

충남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발표회

지방시대, 충남의 정책 방향을 논하다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장 소 충남연구원

주최·주관



2022년 충남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

❖ 충남연구원의 2022년도 연구결과물에 대한 성과 확산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의 장 마련

1 추진 배경

- (민선8기 도정 선도) 새정부 및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도정 선도 연구성과 확산
- (다양한 연구 환류) 연구결과에 대한 도 담당 실국-연구원 책임자 간 소통에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다대다(多對多) 소통 강화
- (수요자 협력형 정책연구) 정책수요자인 도 및 시군, 도의회와 충남연구원 간 소통을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한 수요자 협력에 기반한 정책연구 발굴 및 제안 기회 마련

2 연구성과 발표회 개요

- 주제 : 지방시대, 충남의 정책 방향을 논하다.
- 2022년 대표 및 핵심 전략과제 성과발표
 - 주최·주관 : 충남연구원
 - 일자 : 2022년 12월 20일(화)
 - 장소 : 충남연구원 회의실(1층, 2층, 3층, 4층)
 - 세션별 참석자 : 좌장1명(실장급, 수석급, 선임급), 사회 1명(무기계약직), 세션당 발제 3인, 토론 5인(지역언론인, 공무원, 외부전문가 / 주제별 집단토론)
- ※ 외부전문가(국책연구원, 교수, 연구자문위원회 등), 공무원(세션별 1명), 언론사(세션별 1명)

시간	구분	내용		말씀/발표
09:20~09:30		개회사		유동훈 원장
09:30~09:45		2022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성과 및 2023년 연구아젠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
09:45~10:00		이동		
10:00~11:50	세션1. 지역이 선도하는 자치분권 (2층)	좌장	충남연구원 이상진 수석연구위원	
		사회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최정현	
		발제1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고승희 연구위원
		발제2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장창석 전문연구원
		토론	윤상오(단국대학교 교수) 권경득(선문대학교 교수) 전창수(충청남도 갈등정책팀장) 이찬선(뉴스1 부국장)	
	세션2. 지역과 함께하는 경제 (3층)	좌장	충남연구원 신동호 선임연구위원	
		사회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조소진	
		발제1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
		발제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이홍택 전문연구원
		발제3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강마야 연구위원
		토론	박상헌(한라대학교 교수) 정민철(젊은협업농장 대표) 신천식(한양대학교 교수) 박재혁(충청남도 농업정책과)	
	세션3. 특색있는 지역발전 (4층)	좌장	충남연구원 정옥식 선임연구위원	
		사회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김윤식	
		발제1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유학열 연구위원 조영재 선임연구원
		발제2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한상욱 연구위원

시간	구분	내용		말씀/발표	
		발제3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이관률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정연(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하수정(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성주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양근(충청남도 농촌활력과) 김갑수(굿모닝충청 본부장)		
	세션4. 주도하는 지역발전 (1층)	좌장	충남연구원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사회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강수현		
		발제1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김원철 연구위원	
		발제2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김형철 연구위원	
		발제3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최돈정 책임연구위원	
		토론	안우영(공주대학교 교수) 조종석(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		
	11:50~14:00	점심식사 및 휴식			
	14:00~15:50	세션5. 가치있는 정주기반 (1층)	좌장	충남연구원 조영재 선임연구위원	
사회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제수진		
발제1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김용현 연구위원	
발제2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발제3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임준홍 선임연구위원	
토론			강현미(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남정(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미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병훈(충청남도 더행복한주택팀장)		
세션6. 품격있는 도민 육성 (2층)		좌장	충남연구원 고승희 연구위원		
		사회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홍은일		
		발제1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박춘섭 책임연구위원	

시간	구분	내용		말씀/발표
		발제2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윤향희 책임연구원
		발제3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임형빈 연구위원
		토론	박창원(충남도립대학교 교수) 김경제(동국대학교 교수) 박찬석(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박선영(충청남도 청년복지팀장)	
	세션7.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4층)	좌장	충남연구원 이관률 선임연구위원	
		사회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김영수	
		발제1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자동차사업을 중심으로-	홍원표 책임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
		발제2	대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방안 연구	김양중 연구위원
		발제3	해양치유자원 활용방안 연구	김진영 책임연구원
		토론	이상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천식(KDI 선임연구위원) 김명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경덕(충청남도 향만개발팀장) 류종철(서산시대 대표)	
	세션8. 삶을 지탱하는 환경 (3층)	좌장	충남연구원 이상진 수석연구위원	
		사회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백승희	
		발제1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형범 연구위원
		발제2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이샘 책임연구원
		토론	박미옥(나사렛대학교 교수) 박창석(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은미(예산흥성환경연합 사무국장) 서륜(농민신문 기자)	
15:50~16:10	정리 및 이동			
16:10~17:50	2023년 실별 주요 아젠다 발굴 및 방향 설정 회의			각 실 회의 좌장 : 각 실장
17:50~18:00	폐회 및 정리			

세션 목 차

세션1. 지역이 선도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_고승희	21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_장창석	43

세션2. 지역과 함께하는 경제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_전지훈	69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_이홍택	91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_강마야	111

세션3.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_유학열·조영재	129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_한상욱	14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_이관률	161

세션4. 주도하는 지역발전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_김원철	179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_김형철	191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_최돈정	215

세 선 목 차

세션5. 가치있는 정주기반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_김용현	231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_박철희	245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_임준홍	259

세션6. 품격있는 도민 육성

충청남도 청년정착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_박춘섭	285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_윤향희	301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_임형빈	325

세션7.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자동차사업을 중심으로_홍원표·이민정	339
대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방안 연구_김양중	363
해양치유자원 활용방안 연구_김진영	383

세션8. 삶을 지탱하는 환경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_여형범	403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_이 샘	425

2022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성과 및 2023년 연구아젠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2022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성과 및 2023년 연구아젠다

2022.12.20

목차

I

2022년 전략과제 연구성과

II

2023년 전략과제 아젠다

I

2022년 전략과제 연구성과

1. 개요
2. 전략과제 연구성과
3. 개선과제

I. 2022년 전략과제 연구성과

1. 개요

연구원 조직

5실1단2센터, 현원 112명 (본원 책임급 연구직 40명, 부설센터 연구직 18명 등)



1. 개요

전략과제 유형

국가 및 충청남도과시·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연구로 매년 충청남도, 시·군, 의회 등과 협의 후 연구과제 선정



정책담론연구

새로운 정책담론 발굴 및 정책화를 위한 대표전략과제

예: 환경정의관점에서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과제



정책지원연구

분야별 도, 시·군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핵심이슈과제

예: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운영방안



수탁과제기획연구

수탁과제 수행방향을 설정하는기획연구과제

예: 백제문화권관광거점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2022년 과제수행실적

대표과제 4개, 핵심이슈과제(정책지원연구, 수탁과제기획연구) 24개 등 26개 전략과제 수행

- 2022년 전략과제는 연구책임(박사급) 24명, 외부전문가 2명이
원내 연구진(책임급 8명, 연구원급 25명)과 함께

- ① 중장기적 가치 실현, ② 지방소멸 대응,
- ③ 정책수요 대응, ④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연구성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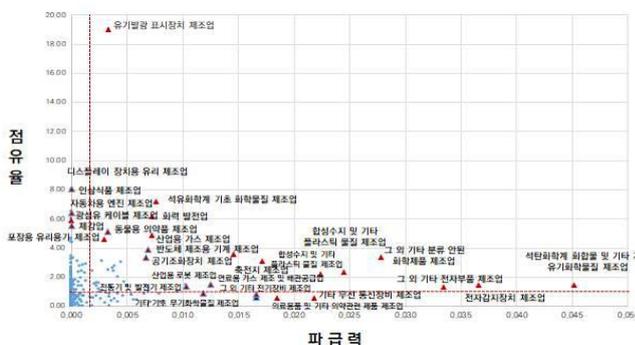
2. 전략과제 연구실적

① 중장기적가치 실현형 전략과제 : 4개

② 미래신산업 발굴, 환경정의 구현, 과학기술 진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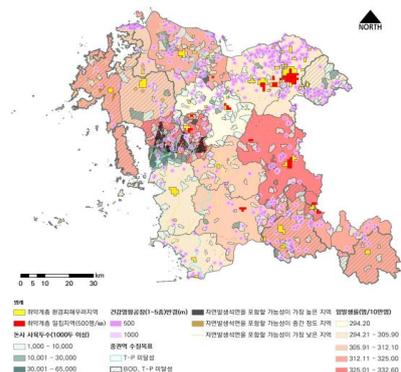
- 충남의 미래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및 지역 간 상생일자리 창출모델 연구
-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표과제
-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대학원 설립 방안
-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 대표과제

산업부문 점유율과 파급력



주: 점유율(충남 산업특화도 표준화), 파급력(미래신산업 중심성, 네트워크 분석)
자료: 후원표·이민정 외, 2022. 충남의 미래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및 지역 간 상생일자리 창출모델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취약계층과 암 발생률 중첩도



주: 인구격자 1km 내 취약계층, 환경위험지역, 10만명당 암 발생률 중첩도
자료: 여형범 외, 2022.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1. 2022년 전략과제 연구성과

2. 전략과제 연구실적

② 지방소멸대응형 전략과제 : 3개

① 남부권 발전(균형발전), 농촌 과소지역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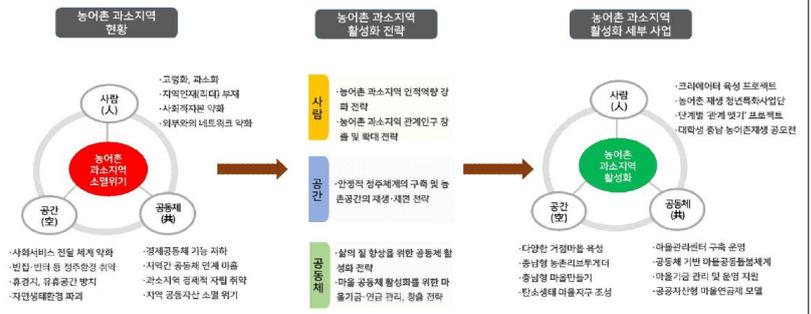
- 충남 저발전 남부권역 발전방안 : 대표과제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 사람, 공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 : 대표과제
-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

남부권 전략산업(안)

구분	자식산업	미래전략산업				관광산업
		소재·부품 첨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의약·뷰티	에너지 (수소, 태양광 이화전지)	
광주					농업산림	역사문화(세계문화유산) 생태관광
논산	국방ICT 국방R&D 국방산업 스타트업 지원				농축산 바이오	근대문화유산 유교문화 마리아나(탐정촌)
계룡	국방ICT				MIC(산업) 국방인보관광	
금산	국방ICT				음식임 농업(인삼) 농축산 바이오	산림치유(국립자연휴양림)
부여		농업바이오 소재			음식임 농업(고추)	역사문화(세계문화유산)
청양		산림바이오 소재			음식임 농업 산림생명산업	생태관광

자료 : 한상욱 외, 2022, 충남 저발전 남부권역 발전방안,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취약계층과 암 발생률 증척도



자료 : 유학열 외, 2022,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 사람, 공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1. 2022년 전략과제 연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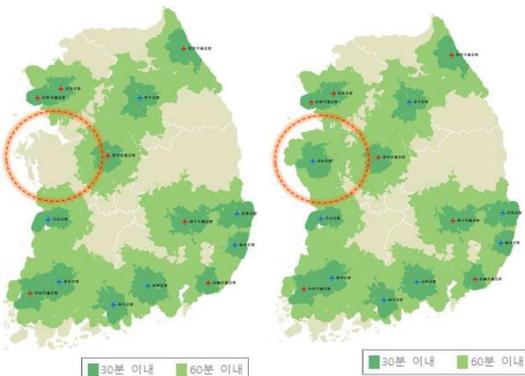
2. 전략과제 연구실적

③ 정책수요 대응형 전략과제 : 9개

① 서산공항 개항, 국방부 이전, 금강하구 정책성 평가,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응 등

- 서산공항 정책효과와 추진전략
- 국방부 충남 이전 당위성 및 유치전략 검토
-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환경편익 연구
-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방안 연구
-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아산시 둔포지역 영향분석과 제도개선 기본방향
-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방안 연구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환경분석 및 외부 우수사례 연구

서산공항 접근성 개선효과



주: 충남은 1시간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31.7%로 전국 지자체 중 공항 접근성 가장 열악

자료 : 김형철, 2022, 서산공항 정책효과와 추진전략,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 대안

향후 충남 시나리오

- 1) 하굿둑 상류 취양수장 상류이설 (안)
- 2) 배수갑문 신규 설치 (안)



자료 : 이섬, 2022,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환경편익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2. 전략과제 연구실적

④ 지역공동체 지원형 전략과제 : 9개

① 주민자치, 주거복지, 대안교육, 외국인 교육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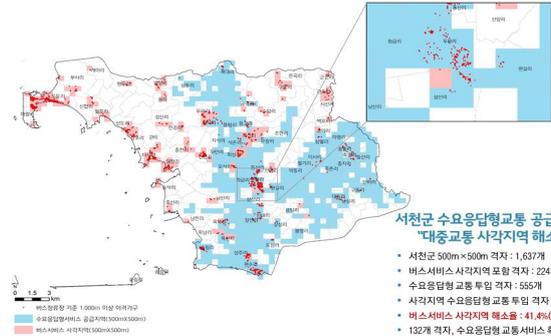
-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방안 연구
-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 충남도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 지원중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 방안 연구

시애틀의 고령친화 근린가로기준



주 : 보도 휴식공간 배치,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노상주차 허용 등
 자료 : City of Seattle, Office of the Mayor, 2018. Age Friendly Seattle Action Plan 2018-2021.

충남 대중교통사각지역 관리모델



자료 : 김원철외, 2022,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서천군 수요응답형교통 공급에 따른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 서천군 500m×500m 격자 : 1,637개
-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포함 격자 : 224개
- 수요응답형 교통 투입 격자 : 555개
- 사각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투입 격자 : 92개
-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율 : 41.4%(92/224)
- 132개 격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필요

3. 개선과제

시대적 조류에 대응한
정책개발기능 강화



구조적, 거시적 관점에서
패러다임 전환 대응

국정과제의 지역화 및
민선8기 핵심과제
대응기능 강화



정책수요자 밀착형
연구기능 강화 위해 연구기간 단축

균형발전 및 공간 기반의
문제해결능력 강화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연구 확대

II

2023년 전략과제 아젠다

1. 중점 연구분야
2. 연구사업방향
3. 성과 확산방식

II. 2023년 전략과제 아젠다



1. 중점 연구분야

충남연구원 2023년 전략과제 사업방향 및 아젠더 발굴 (2022.11.29)

시대적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인구구조전환시대, 탄소중립시대, 경제안보시대, 지방시대 등 **시대적 패러다임 대응형 연구**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연구 수행

베이밸리 충남-경기 메가시티, 탄소중립경제특별도, 경제자유구역, **신규형발전, KBS 지국, 자치분권법+균특법 통합 등 정책수요 대응형 연구**

공간기반의 문제해결형 연구 수행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초광역협력, 기회발전특구, soc 타당성 및 활용, 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네트워크 등 **공간기반 실증연구**

사람중심의 연구, 도민불안을 해소하는 연구 수행

소득 불안정, 주거 불안정, 생활환경 개선 등 취약성 진단 및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사람 중심의 연구**

2023년 전략과제는 기존 전략과제(연구기간1년)외 수시전략과제(6개월, 20개) 신규 추진, 적기 정책연구 지원기능 강화

II. 2023년 전략과제 아젠다

2. 연구사업방향

민선 8기 20대 전략

충남연구원 아젠다 및 2023년 연구사업방향



2022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성과 및 2023년 연구아젠다 09

II. 2023년 전략과제 아젠다

3. 성과 확산방식

CNI정책연구플랫폼, <https://prpr.cn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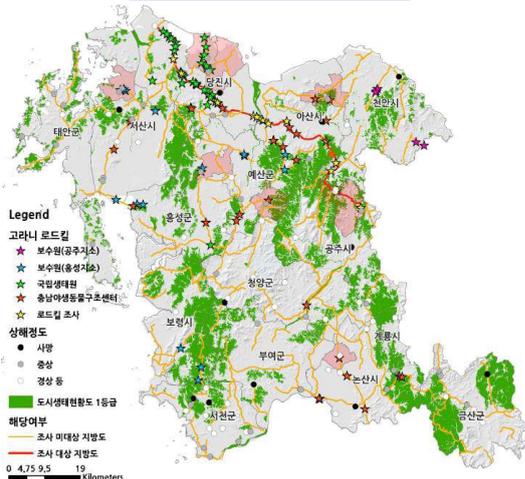
정책지도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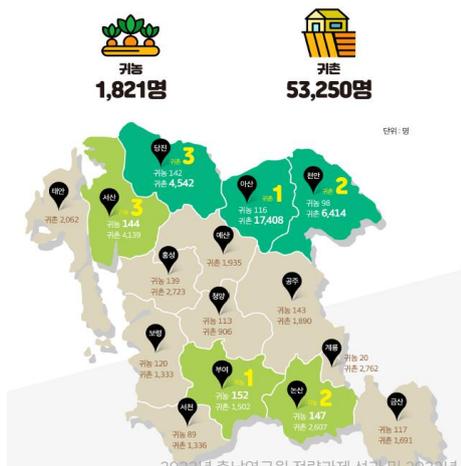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제안을 시각화

충남 로드킬 현황과 예방 대책



충남도정의 이슈 선정 및 정책 제안 등을 시각화,
도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공

충청남도 귀농귀촌 통계



3. 성과 확산방식

CNI정책연구플랫폼, <https://prpr.cni.re.kr/>

정책현장

전략과제 요약서비스

현장성이 강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통해 발굴된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장소 관점에서 정책성과를 재구성하는 리포트

전략과제 중 우수하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인터뷰 영상 소개

서천 갯벌과 유부도

친절한 연구See : YouTube 서비스

UN WTO가 지정한 세계 8대 생태관광지역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2022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성과 및 2023년 연구아젠다

세션 1

지역이 선도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청도 및 사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고승희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장창석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고승희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2022.12

연구요약

연구목적

- ①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지방분권 발전 방향 및 전략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
- ②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법·제도의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충청남도의 민선8기 분권정책을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 관점에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연구내용

- ①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분석을 통한 충청남도 전략과제를 도출
- ②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추진 현황 분석을 통한 여건 및 한계를 검토
- ③ 신정부 및 민선8기 지방분권 공약과 기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모색
- ④ 지방분권 설문조사 및 워크숍 통해 충남의 자치분권 여건·한계 파악, 의견 수렴 통해 전략적 과제 제시
- ⑤ 충청남도의 추진전략과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시

정책제안

- ① 태도와 관심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 증가로 인해 지자체에 대한 신뢰 향상
- ②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시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제시
- ③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전략과 과제들을 모색
- ④ 향후 과제별 세부연구로 추진 시 도정 및 시·군정의 분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가능 기대

목차

I

연구개요

II

정책동향

III

지방분권
인식조사 및
주제어 분석

IV

지방분권
추진전략과
과제

V

결론

I

연구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2022년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

- 2022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으로 지방중심 분권 정책 전략 중요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제시
- 지방자치법이 2022. 1 실시됨으로 인해 법률적 기반을 통한 분권과제의 확대와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

📌 지방분권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광역과 기초 대응을 위한 전략과 과제 모색 필요

- 도의 분권정책 전략과 연계하여 기초의 역할 및 전략에 대한 모색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위해 중요
- 기존 수립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신정부와 민선 8기 지방자치 정책을 연계하고 충남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한 자치분권 전략이 필요

연구의 목적

📌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지방분권 발전 방향 및 전략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

-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법·제도의 개선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도의 민선8기 분권정책을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 관점에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

🏠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 대상 범위

- 충남도와 시·군 대상

📌 시간 범위

- 충남도의 분권 정책 등은 2022년 수립된 계획 등 활용
- 설문조사 등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시행

📌 내용 범위



📁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방법



문헌 및 정책동향 조사

지방분권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대상과 개념을 정립



설문조사 및 주제어조사, 인터뷰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여건 및 가치를 도출,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문제점과 전략적 방향 설정



워크숍 및 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해 세미나 추진

연구의 흐름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역대정부 및 관련 정책동향
제3장	지방분권 관련 인식 및 주제어 조사	*지방분권 관련 인식조사, 연구 및 언론 지방분권 주제어 조사 등
제4장	충남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조직·기능분야/재정관리분야/참여·공동체분야/행정체제·연계협력분야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07

II

정책동향

윤석열 정부 및 민선8기 충남도 분권과제와 시사점
지방분권의 성과평가와 과제

윤석열 정부 및 민선8기 충남도 분권과제와 시사점

윤석열 정부 및 민선8기 충남도 분권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제시

- 국정목표 6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15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구체화(15대 국정과제 및 76개 실천과제)
- 지방분권은 6개 국정과제와 연계
-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민선8기 충남도지사는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100대 중점과제를 발표

- 이 중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력강화, 자치경찰위원회기능 실질화 등이 포함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크게 지방재정력 확충과 자치조직원의 실질적 이양을 요구
-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 실질화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권 실질화와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 및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과 세외수입 이관 등으로 제시

윤석열 정부 및 민선8기 충남도 분권과제와 시사점

시사점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지방분권 관련 과제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

- - 이미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시행령이 ('22.1.13)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 등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분권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2021년부터 재정분권 2단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있는 만큼 국세-지방세의 구조개선과 달라진 환경을 반영한 기능 재배분의 검토가 필요

충남도 및 시·군은 지방분권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분권전략 필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재정력 강화방안도 모색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광역-기초의 재조정된 기능 바탕으로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도와 시군간 기능 재정립하고 주민자치회 등과 기능 조정하여 분권시대에 부합한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투표 방안들에 대한 준비와 지방의회의 정책연구 기능 확대 검토

지방분권의 성과평가와 과제

- ▶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평가는 중앙-지방 간 권한배분의 정도를 의미
 - 자치행정권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7:3, 국세와 지방세 비율 76:24 등 미흡
 - 자치조직권 : 기준인건비를 도입 등으로 정원관리의 자율화와 대민서비스 중심의 조직재설계 강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자율적 운영은 제한적
 - 자치재정권 : 지방세 감소와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지속하락으로 중앙의존도 상승
- ▶ 자치행정권이 구조적으로 지방사무의 기본원칙과 범위, 배분기준 및 국가사무 처리 제한 규정 등의 법적 틀 내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
- ▶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및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일련의 변화를 통해 법적 토대를 정비
- ▶ 자치분권 확대의 관점에서 집권 초기에는 지방분권의 기반을 다지고, 이후 확장되는 흐름을 가지며 분권정책의 체계성과 적합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
- ▶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의 보장이라는 목표의 설정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의 연대를 담보할 수 있는 과제 도입이 필요

III

지방분권 인식조사 및 주제어 분석

지방분권 인식조사 분석
지방분권 연구 및 언론 주제어 조사 분석

📁 지방분권 인식조사 분석

조사 개요

조사범위

- 충남도청 : 관계부서 관계자 및 유관부서 공무원
- 시·군청 : 충청남도 15개 시군 공무원
- 지역주민 : 충청남도 거주 지역주민

조사방법

- 조사 기간 : 2022년 5월~6월
- 조사 대상 : 공무원, 지역주민 등 1,349명
- 조사 방법 : 충청남도 및 시군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 실시, 이메일, FAX 등

조사내용

-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지방분권의 현재 수준, 지자체의 역할 등

📁 지방분권 인식조사 분석

설문지표의 구성체계

구분	주요 조사내용
일반 현황	· 성별, 연령, 소속, 거주지역, 학력, 직업 등
지방분권 인식	· 우리나라 지방분권 상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우리나라에 적합한 중앙-지방 유형 · 충남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 여부 · 지자체의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 · 지방분권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지방분권 현재 수준	· 제도 및 재정 분야의 지방분권 수준· 시민 참여 수준 · 타 지자체 협력 수준 · 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 · 제도 및 재정 분야의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 ·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이양 방식 · 타 지자체 협력 필요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	· 충남의 위상 강화에 필요한 사항 · 지역문제 해결 역량강화 필요 사항 · 중앙정부 지방분권 실현 개선사항 · 지자체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선사항 · 충남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필요 사항 · 시민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 효과적 지방자치 실현 필요 사항 · 기타 제안 사항

시사점

- ▶ 도, 시군, 주민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차이 개선 필요
-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량 및 참여 강화 필요
- ▶ 지방정부로서 충청남도와 시군의 위상 재정립
- ▶ 충남도 차원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수요기반의 정책개발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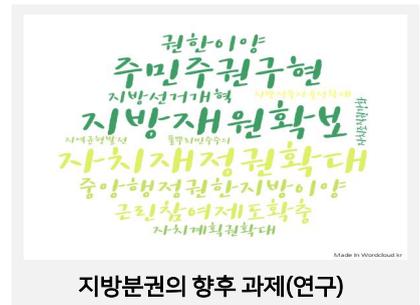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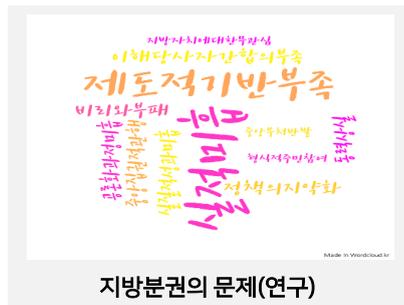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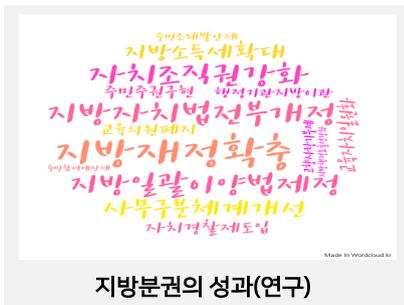
Ⅲ. 지방분권 인식조사 및 주제어 분석

📍 지방분권 연구 및 언론 주제어 조사 분석

조사 개요

구분	기간	검색대상	검색결과
연구논문	2012-2022	한국학술지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성과 : 129건 한계 : 156건 과제 : 72건
언론기사	2017-2022	빅카인즈 분류 11개 일간지	성과 : 447건 한계 : 324건 과제 : 905건

지방분권 관련 연구 주제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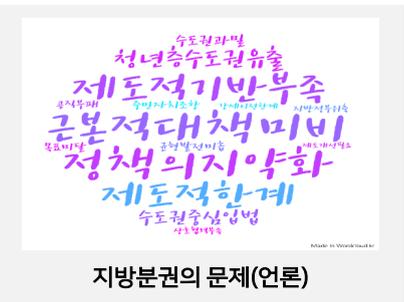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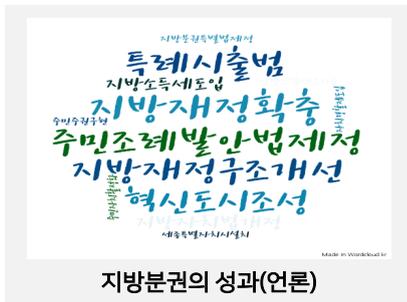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15

Ⅲ. 지방분권 인식조사 및 주제어 분석

📍 지방분권 연구 및 언론 주제어 조사 분석

지방분권 관련 언론 주제어 조사



시사점

- 📌 연구의 성과는 법제도적 변화를 제시한 반면 언론의 성과는 특례시 등과 같은 실질적인 모습을 주요 성과로 제시
 - 지방분권의 문제로는 연구와 언론 모두 제도적 기반 부족을 제기하였으며 연구의 경우 정책실현과정의 문제제기인 반면 언론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등 현상의 문제를 지적
 - 향후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와 언론 모두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
- 📌 중앙-지방의 관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주민의 관계 속에서 지방분권 추진 노력 필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16

IV

충청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추진전략과 과제

조직 및 기능의 권한 정립과 운영기반 마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
대안적 민주제도로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연계·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확보

IV. 충청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추진전략과 과제



🏠 조직 및 기능의 권한 정립과 운영기반 마련

현황 및 실태

📊 조직·기능영역의 구조

- 조직·기능의 영역은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을 의미
 - 전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되어 있는지가 지방분권의 쟁점

📊 조직관리 실태

- 조직관리의 법제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구와 정원을 관리
- 조직관리 제도변천
 -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3차례 걸쳐 변화
- 행정기구 관리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 관리
- 정원 관리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 관리

조직 및 기능의 권한 정립과 운영기반 마련

기능재정립

- 법적근거
 - 기능배분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 기능배분 개념변천
 - 기능배분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
- 기능배분 실태
 -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현재 33.6%

지방의회 실태

- 법적근거
 - 다양한 법에서 지방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규정
- 지방의회 제도변천
 -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 유급제 도입,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의 변화
- 지방의회 실태
 - 입법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제한성과 더불어 조례를 통한 기본권 제한이나 벌칙부여가 불가능

조직 및 기능의 권한 정립과 운영기반 마련

문제제기 및 정책이슈

조직관리 분야

-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탄력성 미흡
- 자치조직권의 보장가능성과 획일적 관리방식의 탈피

기능배분 분야

- 핵심과제 추진실적 미흡과 지자체 핵심기능들의 이양과 행·재정 동시이양 부진
- 기능이양은 원칙적으로 인력과 재원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이양의 효과를 제고

지방의회 분야

-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거나 추진 제한
- 의회사무 인력의 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존에 비해서는 지원체제가 확충된 것은 분명하나, 여전히 미흡

🏠 조직 및 기능의 권한 정립과 운영기반 마련

추진전략과 과제

(1) 조직관리 방식의 전환과 자율적 조직관리시스템 구축

📌 획일적 조직관리 전환

- 지방자치단체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획일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전환
 - 분류기준 재설정 검토 : 현행의 인구기준에 따른 획일적 관리제도는 개선 필요
 - 분류기준 추가변수 제안 : 시군에서 인구 이외의 추가변수를 발굴하여 시도에 건의

📌 행정기구 설치범위 폐지건의

- 자치조직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행정기구의 관리권한 폐지 방안 모색 필요
 - 도의 시군 조직관리 지원 : 시도 차원에서 시군의 조직관리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적극화
 - 시군의 자율적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 : 행정기구의 설치범위 폐지 위한 전제로 자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 구축

📌 정원관리권 폐지건의

- 자치조직권은 완전히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구축
 - 조직진단의 상설화 : 도는 조직진단을 상설화하는 대책을 수립

🏠 조직 및 기능의 권한 정립과 운영기반 마련

(2) 기능안정화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직·기능 연계 강화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적 유사성 존재
 - 이양기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
 - 일차적으로 시·도를 대상으로 기능이양을 검토 후 시·군 수행 가능 대상 검토

📌 기능배분체계 전환 및 광역-기초 간 기능 재정립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능을 구분하고, 기능전체를 대상으로 이양판단
 - 시도시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기능배분 방식의 전환을 위한 건의를 제기
 - 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수반

📌 행·재정 동시이양 및 재정안정화 도모

- 기능이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인력 및 재원의 동시이양
 - 기능이양에 따른 행·재정은 적극적인 이양건의를 제기

🏠 조직 및 기능의 권한 정립과 운영기반 마련

(3) 지방의회 충원방식 검토 및 지원체계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의회의 효율적 충원방식 강구

- 충원방법은 양질의 정책역량을 구비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
 - 공천방식의 전환검토 :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상향식 접근의 공천방식이 도입 필요
 - 정당공천제의 유보검토 : 한시적으로 기초의원예에 대한 정당공천은 유보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

📌 자치입법권의 확대 및 대안제도 마련

- 단기적으로 조례를 통한 기본권 제한이나 벌칙부과가 가능한 대안인지를 검토
 - 기본권 제한과 벌칙부과에 대한 선행적 확대여부에 대한 대안을 검토
 - 조례의 위계구조 타당성 검토 : 자치입법권에 대한 개정은 시·도와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도 동일 적용

📌 지방의회 지원체제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

- 국회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가칭)지방의정센터를 도입하는 대안의 검토
 - (가칭)지방의정센터 도입검토
 - 의정지원 기구검토 : 시·군·구 단위에서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적 시스템의 모색이 수반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

현황 및 실태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 중앙정부 55.5%, 지방자치단체 35.0%, 지방교육 9.5%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49.9%(2022년 (당초)예산기준)로 특·광역시 제외 하락
- 충남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2022년 (당초)예산기준으로 33.6%
 - 재정자주도는 2022년 (당초)예산기준으로 67.12%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자원 보장 기능
 - 기능과 동시에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

문제제기 및 정책이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 2022년 (당초)예산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 96.3%
- 재원신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원이 중앙에 집중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의 감소

- 지방소비세의 증가는 지방교부세를 오히려 감소
 - 지방세 증가와 함께 지방에 이양된 사무가 증가되면 재정여건 악화 우려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차이

- 지방세 비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

문제제기 및 정책이슈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제도변화

- 지방소비세 확충과 수도권 편중 세목을 동시에 이양하는 등의 정책조율 미흡
- 2019년 09월 본격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논의와 합의를 시작
 - 지방소비세의 확충,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단체 국고보조 인상, 재정제도 개편

인구구조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

- 인구구조가 변화하면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영향
 - 지역 내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경제(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실질적 변동

-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의 COVID-19 사태를 감안 보수적으로 편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재정관리 체계 마련

추진전략과 과제

(1) 실질적인 세입분권을 통한 과세자주권 확보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는 지방재정 수요 증가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

- 광역(도)과 기초(시·군)간 재정균형을 연계한 세목변경 정립
- 합리적인 세외수입 원칙과 기준의 설정

(2) 지방교부세제도의 형평화기능 강화 : 인구감소 및 경제현황 반영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과 재원 총당 기능에 대한 진단이 필요

- 보통교부세 개편사항에 대한 중앙정부 건의(도 및 시군 차원)
- 시·군간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

(3) 지방재정사전위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재정성과시스템 구축

재정여건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성과시스템의 설정 필요

- 충남형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도입
- 충남형 지방재정사전위기경보제도 도입
- 충남형 재정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체납제도 개선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27

대안적 민주제도로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현황 및 실태

지방자치의 원리와 개념적 논의

- 지방자치의 의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
 -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 지역주민의 영향력을 확대
- 지방민주주의는 지방분권과 분리해서 접근

제도화된 참여제도 실태

- 정부와 시민의 영향력 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된 다양한 참여제도를 유형화
 - 수동적 시민참여제도
 - 교호적 시민참여제도
 - 적극적 시민참여제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28

대안적 민주제도로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문제제기 및 정책이슈

대의민주제가 가지는 민주성의 결핍

- 대의민주제가 가지는 민주성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적 민주제도들을 발전

대안적 민주주의 한계

-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제도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제 속에서 거의 작동
 -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민주제의 실제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한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그 권한과 자원, 기능이 부족
 - 정치영역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있어서 한계

대안적 민주제도로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추진전략과 과제

(1) 마을 역량강화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

- 로컬리스트 양성
- 마을공동체 조직 및 주민자치회 등 상호학습기회 제공
- 학생·청소년 명예읍면동장제 도입 및 청소년 자치를 위한 마을학교 활성화
-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및 우수사업의 확산
- 마을공동체 조직 입법역량 및 대표성 강화
-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내실화 및 교육

대안적 민주제도로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2) (읍면동) 행정의 혁신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차원에서 혁신이 필요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 : 읍·면·동장 임명권한을 시민과 공유
-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특별회계 구상
-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 주민참여 및 온라인 공동체 플랫폼 구축
- 읍면동 자율예산 편성제 검토
- 공유자산 자율관리 및 운영권 도입
- 정책사업기획 및 설정
- 자체인사권 및 자율적 조직권 운영
- 중간지원조직 개편 및 교육체계 개선
- 주민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세율 결정 제도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31

대안적 민주제도로서의 주민참여 제도화

(3) 도민을 위한 마을단위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도민이 스스로 참여해 토론과 합의

- 도민인사검증배심원제 실시
- 마을단위의 숙의적 공론장 운영
- 도민이 정하는 정책 슬로건 설정
- 숙의민주제적 위원회제도 도입

(4)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생산 실현

공동생산은 지역사회와 '함께'(with) 공적 가치를 생성한다는 지방정부 역할

- 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으로의 민간위탁 확대
- 읍면동 중점사업 가칭 '주민공동기획단' 운영
-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자치계획 고도화
- 마을의제 상시적 제안체계 마련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32

연계·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확보

현황 및 실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논의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논의는 네트워크 도시지역을 의미
- 지역 간 협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의 협력을 의미

인구감소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의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충남에서 자치분권의 강화는 지방소멸과 인구과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협력관련 신정부의 정책방향

-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 강화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주목

충청권 광역차원의 협력현황과 한계

- 각각의 4개 시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형태가 중심
-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통합적 의제의 설정과 구체화의 시도가 필요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33

연계·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확보

문제제기 및 정책이슈

연계·협력의 조직 및 제도적 접근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한 제도들이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 미흡
- 사무에 따른 제한적 내용과 인력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한계가 존재

생활권 중심의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제도 미흡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발전은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협력의 형태와 함께 시·군·구 차원에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중심의 지역협력의 정책방향도 존재
-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재정 인센티브의 강력한 추동에 기인하여 자율성 부족

충남 광역-시군의 상호교류와 협력방안 부족

-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과소지역 시군간의 협력과 지원에 관련된 지원개발이 필요한 상황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34

연계·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확보

추진전략과 과제

(1) 광역 및 기초단위 협력과 공동사업의 추진

-  **충남에서 현재의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지방행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 필요**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상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연대와 협력의 방안들을 제시
 - 공통문제해결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 : 광역자치단체 기반의 협력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협력사업의 중요성이 강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
 -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방안을 설계하고 실행
 -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연계·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확보

(2)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행정체계 공유

-  **각 읍·면 단위에서 지방행정의 협력적 형태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 노력**
 - 지역 간 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충청남도 차원에서 연계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교류와 네트워크의 場을 구축
 - 지역 생활인프라 공유
 - 인접한 기초자치단체 간에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조사
 - 지역 연계기반 공동발전 전략
 -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활용이나 주력산업 성장전략 등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규모화와 전문화를 도모

연계·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확보

(3) 도-시군 협력을 위한 상호교류와 연계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한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의 장이 필요

- 도-시·군 간 자치분권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 사무배분 등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 주민자치회와 시·군 및 도 지방자치 담당자 간 정례회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 지원
- 광역-기초-주민 협의체 운영 지원
 - 현장중심 자치분권협의체의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사항에 대한 실천 지원

V

결론

▶ 지방행정과 주민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발생

- 태도와 관심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증가
- 주민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관리의 대상에서 지방자치의 주체로 역할과 기능
-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향상

▶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

- 권력이 중앙주도의 중앙집권적 체제에 기인, 수도권 집중을 초래

▶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전략과 과제들을 모색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현재의 여건 하에서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들을 모색
-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내용들과 충남도 및 시·군차원에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

▶ 모든 전략과 과제들이 일시에 추진될 수는 없겠으며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

- 현실적인 문제와 과제들의 구체화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
- 또한, 실천의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일부 미흡
- 향후 과제별 세부연구로 추진 시 도정 및 시·군정의 분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가능 기대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의 지방분권 전략과 과제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장창석 전문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2.12

목차

I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III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IV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개선방안

I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변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I.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변화

주민자치회의 정의

-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조직
-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네, 지역의 공동체이며 자치적으로 조직된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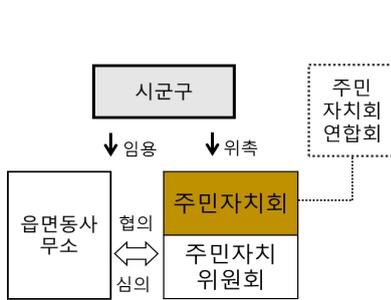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변화

-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입 이후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 발생
-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제도적 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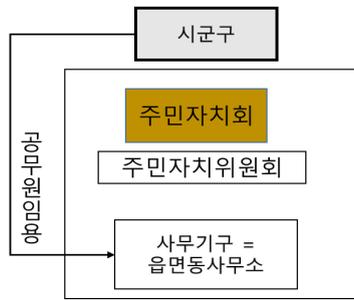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상	- 읍면동장의 자문기구	- 주민자치 협의·실행기구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 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9조(행안부 승인) - 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결정 -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 주민자치 기능, 지방정부 위임·위탁사무 처리 - 주민생활 관련 사항 협의 및 심의
위원구성	- 각급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접수	- 일정주민자치 관련 교육시간을 이수한 지역대표, 주민대표, 일반주민 등 비율 고려, 공개모집 후 공개 추첨(대표성 확보)
위촉권자	- 읍면동장	- 시장·군수
재정	- 읍면동 지원금, 프로그램 수강료 한정	- 자체재원인 사업(위탁)수익,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
지방정부 관계	- (대부분) 읍면동 주도로 운영	-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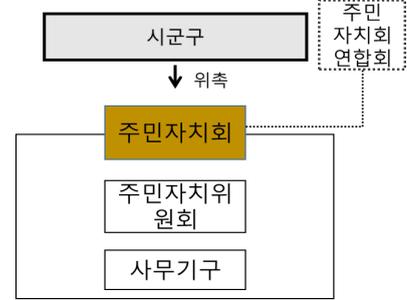
[협력형]



[통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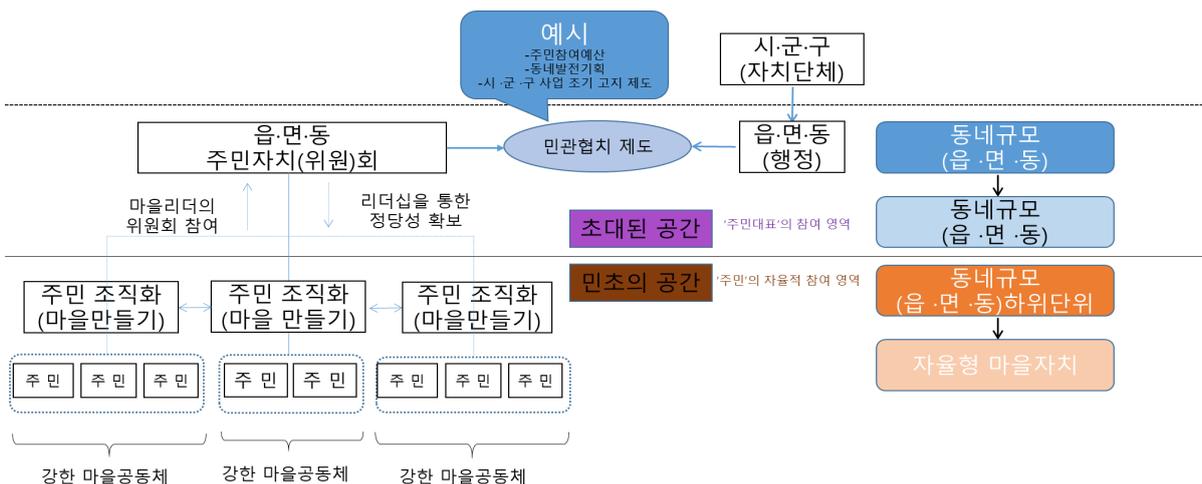
[주민조직형]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행안부의 협력형 모델과 유사한 형태임
-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하위 영역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운영중이며, 이는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근본이 됨



I.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충청남도 전체 읍·면·동은 207개이며, 이 중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2021년말 기준 총 102개소임

- 시·군별 주민자치회 개소수는 논산이 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 14개소, 서천·홍성 6개소, 천안 5개소, 아산 4개소, 예산 3개소, 공주·서산·청양 2개소, 보령·계룡·금산·태안 1개소 나타남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2018년을 7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 9개소, 2020년 9개소, 2021년 9개소 등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총 34개소임

구분	2018			2019			2020				2021			
	개소수	충남형	행안부	개소수	충남형	행안부	개소수	충남형	행안부	자율전환	개소수	충남형	행안부	자율전환
	7	7	-	49	9	40	31	9	19	3	37	9	27	1

도내 주민자치회 시범대상 102개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충남형과 행안부형이 혼재되어 운영중인 주민자치회가 나타남

-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는 행안부형 보다 충남형 시범대상지역에 먼저 선정됨
- 이러한 현상은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의 결과로 분석될 수 있으나, 현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I.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전환	최초구성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전환	최초구성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전환	최초구성	
		충남형	행안부					충남형	행안부					충남형	행안부			
합계	102개소	34	91	4		합계	102개소	34	91	4		합계	102개소	34	91	4		
천안(5)	원성1동		2013		'13.12	보령(2)	대전3동	2021			'21.06	논산(15)	가야곡면		2020		'20.01	
	성정1동	2018	2019		'18.11		대전4동	2020	2020		'20.08		은진면		2020		'20.01	
	통세면	2019	2019		'19.09		탕정면		2013		'13.10		채운면		2020		'20.01	
	성환읍	2019	2019		'19.01		배방읍		2015		'16.07		연무읍		2020		'20.01	
	백석동	2019	2019		'19.09		운양3동		2019		'20.01		양촌면		2020		'20.01	
공주(16)	반포면		2019		'13.12	아산(4)	운양6동		2019		'19.06	청양(4)	노성면		2020		'20.01	
	정안면	2020	2020		'20.07		대산읍	2018	2019		'18.01		벌곡면		2013		'13.11	
	유구읍		2021		'21.01		부석면	2019	2019		'19.09		취암동		2020		'20.01	
	이인면		2021		'21.01		인지면		2021		'21.07		부창동		2020		'20.01	
	탄천면		2021		'21.01	서산(15)	팔봉면		2021		'21.07		강경읍		2020		'20.01	
	계룡면		2021		'21.01		자곡면		2021		'21.07		성동면		2020		'20.01	
	의당면		2021		'21.01		성연면		2021		'21.07		광석면		2020		'20.01	
	우성면		2021		'21.01		음원면		2021		'21.07		상월면		2020		'20.01	
	사곡면		2021		'21.01		운산면		2021		'21.07		부치면		2020		'20.01	
	신동면		2021		'21.01		해미면		2021		'21.07		연산면		2020		'20.01	
	중학동		2021		'21.01		고북면		2021		'21.07		청양읍	2018	2019		'19.01	
	웅진동		2021		'21.01		부춘동		2021		'21.07		정산면	2020	2020		'20.12	
	금학동	2021	2021		'21.01		계룡(2)	동문1동		2021			'21.07	청남면		2021		'21.01
	육룡동		2021		'21.01			동문2동		2021			'21.07	운곡면	2021			'21.01
	신관동		2021		'21.01			수석동		2021			'21.07	두마면	2021			'21.07
	월송동		2021		'21.01			석남동		2021			'21.07	신도안면	2020	20		'20.07

I.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 진원	최초 구성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 진원	최초 구성	시·군	읍·면·동	시범대상		자율 진원	최초 구성
		충남형	행안부					충남형	행안부					충남형	행안부		
※ 행안부형 91개소(충남형 27개소 중복)																	
당진 (14)	당진1동		2019		'20.05	부여 (4)	초촌면		2019		'13.12	홍성 (7)	홍동면	2019	2019		'19.01
	당진2동		2019		'20.05		외산면	2018	2019		'18.10		홍성읍		2019		'19.11
	당진3동		2019		'20.05		홍산면	2019	2019		'20.01		광천읍		2019		'19.11
	합덕읍		2019		'20.05		내산면	2020	2020		'20.10		홍북읍		2019		'19.11
	송악읍	2021	2019		'20.05	서면		2019		'14.05	장곡면		2020	22020		'20.11	
	고대면		2019		'20.05	마산면	2018	2019		'18.11	결성면		2020	2020		'20.11	
	석문면		2019		'20.05	장항읍	2019	2019		'19.11	구항면		2021			'21.06	
	대호지면		2019		'20.05	비인면	2019	2019		'19.12	대흥면		2013		'13.12		
	정미면		2019		'20.05	문산면	2020	2019		'20.09	예산읍	2018	2019		'18.09		
	우강면		2019		'20.05	한산면	2020	2020		'20.10	덕산면		2019		'20.01		
	신평면		2019		'20.05	화양면	2021			'21.06	신왕면	2021			'21.06		
	송신면		2019		'20.05	태안 (2)	이원면	2021			'21.06						
	면천면		2019		'20.05		원북면	2018	2019		'19.01						
	순성면		2019		'20.05												

I.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충청남도의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은 역량 단계별, 지원 영역별로 추진중임

(4단계) 역량 단계별 지원 사업

- 예비단계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등 읍·면·동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도입단계 :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용 운영비 및 컨설팅 지원
- 정착단계 : 주민자치회 기반이 마련된 곳 중 제안사업을 추진
- 확산단계 :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행 등 주민자치의 최상위 단계 지원

(4영역) 지원 영역별 지원 사업

- 공모사업 영역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등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과 도민참여 예산 등의 정책 추진
- 시·군 지원 영역 : 개방형 읍·면·동장 시범사업,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비 등 지원
- 역량강화 영역 : 주민자치회 컨설팅, 상설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아카데미,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등 운영
- 발굴·확산 영역 : 사진·영상공모전, 사례집 발간, 주민자치 한마당 등 운영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년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			2019			2020			2021			
	계	도	시군	계	도	시군	계	도	시군	계	도	시군	
합계	747	477	270	1,035	635	400	1,335	890	445	1,253	713	540	
공모사업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460	-	-	700	370	330	1,015	640	375	832	416	416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60	60	-	40	40	-	40	40	-	40	20	20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00	200	200	660	330	330	750	375	375	648	324	324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	-	-	-	-	-	225	-	-	144	72	72
	도민참여 예산 등	-	-	-	-	-	-	-	-	-	961	480.5	480.5
시군지원	개방형 읍·면·동장 시범사업	-	-	-	60	60	-	500	500	-	150	150	-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비 지원	-	-	-	-	-	-	60	60	-	30	30	-
역량강화	주민자치회 컨설팅	80	80	-	90	90	-	90	90	-	90	-	-
	상설 주민자치학교	16	16	-	16	16	-	18	18	-	26	26	-
	주민자치 아카데미	140	70	70	140	70	70	140	70	70	119	59.5	59.5
발굴·확산	사진&영상 공모전	9	9	-	15	15	-	15	15	-	10	10	-
	사례집 발간	6	6	-	30	30	-	16.2	16.2	-	8.5	8.5	-
	주민자치 한마당	36	36	-	44	44	-	40.9	40.9	-	39	39	-

*충청남도 내부자료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단계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연차별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 분석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 단계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① 예비단계

📌 추진방향성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등 읍.면.동의 자치 역량 강화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도내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자치와 참여를 훈련하여 사람을 키워 주민이 동네 일을 주도하는 생활속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정책

📌 지원대상

- 매년 20개소 정도의 충청남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 단계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① 예비단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주요내용

년도	지원지역	주요 사업
2019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반찬지원, 돌봄, 사진) · 교육(정보화 교육, 심리상담, 부모교육) · 문화(지역투어,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환경(중고물품 나누기, 장난감 대여) · 홍보(책자 발간, 홍보영상 제작)
2020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청소년 원탁회의, 환경교육 및 쓰레기 수거 등) · 저출산(놀이터 벽화그리기 등) · 고령화(사진촬영, 반찬나누기, 주거 여건 개선 등) · 양극화(소외계층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2021	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지역의제 발굴, 산책로 정비, 심리치료 지원 등) · 저출산(진로 탐색 등) · 고령화(사진촬영, 빨래 수거 및 세탁, 주거 여건 개선 등) · 양극화(취약계층 지원 등)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 단계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① 예비단계

📊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 충청남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중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은 지속세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 시범공동체 운영						
전환	7	5	9	3	9	3	9	4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 단계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② 도입단계

📊 추진방향성

-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용 운영비 및 컨설팅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육성
- 읍면동 주민공론의 장을 활성화 및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예산지원

- 2018년 400백만원, 2019년 660백만원, 2020년 750백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 비율로 사업 추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도비	시군비									
예산지원	400	200	200	660	330	330	750	375	375	648	324	324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단계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② 도입단계

예산지원

- 예산집행률은 2018년 96%, 2019년 64%, 2020년 13% 등으로 감소추세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집행	350	336	96%	660	420	64%	750	98	13%	648	-	-

지원대상

-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2018년 신규 7개소, 2019년 신규 7개소, 후속 4개소, 2020년 신규 9개소, 후속 7개소, 2021년 신규 9개소, 후속 18개소로 매년 지원대상 주민자치회 개소수가 증가중임

(단위: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신규	후속	신규	후속	신규	후속	신규	후속
지원대상	7	-	9	4	9	16	9	18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7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단계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② 도입단계

지원대상

- 도내 주민자치회 시범대상 102개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충남형과 행안부형이 혼재되어 운영중인 주민자치회가 나타나고 있음
- 2020년부터는 자율전환 주민자치회도 지속적으로 나타남

(단위: 개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충남형	행안부형	계	충남형	행안부형	계	충남형	행안부형	자율전환	계	충남형	행안부형	자율전환
개소수	7	7	-	49	9	40	31	9	19	3	37	9	27	1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8

🏠 단계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③ 정착단계

📌 추진방향성

- 예비단계, 도입단계를 거친 주민자치회의 기반이 마련된 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

📌 지원대상

-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지역은 2020년 10소에서 2021년 8개소로 감소함
- 사업의 유형은 충남도 정책목표와 동일한 3대 위기(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구분	지원지역	주요 사업
2020	1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청소년 동아리 운영, 마을학교 운영, 폐기물 처리 등) · 저출산(놀이터시설 설치 등) · 고령화(공원조성, 사진촬영, 주거만족도 개선 등)
2021	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복합체 운영 등) · 저출산(찾아가는 동화 프로그램 등) · 고령화(사진촬영, 빨래 수거 및 세탁, 주거 환경 개선 등) · 양극화(취약계층 지원, 발달장애인카페 운영 등)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9

🏠 연차별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 분석

충남형 주민자치 운영 성과 분석 지표 설정

-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분석 항목, 세부 분석 기준 마련
- 성과분석을 위한 부문은 예비단계, 도입단계(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 정착 단계(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으로 구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연차별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 분석

부문		분석 기준	배점	세부 분석 기준
4개 부문		11개 기준	100	
예비단계	예비단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운영	5	- 미운영 : 0점 - 운영 : 5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 실행	5	- 미실행 : 0점 - 실행 : 5점
		주민자치위원 사전 교육	10	- 60%이상 : 6점 - 80%이상 : 8점 - 전부이수 : 10점
도입단계	주민자치회 구성	사무국 설치	10	- 공간미확보 : 0점 - 공간확보 : 5점(회의장無) - 공간확보 : 10점(회의장有)
		주민자치위원수	10	- 30인 이하 : 5점 - 30인 이상 : 10점
		상근인력 여부	10	- 없음 : 0점 - 비상근 : 5점 - 상근 : 10점
		전담공무원 활용도	10	- 미배치 : 0점 - 활용 미흡 : 5점 - 전적 활용 : 10점
	주민자치회 운영	총회개최 이력	10	- 미개최 : 0점 - 개최이력 : 5점 - 당해연도 개최 : 10점
		총회사업 실행	10	- 미실행 : 0점 - 일부실행 : 5점 - 실행 : 10점
		분과 운영	10	- 분과계획 無 : 5점 - 분과계획 有 : 10점
정착단계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10	- 미참여 : 0점 - 참여 : 5점(타 공모) - 참여 : 10점(도 공모)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1

II.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운영 실태 분석

연차별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 분석: 시범사업 추진성과 평가 비교

4개년 평균 비교

- 4개년도 동안의 주민자치회 성과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018년 50.0점, 2019년 53.8점, 2020년 50.8점, 2021년 41.7점으로 최근 3년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비교

연번	대상지역	년도			
		2018	2019	2020	2021
2018 지원	7개소	350	430	430	-
2019 지원	16개소	-	430	475	460
2020 지원	25개소	-	-	365	400
2021 지원	27개소	-	-	-	264
합계		350	860	1,270	1,125
평균		50.0	53.8	50.8	41.7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2

연차별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 분석: 시범사업 추진성과 평가 비교

연차별 평균 비교

- 연차별 점수를 살펴보면 2018년 지원된 주민자치회 평균이 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9년 지원 47.8점, 2020년 지원 40.6점, 2021년 지원 29.4점으로 1차년도 점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1년 지원 주민자치회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 2차년도와 3차년도 역시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차별 주민참여 혁신모델 사업 추진현황 비교

대상지역	평균 점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8년 지원	50.0	61.4	61.4
2019년 지원	47.8	52.8	51.1
2020년 지원	40.6	44.4	-
2021년 지원	29.4	-	-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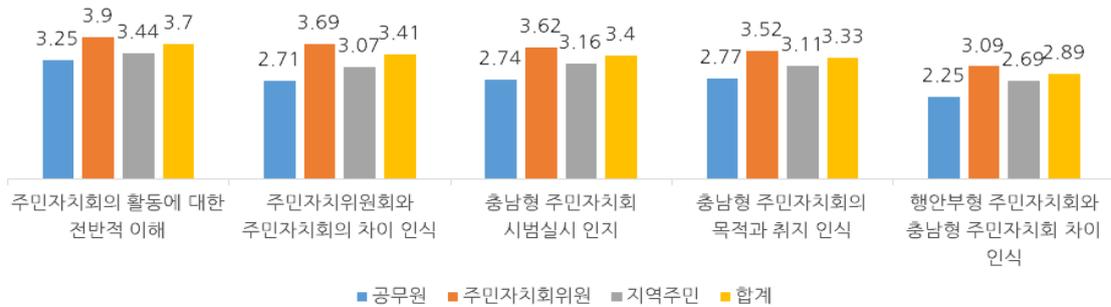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 인식
 영역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성과 인식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인식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 인식

📊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인식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일반 및 운영인식 전반에서 집단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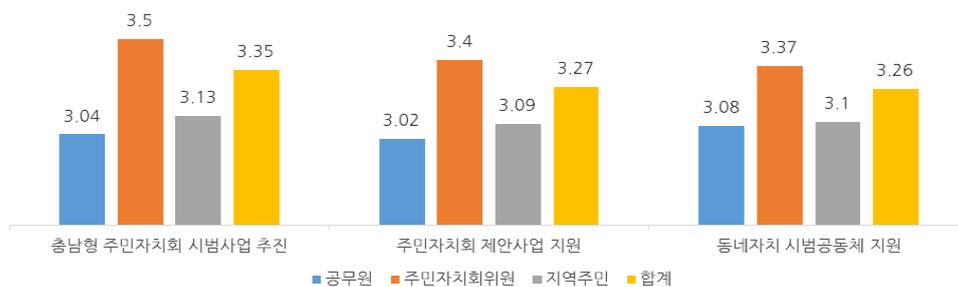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 영역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성과 인식

📊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의 만족도는 평균 3.29점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함
- 공무원 집단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별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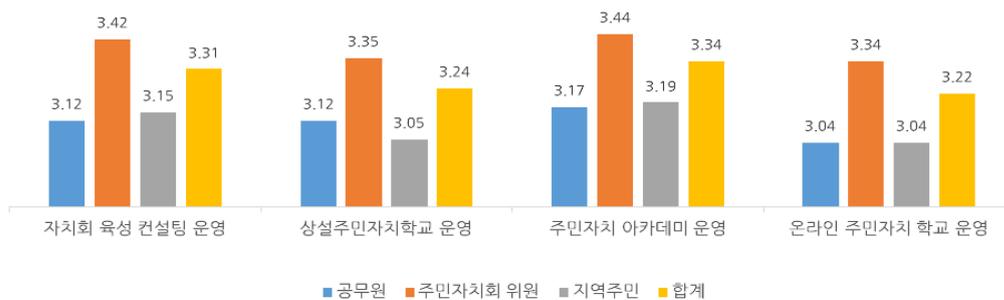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영역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성과 인식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의 만족도는 평균 3.28점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 공무원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함
- 공무원 집단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남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별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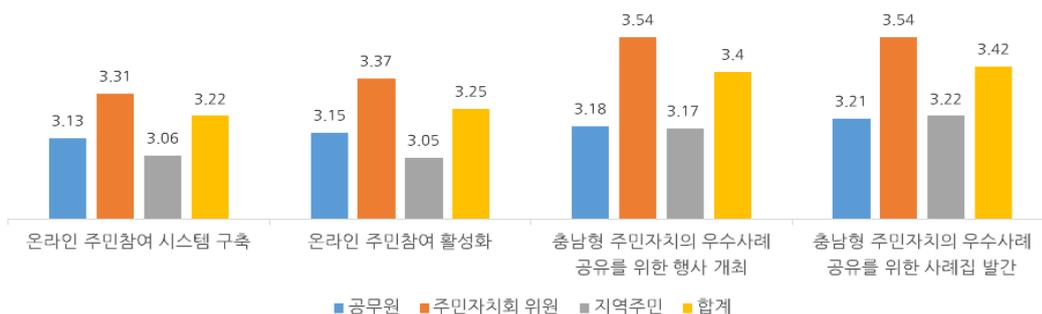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영역별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성과 인식

주민자치 발굴·확산 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평균 3.32점으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주민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함
- 지역주민 집단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남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별 만족도중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행사 개최, 사례집 발간 사업의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남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인식

-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인식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 부족'이 397명(33.8%),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371명(31.6%),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158명(13.5%),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 156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	비율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	371	31.6%
주민참여 부족	397	33.8%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	156	13.3%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158	13.5%
자치회 내 갈등	40	3.4%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	47	4.0%
기타	5	0.4%
전체	1174	100.0%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인식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함

- 주민인식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FGI를 실시

주민자치회 운영 및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FGI 결과

구분	주요 의견
주민참여 부족	- 인구가 적은 군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구성이 고령화 되어 주민참여나 활성화가 어려움 -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적음, 참여활동의 증가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	- 주민자치회 참여자의 주민자치 이해도 부족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 없음 - 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시 공모에 참여 자체가 어렵고, 사업비가 운영비로는 활용할 수 없음 -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유연한 운영 어려움
전담 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	- 주민자치회 상근자 부재 - 주민자치회 상근자에 대한 비용지원 필요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인식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한 지역선정 방식에 대한 질문에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 649명(55.3%)이 가장 높게 나타남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선정 방식 인식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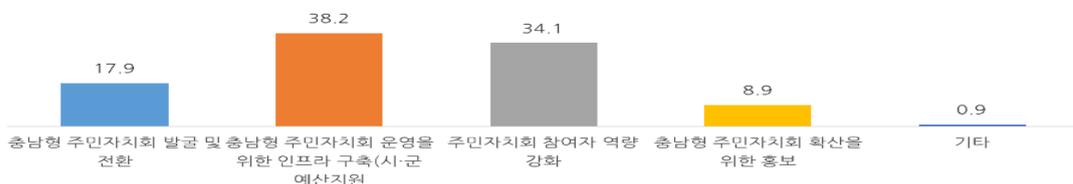
Ⅲ.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인식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해 충청남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분야에 대한 인식은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449명(33.2%), '주민자치회 참여자 역량 강화' 400명(34.1%),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 및 전환' 210명(17.9%) 순으로 나타남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한 정책 인식 빈도분석

구분	빈도	비율
충남형 주민자치회 발굴 및 전환	210	17.9%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449	38.2%
주민자치회 참여자 역량 강화	400	34.1%
충남형 주민자치회 확산을 위한 홍보	105	8.9%
기타	10	0.9%
전체	1174	100.0%



IV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개선방안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실태 분석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개선 방안

IV.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개선방안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실태 분석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 충청남도의 주민자치 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집행률은 감소하고 있음
- 충남도내 주민자치회의 전환은 증가추세이나 충남형 보다는 행안부형 주민자치회의 개소수가 많거나, 행안부형과 충남형을 중복해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가 다수임
-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의 사업내용은 도정 목표와 일치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획일화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음
- 충남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반해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의 지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

- 충남형 주민자치회 추진에 따른 성과를 정량화 하여 살펴본 결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역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매년 새롭게 구성되어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의 역량이 낮아 지는 것으로 평가됨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실태 분석 결과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인식 분석

-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일반적 인식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무원 간의 인식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대한 인식정도와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참여부족, 자치회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전담 인력의 부족 순으로 나타남
-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전환, 운영, 확산을 위해 충청남도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인 것으로 나타남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개선 방안

① 제도적 측면

주민자치 지원 계획 변화 추진

-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의 평가는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내 신규 공동체의 형성과 참여를 활발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중임
- 현재의 주민자치 지원 사업은 2~3년 이내 단기적 구성과 운영에 집중됨
- 이에 충남도의 광역차원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방향과 단계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함

주민자치회 지원 적정 성과지표 체계 마련

-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산의 미집행, 주민자치회 역량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나, 현행 지원제도는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과정을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다양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중간 모니터링 과정 및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개선 방안

① 제도적 측면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의 유연성 추진

-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 예산의 집행률 저하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견수렴 결과 획일화 된 예산항목의 배정과 정산으로 유연한 예산집행이 어려운 점이 요인중의 하나로 나타남
- 주민자치회별 자율성을 기반으로 예산의 지원과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동네자치 공동체의 지속적 발굴

- 충남도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의 획일화와 단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문제의 연결점 미흡 등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로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충남형 주민자치가 우리지역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충남형 주민자치의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주도해서는 안 됨
- 충남도는 허용하는 수준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과 활동들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또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민계층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동네자치 공동체의 발굴이 요구됨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7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개선 방안

② 운영적 측면

도, 시·군 협력 강화

-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충남도 차원의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은 충남도의 지원 이후 시·군의 적극적인 지속 운영 의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시범사업 종료 후 주민자치회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충남도로 이어지고 있음
- 충남도의 역할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시·군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하여 자치분권을 확립하는데 있음
- 이에 주민자치 지원사업에 대한 도, 시·군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도, 시·군의 협력은 주민자치회 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며, 세부적, 단계적 지원계획의 수립과 강화를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구축이 추진되어야 함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8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개선 방안

② 운영적 측면

주민자치회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 및 활용

- 충남형 주민자치회의 실태 분석 기준으로 선정된 항목중의 하나가 주민자치회의 상근인력 근무 여부임
- 주민 의견 조사에서도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근인력의 근무와 이를 위한 수당의 지급의 필요성 의견이 나타남
-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상근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은 어려움
-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흡, 사업추진의 연속성 측면에서 상근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한다면 주민자치회간 역량 편차를 줄이고 수당지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 사업 개선 방안

② 운영적 측면

주민자치회 지역사례에 대한 공유 플랫폼 운영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주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사업 추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비참여 주민과의 소통없다면,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위축될 수 있음
- 이에 주민자치 컨설팅, 교육, 추진사업 등 다양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가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우수사례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및 공유를 통한 학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 지역주민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참여 주체임
- 주민자치회 참여자들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교육프로그램이 획일화 되어있고, 동일한 내용의 지속적 반복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주민자치회 조직의 역량을 가늠하고 그룹에 따른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형 주민자치 지원사업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세션 2

지역과 함께하는 경제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전지훈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이홍택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강마야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 지 훈

2022.12

목차

I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배경

II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요 내용

III

일본 사례 검토

IV

제도의 인식과 재정유입 효과

V

충남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I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배경

I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배경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위기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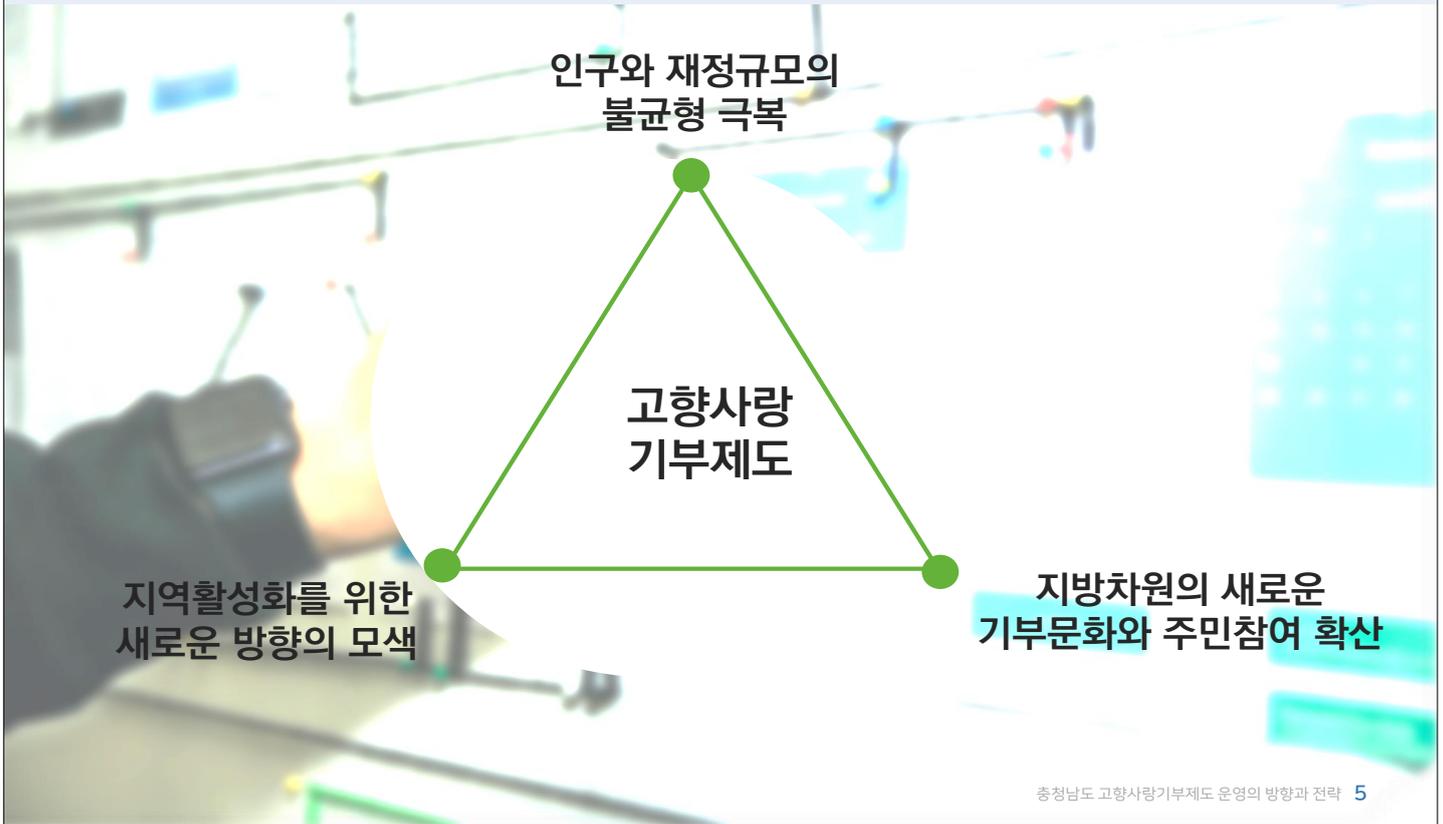
- ④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 인구감소 본격화로 지방소멸, 세수감소의 극복방안이 절실
- ④ 인구와 재정감소는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지방소멸 가속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규모 불균형 심화와 재정격차 확대

지방소멸 극복 위한 정책 다각화

- ④ 지방소멸, 인구감소 극복 위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발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2022.06) 발표
- ④ 정부 정책지원 및 재정지원으로 극복의 한계로 인해 기부를 통한 민간차원의 새로운 지자체 재원확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

기부행위로 인한 지역활성화 도모

- ④ 기부행위는 시민의 인식에 따른 자발적 행위로 경직적인 공공의 제도에서 벗어나 시민중심의 지역사회 관심증대와 지역활성화의 적극적 주민참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
- ④ 기부금활용과 답례품의 지속적 생산 공급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다양한 사업을 도모하는 기반 제공하고 새로운 지역의 홍보채널 확보



관련 법안 발의 경과

발의(재일시)	법률안	도입목적
이주영의원(2009.03.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불균형 해소
홍재형의원(2011.7.7.)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불균형 해소, 수도권 과밀화 해소
황주홍 의원(2016.7.13.)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제정)	농어촌 발전, 국가균형발전
안호영 의원(2016.8.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수증대, 지역균형발전
전재수 의원(2017.5.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세수증대 지역균형발전
홍의락 의원(2017.6.1.)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수도권 재정여건 개선,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강효상 의원(2017.6.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방재정 확충, 기부문화 활성화
박덕흠 의원(2017.8.8.)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재정 확충, 지역간 불균형완화
김광림 의원(2017.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애향심 고취, 지방재정 확충
김두관 의원(2017.9.14.)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발전
이개호 의원(2017.9.27.)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부문화 확산,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
주승용 의원(2017.9.29.)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이명수 의원(2017.11.17.)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애향심 고취, 지역재정불균형 완화 지역활성화
정인화 의원(2018.8.27.)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활성화
윤영일 의원(2018.9.13.)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제정)	기부문화 확대, 지역재정불균형 완화 지역균형발전

II

고향사랑 기부제도 주요 내용

II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요 내용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취지

- ①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 조세에서 공제해주는 기부금 제도의 원리를 의미
- ② 중앙 중심의 조세 배분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라는 행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 도모하고 재정격차 해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 ③ 주민이 태어난 장소 및 관심 있는 지역, 응원하고 싶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지역을 위해 기부하도록 조세를 공제하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세액공제를 통해 재정불균형 해소 도모
- ④ 본 제도는 본격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론이 우리나라에서 대두된 200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고, 제도의 모태는 2006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임

2009년 3월

고향사랑기부제
최초 발의

2017년 6월

국정추진과제 채택

2021년 9월

고향사랑기부제도
법안 의결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2022년 9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령 발표

기부의 동기와 인식

기부의 외적동기

-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국가 기부장려 정책, 세제혜택 및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기부문화로 파생된 동기

기부의 내적동기

- 인간 행위의 내적요인으로 시민으로 신념, 이타성, 동정심, 행복감의 인지적 접근이며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공공적 가치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기부를 통한 이상향에 동참하는 행위를 의미
- 내적 동기로 공공선 실현의 사회적 책임감은 기부행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통한 심리적 행복감이 증가하여 지속적 기부요인으로 중요성이 강조

일본의 제도도입 동기

- 일본은 제도도입 관점에서 '라이프사이클균형론' 과 '지역사회응원론' 의 시각이 주요하였고 일본에서 지역사회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며 응원의 필요성을 강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제2조 정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	기부자의 거주지의 지방정부 제외
제3조 법률 관계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접수, 사용 등에 관해 '기부금법' 적용 제외	기부금법 적용 제외
제4조 모금주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 가능	
제7조 모금방법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가능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권유·독려는 불가능	
제8조 접수 상한액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하며 단체장 명의의 영수증 발급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	영수증 발급, 개인연간 기부금 500만원 상한액

II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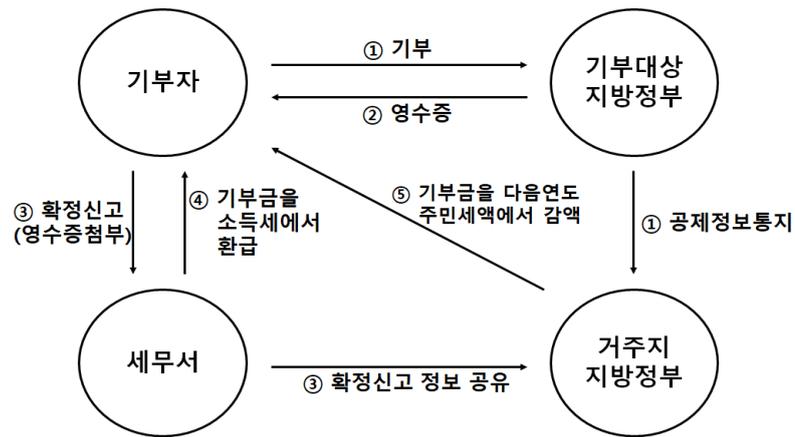
항목	주요내용	비고
제9조 답례품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제공 -답례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유가증권 등을 제공할 수 있음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는 제외	답례품 제공 가능
제11조 기금설치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함 -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해야 함	의무기금 설치 기금의 목적사용 규정
제12조 제도연구·지원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제13조 공개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함	
제14조 반환	-불법·위반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해야 함	

II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3-4조 기부금 접수 모금	-기부금 모금 경우 모금하는 지자체 명칭, 사용 용도, 기부절차와 방법, 답례품 제공 등을 명시해야 함 -접수할 때 기부금 기탁서를 받으며 본인 및 지자체 주민 확인과 총액상한, 답례품 제공 사항 확인	
제5-6조 답례품 제공 운영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유가증권, 개별소비세 부과하는 장소 입장권, 고가 스포츠용품 등 제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	
제7조 기금 관리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집과 운영 등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비율 내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 -전년도 기부금 10억이하(15%), 10억~100억(13%), 100억~200억(12%), 200억 초과(10%)	
제8-10조 시스템, 정보공개	-기부금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기부금 접수, 사용내역, 답례품 현황, 비용지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위반사실 및 제한에 대해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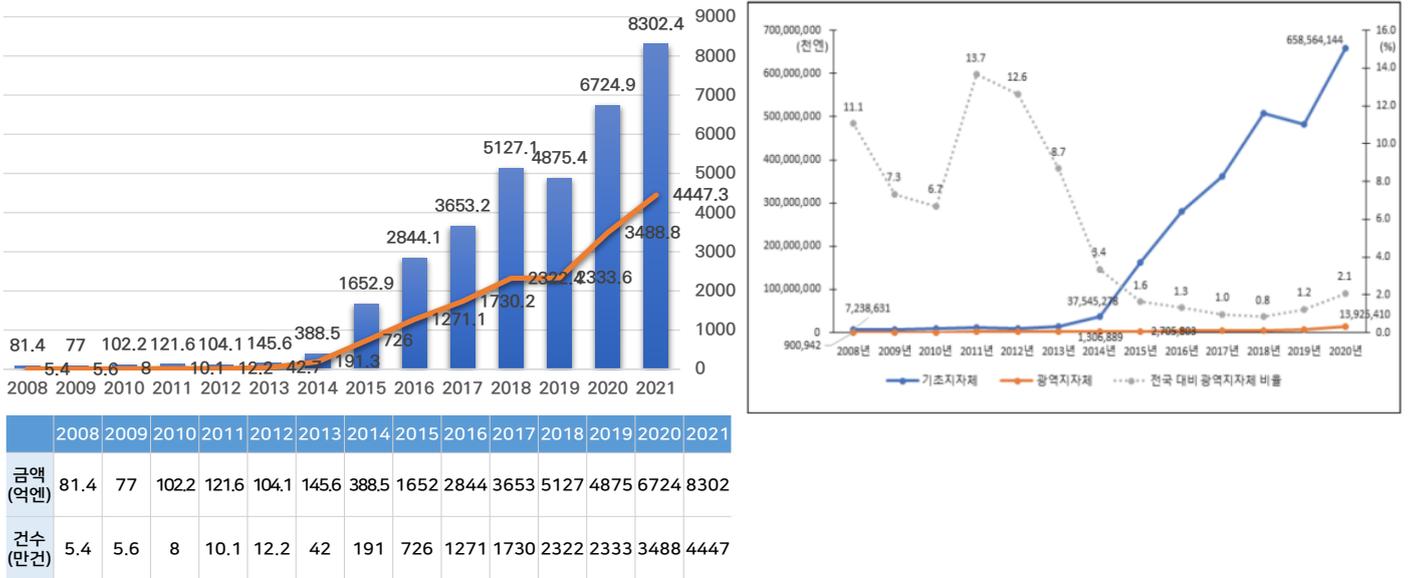
- ➡ 기부자는 기부대상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거주지의 지방정부는 기부자에게 세액을 공제(기부금 9%)
- ➡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소득세액공제(기부금 91%)에 따라 지방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III

일본 사례 검토

III 일본 사례 검토

일본 고향납세제도 추진 현황



- 2013년 이후 답례품 고품질화 및 경쟁확산과 2015년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등으로 기부활동 급증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후 일본에서 팬데믹으로 어려움 겪는 지자체 대상으로 기부활동이 지속적 상승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기부건수나 금액시 상대적으로 저조, 대형재난시 상승의 패턴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15

III 일본 사례 검토

주요 답례품 제공 현황

- 일본에서 고향납세 기부처 선택 이유에 대해 매력적 답례품 수령, 세금공제, 고향과 지역의 응원관점 응답
- 일본 답례품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제공형
 - 관광객과 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숙박형
 - 재난민이나 빈곤층을 돕기 위한 공익성 기부형

고향납세참여이유	응답비율(%)
실질적으로 무료로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음	77.5
매력적인 특전(답례품)이 있음	75.5
세금 공제 혜택	68.5
다양한 답례품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재미	65
고향납세가 전국적인 붐과 현상	51
자기의 고향 또는 마음에 나는 지역을 지원	50.5
고향 발전 및 지역활성화에 대한 관심	48

자료: 유학열(2021) 참조

유형	답례품(종류수)
농수산물 식품류	육류(57,755), 곡물류(36,422), 과일류(30,199), 해산물류(39,297), 채소류(16,099), 주류(27,833), 음료류(23,410), 과자류(28,171), 조미료(13,013)
여행	숙박권(9,454), 레저이용권(20,964)
특산품	공예품(49,595)
일용품	주방용품, 문방구, 서적, 그림사진 등(93,445)
기타	감사장, 인증서, 회원증 등(495)

자료: 일본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유학열(2021) 참조.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16

일본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현황

기부금의 지역사업 활용 내용

영역	사업내용
보육, 교육 분야	-지역 고등학교 환경정비, 공공학원 개설, 드론 및 pc지원 -무료 보육원 설치, 지역 중학생 국제교류 사업 지원, 지역관광 인재 육성 -아이 육아용품 세트 지원, 보육원의 어린이 영어 교육 강화, 지역초등학교 책 기부, 차량 이동식 도서관 설치 지원
역사, 문화 분야	-지역 중요문화재 수리 보수 지원 -지역 전통문화축제 비용지원 및 납세자 축제 초청 -지역 전통건물보존 정비사업 지원 및 인력 육성 사업 -역사자원 활용한 지역만들기 사업 지원 -지역 전통 예능 및 기능과 문화 계승 사업 지원 -지역 아동 교향악단 구성 및 운영 지원
복지 분야	-지역 아동보호시설 퇴소자의 생활준비금 지원 -지역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배달식)지원 -고령자 위한 교통수단 확보 지원(무료 이동 서비스 등) -폐교시설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쉼터 시설 조성 지원

자료: 유학열(2021) 재구성

기부금의 지역사업 활용 현황

사업구분	지자체수	정책수요(지자체수)		
		1순위	2순위	3순위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20	1	1	3
스포츠, 문화	29	1	8	2
의료, 복지, 건강	32	22	5	1
환경, 위생	28	0	4	5
교육, 인재양성	35	5	9	9
육아, 돌봄	29	1	5	6
지역 및 산업발전	28	2	3	4
관광, 교류, 정주 촉진	26	1	3	2
안심, 안전, 방재	26	1	1	1
재해복구, 지원	17	5	3	0

*복수응답으로 취합 자료: 신동철(2022)

- 기부금 활용은 기부자의 가장 큰 관심사로 지속가능한 기부활동의 가장 핵심이며 일본은 97%가 사용처 선택 가능
- 일본은 대부분 복지, 의료와 인재육성의 사회정책지원 분야에 활용되며, 재해복구의 성금 차원 기금도 다수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17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 내용

일본 고향납세제도 운영 자원 비율

- 일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답례품 조달 및 송부 비용으로 대부분 활용

구분	금액(백만엔)	비율(%)*
답례품 조달 관련 비용	140,615	38.5
답례품 송부 관련 비용	24,098	6.6
홍보 관련 비용	5,570	1.5
기부금, 답례품 결제 등 관련비용	7,752	2.1
기타 사무비용	24,671	6.8
합계	202,707	55.5

*비율은 총 기부금 대비 사용비율을 의미함 자료: 홍근석 외(2019)

정부 크라우드 펀딩(GFD) 운영

- 일본은 지역활성화 위해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정책사업(GCF)에 기부하면 고향납세와 동일한 세액공제를 제공
- 답례품 과열경쟁 폐해를 극복하고 기부활동으로 제도적 의의에 부합하여 일본 총무성에서 관련사업에 재정지원
- GCF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높으며 전체 도도부현의 68%가 시행되어 고향납세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18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운영 주체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단계별 지원 조직



- ① 일본은 대부분 고향사랑납세제도를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에게 업무를 위탁 수행
- ② 위탁기관은 해당 사업의 전체, 부분 활동을 대행하며 기부금의 수수료로 수익 창출
- ③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적극적 참여 경쟁을 통한 제도 효과성 확보,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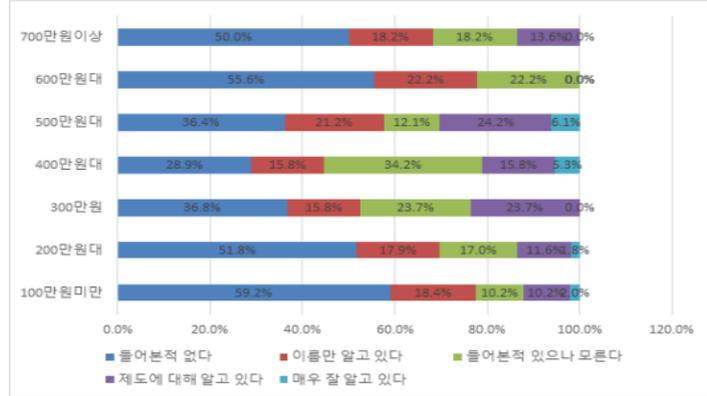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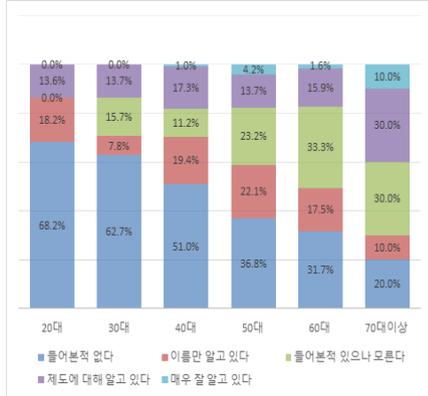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19

IV

제도의 인식과 재정유입 효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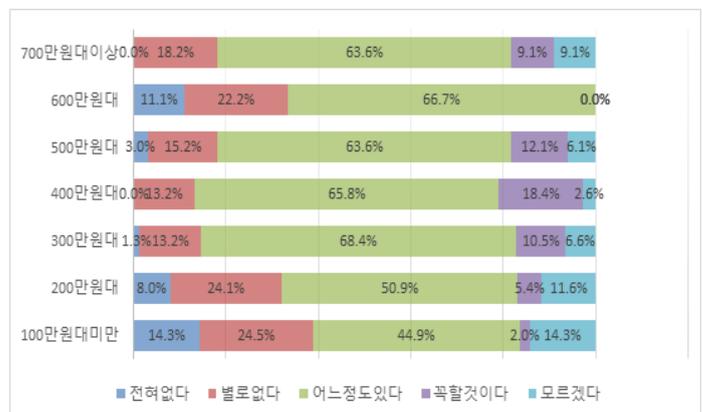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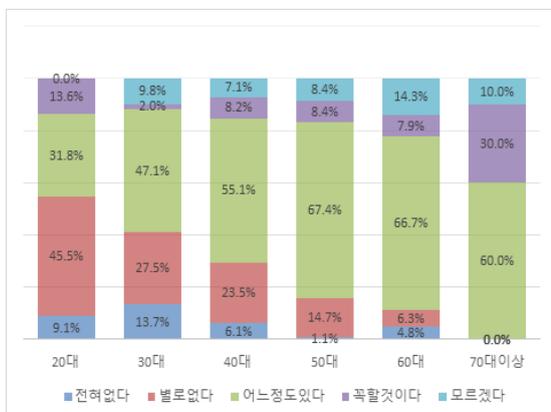
충남도민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지 현황



- ③ 절반 이상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적 홍보와 인식확산이 시급
- ③ 특히 연령이 낮을 수록 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연령에 따른 차별적 홍보 접근이 필요
- ③ 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인지도가 낮아서 고액 기부자 유인에 대한 전략도 필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 현황

충남도민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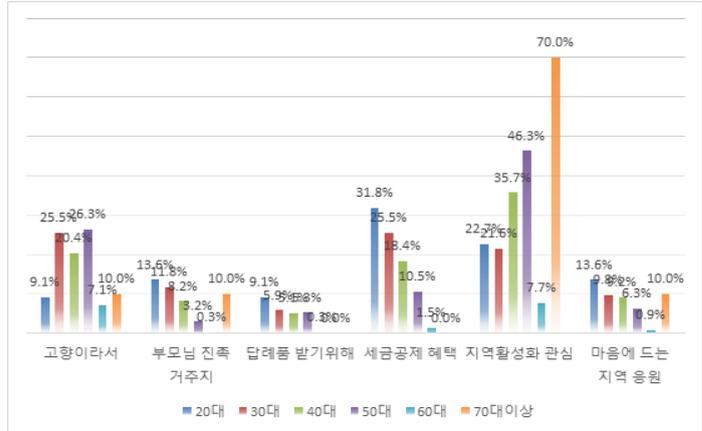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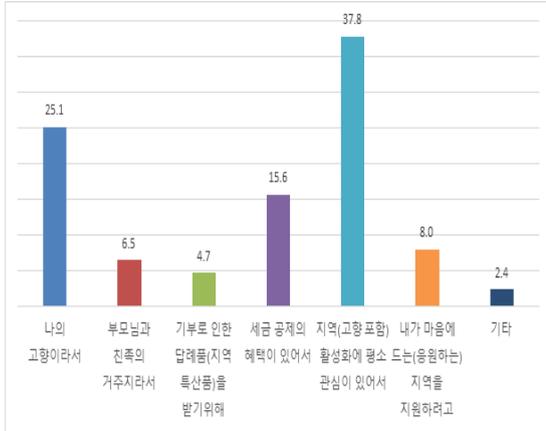


- ③ 제도 참여의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으며 낮을 수록 의향이 낮은 양극화가 심각하여 대응 필요
- ③ 소득수준별로도 300만원 이상 소득범위에서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자도 참여의향 높은 편임

IV 제도의 인식과 재정유입 효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 현황

충남도민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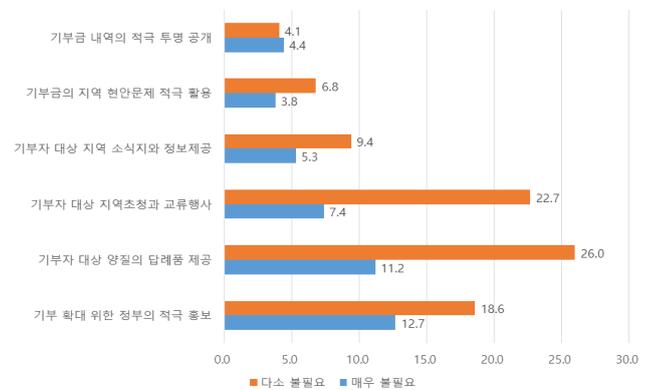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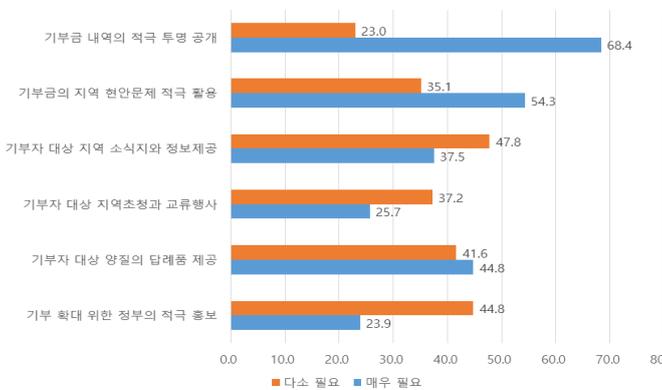


- ①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고향의 의미를 강조하여 지역사회 관심이 높음
- ② 20-30세대는 세금공제와 부모님 거주지의 관심이 높고 중장년층연 지역활성화 및 고향의 인식이 높음

IV 제도의 인식과 재정유입 효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 현황

기부금 활성화 위한 운영방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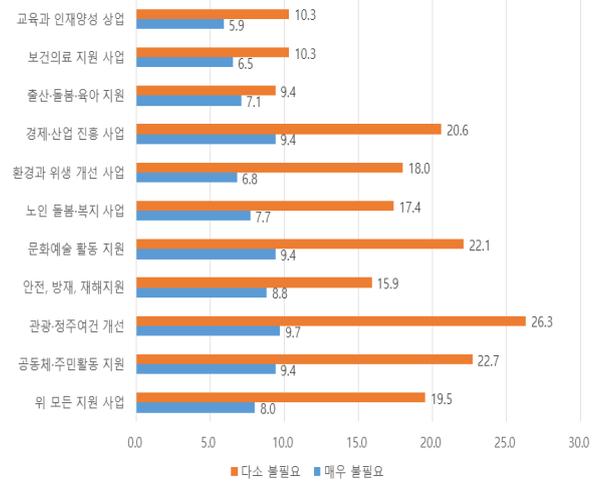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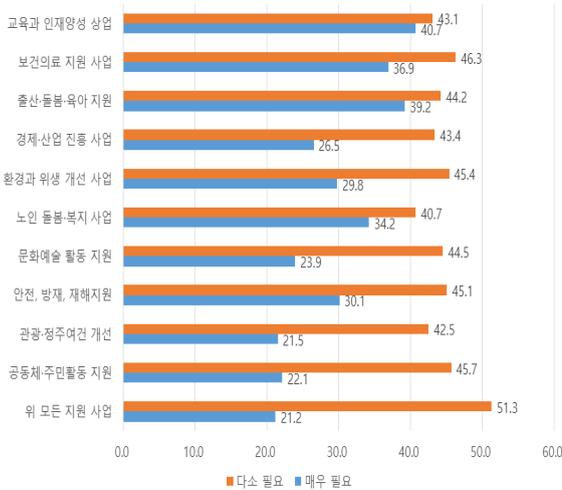


- ① 제도의 운영을 위해 기부내역 투명공개와 기부금의 지역사회 현안문제 효과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 ② 상대적으로 양질의 답례품 제공이나 정부의 적극 홍보 부분의 정책 필요성 인식은 높지 않음

IV 제도의 인식과 재정유입 효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 현황

기부금 활용사업에 대한 수요



- Ⓜ 기부금에 대해 교육과 인재양성, 출산돌봄육아지원, 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수요가 높음
- Ⓜ 상대적으로 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이나 주민활동으로 기부제 활용 인식이 부정적임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25

IV 제도의 인식과 재정유입 효과

충청남도 재정유입 효과

단위: 억원

구분	비율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				출향주민 중 근로소득 납세인구				출향주민 중 종합소득 납세인구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소득 세공제액	교부세감 소액	합계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소득 세공제액	교부세감 소액	합계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소득 세공제액	교부세감 소액	합계
충남출향주민 기부인구 적용 비율 및 금액	5%	34.0	3.4	232.1	-201.5	11.2	1.1	76.2	-66.1	3.6	0.4	24.9	-21.7
	10%	68.0	6.9		-171	22.3	2.3		-56.2	7.3	0.7		-18.3
	15%	102.0	10.3		-140.4	33.5	3.4		-46.1	10.9	1.1		-15.1
	20%	136.0	13.7		-109.8	44.7	4.5		-36.0	14.6	1.5		-11.8
	25%	170.0	17.1		-79.2	55.8	5.6		-26.0	18.2	1.8		-8.5
	30%	204.0	20.6		-48.7	67	6.8		-16.0	21.9	2.2		-5.2
	35%	238.0	24		-18.1	78.1	7.9		-6.0	25.5	2.6		-2
40%	272.0	27.4	12.5	89.3	9	4.1	29.2	2.9	1.4				

구분	비율	충남 제외 전국 경제활동인구				충남 제외 전국 근로소득 납세인구				충남 제외 전국 종합소득 납세인구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소득 세공제액	교부세감 소액	합계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소득 세공제액	교부세감 소액	합계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소득 세공제액	교부세감 소액	합계
타지역 거주 기부인구 적용 비율 및 금액	5%	1773.8	6.7	85.8	1,681.3	583.1	2.1	28.2	552.8	228.8	0.8	9.2	218.8
	6%	2128.5	8.1		2,034.6	699.8	2.6		669.0	274.6	0.9		264.5
	7%	2483.3	9.4		2,388.1	816.4	3		785.2	320.4	1.1		310.1
	8%	2838	10.8		2,741.4	933	3.4		901.4	366.1	1.2		355.7
	9.1%주1	3228.3	12.2		3,130.3	1,061.3	3.9		1,029.2	416.5	1.4		405.9
	10%	3547.6	13.4		3,448.4	1,166.3	4.3		1,133.8	457.7	1.6		446.9

주1. 지방행정연구원(2019)에서 제시하는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설문대상자의 비율이 9.1%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분석에 활용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26

충청남도 재정유입 효과 시사점

충남도민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 ① 충남의 출향인구 중심으로 기부금 유입 시나리오는 재정유입효과가 미미함
충남은 출향인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고액기부자 출향인사 적극 유치 등의 타겟 중심의 유치가 필요
- ② 경제력 갖춘 전국민 대상의 경우 재정유입 효과가 출향주민 대상보다 매우 높음
충남에서 재정유입효과 위해 공간적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적극 홍보와 기부 독려의 방안 필요
고향인식 기반의 출향민보다 세액공제, 활용사업, 답례품 중심의 일반주민의 지역 기부 동기가 중요
- ③ 하지만 전국민 9.1%의 충남 기부인구에 대한 재정유입규모도 1,029억, 405억으로 크지 않음
이는 충남과 시군을 모두 합친 '충청남도' 지역의 금액으로 광역 안분 비율은 더욱 크지 않음
또한 제도 운영을 위한 답례품 송부와 생산 및 운영 시스템 등 운영비용을 기부금에서 일부활용
- ④ 결국 본 기부제도로 인한 막대한 재정유입 효과를 처음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답례품으로 인한 지역홍보와 기부금 활용사업을 통한 지역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의의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감소 지역 대상 관계인구 확산으로 지역활성화 도모의 방안으로 활용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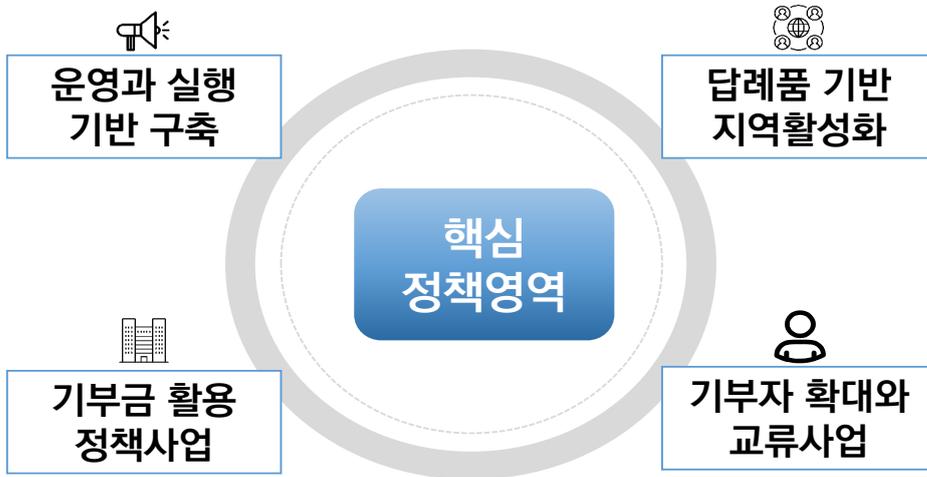
V

충남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영역의 도출

충남도민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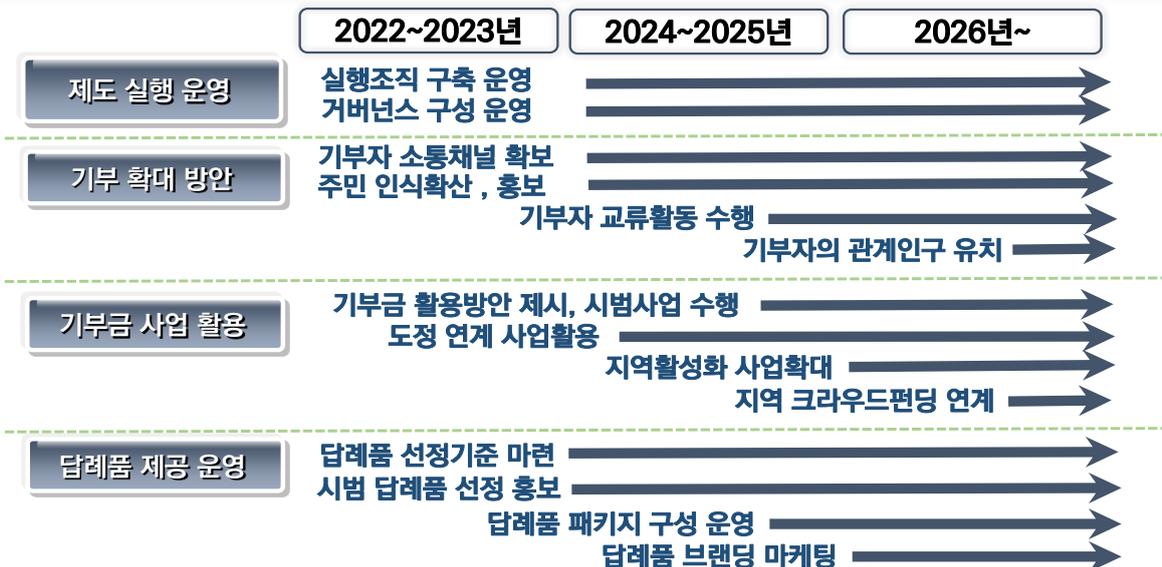
- ① 단기적으로 제도의 지역사회 정착과 안정화의 운영기반 마련과 답례품 제공의 시스템 구축 필요
이와 함께 기부자 수요기반의 기부금 활용사업 발굴, 기부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핵심
이러한 4가지 영역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영역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29

🏠 제도 운영 위한 정책영역 도출

- ① 정책영역별 수행되어야 할 세부 정책사업은 시기에 따른 중요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기적 사업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 구분의 필요
제도의 본질은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민간 기반 대안이라는 전략에 집중 필요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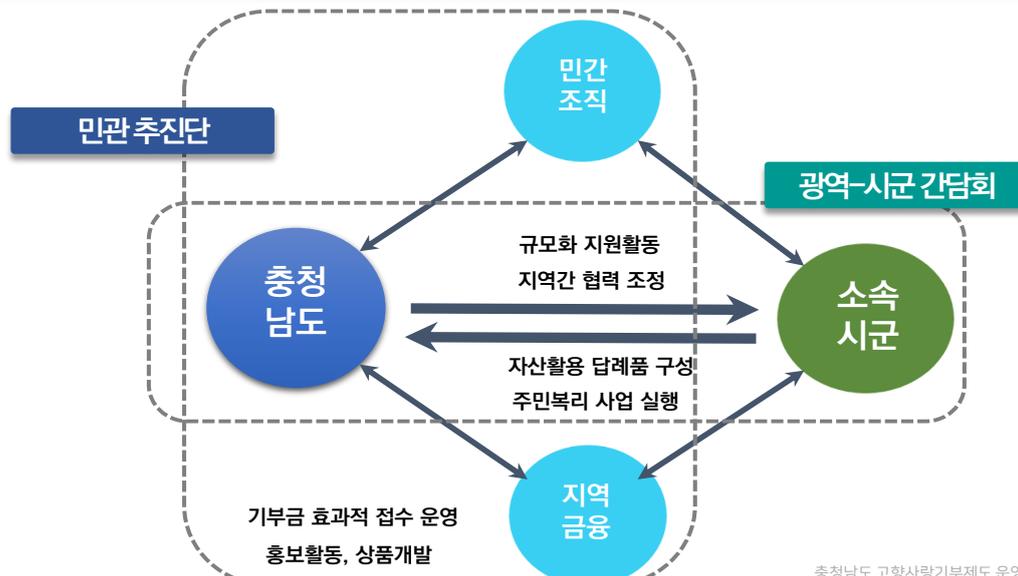
제도 운영 위한 전담조직 구축

- 2023년 부터 기부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조직 구성 및 배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은 행정 및 정책지원 업무로 민간에게 민간전문역량 활용의 위탁도 필요

구분	주요 업무(안)
팀장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업무총괄
행정, 홍보	-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 기부금 모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기부 목표액 설정 - 기부금 모집과 기부행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계획, 실행 - 충남 기금 및 기금활용사업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 관리	- 답례품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 운영과 생산·제공업체 기준 마련 - 답례품 품목개발과 답례품 운영 관리 - 답례품 선정 관리를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과정 관리 운영 - 답례품 공급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기관 관리·감독
기부금 관리	- 고향사랑 기부자 관리 운영(감사 서한문 및 기금사용내역 정기보고) - 기부자 대상 명예도민증 및 고약 기부자 별도 관리 운영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지 발간 운영 - 기부금 모집 시스템 관리 운영(세액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모금과 영수증 발급 등) - 기부금 부정모금관리 및 기부금 반환 업무
정보, 관리	-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용의 결과 및 보고서 공개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 선정 및 추진(취약계층 및 청소년육성보호, 문화예술보존,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지원 등) - 제도 관련 광역 및 기초 연계 네트워크 및 공동활동 추진 - 의회 업무 수행 및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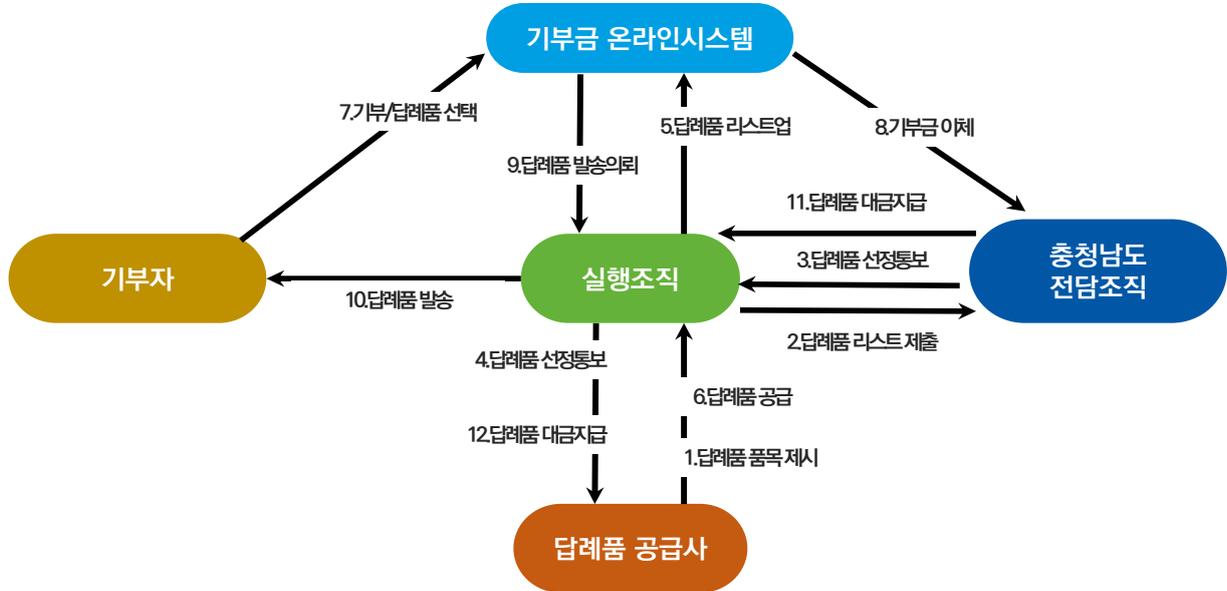
제도 운영 위한 조직간 협력방안 구축

- 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민간 위원회(답례품, 기부금 활용) 구성 운영
충청남도 와 15개 시군간 광역시군 간담회 구축 운영
제도 운영을 위한 농수축산의 유통지원과 홍보, 금융 및 기부신청을 위한 지역기관과 긴밀한 연계



제도 운영 위한 조직간 협력방안 구축

답례품 관련 민간조직 협력 업무 프로세스



자료: 김동영(202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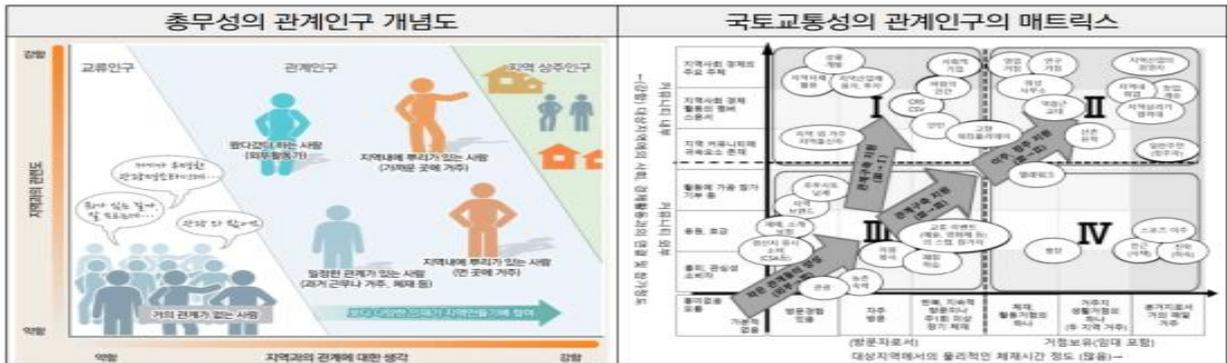
기부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

- Ⓢ (중앙정부) 제도에 대한 인식확산과 홍보 활동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활용과 답례품 매력 홍보
- Ⓢ 도내 주민 대상 기부제도 교육, 인식확산으로 홍보 강화, 주요 지역 홍보물 제작 비치로 정보제공
- Ⓢ 수도권 거주 지역 대학생 및 직장인 등 교류 인구중심 '충남사랑인' 등 홍보단 구성 운영
- Ⓢ 충남의 고향사랑기부 제도 및 내용의 홍보는 세대에 따라 특화된 내용이 필요

	홍보방식	홍보내용
청년층 (20-30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온라인 미디어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기부에 따른 다양한 답례품 -기부행위의 세액공제 -지역간 차별 해소, 사회적 문제해결의 착한소비 가치
중장년층 (40-50대)	-지역주민 통한 바이럴 홍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통한 홍보 -지역 공동체, 주민조직 활동 중심 홍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 -기부 활용처의 적극 공개로 기부 효능감 확산 -지역 특산물 기반 답례품 관심 -부모님 이미지 활용한 지역홍보
고령층 (60대 이상)	-매스미디어 통한 인식확산 -주요 명소 및 기관의 리플렛 등 홍보물 접근 -오프라인 중심 대면접촉	-고향 이미지와 브랜딩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방안 부각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지역상품 및 특산물, 관광상품
공통	-각 세대별 지역 명사 중심의 미디어 홍보 -대중교통 및 옥외광고판 홍보	-지역기반 먹거리 중심 특산물 -지역 관광지 및 여행상품 -기부제도로 인한 지역의 변화로 가치 창출

기부자 교류 확산 및 관계인구 형성

- ① 도기부자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부자의 기부이사 지속성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
지속적 기부행위 창출을 위해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투명한 내역 공개와 구체적 활용의 피드백 필요
- ② 충남 기부금 정보공개 및 활용사업 정보제공 등 충남 자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추후 GCF 활용 기반)
충남 기초지자체 중심 기부자에게 시군 고향사랑 소식지 분기마다 제작 발송 (충남 소식 공통 적용)
충남 지자체 차원의 기부행위에 대한 적극적, 공개적 감사표현 (명패, 조형물, 감사공간 등)
- ③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극복 위해 기부자와 지속적 교류관계를 확산하여 관계인구, 생활인구로 유입
지역에 정주민구 확대보다 지역과 지속적 교류와 관계형성을 통해 유입 유인 전략, 기부제도가 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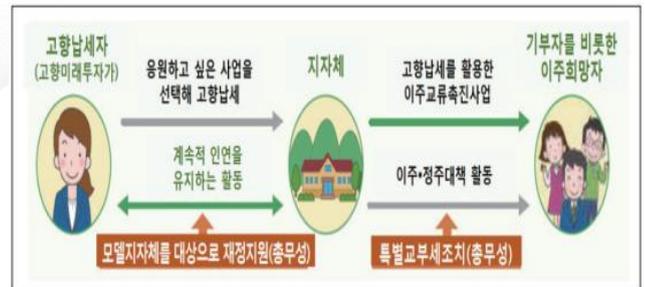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35

기부자 교류 확산 및 관계인구 형성

- ① 중장기적으로 관계인구 고려한 기부제도 기반의 지자체별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단순한 재정유입효과보다 지역 관계인구 형성의 장기적 안목이 중요

대상자	정책사업	효과
기부자	-세액공제 등 기부행위 참여 유인 -지역 상품·서비스의 답례품 제공 -지역문제해결 및 활성화 사업 기부 참여	지역의 관심, 응원 형성
교류인구	-지역방문시 종합정보지, 숙박권, 식사권, 관광바우처 등 인센티브 제공 -기부자 대상 연회 지역방문의 날 개최 -기부자 대상 다양한 지역 체험기회 마련 -지역 주치 이벤트 및 축제 등 행사와 재난구호의 자원봉사 활동 기회 부여	지역활동 참여, 빈번한 교류 형성
관계인구 체류인구	-1달살이 등 중장기 관광, 휴양거주 등 체류 위한 기반과 프로그램 마련 지원 -귀농귀촌 관심자 대상 농산어촌의 1달 거주기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업무활동 수행 위한 기반(위케이션, 지역사무소 등) 제공 -지역사회 다양한 취창업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공	지역과 밀접한 관계 활동 추구, 지역생활과 거주 경험 형성
정주민구	충분한 지역관계 형성 주민 -지역사회로 이주하여 정주민구 형성	인구 확대



충청남도 차원에서 단기적 성과와 함께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기부자들에 대한 관계인구 편입의 정책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36

기부금의 정책활용 사업

➤ 법률상 활용사업을 넓은 범위로 규정하며 지자체도 기금사용 목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충남에서 기금 활용사업 기준과 가이드라인 규정은 필요하며 활용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활용사업 예시(안)

- ①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며 소외계층 복리 증진 우선사업
- ② 충남 내 초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활용
- ③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수행되는 정책을 제외한 사업
- ④ 최대한 기금 활용에 대해 지역주민의 효능감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
- ⑤ 기금 활용에 대한 성과와 결과가 기부자에게 전달되기 용이한 사업

➤ 아래의 전국 및 충남 인식조사 기반의 정책사업 발굴과 탐색이 효과적
활용사업이 여러 기초시군에 함께 적용될 경우 충청남도의 연계,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 방안 모색 필요

구분	전국	충남
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	5위	1위
건강, 보건, 의료 지원사업	1위	3위
출산, 아동, 육아 지원사업	4위	2위
지역 경제 및 산업 진흥 사업	2위	7위
환경과 위생개선 사업	3위	6위
문화예술, 스포츠 진흥 사업	9위	8위
공동체, 시민활동 지원 사업	8위	9위
관광, 교류, 정주여건 개선 사업	6위	10위
안전, 방재, 재해지원 사업	7위	5위
기타	10위	4위(노인돌봄)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37

답례품 운영 전략

- 충남에서 답례품 선정을 위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배포 필요
- 시급히 마련하기보다 현재 충남에서 운영중인 농사랑, 따숨물 등 온라인 플랫폼 유통, 등록기준 참고

농사랑 플랫폼



따숨물 플랫폼



- 충남의 광역차원에서는 답례품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기준, 테마의 패키지 형식 답례품 구성(전문MD 활용)
- 시군차원에서 답례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가치부여, 통합적 포장시스템 구축 등 고도화 지원 필요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38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의 방향과 전략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이홍택 전문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이홍택·홍은일

2022.12.20

목차

I

개요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I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성장촉진 방안

연구목적

- ① 지원 종료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의 운영상황, 성공 및 실패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정책방안 제안

연구내용

- ①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특성, 제도화 과정 및 정책 동향 분석
- ②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사례분석 및 설문조사
- ③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성장촉진 방안을 제안

정책제안

- 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대전환을 위해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기초역량 강화 지원 필요
- ② 중간지원조직의 성장지원 역량강화 필요
- ③ 사회적기업의 가치 체감 확대 및 도민 인식개선 필요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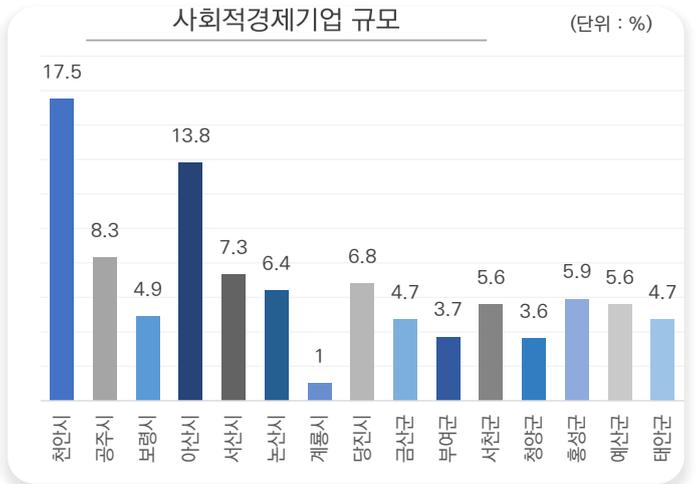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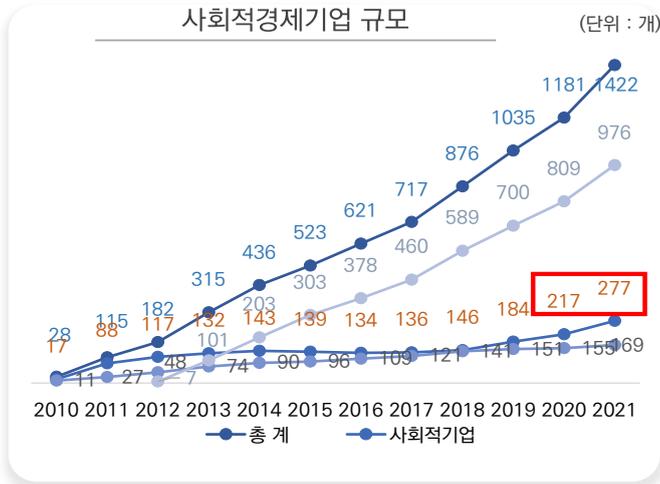
개요

현재의 상황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현재의 상황

● 충남 사회적경제는 2021년 12월 기준 1,422개, 사회적기업은 277개(19.5%)

- 1차기간(2013~2017)의 경우, 315개 → 717개로 연평균 17.9% 증가
 - (예비)사회적기업 132개 → 136개로 연평균 0.6%, 마을기업 74개 → 121개로 연평균 10.3%,
 협동조합 101개 → 460개로 연평균 35.4%
- 2021년 12월 기준 1,422개로, 2차 계획기간(4년) 중 연평균 12.8% 증가
 - (예비)사회적기업 146개 → 277개로 연평균 17.4%, 마을기업 141개 → 169개로 연평균 4.6%,
 협동조합 595개 → 976개로 연평균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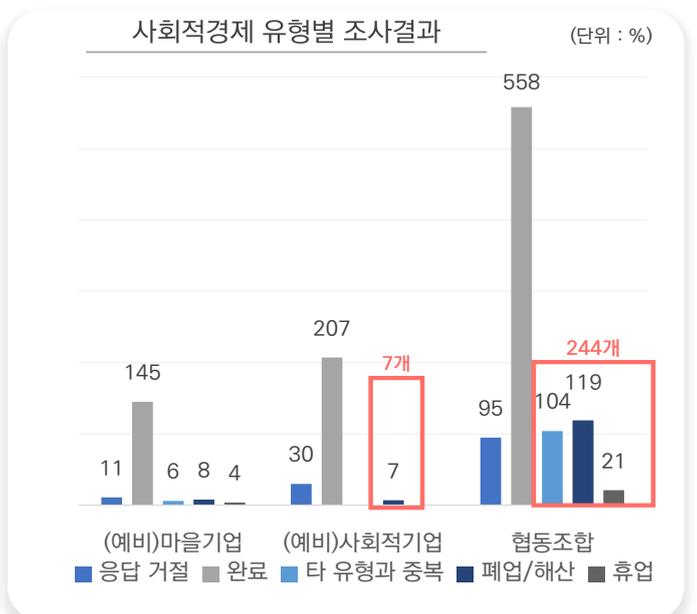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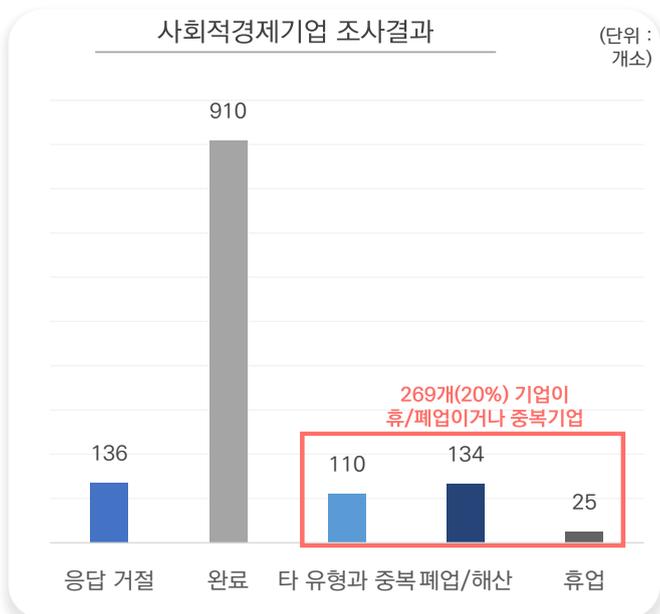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01

1. 현재의 상황

● 실태조사 결과 1,315개 기업(2021. 6. 기준) 중 1,046개소가 가동 중이며, 269개(20%)기업이 유명무실

- 사회적기업은 폐업/해산이 7개소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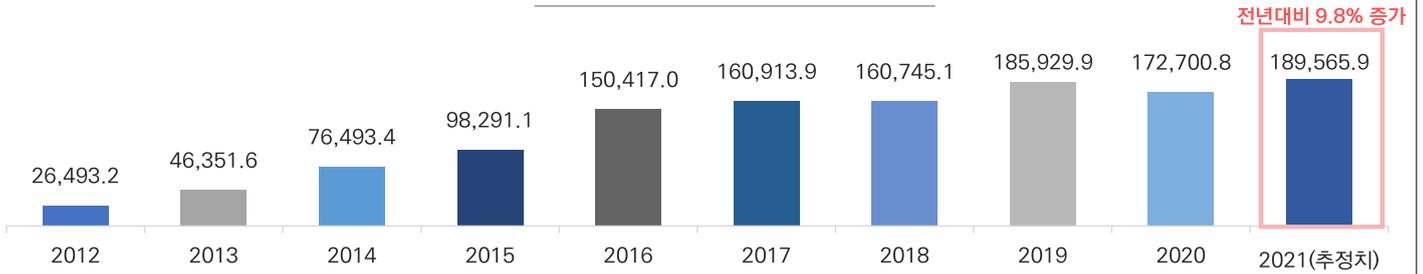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02

1. 현재의 상황

● 매출액은 지속 성장하여 2021년 1,896억원 규모, 평균매출액은 감소하여 2.3억원 규모

연도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1. 현재의 상황

● 충남 사회적경제 규모는 매년 1.8% 성장, 1천 7백억원 성장, 기업당 매출 평균 2억 5천 3백만원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의 중위값 7천만원으로, 매출평균값과 1억 8천 3백만원 차이
- 매출 중위값은 총매출 증가(1.8%), 평균값(-8.9%)에 비해 매년 32.8% 증가

유형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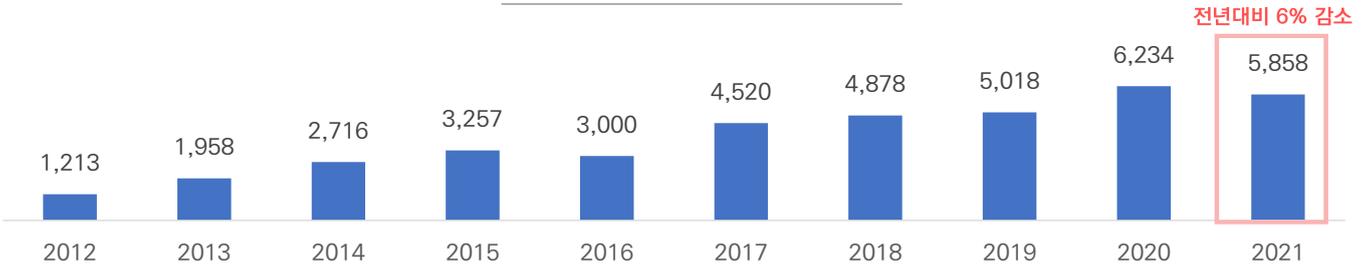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구분	2천 만원 미만	2천~5천 만원	5천~1억	1억~3억	3억~6억	6억 초과	기타	평균	합계	
매출 규모	160,9139	160,7451	185,9299	172,7008	189,565.9	3.3%	전체	32.7	18.7	11.6	15.2	5.5	6.5	9.8	231	189,566	
매출 평균 값	356.0	305.6	258.9	253	230.9	-8.3%	유형	사회적 기업	9.0	10.6	11.7	26.1	19.1	22.3	1.1	691	128,529
매출 중위 값	22.5	42	58.5	70	40	12.2%		마을기업	37.6	25.6	14.4	14.4	1.6	-	6.4	60	7,014
평균 중위 값 차	333.5	263.6	200.4	183	190.9	-10.6%		협동조합	39.2	19.8	11.1	11.9	2.0	2.8	13.2	104	54,023

1. 현재의 상황

2021년 사회적경제 종사자는 5,858명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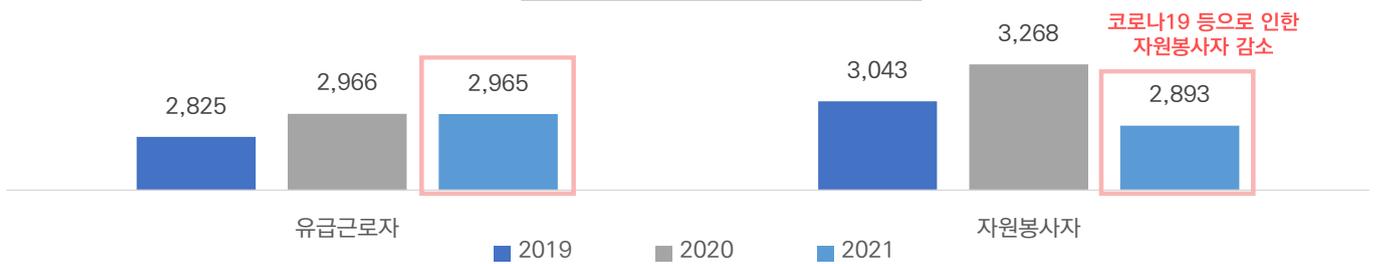
연도별 총 종사자 수

(단위 : 명)



유급근로자 자원봉사자 비교

(단위 : 명)



1. 현재의 상황

사회적기업은 57.4%가 5인 이하 사업장, 100명 이상 근무하는 곳도 2개소

유형별 유급근로자 고용현황(2021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1인기업	5인 이하	6~10명	11~30명	31~50명	51~100명	100명 초과
사회적기업	16	92	42	29	4	3	2
마을기업	67	52	5	1	0	0	0
협동조합	372	191	24	7	2	1	0
총합계	455	335	71	37	6	4	2

업종별 유급근로자 고용현황(2021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1인기업	5인 이하	6~10명	11~30명	31~50명	51~100명	100명 초과
농·축산·어·임·광업	71	45	8	2	0	0	0
제조업	50	66	10	12	2	0	1
도·소매, 유통	70	44	10	4	0	0	0
요식업	10	12	0	0	0	0	0
문화·예술	54	37	6	5	0	0	0
교육·보육	86	59	5	2	0	0	0
보건·복지·건강	14	9	5	3	0	3	1
청소·환경·재활용	33	22	14	7	1	2	0
지식서비스업(IT, 영상 등)	6	19	3	0	1	0	0
기타	61	22	10	2	1	0	0
총합계	455	335	71	37	5	5	2

I. 개요

1. 현재의 상황

●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과 탈락 (생존률)

■ 인증사회적기업 : 2016년 이후 10개 취소(13.7%), 재정종료 이후 생존률 86.3%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주)나눔가게						18.12.28.
(사)충남신체장애인 복지회 보령지부						폐업(경영악화) 16.6.7.
(주)희망나눔						상호변경 (현 이룬친구들)
(주)북카폐산세						취소(요건 미충족) 19.1.14.
충남장애예방 교육센터		충남장애예방교육센터				반납(경영악화) 19.8.19.
계룡한강치공사						폐업(경영악화) 20.3.10.
주식회사리움						20.1.29.
순천향사람						취소(요건 미충족) 17.7.11.
사단법인 더울림						폐업(경영악화) 19.8.5.
다들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장 이전 (경기도)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						상호변경 (현 에스이건축기공협동조합)
(주)맛있는국수집						폐업(경영악화) 19.7.22.
주식회사마이소사이어티						사업장 이전 및 상호변경 (현 퍼센트)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상호변경(현 씨엔협동조합)
주식회사충남유소년스포츠						취소(요건 미충족) 20.3.25.
총 73개	총 86개	총 97개	총 104개	총 115개	총 143개	2016년 이후 10개 취소(13.7%)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07

I. 개요

1. 현재의 상황

● 인증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과 탈락 (생존률)

■ 2016년~2021년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46개소 ■ 2016년 5.6%로 낮았으나, 2017년 11%, 2019년 13.5%, 2021년 16.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폰테뮤직협동조합						
주식회사 나무와사람들						
(재)명학정학회						인증(2017)
바른먹거리영농조합법인						인증(2018)
협동조합 고랑이랑						인증(2017)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						
(주)충남유소년스포츠						
(주)서천식품						인증(2019)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서천지회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인증(2017)
(주)대원지앤지						
(주)농플라워						
(사)글로벌드림아카데미						인증(2018)
서천시장협동조합						
서천생선구이개협동조합						
(주)맑은세상						
아산배방로컬푸드협동조합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영농조합법인						
(주)영클컴퍼니						
월명팜영농 조합법인						
(주)빛채움						
농업회사법인(주)산들본가						
(주)해강공예						인증(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주식회사휴비즈코리아						
건강한교육협동조합						
공주다살림사회적협동조합						인증(2021)
주식회사정성온밥상						인증(2021)
주 본래순대 보령점						
군현어촌계						
아산친환경학교급식생산자영농조합법인						인증(2021)
에프앤비브릿지협동조합						
(주)몽두레						
에스그린협동조합						인증(2021)
(주)논산주거복지센터						
사단법인반딧불나눔복지재단						
(주)식판생생민당진점						
다빈치건강놀이심리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주)문누리유한회사						
리얼라이즈컬처앤컴퍼니						
오석영농조합법인						인증(2021)
해미S&F영어조합법인						
서천문화예술연구회협동조합						
주식회사청양주거복지센터						인증(2021)
총 63개	총 84개	총 103개	총 145개	총 178개	총 277개	46개 인증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08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양적 증가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
그러나 질적 성장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182개에서 2021년 1,416개로 규모가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전체근로자의 73.7%),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가치 창출
그러나,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약 20%가 유명무실(2021년 6월 1,315개기업중 269개기업이 휴·폐업)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3억원, 영업이익 1천만원 이하 64.9%
코로나19 위기 이후 많은 기업(79.3%)이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필요성을 호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대부분 초기창업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지원종료 이후의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도 미흡한 상황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촉진 방안 마련 필요'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09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조사개요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사례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1. 조사개요

공간범위

- 충청남도 전역

조사범위

- 2016년 이후 지원이 종료된 180개소 중 110개소 조사

조사방법: 면대면 방문조사

- 조사기간: 2022년 5월-6월
- 조사방식: 면대면 설문조사

응답대상

- 사회적기업 54.5%, 예비사회적기업 45.5%
- 사회적기업 법인유형별로는 주식회사 60.9%, 일반합동조합 12.7%, 영농조합 10.9% 순
- 주사업분야별로는 문화·예술 20.0%, 제조업 16.4%, 청소·환경·재활용 16.4%, 지식서비스업 10.9% 순

구분		주요 조사내용
기본현황	기업특성	·기업소재지, 대표자 성별, 인증 종류, 사회적기업 유형, 운영 상황, 법인설립일, 법인 유형, 주 사업 분야, 성장단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정부나 민간 지원 사업	·지원처(기관), 지원사업명, 지원연도(시작-종료), 금액 ·지원사업이 사업 초기 정착 도움 여부 ·지원사업이 기업 성장(스케일업) 도움 여부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실태	지원종료 이후 상황	·지원종료 이후 기업 경영 상황 ·지원종료 이후 기업 운영 변화, 사회적기업으로서 경영활동의 어려움 ·지원종료 이후에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생각 여부
	내적역량	·기업경영: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제품 및 서비스 지속적 개발, 고객 이탈률, 지속적인 신규고객 확보 활동, 유통구조(채널), 홍보 방법, 기업 브랜드 이미지 ·사회적미션: 당초 설정한 사회적목표 지속 여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 실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 일자리 복지 개선, 직원 역량 강화
	외적역량	·자원동원: 조합원(지역주민) 고정적 기부금(후원금), 벤처 등 다양한 투자자금 유치, 정책사업 지원, 소비자 연계 투자금 유치 ·외부네트워크: 공공기관, 대. 중견기업 등 협력관계, 지역주민, 소비자 및 시민사회 등 협력관계,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신규 사회적기업 창출을 위해 지원 활용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종료 이후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	·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 시도 유무, 시도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 인증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등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계획 유무, 인증 신청 예정 시점
	애로사항	·당면 애로사항: 경영전반 및 사회적가치 실현에서 어려움점, 현재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책 ·비즈니스 부문: 온·오프라인 희망 판매 채널 ·자금 부문: 자금 대출 필요 여부, 필요시 대출 규모
	정책 수요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11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 지원종료 후 기업 경영상황

-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62.7%가 안정적으로 운영(110개 기업 중 69개)
- 인증 사회적기업은 81.6%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60%가 휴폐업 또는 일반기업 전환

구분	사례 수	후·폐업 중임	1년 내에 후·폐업을 고려	지원받을 때와 별 차이 없음	일반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속 성장세에 있음	
[전체]	(110)	8.2	5.5	21.8	23.6	40.9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60)	-	-	18.3	18.3	63.3
	예비 사회적기업	(50)	18.0	12.0	26.0	30.0	14.0
사회적 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56)	5.4	-	25.0	19.6	50.0
	사회서비스 제공형	(5)	-	20.0	-	20.0	60.0
	혼합형	(9)	-	-	33.3	22.2	44.4
	지역사회 공헌형	(17)	17.6	11.8	11.8	35.3	23.5
	기타형	(23)	13.0	13.0	21.7	26.1	26.1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11)	-	9.1	27.3	36.4	27.3
	제조업	(18)	11.1	-	11.1	22.2	55.6
	문화·예술	(22)	9.1	9.1	36.4	22.7	22.7
	교육·보육	(10)	20.0	20.0	30.0	20.0	10.0
	청소·환경·재활용	(18)	5.6	-	11.1	22.2	61.1
	지식서비스업	(12)	-	-	16.7	33.3	50.0
	기타	(19)	10.5	5.3	21.1	15.8	47.4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12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 지원종료 후에도 사회적기업이라 인식 여부

-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84.5%
- 인증 사회적기업에서는 98.3%가 응답한 반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는 68.0%

구분		사례 수	사회적기업임	사회적기업이 아님
[전체]		(110)	84.5	15.5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60)	98.3	1.7
	예비 사회적기업	(50)	68.0	32.0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56)	91.1	8.9
	사회서비스 제공형	(5)	100.0	-
	혼합형	(9)	100.0	-
	지역사회 공헌형	(17)	70.6	29.4
	기타형	(23)	69.6	30.4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11)	100.0	-
	제조업	(18)	77.8	22.2
	문화·예술	(22)	86.4	13.6
	교육·보육	(10)	70.0	30.0
	청소·환경·재활용	(18)	88.9	11.1
	지식서비스업	(12)	75.0	25.0
	기타	(19)	89.5	10.5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13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 지원종료 후 어려운 부문

- 인건비 증대로 인해 고용유지가 힘들다 44.5%, 판로확보가 어려워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18.2%,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확대가 어렵다는 의견이 15.5% 순

구분		사례 수	인건비 증대로 인해 고용유지 힘들	판로확보 어려워 매출이 지속 감소	온라인 확대로 인해 대응이 어려움 등	투자유치 어려워 사업확대 어려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공감대 형성 어려움
[전체]		(110)	44.5	18.2	10.0	15.5	11.8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60)	40.0	13.3	10.0	20.0	16.7
	예비 사회적기업	(50)	50.0	24.0	10.0	10.0	6.0
사회적 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56)	48.2	14.3	10.7	16.1	10.7
	사회서비스 제공형	(5)	40.0	-	20.0	20.0	20.0
	혼합형	(9)	22.2	11.1	-	33.3	33.3
	지역사회 공헌형	(17)	47.1	23.5	17.6	-	11.8
	기타형	(23)	43.5	30.4	4.3	17.4	4.3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11)	54.5	36.4	9.1	-	-
	제조업	(18)	33.3	16.7	5.6	22.2	22.2
	문화·예술	(22)	40.9	27.3	13.6	13.6	4.5
	교육·보육	(10)	60.0	20.0	-	20.0	-
	청소·환경·재활용	(18)	44.4	11.1	11.1	11.1	22.2
	지식서비스업	(12)	41.7	8.3	8.3	16.7	25.0
	기타	(19)	47.4	10.5	15.8	21.1	5.3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14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 지원종료 이후 내적역량(기업경영)

구분	매출액/영업 이익 지속적 증가	제품/서비스 지속적개발 (개선)	고객의 이탈을 낮춘편	지속적신규 고객 확보	유통 구조가 매우 효율적	홍보 방법이 효과적	브랜드 (이미지) 우수함
[전체]	3.01	3.48	3.28	3.35	3.26	3.35	3.45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3.30	3.83	3.52	3.65	3.53	3.75
	예비 사회적기업	2.66	3.06	3.00	2.98	2.94	3.10
사회적 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3.23	3.63	3.45	3.48	3.38	3.61
	사회서비스 제공형	3.00	3.40	3.80	3.60	3.40	3.20
	혼합형	3.22	3.44	3.22	3.56	3.22	3.33
	지역사회 공헌형	2.76	3.41	3.06	3.18	3.00	3.18
	기타형	2.57	3.22	2.96	3.00	3.17	3.22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91	3.64	3.27	3.45	3.27	3.36
	제조업	3.06	3.56	3.11	3.22	2.94	3.44
	문화·예술	2.77	3.41	3.05	3.09	3.09	3.23
	교육·보육	2.30	2.90	3.00	2.90	3.20	3.10
	청소·환경·재활용	3.39	3.72	3.39	3.61	3.39	3.33
	지식서비스업	3.25	3.75	3.33	3.67	3.50	4.00
	기타	3.16	3.32	3.74	3.47	3.53	3.74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 지원종료 이후 내적역량(사회적미션)

구분	당초 설정한 사회적목표를 지속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을 실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참여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를 개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노력
[전체]	3.74	3.77	3.63	3.26	3.45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3.98	4.03	3.83	3.58
	예비 사회적기업	3.44	3.46	3.38	2.88
사회적 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3.82	3.86	3.66	3.48
	사회서비스 제공형	3.80	3.60	3.80	3.80
	혼합형	3.78	4.00	3.22	3.22
	지역사회 공헌형	3.82	3.71	3.71	2.82
	기타형	3.43	3.57	3.61	2.96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82	3.91	3.36	3.18
	제조업	3.56	3.72	3.44	3.17
	문화·예술	3.55	3.41	3.64	2.77
	교육·보육	3.30	3.50	3.40	2.70
	청소·환경·재활용	3.83	3.94	3.83	3.61
	지식서비스업	4.17	4.17	4.00	3.67
	기타	3.95	3.89	3.63	3.68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 지원종료 이후 외적역량(자원동원)

구분		조합원(지역주민)고정 적 기부금(후원금) 제공	벤처투자 등 다양한 투자기금을 유치	중소기업 정책 등 정책사업의 지원 유치	크라우드펀딩 등 소비자와 연계하여 투자금을 유치
[전체]		2.40	2.45	2.74	2.45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2.47	2.55	2.93	2.60
	예비 사회적기업	2.32	2.32	2.50	2.28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2.34	2.50	2.77	2.55
	사회서비스 제공형	2.80	2.40	3.20	2.60
	혼합형	2.44	2.67	2.78	2.78
	지역사회 공헌형	2.29	2.35	2.59	2.41
	기타형	2.52	2.30	2.65	2.09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36	2.18	2.36	2.27
	제조업	2.17	2.28	2.50	2.44
	문화·예술	2.59	2.59	2.64	2.50
	교육·보육	2.40	2.20	2.30	2.20
	청소·환경·재활용	2.11	2.44	2.56	2.22
	지식서비스업	2.42	2.58	3.42	2.67
	기타	2.68	2.63	3.26	2.74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17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 지원종료 이후 외적역량(외부네트워크)

구분3.87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형성	지역주민 및 소비자, 시민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형성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 연계	신규 사회적기업 창출을 위해 지원활동을 수행
[전체]		3.55	3.58	3.45	3.12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3.87	3.78	3.60	3.28
	예비 사회적기업	3.18	3.34	3.28	2.92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3.64	3.66	3.48	3.25
	사회서비스 제공형	3.40	3.60	3.60	3.40
	혼합형	3.56	3.44	3.44	3.00
	지역사회 공헌형	3.53	3.65	3.29	3.00
	기타형	3.39	3.39	3.48	2.87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33	4.00	4.00	3.00
	제조업	3.85	3.78	3.56	3.22
	문화·예술	3.42	3.44	3.24	2.98
	교육·보육	3.51	3.57	3.60	3.23
	청소·환경·재활용	3.78	3.67	3.61	3.11
	지식서비스업	3.92	3.67	3.83	3.42
	기타	3.53	3.58	3.42	3.37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18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종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 시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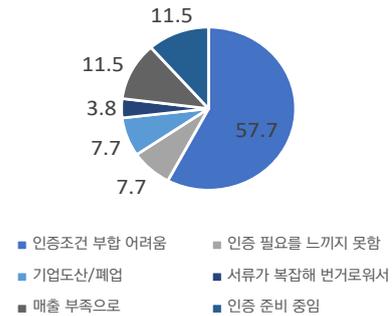
<예비 사회적기업만> 지정종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 시도 경험(%)>

구분	사례 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50)	48.0	52.0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	-	
	예비 사회적기업	(50)	48.0	52.0
사회적 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14)	35.7	64.3
	사회서비스 제공형	(1)	-	100.0
	혼합형	(3)	33.3	66.7
	지역사회 공헌형	(14)	64.3	35.7
	기타형	(18)	50.0	50.0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6)	66.7	33.3
	제조업	(4)	25.0	75.0
	문화·예술	(13)	30.8	69.2
	교육·보육	(7)	100.0	-
	청소·환경·재활용	(6)	50.0	50.0
	지식서비스업	(7)	28.6	71.4
	기타	(7)	42.9	57.1

<인증을 시도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이유(%)>



<지정종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

2.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지원종료 이후 어려운점

- 경영전반의 어려움으로 자금조달 60.9%로 가장 높았으며, 판로개척 56.4%,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40.0% 순

구분	사례 수	자금조달	인력채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개선)	판로 개척	조직관리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모델 강화	시장경쟁력 확보
[전체]	(110)	60.9	32.7	40.0	56.4	11.8	13.6	8.2	26.4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60)	51.7	28.3	48.3	50.0	11.7	15.0	28.3
	예비 사회적기업	(50)	72.0	38.0	30.0	64.0	12.0	12.0	24.0

- 사회적가치 실현에 있어 어려움은 사업 활동을 통한 안정적(고정적) 수익창출 79.1%,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성과 측정 및 표현 부족이 59.1%,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유대관계 형성이 41.8% 순

구분	사례 수	지역사회와의 공감대/유대관계 형성	사업 활동을 통한 안정적 (고정적)수익창출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성과 측정 및 표현 부족	소셜미션에 대한 내부적 합의 부족	전문성 부족에 따른 가치실현 역량 부족
[전체]	(110)	41.8	79.1	59.1	29.1	13.6
인증 종류	인증 사회적기업	(60)	36.7	78.3	65.0	11.7
	예비 사회적기업	(50)	48.0	80.0	52.0	16.0

3.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 사례

[사례 1] 연관사업 통합을 통한 규모화·효율화	[사례 2]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의 효과적 활용
<p>▶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돌봄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규모화·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서비스, 노인서비스, 사회서비스, 간병사업, 산모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공간 임대비, 운영비 등 절감 ▶ 고객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업평가에 맞춰 서비스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활발한 지역네트워크 참여와 상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객의 확보, 상호거래를 통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p>▶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속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정책을 효과적·적극적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여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적기업이 원재료와 생산시설을 확보하고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 ▶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초기 안정적 수익기반을 창출 ▶ 지속적인 상품개발 및 마케팅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 ▶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과 당자사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판과 인맥을 넓혀 왔던 것도 중요한 성공요인
[사례 3]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의 부조화	[사례 4] 불명확한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
<p>▶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인증반납하고 비영리단체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미션에 맞는 비즈니스모델 설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에는 북카페에서 커피와 식사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북카페를 이용하는 독서 모임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으며 일반 소비자를 끌어들이기에는 공간의 매력 부족 ▶ 충분한 창업 준비 과정을 거치지 못함 ▶ 구성원들간 미래비전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설립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은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만큼, 사회적기업으로서 명확한 인식공유와 분담 필요 	<p>▶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미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구하고자 하는 소셜미션이 불명확하고 측정이 어렵다는 점 ▶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재배로 수익의 규모화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주사업은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운 현실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구조의 경우 주식회사인 만큼 초기에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해 유명무실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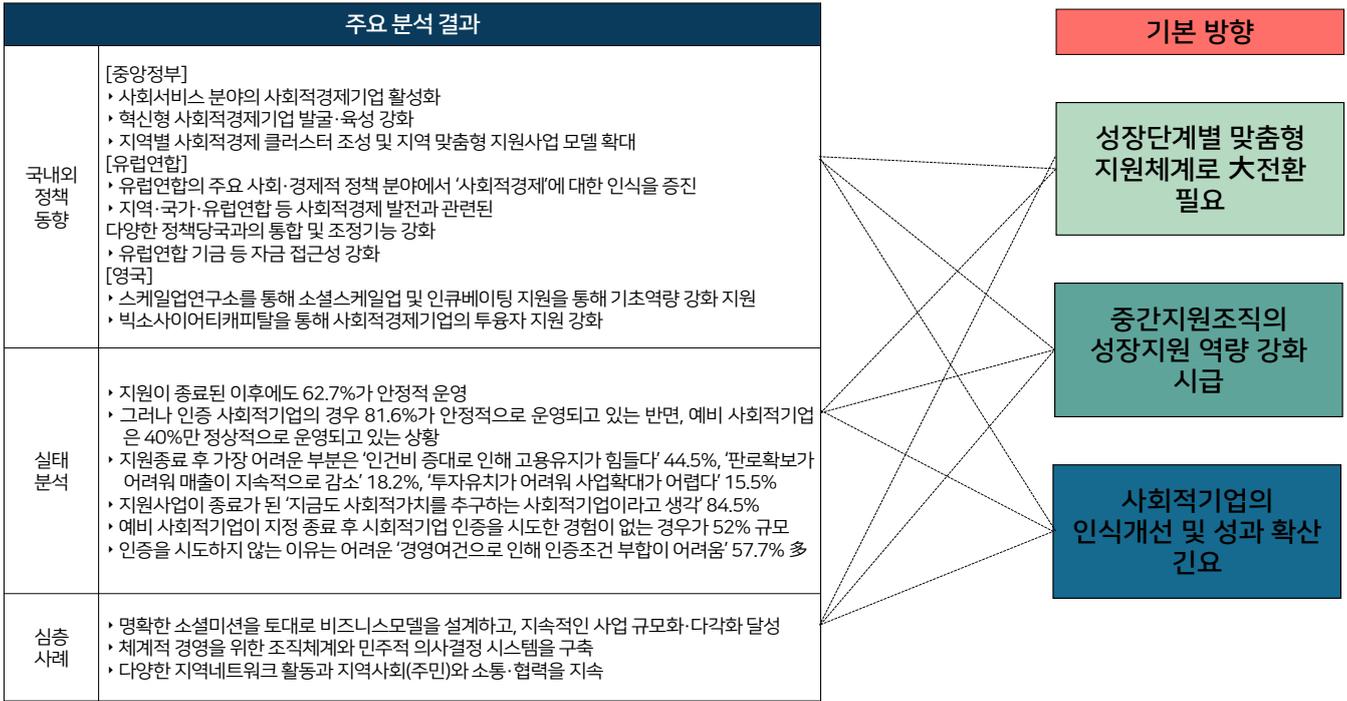
III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성장촉진 방안

성장촉진 방향 및 추진전략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대전환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고도화
 사회적기업의 가치체감 확대 및 도민인식 개선

1. 성장촉진 방향 및 추진전략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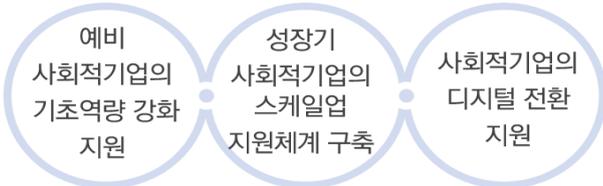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23

1. 성장촉진 방향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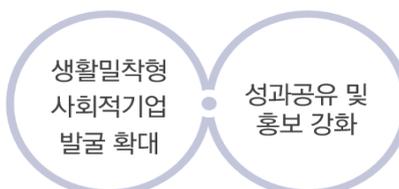
Q1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대전환



Q2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고도화



Q3 사회적기업의 가치체감 확대 및 도민인식 개선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방안 연구 24

2.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대전화

● 예비 사회적기업의 기초역량 강화 지원

소셜미션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 사업내용

- ① [1단계]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진단 (팀당 500만원)
- ② [2단계]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컨설팅 (팀당 1000만원)
 - (소셜 아이디어 검증) 소셜미션을 기반으로 한 잠재고객 분석, 기술·제품 등 유형별 환경 분석 및 사업타당성 분석 수행
 - (BM 수익 창출 방안 제시 및 투자계획 수립)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 등 최적의 도구를 활용하여 전략적 BM 도출
- ③ (선정방식) 공모방식을 통해 [1단계]맞춤형 진단, [2단계]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컨설팅 분야의 지원대상 기업 선정(동시 지원 가능)

사회적기업가로서 소셜미션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추진의지 함양

◆ 사업내용

- ① (참여 대상모집) 초기 또는 예비팀 모집
- ② (사회적기업가정신 아카데미) 이론을 포함한 체험형, 체감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 ③ (1:1 멘토링) 프로그램 전 기간 동안 전담 멘토의 피드백을 통한 밀착 멘토링 제공
 - 선배기업들과 1:1 멘토-멘티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2.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대전화

● 성장기 사회적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및 스케일업 지원

◆ 사업내용

- ① 우수기업 인증 평가지표 개발 : 지역네트워크 참여 및 사회적경제 연대협력(기본요건)
- ②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및 사후관리·평가 실시
- ③ 스케일업 지원 : 전문컨설턴트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업 전략 수립
 - (기업진단) 자가진단 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 상태 분석
 - (전략수립 컨설팅) 분석 의견을 바탕으로 브랜딩, 기술 개발, 마케팅 등 필요 방안 진단 컨설팅 및 지원 단계별 로드맵 구축을 통해 실행 연계
 - (선택적 사업지원) 디지털 전환, 제품/서비스 고도화, 포장 등 패키징, 판로연계 등 선택

● 사회적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전환 컨설팅 및 시설장비도입 지원

◆ 사업내용

- ① 성장단계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
- ② 사회적경제 디지털 전환 보조금 지원 :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운영관리 프로세스 개선, 커뮤니케이션 혁신 등
- ③ 대기업 ESG 경영과 연계한 디지털 전환 '따숨 파트너스' 구축

3.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고도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화·자립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및 인적역량 강화

◆ 사업내용

- ①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의 진단 및 컨설팅, 인적·물적·정책적 자원연계 등의 전문성을 강화 필요
- ② 성장지원에 필요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활동 가능한 각 분야 전문가를 전국에서 모집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컨설팅 협력 및 지원사업 품질 향상을 도모

중간지원조직의 점진적 자립화 기반 모색

◆ 사업내용

- ① 점진적인 자립화를 위해 먼저 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민간위탁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해, 전입금이나 후원금, 타 기관 위탁사업 등으로 확대 필요
- ②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을 통한 자체 수익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중간지원조직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도유지나 도 소유 건물 등 공유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

3.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고도화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및 인적역량 강화

◆ 사업내용

- 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유사 중간지원조직들 간의 협력이나, 다양한 외부자원들과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가능
- ② 첫째, 중간지원조직들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도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정보공유에 그치고 있는 상황. 또한 유사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는 확대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을 중심으로만 수행
 - 중간지원조직들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간 협의체 등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중간지원조직 협의체를 설치하여 도내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의 상호연계를 토대로 협치역제 공동개발 및 지역사회 아젠다 발굴 등 공동 수행
- ③ 둘째, 중간지원조직과 외부자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영국 Scaleup Institute(2021)의 조사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협력주체로 은행 및 관련 금융기관, 피어 네트워크(Peer network), 지역 전문서비스, 지자체, 지역대학 및 학교 등이 높게 나타남
 -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 접근성을 제고, 피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선배 사회적기업과 신규 진입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주는 네트워크 지원사업 기획 필요. 또한 비즈니스모델 설계나 시설장비 도입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서비스 기관(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필요

4. 사회적기업의 가치체감 확대 및 도민인식 개선

-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 확대

친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발굴 확대

◆ 사업내용

- ①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2022년 10월 6일)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강조
- ② 자원순환(폐플라스틱, 폐윤활유 등을 재활용), 적정기술, 산림자원 활용(목공예, 친환경 건축, 적정에너지 등), 환경교육(지구환경 교육, 숲체험 교육, 친환경 에너지 교육 등) 등의 창업 활성화 지원 필요

인구소멸지역 위기해결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사업내용

- ① 도민의 체감과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필요. 지역사회돌봄,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체의 공동구매·판매,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 공공이나 민간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 강화가 필요
- ② 이를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과 연계가 필요.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알리고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 추진

4. 사회적기업의 가치체감 확대 및 도민인식 개선

- 도민인식 개선을 위한 성과공유 및 홍보 강화

도민 인식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 사업내용

- ①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사업 추진 : 인플루언서 등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홍보 추진
- ② 기존 홍보 방식에 더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홍보방식 다각화
- ③ 탄소중립 '탄소따숨 캠페인' 등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미담확산' 프로젝트

◆ 사업내용

- ① 사회적가치 측정을 토대로 미담기업 발굴 및 홍보사업 추진
- ② 분기별 사회적경제기업 '미담 전파(돈줄내기)' 이벤트 개최 및 사례 홍보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지원종료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 및 성장촉진 방안 연구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강마야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강마야·이도경

2022.12.20.(화)

목차

I

서론

II

현황 및 문제

III

조사 및 분석

IV

실행전략

V

결론

I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서론

03

들어가기에 앞서...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들

청춘작당

Prologue

Season1

Season2

Season3

Epilogue

우리가 던진 질문들

Handwritten notes on lined paper containing various questions and reflections:

- 청년들의 삶의 선택지에 귀환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 청년은 왜 지역에서 살기 어려울까?
- 연고가 없는 2030도 농촌에서 살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할 수 있을까?
- 한번 살아보고 이주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 서늘이 어떤 곳에서 살 수 있을까?
- 무엇이 지역을 떠나게 만들까?
- 지역 청년들이 필요하고 청년들도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데 왜 이 두 가지가 변이 높은 걸까?
- 어떻게 하면 지방 살려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실제로 지역에 머물 수 있을까?
-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
- 무엇이 청년인구 유입을 어렵게 만들까?
- 지역에 있는 공백을 청년들이 채울 수 있다면...
- 지역이 정말 필요하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일까?
-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 인구소멸 위태로울 때 발생할 거 같아
 - 인구소멸 위태로움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인구소멸 위기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
 - 인구유입과 정책안이 유일한 해결방안인가

자료 : 청춘작당 누리집(<https://springground.com/Prologue1>, 검색일자 : 2022.11.17.)

04

연구배경 및 필요성

- ① 첫째, 충남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악화, 기존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성과 미흡
- ② 둘째, 민선 8기 충청남도 농정 핵심과제는 연간 500명 청년농업인 양성
- ③ 셋째, 충남 농업·농촌 복원방안은 청년농업인 통합정책 방향과 실행전략 필요

연구목적

- ④ 기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통합정책방향, 추진체계, 실행전략을 제시

연구내용

- ⑤ 첫째, 청년농업인 기초현황 분석
- ⑥ 둘째, 청년 특징 및 사례 분석
- ⑦ 셋째, 청년농업인 통합정책방향
- ⑧ 넷째, 청년농업인 정책 실행전략

연구방법



연구기간 : 2022.09.16.~2022.12.06.

연구진 : 경제산업연구실 강마야, 이도경

추진근거 : 하반기 연구과제 제안(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연구수요조사 제안서 의거)

II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현황 및 문제

07

1. 선행연구 고찰



주요 공통점

- ④ 수요자 요구에 맞는 농지공급과 농지유동화 등 농지기반 확보(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등)
- ④ 청년들이 살만한 입지에 위치한 주거 확보 등 정주여건 조성
- ④ 영농현장 밀착형 프로그램 정책개선
- ④ 지역기반의 실천농장 방식으로 체계화(친환경농업기반, 지역정착 유인, 교육 및 경제 기능 달성)
- ④ 지역단위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청년농업인 등 인력육성계획 연계
- ④ 지역 내 유희시설 활용한 지역 공동자산화하여 정보공유와 소통 과정 조성
- ④ 마을자치회 등 마을단위 조직 및 사람 등과 함께 지역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
- ④ 시기별·단계별(준비기-창농초기-재구조화기-정착기) 종합패키지 지원
- ④ 유형별(청년창업농과 청년후계농) 차등적인 정책자금 지원
- ④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문화, 교육, 복지), 가족과 지역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 확보
- ④ 창농 초기 유입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관리, 원스톱 맞춤형 지원
- ④ 청년농업인 간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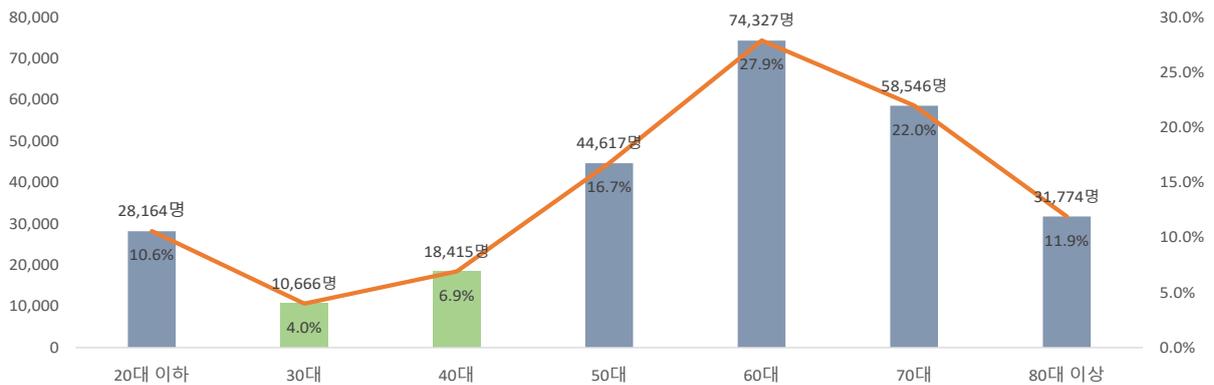
자료 : 김기흥(2022:2021:2020:2018), 임소영 외(2021), 배균기 외(2021), 김민정(2019), 마상진 외(2019:2018), 황정임 외(2019) 등

08

충남의 40세 미만 경영주 농업인 변화(2000년~2020년)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91,516 (6.61)	42,392 (3.33)	33,143 (2.82)	14,366 (1.32)	12,426 (1.20)	-9.5
충남	11,982 (6.67)	5,132 (3.14)	3,959 (2.61)	1,541 (1.17)	1,259 (1.03)	-10.7
(비중)	13.1%	12.1%	11.9%	10.7%	10.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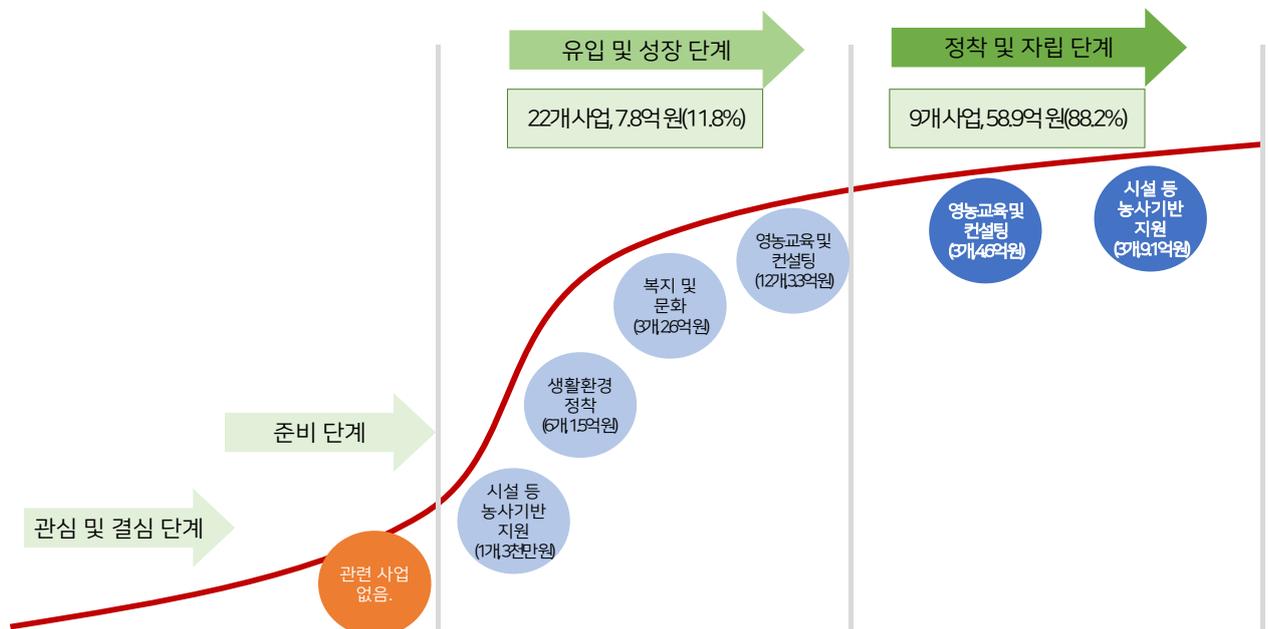
충남의 연령대별 농업인구 구조와 분포(2020년 기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인구 포함)



자료 : 통계청(2020), 농림어업총조사 :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성비. * 위의 표, 아래의 그래프 동일 출처

충남의 청년농업인 단계별-정책영역별 예산 현황(2022년 본예산)

📌 2022년 본예산기준,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은 총 31개, 66.8억원 (농림축산분야예산 중 4.6% 차지)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농식품부의 제1차 후계.청년농육성 기본계획(23-27)

목표 :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 3만명 육성

전략 1 "더 많은" 후계.청년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
-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전략 2 보다 "쉽게" 농지.자금을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

- 농지은행 매매임대 지원 강화
청년농 대상 농지공급물량 대폭 확대,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선임대 후매도 도입
- 융자조건(상환기간, 금리) 개선 ■ 정부(금융공공기관) 직접투자 펀드 조성

전략 3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성장 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지원
- R&D.기술, 판로,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 연계 지원

전략 4 "패직하고 매력적인" 농촌으로,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 임대주택 확대, 농촌 보육서비스 확충
청년농촌보급자리,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농촌공간 정비,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추진체계**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정책 거버넌스 구축
 - 농업 창업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 ◆ 청년농 3만명+α 육성(~'27),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
- ⇒ 장기적인 유입 추세(5년 평균 26천명) 유지로 고령화를 완화, 청년농 비율 증가
- ① 고령화율(40p) : (계획 이전) 76.1% → (계획 이후) 62.9 (13.2%p ↓)
- ② 청년농 비율(40p) : (계획 이전) 1.2% → (계획 이후) 10.0 (8.8%p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안, 2023-2027).

충청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전략(23-27)

1] 예비 창업자 : 사전 교육 + 창업 준비 여건 제공

준비

농업계 학생	비농업계 청년	예비 귀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교육기관 연계 지원 도내 청년 농창업 지원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교육 프로그램 * (도)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 (사)군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회적농장 영농실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H 양성 및 교육지원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		
창업 준비 여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농창업 희망자 영농실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승계)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20억→ 30억), 농지 증여세 면제 (농지 확보) 고령농 은퇴지원 및 경영이양 유도로 신규농지 최대 확보 (창업정보 플랫폼) 농지.자금.주거 등 농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 통합 제공 		

2] 신규 농창업자 : 안정적인 정착 여건 제공

진입 · 정착

영농기반	자금지원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 우선임대 취득 지원 농업 스타트업 단지조성 선임대 후매도 정책 도입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청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영파머스펀드 조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영농정착 기술지원 품목별 연구동아리 지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3] 전문농업인 : 성공사례 발굴 + 친환경 + 융복합화

성장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술.경영 고도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사례 발굴) 품목별 우수 청년농업인 선발, 멘토 및 현장강사 육성 (친환경) 친환경 청년농부 생산-유통 시설지원 및 법인구축 지원 (융복합화) 온라인 마케팅, 유통 협업기반 조성, 청년-투자자 플랫폼 구축

자료 : 충청남도(2022), 민선8기 청년농 육성 등 농업정책 추진방향(안, 2023-2027).

III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조사 및 분석

22.08.22~09.02 /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 10명 대상 / 3개 항목 주관식 조사 진행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관련한 반성과 평가

① 행정의 추진체계

-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력이 오래된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신규창업농 중심의 육성사업 비판
- 정책공급과 정책수요 간 거리감, 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행정(공급 측면)에서는 간과하는 경향 존재
- 단발성 정책이 대부분, 사후관리 부족,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전담 기구의 부재
- 행정의 순환보직 체제로 인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전문적 행정 담당자의 부재
- 실제 청년들의 니즈를 조사하지 않고 先 정책지원사업 제안, 後 청년 모집의 시스템 구조로 인한 획일적이고 제약적인 사업방식, 경직된 행정집행방식 유연하게 풀기

②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

- 농작물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
-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업비 지원 후 모니터링 체계 없음
-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사업비를 적기, 적재, 적소에 사용 불가
- 공급자(행정)에 맞춘 사업 진행이 아닌, 수요자(농업)를 고려하여 농한기를 활용한 사업 집행 기간 조정 필요
- 사업비 집행 증빙에 대한 어려움(복잡한 서류처리와 제한적 사용 인정)

22.08.22~09.02 /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 10명 대상 / 3개 항목 주관식 조사 진행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관련한 반성과 평가

③ 특정 사업에 대한 평가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초기 농촌 진입과 정착을 위한 많은 도움이 됨
- 농어촌공사의 청년창업농 토지임대사업, 농지은행사업은 양질의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한계
- 청년창업농과 영농후계자와 지원에 큰 차이가 없고, 대출도 제한적이라 현재 농업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다수 존재
-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부인건비 지원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그 외 정부지원 인건비 사업에는 참여가 제한되어 공평하지 않음
- 친환경청년농부 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부들이 조직을 만들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단기적인 시설지원에 그치는 시스템으로 향후 육성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제약사항이 미비한 한계

④ 기타 자율의견

- 농림부, 지자체, 농협 등 각 농업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필요
- 농촌에서의 역귀농 청년농업인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필요
- 종합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부터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조직 필요
- 영농 기반이 없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유입 될 수 있는 경로 활성화 필요성
- 지원받은 청년들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 사업지원 후 사후 관리를 통한 단계별 지원과 패널티, 인센티브 병행

1. 주관식 의견조사

22.08.22~09.02 / 청년농업인&청년활동가 10명 대상 / 3개항목 주관식 조사 진행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책적 고려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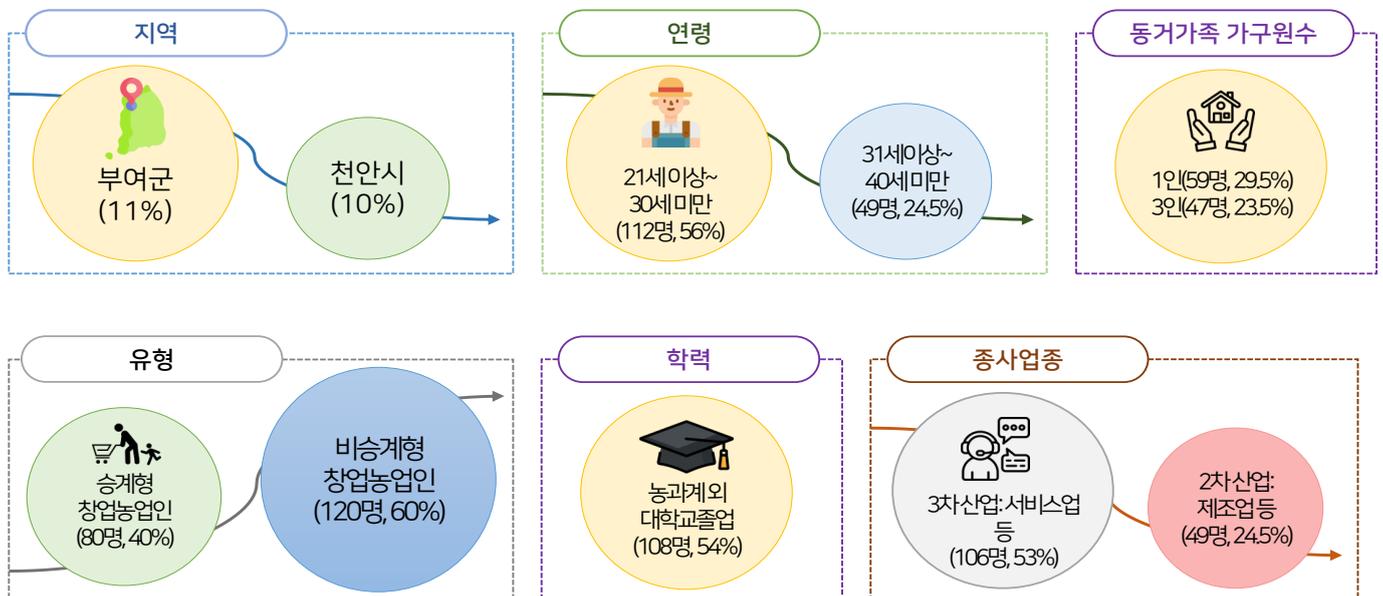
-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로 긴밀한 공동체 의식 부족
- 1차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2차, 3차로의 농업활동 확장을 시도
- 농사와 생활의 구분이 명확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하는 경우 다수
- 농업의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음
- 자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복지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다수
- 다양한 온라인 스트리밍 구독서비스를 이용하여 농촌에서도 여가문화 생활을 즐기는 청년 확대
-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필수성을 느끼는 청년이 비교적 적음
- 반농반X를 꿈꾸며 전업농이 아닌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청년농업인 증가
- 선주민과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보다는 느슨하고 사생활이 존중되는 관계를 선호



2. 영농정착 실태분석

22.11.18~11.27 / 영농정착금 수혜자 846명 중 200명 대상 / 2개 부문 31개 항목 객관식 조사

인구학적 속성



2. 영농정착 실태분석

22.11.18~11.27 / 영농정착금 수혜자 846명 중 200명 대상 / 2개 부문 31개 항목 객관식 조사

영농정착 실태

영농정착 여부 및 영농으로 인한 생계유지 여부 분석결과

-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부에 관련한 질문에서는 **75명(37.5%)**이 '아니오' 라고 응답하였으며 73명(36.5%)이 '예' 라고 응답
- 농사만으로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03명(51.5%)가 '아니오' 라고 응답하여 **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영농투자 금액 및 소득 분석결과

- 농사를 하기 위해 투자한 평균금액은 2억 8,951만 원으로 구간별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이 107명(53.8%)로 가장 많았음
- 연간 평균값으로 투자 금액과 소득을 환산해보면, **연간 투자금액은 14,772만 원, 연간 평균소득은 4,55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득과 투자 차액은 (-)10,33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영농포기 생각이 드는 순간 분석결과

-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가 99명(49.5%)로 가장 높았고, '지속 투자에도 소득 창출 안 될 때' 57명(28.5%)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포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향후 농사 지속 여부 분석결과

-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161명(80.5%)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우세

17

2. 영농정착 실태분석

22.11.18~11.27 / 영농정착금 수혜자 846명 중 200명 대상 / 2개 부문 31개 항목 객관식 조사

영농정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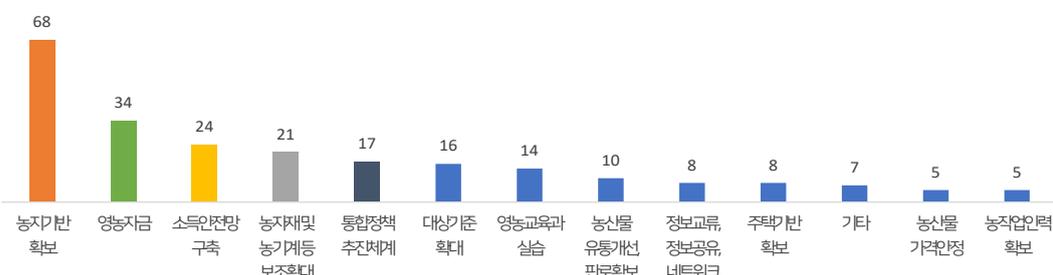
변화가 필요한 주체.기관/도움이 되는 주체.기관

-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변화가 필요한 주체.기관은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20.2%, '지역농협' 19.4%, '도·시군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17.1% 순
- 대상자들이 가장 정보를 많이 받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체.기관 역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29.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 친척, 지인' 14.3%, '도·시군 관련부서, 읍면사무소' 13% 순

정책적으로 집중할 영농단계 분석결과

-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로는 '**유입 및 성장단계**'가 83명(4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로는 '**영농자금**' 분야가 114명(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청년농업인 정책관련 해결해야 할 부문, 과거 및 현재 영농과정에서 어려운 점 분석결과



18

IV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실행전략

19

1. 접근관점과 방향



접근관점

- ① 첫째, 청년정책이든, 청년농업인정책이든 출발지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행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② 둘째, 기존 농업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청년농업인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
- ③ 셋째, 농업 중심의 전략만이 아닌 “농촌지역(공간이자 삶의 터전) 중심”의 전략도 설계해야 한다. **영농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도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 ④ 넷째, 청년농업인은 승계형 창업농업인과 비승계형 창업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단계별, 시기별, 유형별 정책과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여 각기 달리 접근해야 한다.
- ⑤ 다섯째, 청년농업인 육성 중심의 접근전략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유입하고자 하는 이들, 농촌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접근 전략도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 청년농업인들이 유출되지 않는 접근전략도 중요하다.
- ⑥ 마지막으로, 현재의 단일팀(농업정책과 내 농촌복지여성팀), 분산된 기관(충남도청과 농업기술원) 조직 구조만으로 이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좀 더 통합적인 조직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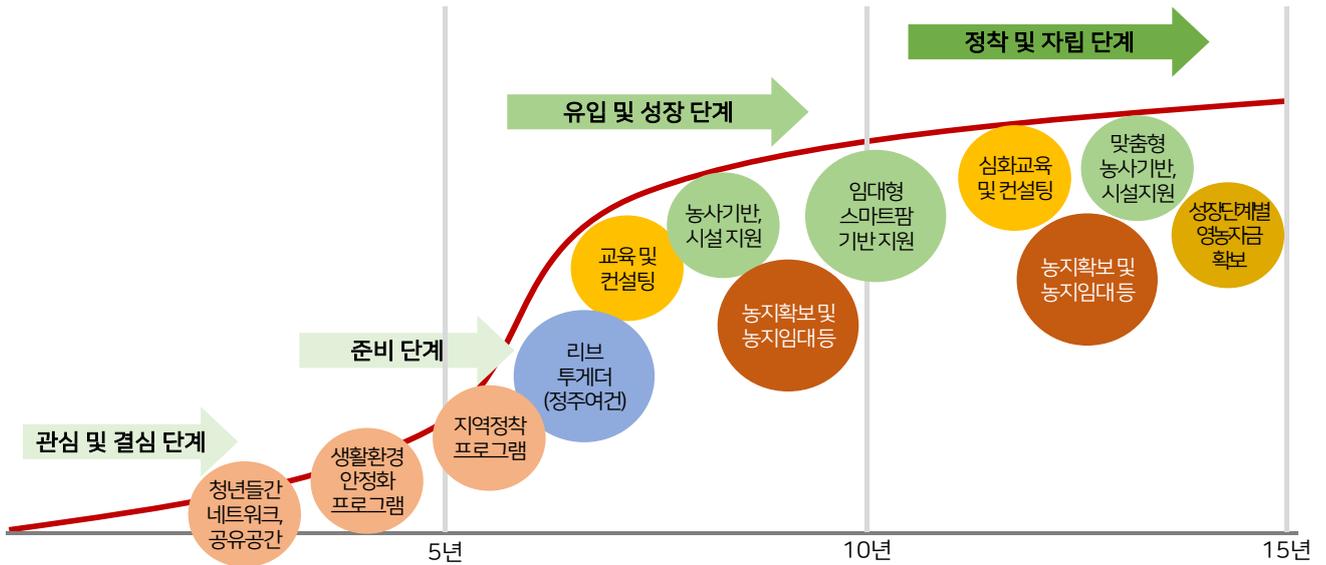
추진전략



20

2. 단계별 로드맵

충남 청년농업인 단계별 실행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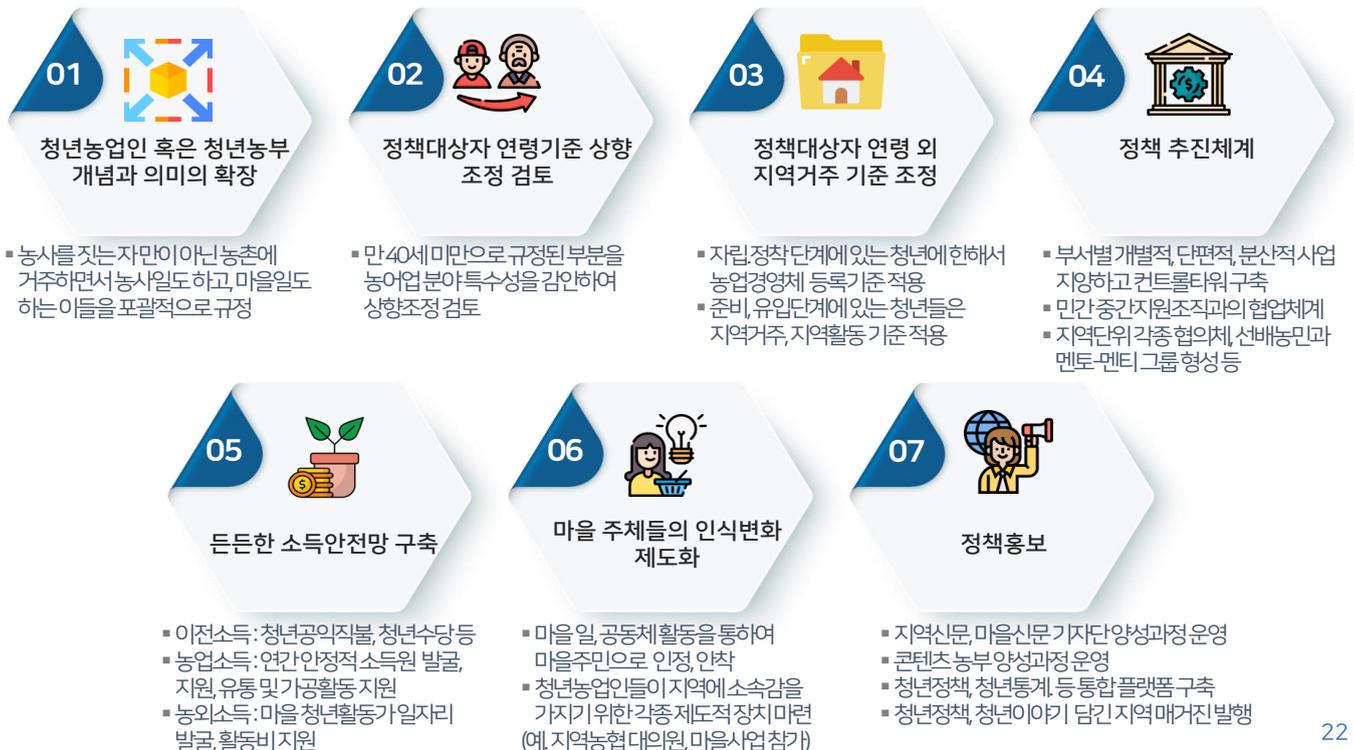
공통전략

- 청년농부 개념과 의미 확장, 청년 정책대상자 기준 조정(예. 연령 외 지역거주 기준),
- 청년농부 관련 정책 추진체계 정비(예. 행정 내 컨트롤타워,
-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예. 기본적 농업소득 + 일자리를 통한 농외소득 + 수당 등 이전소득)
- 마을주체들 인식변화의 제도화 기반 마련(예. 마을개발사업 등과 청년유입성과지표 연계)

→ 민선 8기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전략은 유입 및 성장 단계, 정착 및 자립 단계에 초점 이번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략은 관심 및 결심 단계, 준비단계, 공통 분모에 초점

3. 공통 전략

충남 청년농업인 공통 전략



4. 유입을 위한 전략

충남 비승계형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



5. 육성을 위한 전략

충남 승계형 청년농업인을 위한 육성 전략



V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결론

종합제언

젊은 농촌, 젊은 농부 프로젝트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세션 3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유학열·조영재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한상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이관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유학열 연구위원 · 조영재 선임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2022.12. 20

목차

I 서론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II 연구 내용

충남 과소지역 실태 분석
충남 과소지역 정책 수요 분석
국내외 과소 정책 우수사례 분석

III 연구 결과

과소지역 활성화 추진 전략 세부 정책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I

연구 개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03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배경

- ①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고조. 특히 지방소멸의 최선단에 있는 농어촌 과소지역의 대책 마련 시급
- ② 농어촌지역 인구 문제는 단순히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양적 문제와 더불어 젊은 층 인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질적 문제 심각
- ③ 한편 지역 불균형 고착화와 농산업이 쇠퇴하면서 청년층 중심의 탈 농촌 과속화로 인해 농촌공동체 약화. 또한 농어촌마을에 존재하는 공동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농촌공동체 회복 필요

연구목적

- ①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이 대응해 나가야 할 구체적 전략 제시
- ② 특히 농어촌 과소지역을 '사람', '공간', '공동체' 3가지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 제시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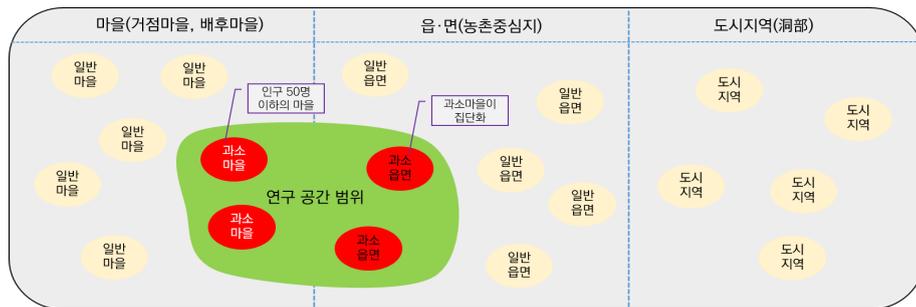
정책 범위

- ①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을 '사람', '공간', '공동체' 3개 영역으로 접근
- ② 상기 3개 영역을 각각 독립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보다는 3개의 영역 간 상호협력적 전략 제시



공간 범위

- ① 농어촌 과소지역의 행정리~읍면



연구 방법

- ①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 ②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우수 정책 현장조사, 지역주민 및 지역활동가 인터뷰
- ③ FGI(Focus Group Interview):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연구진 집중 토론 및 의견 교환
- ④ 전문가 자문: 연구설계 자문회의, 세부 전략도출 자문회의 등
- ⑤ 설문조사: 충남 과소마을 대상 설문조사 실시(약 200명)

구분	대상	주요내용	시기
문헌 연구	-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사례 검토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실태 파악	2022년 2월~6월
현장조사	현장 활동가, 지역 주민	국내 우수 정책 사례 심층 분석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	2022년 4월~9월
FGI	현장 활동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논의	2022년 7월, 9월
전문가 자문	전문가	연구설계 및 추진 체계 자문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 자문	수시
설문조사	충남도 과소마을	과소지역 실태 파악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	2022년 6월

II

주요 연구 내용

충남 과소지역 실태 분석
충남 과소지역 정책 수요 분석
국내외 과소 정책 우수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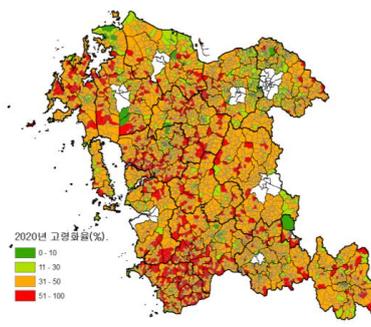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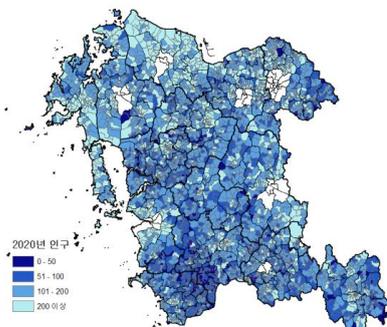
07

충청남도 과소지역 실태 분석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현황 분석

④ 과소지역 통계 분석: 충남 시군별 행정리 인구수·노인인구 비율 변화 분석 등



주민의식 분석(설문조사)

- ④ 사람부문: 과소마을 내부 인적 역량 및 교류 실태, 과소마을과 외부와의 교류 실태 등
- ④ 공간 부문: 농어촌 정주공간 실태, 농어촌 환경공간 실태 등
- ④ 공동체 부문: 과소지역 공동체 의식, 마을공동체 기금 실태 등

08

사람 부문(일부 예시)

④ 마을발전을 위한 외부 주체와의 교류 필요성

구분	응답빈도(명)	응답비율(%)
① 매우 필요하다.	14	6.7%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171	82.2%
③ 어느 쪽도 아니다.	17	8.2%
④ 별로 필요 없다.	6	2.9%
전체	208	100.0%

⑤ 마을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부 지원 활동

구분	응답빈도(명)	응답비율(%)
① 농사일 돕기 지원	125	30.0%
② 마을만들기 자문 지원	44	10.6%
③ 고령자 돌봄 지원	93	22.4%
④ 마을환경 개선 지원	100	24.0%
⑤ 소득사업 지원	33	7.9%
⑥ 마을 축제 활성화 지원	21	5.0%
전체	416	100.0%

09

공간 부문(일부 예시)

④ 마을발전 저해 요인

구분	응답빈도(명)	응답비율(%)
① 인구감소 및 고령화(젊은 층의 감소)	119	57.2%
② 도시-농촌간의 상대적 격차	23	11.1%
③ 낙후된 정주생활 환경	24	11.5%
④ 무분별한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10	4.8%
⑤ 열악한 문화 복지 및 생활서비스	14	6.7%
⑥ 소득 및 일자리 감소	9	4.3%
⑦ 농촌공동체 기능 약화	9	4.3%
전체	208	100.0%

⑤ 마을소멸 시 가장 필요한 대책

구분	응답빈도(명)	응답비율(%)
① 인근 마을과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행정적 낭비 최소화	60	28.8%
② 여러 마을을 묶어 기능 분담 및 상호공존의 관계 설정	105	50.5%
③ 마을 전면 재개발 및 인구유치를 통한 새로운 마을 조성	37	17.8%
④ 마을주민의 이주를 통한 새로운 마을 조성	4	1.9%
⑤ 잘 모르겠음	2	1.0%
전체	208	100.0%

10

공동체 부문(일부 예시)

②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정책 인식

구분	평균점수(7점 척도)
① 지역내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지원	5.639
② 공동체 인적역량강화(교육, 전문분야 컨설팅 등)	5.586
③ 구성원간 상호협력 관계와 신뢰, 공동체성 형성	5.764
④ 보조금, 활동사업비 지원 등 공공재정 지원	5.870
⑤ 읍면동 및 시군 공무원의 적극적 관심	5.779
⑥ 주민과 공동체들간 연대협력활동 지원	5.620
⑦ 마을공동체 활동인력(청년 등) 제공 지원	5.558
⑧ 공동체 활동의 행정, 회계 등 사무역량 지원	5.413

③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금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빈도(명)	응답비율(%)
① 매우 필요하다.	50	24.0%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157	75.5%
③ 어느 쪽도 아니다.	1	0.5%
전체	208	100.0%

11

국내외 과소 정책 우수 사례 검토

문헌 검토

사업명	지역	주요내용
마을로 내일로	전라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활동가 육성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경상북도	청년 인구 농촌 유입, 청년들의 농촌에서의 창업, 구직 활동 지원
Rural Action Program	영국	기업, 민간단체 등의 농촌공헌 프로그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박	일본 시즈오카현 스소노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성,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집락지원원	일본 총무성	농촌마을에 도움을 줄 인재 지원
지역부흥협력대	일본 총무성	도시 청년 대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일본지방창생전략	일본 총무성	일본의 지방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 해결
오하라지역 공유림 관리 제도	일본 오하라	일본 농촌마을의 공유자산 관리 우수 사례
태안 만수동 마을연금제도	충남 태안	마을 공동자원인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수 사례
옥천 순환경제공동체	충북 옥천	옥천푸드운동, 생태농업운동 등 지역공동체 활동 활발
런던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영국 런던	지역 공동체가 구입한 토지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영광 여민동락 공동체	전남 영광	노인층 소일거리 제공, 일터 공동체 구축

12

심층 분석

④ 경북 의성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 조성 사업

사업 명칭	사업내용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 일자리 사업,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스마트팜 조성, 의성팻월드조성 등
청년주거지 조성	금수장 리모델링, 청년주거단지 조성, 신규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행복 플랫폼 조성, 3대 필수의료 체계 내실화, 경북형 미래학교지정
공동체 활성화	행복자치사업, 주민소확행 문화 프로그램
청년유치기반 조성	의성 살아보기, 청년예술캠프
중간조직 지원	이웃사촌지원센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센터, 이웃사촌복지센터



심층 분석

④ 전북 완주 문화재단 사업

사업 명칭	사업 내용
문화예술인 완주 한달살기	예술인 문화귀향 활성화 사업, 농촌마을 유휴공간 예술인들에게 빌려줌, 농촌마을에 문화적 활력
문화아지트 빨래터	입주 예술인과 지역주민과의 문화적 교류 활동 공간
문화창작공간 달빛품	주민협업프로젝트, 주민문화예술활동 결과공유회 등
아트커뮤니케이션 완산가	전문 예술가들에게 자연친화적 창작환경 제공, 창작물 공유
아트스테이 풀	음악특화공간 조성
문화이장	주민 대상으로 '문화이장' 선정, 주민 간 문화통신사 역할 부여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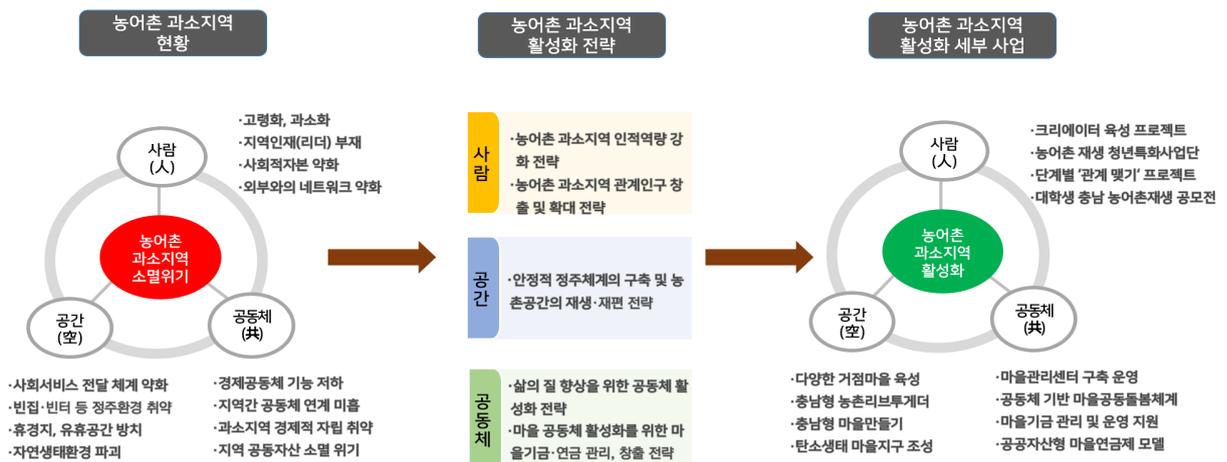
연구 결과

과소지역 활성화 추진 전략 세부 정책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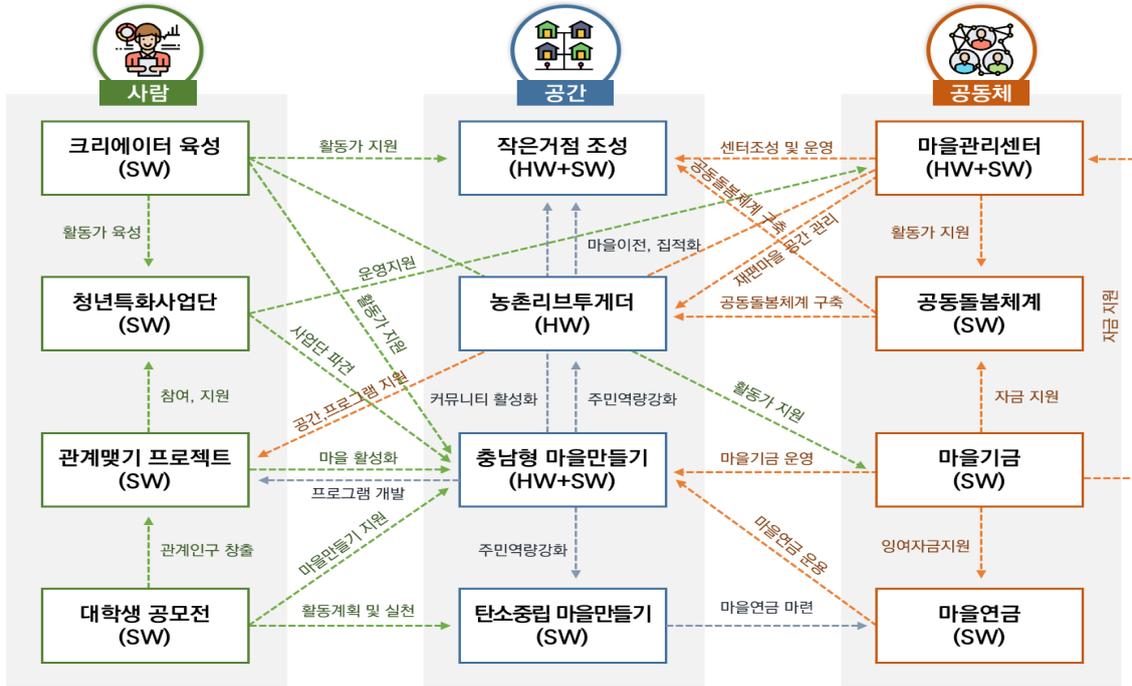
과소지역 활성화 추진 전략 세부 정책

5대 추진 전략

- ① 농어촌 과소지역 인적역량 강화
- ② 농어촌 과소지역 관계인구 창출 및 확대
- ③ 안정적 정주체계 구축 및 농촌공간의 재생·재편
- ④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 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금·연금 관리 및 창출 방안



세부 정책



활성화 전략 ①: 농어촌 과소지역 인적역량 강화

세부 정책: 농어촌 과소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농어촌지역 활동가 육성
정책 대상	도시 지역주민(청년 위주), 지역주민
공간 범위	마을~읍면 중심지
추진 주체	지역 대학 위탁 운영(충남도립대, 공주대 등)
정책 유형	S/W

정책 필요성 및 목표

- ① 농어촌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해 낼 수 있는 지역크리에이터 육성 시급
- ②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사람(인재)은 통합적 능력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무형 활동가 필요
- ③ 과소지역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기관 설립(또는 위탁)

정책 내용

- ① 교육 대상: 충남 농어촌지역에 관심 있는 전국의 청년, 지역주민
- ② 기본 원칙: ① 체계적·통합적 역량강화, ② 실천을 중시하는 실무형 교육, ③ 교육과 실천의 연계 체계
- ③ 교육 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 ④ 추진 주체: 단기적-전문교육기관 위탁, 중장기적-충남 지역활동가 육성 전문기관 설립

☞ 세부 정책: 농어촌 과소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정책 내용

과정	핵심가치	교육목표
기본 과정	리더로서의 기본적 소양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참여 및 지속적 학습의 동기 부여, 자기 혁신 - 농업농촌을 포함한 현대사회 전반의 문제 의식 - 균형 잡힌 마을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개발 방법 습득 - 외부 주체와의 네트워크 관계 구축
심화과정	지역의 가치 발견과 비전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지역문제의 이해 - 지역자원의 중요성 인식과 조사 방법 습득 - 지역의 미래비전 구상
전문과정	지역활동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과정 - 농업의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과정 - 마을문화리더 과정 - 충남 농어촌 재생 청년특화사업단 인력 양성

*양성된 크리에이터 농어촌 과소지역에 투입
과소마을 재생과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세부 정책: 충남 농어촌 재생 청년특화사업단

정책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및 활동가 육성
정책 대상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 활동가
공간 범위	마을~읍면 중심지
추진 주체	충남도 농촌활력과,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정책 유형	S/W

정책 필요성 및 목표

- ② 다양한 농어촌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적역량 절대 부족
- ② 미흡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넣어 줄 인적자원 지원시스템 필요
- ②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및 지원시스템 구축

청년특화사업단이란

- ② 읍면단위에 설치하며, 농촌 지역 활동가가 해당 읍면에 거주(또는 비거주)하면서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조직

청년특화사업단 활동 내용

- ② 면단위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② 면단위 학습조직 구성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 ② 배후마을 지원을 위한 '청년도우미' 채용 및 정착 지원

☞ 세부 정책: 다양한 거점마을(작은거점) 육성 및 과소마을 공간재편 및 재생 추진

정책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작은거점 육성(읍면당 2~3개) 과소마을 공간재편(시군당 2~3개 지구)
정책 대상	행정리(농촌마을), 한계마을, 농촌주민
공간 범위	읍면 거점마을, 농촌마을
추진 주체	행정, 마을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정책 유형	H/W

정책 필요성 및 목표

- ① 기존 읍면소재지 거점기능 약화에 따른 근거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거점마을 육성
- ②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농가주택)의 공간재구조화를 통한 리모델링 또는 이전 및 집적화 도모로 정주여건의 개선
- ③ 인구감소시대, 자치분권정책 등에 대응한 충남형 마을만들기 등 농촌재생정책의 확대 추진

정책 내용

- ① 농촌소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거점마을(작은거점)의 육성
 - 인접한 마을별로 마을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 분담을 통한 거점마을을 육성하고 상호 연계
- ② 과소마을 공간재편 추진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 과소마을을 대상으로 신규조성형(단독주택형, 공동주택형), 마을재편형의 공간재편 추진
- ③ 주민주도의 농촌마을 재생정책 추진 (충남형 마을만들기)
 - 정주계층별 마을육성(거점마을 육성 추가), 공간재편과의 통합적 추진

☞ 세부 정책: 다양한 거점마을(작은거점) 육성 및 과소마을 공간재편 및 재생 추진

정책 내용

정주계층 구분	마을재생정책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간재편정책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1단계: 마을이전·재개발 (단기)	2단계: 신규지구 개발 (중장기)
↑ 중심성	1. 읍면소재지 (중간거점) ※ 중심지활성화 ※ 기초생활거점	※ 농촌형 임대주택	-
	2. 거점마을 (작은거점) 종합개발 마을만들기 ↑ 중규모 마을만들기	3) 마을 이전형 - 일부이전 - 집단이전	-
↓ 낙후도	3. 일반마을 ↑ 소규모 마을만들기 ↑ 선행사업 ↑ 현장포럼	1) 신규조성형 - 단독주택형 - 공동주택형 2) 마을재편형 - 리모델링 - 재개발	※ 신규지구 개발 (스마트팜, 뉴타운 등)
	4. 한계마을 ※ 과소(한계)마을정책		

📍 세부 정책: 탄소생태 마을지구 조성

정책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탄소중립 실천 농업거점 조성
정책 대상	지역주민
공간 범위	마을~읍·면 중심지
추진 주체	충남도 시군구
정책 유형	S/W

정책 필요성 및 목표

- ① 빈집과 유휴지 등 장기적으로 방치된 공간 노후화
- ② 과소지역 농촌 전통유산 역할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상실
- ③ 과소지역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관광과 체험을 탄소중립 실천과 연계시켜 시·군별 특징 반영한 탄소중립 실천 농업 거점 조성

정책 내용

- ① 빈집과 유휴지 등 현황 파악 후 장기 숙박형태 대여 및 이주 유도
- ② 탄소생태농업 실천, 경관작물 식재 체험과 연계해 농촌 지역주민 주도적 참여주체로 인식시키고 탄소중립 농촌공간 조성
- ③ 농업활동과 연관된 탄소배출 감축 행위 실천 주민과 신규 이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 세부 정책: 공동체 참여형 마을관리센터 구축 운영

정책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마을관리센터 구축과 운영조직 발굴
정책 대상	과소지역 주민
공간 범위	읍면단위 및 복수 행정리
추진 주체	관련 중간지원조직
정책 유형	S/W+H/W

정책 필요성 및 목표

- ① 농어촌 과소지역에서 인력부족으로 노후화된 주택 관리보수의 필요성이 증가
- ② 고령화, 인구부족으로 주택과 함께 자체적 마을환경관리, 정비와 안전문제의 취약성 극복의 대안이 강조
- ③ **면 단위 과소지역 대상 주민의 주택과 거주환경 및 안전관련 마을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공간 및 조직 구축**

정책 내용

- ① 정책 대상: 면단위 지역주민
- ② 기본 원칙: ① 마을주민 수요 중심, ② 지역자원과 유휴공간기반, ③ 외부인력의 적극활용
- ③ 추진 과정: 마을기반 수요조사 -> 유휴공간 리모델링 -> 운영조직구성 -> 행정지원 기반 마련
- ④ 추진 주체: 마을주민 및 청년특화사업단 연계한 마을관리조직(추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추진)

🏠 세부 정책: 공동체 참여형 마을관리센터 구축 운영

정책 내용

과정	추진방향	세부내용
공간구축	빈집과 유휴공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빈집과 유휴공간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매입 및 임차 -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마을활성화사업과 연계진행 - 공간 리모델링 위한 활용주체 중심의 사전조사와 관련 재정지원
추진주체	지역주민+외부활동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중심의 공동체활동 조직의 주체화 위한 역량강화 - 마을 및 지역관련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참여 - 청년자원유입을 위한 충남 농어촌 청년특화사업단 참여 유인
추진체계	다주체 연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주민과 외부 활동인력이 융합된 마을관리센터 운영거버넌스 구축 - 중장기적으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진입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 사업운영 지속성 위한 활동가 인건비 및 보조금 행재정 지원 필요 - 읍면단위 센터의 통합적, 효과적 관리위한 마을관련 중간지원조직 역할 부여

과소지역에 대한 주택 및 마을의 자립적 관리체계 구축
주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최소한 기반 마련

🏠 세부 정책: 충남도 공공자산형 마을기금 및 연금제 운영모델 구축

정책 개요

구분	내용
정책 목표	공공자산을 활용한 마을기금 및 연금제 운영모델 구축
정책 대상	인구감소 마을주민
공간 범위	마을(행정리 또는 면)
추진 주체	도·시군 농촌활력/에너지관련 부서, 마을주민, 유관 공공기관 등
정책 유형	S/W

정책 필요성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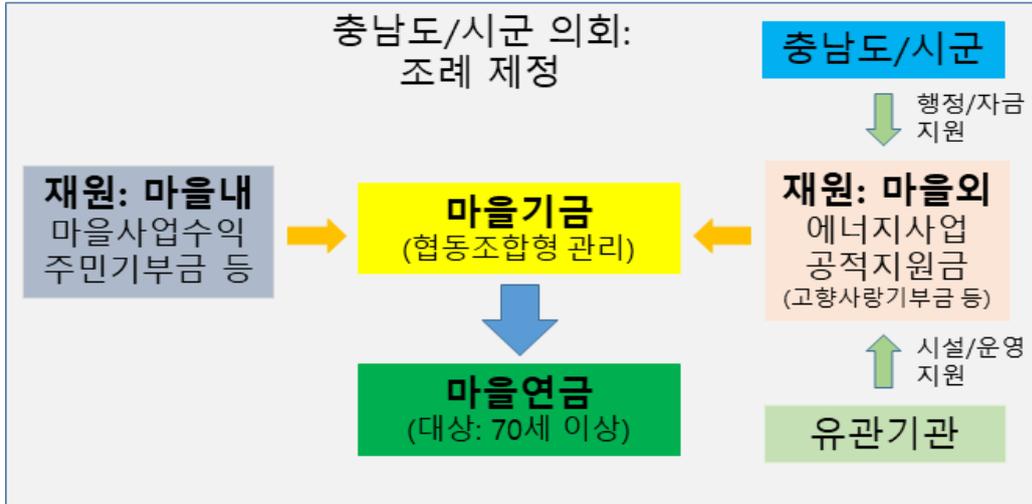
- ①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안정적 소득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을기금이 필요
- ② 최근 지역 내 공공자산/공공자원을 통해 마을기금 및 연금 지급으로 마을 활성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③ 따라서 충남도 농어촌마을 공공자산/공공자원을 활용한 마을기금 조성 및 연금 지급 운영모델 제시

정책 내용

- ① 사업명: 충남도 마을연금제 운영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 ② 사업방향: 마을의 공동자산/공공자원을 활용한 마을기금 조성 및 연금 실시
- ③ 활용자원: 체험관광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풍력 등), 기타 공공시설 등
- ④ 협력체계: 지자체-마을-공공기관(에너지, 연금관련)-기타 유관기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세부 정책: 충남도 공공자산형 마을기금 및 연금제 운영모델 구축

정책 내용



마을 공공자산/공공자원을 활용한 기금 조성 및 연금지급으로
과소마을주민 소득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한상욱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2022.12

한상욱 연구위원

연구요약

연구목적

- ① 전형적인 농산촌지역이며, 저발전지역인 충남 남부권이 대전시·세종시의 영향 확대 속에서 나아가갈 방향을 설정하고, 충남 남부권과 도내·외 지자체간 **협력적·공생적 발전**하기 위한 전략 제시

연구내용

- ① 충청남도 내에서의 발전수준 분석, 남부권의 특성 분석 및 미래 남부권의 미리 전망
- ② 중앙정부, 충남도 균형발전 정책, 외국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남부권에 미치는 영향 검토
- ③ 충남 남부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적 과제를 제시

정책제안

- ① 메가시티 가시화, 공간구조 변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남부권 기존 **도시의 재구조화**
- ② 충남 남부권 각 시·군별로의 전문화된 **성장동력의 확충**
- ③ 시군 행정구역을 벗어나 다양한 광역적·지역적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II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III

남부권 특성
및 전망

IV

인식조사

V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VI

결론 및
향후 과제

I

연구의 개요

📌 배경, 목적 및 연구 방법

- 목적** 충청남도내 대표적인 저발전지역인 남부권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전략 제시
-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남부권(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금산군) 6개 시·군
- 내용적 범위** 남부권의 특성과 전망, 관련 정책 동향 검토, 전문가·주민 인식조사를 기초로 남부권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
 -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검토
 - 충청남도 남부권의 특성 및 전망
 -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제시
 - 충남 남부권 발전 수준 분석
 - 전문가·지역주민 설문조사
- 연구 방법**
 - ① 문헌 조사 및 정책동향 조사
 - 지역발전, 균형발전 관련 이론, 중앙정부·충남·외국의 정책 동향 검토
 - ② 발전수준, 특성 및 미래 전망
 - 남부권 발전 수준 분석
 - 남부권의 주요 계획 검토
 - 지역경제·소득 등 남부권 특성 분석
 - 인구 및 공간구조 전망
 - ③ 전문가 및 주민 설문
 - 인식차 검토 및 정책과제별 중요도와 적용가능성(IPA) 분석

📌 기존 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들은 **정책·계획, 지역 격차**와 관련된 연구, **경제적 불균형** 측면으로 구분

정책 및 계획 관련 연구	지역격차 분석 관련 연구	경제적 불균형 해소 관련 연구
① 충남발전의 비전과 전략/전략별 추진 계획/시군별 발전 방향 ② 지역 현황 조사(정책, 사업)/소득, 삶의 질 지역별 불균형 실태 분석/저발전 지역의 계획과제 평가 및 도출 ③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 구조분석/논산, 계룡, 금산 지역 발전 전략과 과제 도출	①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로 구분된 지역 수준 지표화 ② 접근성, 생활편의성, 경제발전성, 새생산성, 환경,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발전 수준을 비교 ③ 설정된 지표를 권역에 적용하여 권역별 격차 도출 후 불균형 요인을 지니 계수 분해법으로 분석	① 지역 역외유출 구조 파악하여 지역 내에서 소득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방안 제시 ② 충남지역의 소득과 소비의 역외유출 규모와 원인 파악(분공장, 직주불일치)

- ① 대전시·세종시의 영향 확대, 미래 전망에 따른 남부권의 영향력 분석
- ② 도 종합계획의 유형별 **계획권역**에 부합한 **발전 전략** 제시

II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II.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이론 및 정책 동향 종합 : 관련 이론, 정책 동향, 외국 정책·사례 검토

① 균형발전 측면 발전 방향

- ① 지역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 ② 지역의 자원·개성에 기반한 특성화, **차별화** 발전을 통한 특성화 발전으로 전환

② 국가, 지역발전, 균형발전 정책

- ① 발전지역-저발전지역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사업의 요구 증가
- ② 지역 산업·경제 특성별 종합대책 마련 및 다분야 간 선순환 체계 마련이 요구

③외국의 정책 사례

- ①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공간구조 재편** 전략을 동시 추진
- ②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가능하도록 입지적정화 계획 수립
- ③ 생활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 **공공교통 네트워크** 전략 강화
- ④ 미래 인구 감소 대응 연결성 확충 및 공간구조 재편·정비

III

충청남도 남부권 특성 및 전망

III 충청남도 남부권 특성 및 전망

대도시 근접 시·군일수록 격차 확대되는 부정적 영향과 유입 소비 증대의 긍정적 영향 공존

충청남도 15개 시·군간의 지역발전 격차 변화

-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간 격차 확대
- 대전시 연접 시군의 충남도내 순위 하락



남부권 시·군 GRDP분석

- 시군별 주요경제활동은 제조업(20%대), 행정업, 농림어업
제조업은 발전 시군(평균 60% 이상) 대비 상대적 미흡
-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 전통산업 및 압축성장기 산업 쇠퇴
→ 저발전지역일수록 공공과 관련한 행정관련, 공공 서비스 투입의 주체 및 보조하는 경제 활동이 매우 높은 비중
※ 저발전지역일수록 공공의 능력, 역할이 매우 중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공주	제조업(26.7%)	행정업(11.6%)	교육서비스업(8.2%)
논산	제조업(23.9%)	행정업(15.0%)	농림어업(12.7%)
계룡	행정업(63.3%)	교육서비스업(5.2%)	제조업(4.6%)
금산	제조업(49.8%)	행정업(7.2%)	농림어업(5.6%)
부여	농림어업(25.4%)	제조업(17.5%)	행정업(9.6%)
청양	제조업(31.6%)	농림어업(15.9%)	행정업(11.4%)

소상공인의 업종 특성 및 역내·외 소비 비중

- 영세화 업종 : 소상공인, 창작, 예술, 여가, 스포츠관련업, 개인 서비스업
규모화 업종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공공행정
- 남부권 소비의 역외 비중은 20%대 / 대전시와 통근통행이 높은 지역일수록 역외비중 높음(계룡, 32%, 금산 27%)
타 지역에서 역내로 유입된 소비 비중은 78.6%(충남 29.9%)로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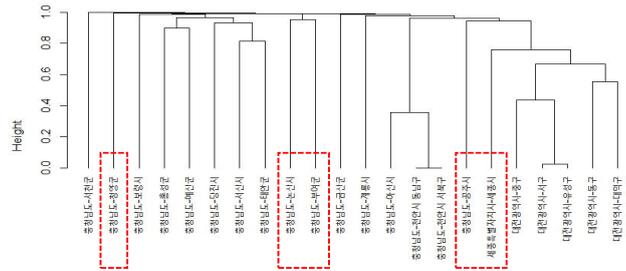
남부권 인구 감소 전망 + 대전시·세종시 영향권 지속 확대

남부권 주요 계획 : 2000년대 이후 발전방향의 큰 변화는 없음

- 공주시는 역사문화도시, 논산시는 국방지원 역사문화도시, 계룡시는 스마트 자족도시, 금산군은 인삼약초 특화도시, 부여군은 동아시아 문화수도, 청양군은 행복공동체 휴양도시

인구 및 공간구조 전망 : 인구 감소세 속에 대전시·세종시의 영향권 지속 확대

- 남부권의 인구는 351천명(2040) 전망. 연평균 -0.6% 감소 / 계룡시 제외시 -1.0% 감소
동지역(0.13%), 시군청소재지 지역(0.63%)은 보합·증가 / 면지역이 인구 감소를 견인(-2.1%)
가장 인구 감소가 높은 시군 순위 : 논산시(-2.1%), 공주시(-1.2%)
- 통근·통학 공간구조는 세종시의 영향권 확대 및 부여군, 청양군이 간접영향권으로 포섭
→ 공주시-세종시·대전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은-대전시, 부여군-논산시, 청양군-홍성·예산군과 연계성이 높음



<충남, 대전, 세종지역 통근·통학 멘드로그램(2040년 기준)>

IV

인식 조사 및 정책과제

IV. 인식조사 및 정책과제

역외 유출 비중 20%대에서 향후 감소 예상

영향 예측

■ 메가시티(다중심 초연결)로 발전하더라도, 경로상 남부권은 고립되거나, 쇠퇴를 경험 전망



미래 방향

■ 전문가 :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71.4%), 영농중심 전원 지역(28.6%)
 주 민 : 관광·여가 산업 중심지역(33.0%), 첨단산업 중심지역(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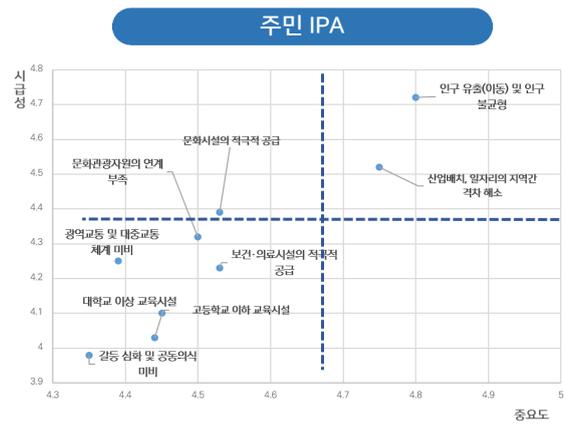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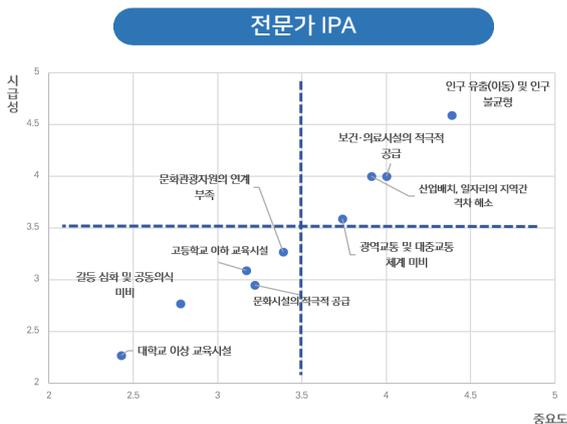
전문가		주민	
구분	응답률	구분	응답률
① 영농중심 전원지역	28.6%	① 영농중심 전원지역	16.0%
② 첨단산업 중심지역		② 첨단산업 중심지역	29.5%
③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71.4%	③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33.0%
④ 국제교류도시		④ 국제교류도시	4.0%
⑤ 교육·연구 중심지역		⑤ 교육·연구 중심지역	8.5%
⑥ 물류·유통 중심지역		⑥ 물류·유통 중심지역	9.0%

IV. 인식조사 및 정책과제

시급한 과제는 '인구 유출, 산업 배치, 일자리'로 확인

시급과제

■ 전문가 : 인구 > 보건·의료 > 산업·일자리 > 광역·대중교통
 주 민 : 인구 > 산업·일자리



연계·협력

농산업

- (남부권내 시·군간) 통합 브랜드, 통합 판촉, 생산농가 교육
- (남부권 시·군 ↔ 충남 시·군) 농축산 바이오산업 육성
- (남부권 시·군 ↔ 대전, 세종) R&D, 농산업 인재 육성, 온라인 마케팅, 귀농귀촌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 과학기술기반, 청년층 인력 활용 분야 등은 광역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고려
- 시·군별로 동종의 사업을 **공동 마케팅**하는 통합적 추진 요구

관광

- (남부권내 시·군간)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관광 통합 브랜드구축
- (남부권 시·군 ↔ 대전, 세종) 국제행사 개최, 국제기구 가입 및 홍보 등
- 시·군별 개별 추진하는 사업을 **공동의 목적**을 갖고서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율성 제고

산업 및 인적자원

- (남부권내 시·군간) 청년 유치 정책, 청년지원 사업, 음식 숙박업 상품 메뉴개발,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 (남부권 시·군 ↔ 대전, 세종)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업 유치, 혁신선도인재 양성, 기업지원, 사업체 기술 특허 지원 등

V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기본방향

기본방향

국가정책상 충청권 메가 시티 조성은 지속 추진 전망

대도시 영향을 흡수하고,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수동적 형태로는 한계
(낙후지역, 생산지역 전략)

도시간 수평적 연계, 쌍방향적 흐름을 통해 혁신시 시너지 효과 기대

지역사회, 문화의 폐쇄적 한계 극복,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 노력
도시간 특화된 기능을 갖고 상호 보완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지역사회로의 전환

광역차원

생활 환경,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
도시간 연계·협력
경제주체간 상호 작용

지역차원

교통 연계성 제고 및 도시재생
지식기반 인프라 강화
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

도시·교통 부문

생활권별 계획적 관리체계

- 주요 중심지를 서비스 생활권 계획을 구체화(대전시, 세종시 중첩생활권)
 - 장래 인구, 교통, 관광지, 산업 등의 변화에 대처하는 생활권 조정
 - 수위 중심지 거점성 확보 및 면지역간 교통 접근성 체계화
 - 노후 산업단지·농공단지, 관광지를 새로운 생산·일자리 중심지로 재편
 - 창업지원, 교류·협력 등 혁신공간 조성
- 외연적 확장을 관리하고, 분산된 공공시설을 집산화 유도
 - 대전시·세종시 영향 흡수하는 대도시 근교형 도심기능 콤팩트화
 - 도시기능 입지 유도를 위한 정책적, 계획적 대안 마련
 - 과도한 상업지역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공간적 압축 유도방안 마련

대전시, 세종시 연계
남부권 생활권 계획
(기존 계획(광역도시계획, 시군
기본계획, 농촌공간계획 등 통합)

시군별 용도지역, 지구,
산업입지, 입지유도 계획 종합
(시군별 관리계획 지침 하달)

다양한 주택, 소규모 주택지 개발

- 청장년층 전원생활 모색형 미니 신도시 개발
 - 대전시 고차 도시 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자연경관 향후 층을 고려
 - 문화, 복지, 보건서비스 일괄 제공하는 전원 복합단지 조성
- 대학, 관광지, 산업단지를 주요 거점지와 연계한 복합단지로 조성
 - 젊은층 인구 유출 방지 위한 산업기능간 융복합 연계, 지역내 인적자원 육성

공주, 논산, 금산 경관우수지
위케어선형 복합단지 조성

공주, 논산, 금산, 청양 캠퍼스
개발 및 지역사회연계 LAB
조성

V.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도시·교통 부문

공공주도형 자율적 도시재생 확대

- 도시재생 + 재건축, 재개발 복합 추진(공공형 > 민간형)
 - 청년 주택공급의 확장
 - 현재 도시 내부의 빈민, 사회적 약자의 포괄적 수용

■ LH, 충남개발공사 참여 확대

거주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본복지형 주택·도시 조성

- 도심내부 스마트 그리드 대응 주민 지분참여형 에너지 충전 스테이션 조성
- 주택 임대료 지출 감소, 주택 리모델링 공공 지원의 신탁형 주택 보급(어포더블주택)

■ 미래 대응
주택, 도시 전담 기능 강화
(남부출장소 기능 강화)

교통 인프라 연계 광역교통체계 운영

- 대전시, 세종시 BRT 연계 및 도심내 인프라 확충(도심 환승체계)
- 철도, 도로망 등 교통시설 입체화 및 기반시설 정비
- UAM 등 미래 교통망 대응 교통 시스템 구축

■ 국가, 광역, 간선 등
다중 교통망의
도심내 입지
및
도심재개발 촉진

V.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산업·경제부문

산업집적지 형성 및 연계협력(장기)

- 남부권내 인력 시장의 보완 및 시장 공급
 - 근로자 수용태세 확보로 직주분리 종합 대응
 - 농업 등 계절 노동자의 수급 및 인력시장 조달(대전,세종 사회적 약자 교육 훈련 공급)
 - 기업,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노동 숙련도 고도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주거지 공급
- 남부권 주력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광역간 연계협력
 - 공주시 천안·공주 산업벨트 조성, R&D 창업공간 조성, 첨단소재산업 바이오소재산업, ICT 융합산업, 에너지 관련산업 육성
 - 논산시, 계룡시 국방산업클러스터 품질, 서비스 고도화 및 기업 유치
 - 부여군, 청양군은 농업, 산림 바이오 소재산업, 식품가공산업, 유통·물류산업 집적화 및 세종 바이오 메디컬산업 연계
 - 금산군 인삼약초산업, 소공인 기업 지원 특화

■ 남부권 인력 시장
공급계획 수립 및
교육 훈련 특성화

■ 시군별 전략산업 선정 및
광역간, 지역간 연계협력

4차산업 혁명 수용한 기존 지역경제 구조·체질 개선

- 농축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산업별 생산성 향상
- 삶의 질 분야 스마트 기술 보급
- 노동집약 루틴화 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전환
- 취업구조 변화 및 재훈련
- 일자리 부족·전환시대 종합 대응

■ 시군별 지역경제 현행화
4차산업혁명 부정적
영향(전통화, 일자리 축소)
최소화
및
청년층 일자리 유입 확대

V.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산업·경제부문

농업 고부가가치화 및 비즈니스화 확대

- 청년 신규 취농 지원 체계 및 진입장벽 해소 원스톱 서비스
 - 생계, 농업 교육훈련
 - 귀농자 자본투자 지원, 인턴급여, 직접지불제 확대,
 - 농지 임대, 경영이양체계화,
 - 농지유통화 연동 농지은행의 청년 농업인 연계 기능 강화
-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 농식품산업 활성화
 - 식품 생산, 유통, 소비자 니즈, 식문화 확대 위한 빅데이터 구축
 - 식품 평가, 정보 공유 시스템
 - 전통식품에서 일반가공식품 정책 강화
 - 식재료 사용 활성화, 식품 포장 및 기자재 외연 확대
 - 농가 판로확보 및 역량개발
 - 취약계층 대상 농업기술 및 경영 역량강화
 - 대도시 농수산물시장, 수출대상 국가별 맞춤형 지원, 외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 학교급식, 공공기관 납품 식자재의 공동 출하 및 판로 확보
- 농산업 미래성장산업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R&D 추진 및 스마트 팜 확대
 - 농업기술 전문가, 기술 네트워크 구축
 - 빅데이터 인력 양성 및 농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기업, 연구원 연계

충남(남부권) 농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시군간, 광역간
기업-농민간
공동 수익창출 모델)

V.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문화·관광 부문 :

관광서비스업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적응 태세 마련

- 지역 청년, 주민, 관광종사자 참여 인적플랫폼 구축
 - 창의적 사업 기획, 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훈련, 마케팅, 상품개발 플랫폼 구축
 - 지역단위 관광발전 혁신주체(지역관광기획가 등) 양성
 - 관광 창업 활성화 지원, 산관학 협력사업 발굴 지원
-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 전통 영역 : 숙박, 항공, 식음료, 여행사, 관광
 - 융복합 영역 :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의료, MICE, 문화예술, 스포츠, ICT, 제조업
- 기존 관광의 한계 극복한 새로운 관광시장 육성
 -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사업
 -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하는 도시 관광
 -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소도시, 시골관광

관광시설 지양
서비스 질의 획기적 개선

주민, 민간 주도형
혁신생태계 육성
및
남부권 차별화된
관광시장 육성

관광분야 연계개발 및 공동 마케팅

- 공공중심의 다지역간 관광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 홍보·마케팅
 - 광역관광코스 발굴 및 참여형 프로그램개발·판매
 - 소도시 자원 연계 네트워크 관광상품 개발(마을만들기 연계)
- 테마별 광역관광 주유 루트 형성 및 촉진
 - 테마성, 스토리성있는 관광지역 네트워크화
 - 기존 백제문화, 종교문화, 정신문화, 유교문화, 불교문화 등
콘텐츠 중심의 연계성 강화 및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홍보·마케팅

테마별, 스토리별 네트워크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대전, 세종, 충남 공동 마케팅

V.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문화·관광 부문

음식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차별화된 음식문화 형성

- 맛, 음식, 식문화와 관광 접목한 음식문화 개발
- 먹는 즐거움으로서 음식에 대한 원형 보전 및 발전
- 젊은이의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눈·맛·눈높에 부합하는 음식개발 및 지적재산화
 - 음식 레시피 개발 및 지적재산화(6개 시군 공동)
 - 전문 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적재산권 무료 활용
- 특산물 활용 치유음식 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 외식 상품 개발

음식문화의 확대
및
지적재산화

광역·지역간 DMO조직 운영

구분	주요기능	주요과제
관광사업기획/계획	계획수립/사업기획	- 관광진흥계획 수립, 행정의 계획수립 지원 - 관광사업용 기획, 행정의 부문별 계획 수립 지원
	관광관련 조사연구	- 각종 관광관련 조사연구
	지역 관광사업평가	- 목표(KPI)설정 및 성과관리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데이터수집	- 중심시장 설정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주요 관광지 마케팅 분석
	마케팅전략수립	- 주요 관광지별 관광역 연계, 관광역행태 만족도조사
	국내홍보 및 프로모션	- 지역관광 마케팅 실행 등
관광자원 관리	국외홍보 및 관광객유치	- 국외 관광 마케팅 직접 실행(국외인물유인사업투자등) - 국외 관광 마케팅 협력 실행(ITO, RTO협력박람회등)
	관광자원 및 관광지관리	- 지역관광 자원 및 관광지관리
	관광상품 및 콘텐츠개발/관리	- 역사박물관 1차체험관 조성, 농박프로그램, 관광메스, 역사유적 민간영관 프로그램, 박물관 수감(체험전시회 등)
관광산업 지원	축제지원 및 운영	- 지역축제 지역내 역할분담 및 공동조직 등 지원가능 - 지역축제의 운영을 상시사업으로 시행
	관광비즈니스 창업/육성지원	- 관광인프라 조성 및 창업 지원 - 여행관광업 창업 및 육성지원
	관광비즈니스 컨설팅지원	- 관광비즈니스 컨설팅 운영(전문가연출, 업무, 세무, 회계컨설팅 등) - 지역 관광상품/특산물 판로개척 지원
관광품질 관리	관광산업 품질관리	- 숙박/음식/쇼핑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지역제 대응강화 - 한국관광품질인증 취득지원, 바가지요금회피여행예약등
	관광안내서비스 등	-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체계 개선

관광 사업 전체
대전시, 세종시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충남 남부권 DMO 운영

V.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계·협력 부문

중간지원조직 통합 구성 운영 및 지역간, 광역간 네트워킹 강화

- 중앙정부 부처별 중간지원조직 통합화 유도
 - 관료형 중간지원조직 탈피(시군 공무원 인식 개선 필요)
- 시군은 활동가, 코디네이터의 양성(점찍기) - 인적 역량의 고도화·전문화 및 네트워크 인력의 고도화
 -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제공
 - 행정환경의 개선 : 과제중심형 학습과정 조성
 -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강화(분야별 지역간, 광역간)

충남 인재개발원
특수 대학원 코스 운영
및
대전, 세종간
네트워크 강화
(소통 채널 단일화 및 통합화)

인적자원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연동

- 산학연 네트워크
 - 고도의 기술 교육, 농산업 클러스터, 지역전략식품산업 양성,
- 소상공인
 - 자영업 경영진단, 창업컨설팅, 현장 체험 멘토링, 자영업 클리닉, 시설개선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자영업 협업화, 골목 창업학교, 농수산물 가격 정보, 물가 정보, 소상공인 물가정보, 도매시장 정보, 착한가격 업소 정보 등
- 창의인재 양성
 - 농어촌 유학, 농어촌 체험 교과과정, 초중학교 공동급식사업 공동 대응, 관계인구 유치, 부동산·세제 관련 인력 양성

인적자원 육성하는
통합 기구 신규 조성

VI

결론 및 향후 과제

VI. 결론 및 향후 과제

결론

▶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기존 도시의 재구조화

- 인구 감소시대에 맞춘 도시의 내부충진식 개발을 기본으로 하되, 대중교통과 연계된 도시시설의 입지 적정화계획도 고려, 주택, 주거의 개발

▶ 충남 남부권 각 시·군별로의 전문화된 성장동력의 확충

- 남부권 시군이 대전시·세종시로의 쏠림현상 가속화로 인한 도시체계상의 중위거점 소멸,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역의 발전전략이 대전시·세종시와 윈윈할 수 있는 전문화된 분담기능 검토
- 장기적으로는 지역자산 기반의 첨단산업과의 접목을 고려

▶ 다양한 광역적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 연계협력의 대상을 산업, 문화, 관광, 의료, 인적자원등으로 확대하여 지역혁신의 주체자로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

향후 과제

▶ 사업의 구체화 및 타 지역간의 연계협력 검토

- 대전시, 세종시와 연계협력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전략산업의 발굴 및 구체화가 필요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이관률 선임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2022.12.20
이관률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II

사회포용의
개념과 이론적 논거

III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V

결론

I

연구배경 및 목적

I. 연구배경 및 목적

- ① 21세기 들어 세계은행과 UN을 포함한 국제기구, EU는 사회포용을 국가 및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있음
- ② - 역사적으로 사회포용이 높은 지역은 성장해 왔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쇠퇴하거나 낙후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예: 미국 남부지역, 네덜란드 등)
- ③ Deloitte 보고서(2019)에 의하면, 포용적 태도가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을 견인함
 - 사회포용은 물적 발전 이외에 사회적 응집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이인원 외, 2020)
- ④ 사회포용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주로 포용성장 및 포용성 지수 개발에 초점을 두었음
 - 소득 불평등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분배 문제가 주요 내용임(정책기획위원회, 2018)
- 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사회포용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사회포용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포용의 중요성을 규명한다는 의의가 있음

II

사회포용의 개념과 이론적 논거

사회포용의 개념
사회포용의 유형
이론적 논거의 검토

II. 사회포용의 개념과 이론적 논거

📌 사회포용의 개념 및 대상

개념

-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회배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극복된 상태(O'Reilly, 2005).
- 특정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을 없애는 동시에 그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특정한 정책과 제도의 고안을 포함함(유엔경제사회부, 2016).

대상

- 외국은 LGBT를 사회포용의 대상으로 연구 수행(Brenner, Lyons, & Fassinger, 2010; Reynolds 2013; Akker et al. 2013).
- 우리나라는 빈곤계층,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여성, 노인, 장애인과 다문화 등을 대상으로 연구 수행(신류라, 2013; 안성조 외 2019; 유란희 외, 2020; 권연화 외 2020, 이인원 외 2020).

II. 사회포용의 개념과 이론적 논거

사회포용의 유형

포용과 배제의 구분

- 관용은 3단계, 그리고 배제는 2단계로 구분
- 우리 사회의 관용은 딜로이트 재단이 정의한 관용 혹은 공정과 존중의 어느 중간 정도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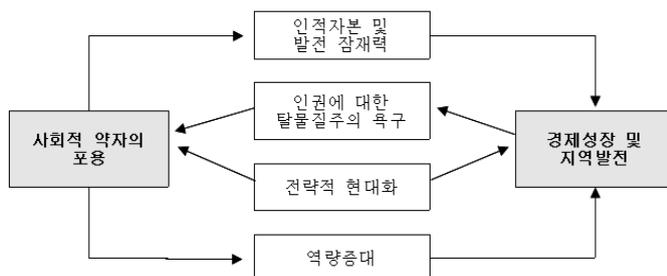


자료: Deloitte(2013; 2019)

II. 사회포용의 개념과 이론적 논거

이론적 논거의 검토

- 사회포용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Habermas, 2001; 1998; Thomaseen, 2006; 장용석 외, 2020).
- 또한 사회포용은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함(Bernard, 1999; Jenson, 1998).
- 포용은 국가적 차원 보다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더 중요함. 왜냐하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임.



자료: Badgett et al.(2019)

[사회포용과 경제성장의 관계]



자료: OECD(2011)

[사회포용과 사회통합의 관계]

Ⅲ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분석자료
분석모형
분석방법

Ⅲ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 분석자료

🔍 사회포용의 분석자료: 충남사회조사

- 충남사회조사에서는 “귀하께서는 거주지역(시군)에서 다음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로 사회포용을 조사하고 있음.

- 충남의 사회포용은 충남사회조사를 통합한 129,913개 자료(2016~2021)를 이용해 연도별, 시군별로 분석함.

[충남 사회조사의 사회포용 조사항목]

구분	2016 (n=27,917)	2017 (n=27,226)	2018 (n=26,318)	2019 (n=25,755)	2020 (n=25,383)	2021 (n=25,128)
여성	○	○	○	○	○	○
아동·청소년	○	○	○	○	○	○
노인	○	○	○	○	○	○
장애인	○	○	○	○	○	○
외국인 노동자	○	○	○	○	○	○
결혼이주민	○	○	○	○	○	○
북한이탈주민	-	-	-	○	○	○
귀화자	○	○	○	○	-	-
농어업인	○	○	○	○	-	-
노숙인	-	-	-	-	-	○
성소수자	-	-	-	-	-	○

🔍 패널자료의 구성

-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충남통계의 2차 자료와 충남사회조사의 1차 자료를 통합함.

- 패널자료는 충남의 15개 시군별 자료가 2017~2021년의 5개 연구로 구성됨.

분석모형

모형 1

$$\textcircled{D} \ln Y_{it} = \alpha + \beta * SI_{it} + \gamma * \ln P_{i(t-1)} + \delta * \ln F_{i(t-1)} + e$$

모형 2

$$\textcircled{D} \ln Y_{it} = \alpha + \beta * ISI_{it} + \gamma * OSI_{it} + \delta * \ln P_{i(t-1)} + \epsilon * \ln F_{i(t-1)} + e$$

** 여기서, Y_{it} 는 i지역 t연도 종속변수의 로그값

독립변수: SI_{it} 는 사회포용, ISI_{it} 는 내부포용, OSI_{it} 는 외부포용

통제변수: $\ln P_{i(t-1)}$ 는 전 연도 인구수의 로그값,

$\ln F_{i(t-1)}$ 는 전 연도 사업체수의 로그값

α 는 상수, e 는 오차항

분석방법

- ① 사회포용 개념의 구분화 : 요인분석
- ② 15개 시군별 사회포용의 실태분석 : 5개 연도별 분산분석
- ③ 사회포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분석 : 패널회귀분석
- ④ 주요 변수의 산정식과 평균값

		구분	산정식	평균값
종속 변수	인구 증가	인구수 증가	$\frac{y_t}{y_{t-1}} * 100$	99.44
		순이동 증가		62.38
	경제 성장	고용 성장	$\ln(y_t - y_{t-1})$	7.03
		GRDP 성장		11.57
	사회 통합	공동체의식 개선	$y_t - y_{t-1}$	0.11
		범죄안전 개선		0.05
사회안전 개선		0.03		
독립 변수	사회 포용	사회포용	x_t	3.43
		내부포용		3.63
		외부포용		3.16
통제변수		전 연도 인구수	$\ln(c_{t-1})$	11.54
		전 연도 사업체수		9.01

주: t 는 해당 연도, $t-1$ 은 전 연도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의 개념화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시군별 사회포용의 실태화 변화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의 개념화

- ④ 충남의 사회포용은 외부포용과 내부포용으로 구분
 - 제1요인으로는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 제2요인으로는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충남 사회포용의 개념 구분 : 요인분석]

구분		요인1	요인2	
사 회 포 용	외부포용	결혼이주민	0.90	0.35
		북한이탈주민	0.86	0.33
		외국인 노동자	0.83	0.37
	내부포용	아동·청소년	0.31	0.83
		여성	0.32	0.83
		노인	0.31	0.77
		장애인	0.51	0.65
	고유값		20.6569	2.92636
	기여율		0.9154	0.1297
누적기여율		0.9154	1.0451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 ④ 2021년을 기준으로 충남의 사회포용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포용은 3.31이고 내부포용은 3.52, 외부포용은 3.01임.
- ④ 7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포용을 살펴보면, 노인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이 3.54, 여성이 3.52이고, 장애인이 3.39로 가장 낮음.
- 그리고 결혼이주민이 3.06이고, 외국인 노동자가 3.03이며, 북한이탈주민이 2.94로 가장 낮음.
- ④ 최근 5년간 충남 사회포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포용은 -0.20 낮아졌고, 내부포용도 -0.14 감소하였음. 특히 외부포용은 최근 5년간 0.38 감소하였음.
- 7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포용이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2021년의 사회포용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가장 낮음.
-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북한이탈주민(-0.38)임. 북한이탈주민은 7개 사회적 약자 중에서 사회포용이 가장 낮은 집단임.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F값(prob)
사회포용	3.51 ^a	3.49 ^b	3.41 ^c	3.37 ^d	3.31 ^e	-0.20	330.82 (0.0001)
내부포용	3.66 ^a	3.67 ^a	3.63 ^b	3.60 ^c	3.52 ^d	-0.14	144.58 (0.0001)
여성	3.65 ^b	3.67 ^a	3.61 ^c	3.59 ^d	3.52 ^e	-0.13	131.78 (0.0001)
아동·청소년	3.66 ^b	3.69 ^a	3.66 ^b	3.62 ^c	3.54 ^d	-0.12	120.12 (0.0001)
노인	3.77 ^b	3.81 ^a	3.76 ^b	3.73 ^c	3.65 ^d	-0.12	137.72 (0.0001)
장애인	3.54 ^a	3.51 ^b	3.48 ^c	3.47 ^c	3.39 ^d	-0.15	94.17 (0.0001)
외부포용	3.30 ^a	3.25 ^b	3.12 ^c	3.05 ^d	3.01 ^e	-0.29	551.94 (0.0001)
외국인 노동자	3.26 ^a	3.21 ^b	3.07 ^c	3.04 ^d	3.03 ^d	-0.23	348.21 (0.0001)
결혼이주민	3.32 ^a	3.27 ^b	3.16 ^c	3.09 ^d	3.06 ^e	-0.26	406.62 (0.0001)
북한이탈주민	3.32 ^a	3.27 ^b	3.13 ^c	3.03 ^d	2.94 ^e	-0.38	843.27 (0.0001)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시군별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 충남의 사회포용은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홍성군, 청양군, 공주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은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별 사회포용의 실태와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F값(prob)
전체	3.51 ^a	3.49 ^b	3.41 ^c	3.37 ^d	3.31 ^e	-0.20	330.82 (0.0001)
천안시	3.43 ^a	3.27 ^c	3.32 ^b	3.24 ^c	3.12 ^d	-0.31	83.79 (0.0001)
공주시	3.37 ^a	3.40 ^a	3.34 ^a	3.29 ^b	3.38 ^a	0.01	4.99 (0.0005)
보령시	3.58 ^a	3.35 ^b	3.35 ^b	3.34 ^b	3.25 ^c	-0.33	52.14 (0.0001)
아산시	3.46 ^a	3.43 ^a	3.32 ^b	3.44 ^a	3.22 ^c	-0.24	52.80 (0.0001)
서산시	3.46 ^a	3.30 ^b	3.27 ^b	3.18 ^c	3.05 ^d	-0.41	85.79 (0.0001)
논산시	3.56 ^a	3.66 ^b	3.49 ^c	3.48 ^c	3.26 ^d	-0.30	61.77 (0.0001)
계룡시	3.49 ^b	3.55 ^a	3.46 ^{bc}	3.44 ^c	3.41 ^c	-0.08	8.05 (0.0001)
당진시	3.29 ^b	3.54 ^a	3.30 ^b	3.33 ^b	3.12 ^c	-0.17	78.08 (0.0001)
금산군	3.62 ^a	3.42 ^b	3.64 ^a	3.29 ^c	3.33 ^c	-0.29	67.20 (0.0001)
부여군	3.65 ^a	3.67 ^a	3.32 ^c	3.53 ^b	3.49 ^b	-0.16	43.19 (0.0001)
서천군	3.83 ^a	3.60 ^b	3.60 ^b	3.35 ^c	3.33 ^c	-0.50	105.37 (0.0001)
청양군	3.23 ^d	3.30 ^{bc}	3.32 ^b	3.27 ^{cd}	3.50 ^a	0.27	39.10 (0.0001)
홍성군	3.53 ^c	3.85 ^a	3.6 ^{4b}	3.38 ^d	3.60 ^b	0.07	85.42 (0.0001)
예산군	3.86 ^a	3.64 ^b	3.60 ^b	3.66 ^b	3.65 ^b	-0.21	21.31 (0.0001)
태안군	3.55 ^b	3.61 ^a	3.34 ^c	3.36 ^c	3.25 ^d	-0.30	64.30 (0.0001)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과 인구증가의 관계

-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은 인구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내부포용은 순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외부포용은 순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함.
- 외부포용은 사회적 인구증가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내부포용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 오히려 순이동을 감소시켜 인구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음.

[사회포용과 인구증가의 관계]

구분	인구증가		순이동 증가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2.056 (-1.52)		174.0449 (0.44)	
내부포용		-2.520 (-1.16)		1322.698 (-2.26)
외부포용		0.187 (0.11)		1202.9 (2.60)
ln(전연도 인구)	-1.539 (-0.19)	-3.734 (-0.42)	127.0156 (0.05)	-2670.423 (-0.95)
ln(전연도 사업체수)	-1.755 (-0.42)	-0.852 (-0.19)	578.7447 (0.45)	1226.166 (1.03)
상수	140.134 (1.30)	158.769 (1.42)	-7101.836 (-0.20)	2009.35 (0.57)
관측 수	75	75	60	60
지역 수	15	15	12	12
모형 적합도	F값 (prob)	0.93 (0.4346)	0.78 (0.5444)	0.09 (0.9628)
	R ²	0.0464	0.0526	0.0062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과 경제성장의 관계

- ① 사회포용은 고용증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GRDP 증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내부포용은 순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외부포용은 순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함.
- ② 그러나 내부 및 외부포용이 고용과 GRDP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을 경제성장과 관련 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사회포용과 경제성장의 관계]

구분	ln(고용 증가)		ln(GRDP 증가)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2.092 (-1.52)	-	6.329 (2.41)	-	
내부포용	-	-0.024 (-0.01)	-	6.143 (0.87)	
외부포용	-	-1.746 (-1.09)	-	0.613 (0.11)	
ln(전연도 인구)	-13.032 (-1.47)	-10.581 (-1.07)	-18.667 (-0.77)	-15.180 (-0.57)	
ln(전연도 사업체수)	5.159 (1.11)	3.787 (0.71)	2.629 (0.19)	-2.383 (-0.42)	
상수	118.474 (1.17)	100.927 (0.95)	181.853 (0.63)	184.241 (0.62)	
관측 수	55	55	55	55	
지역 수	15	15	15	15	
모형 적합도	F값 (prob)	4.20 (0.0118)	3.18 (0.0247)	2.34 (0.1212)	1.65 (0.2264)
	R ²	0.2540	0.2609	0.3504	0.354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17

IV. 충남 사회포용의 실태와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사회포용과 사회통합의 관계

- ① 사회포용은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그리고 사회안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내부포용은 공동체의식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외부포용은 공동체의식, 범죄안전, 사회안전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포용과 사회통합의 관계]

구분	공동체의식 개선		범죄안전 개선		사회안전 개선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0.875 (2.53)	-	0.647 (2.10)	-	0.612 (1.96)	-	
내부포용	-	0.962 (1.96)	-	0.060 (0.12)	-	0.524 (1.06)	
외부포용	-	0.028 (0.07)	-	0.517 (1.36)	-	0.126 (0.33)	
ln(전연도 인구)	1.946 (0.92)	2.650 (1.18)	-2.388 (-1.27)	-2.870 (-1.42)	-2.197 (-1.16)	-1.919 (-0.94)	
ln(전연도 사업체수)	-0.858 (-0.80)	-1.118 (-1.00)	1.980 (2.08)	2.157 (2.16)	2.746 (2.85)	2.634 (2.61)	
상수	-17.620 (-0.64)	-23.992 (-0.85)	7.551 (0.31)	11.895 (0.47)	-1.442 (-0.06)	-3.849 (-0.15)	
관측 수	75	75	75	75	75	75	
지역 수	15	15	15	15	15	15	
모형 적합도	F값 (prob)	5.35 (0.0026)	4.27 (0.0044)	2.48 (0.0699)	1.95 (0.1151)	3.52 (0.0206)	2.64 (0.0434)
	R ²	0.2197	0.2337	0.1156	0.1222	0.1563	0.158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18

분석결과의 종합

구분		모형1	모형2	
		사회포용	내부포용	외부포용
인구증가	인구증가			
	순이동 증가		(-)	(+)
경제성장	고용 성장			
	GRDP 성장	(+)		
사회통합	공동체의식 개선	(+)	(+)	
	범죄안전 개선	(+)		
	사회안전 개선	(+)		

V

결론

- ② 첫째, 충남의 사회포용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15개 시군 모두 감소하고 있음.
 - 충남의 사회포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포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 사회포용 중에서 외부포용이 가장 낮고, 외부포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포용 정책에서 외부포용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임.
- ③ 둘째, 외부포용이 순이동을 증가시키고, 반대로 내부포용이 순이동을 감소시킴.
 - 최근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순이동은 인구증가에서 매우 중요함.
 -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포용을 증진해 사회적 인구를 증가시켜야 할 것임.
 - 내부포용은 순이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의 균형이 매우 중요함.
- ④ 셋째, 사회포용은 GR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충남의 15개 시군은 최근 5년간 사회포용이 악화되고 있음.
 - 내부포용과 외부포용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인적자원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임.
 - 향후 사회적 약자가 경제주체로 정상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의 개방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⑤ 넷째, 사회포용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됨.
 -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내부포용만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 이는 역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의미함.
 - 향후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⑥ 향후 연구과제
 - 객관적인 2차 자료를 활용한 시군별 사회포용의 실태 파악
 - 사회포용의 결정요인과 사회포용의 제고 방안
 - 충남의 사회포용정책의 실태와 정책효과 분석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포용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남의 사회포용과 지역발전의 관계

세션 4

주도하는 지역발전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김원철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김형철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최돈정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김원철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2022.12.20

김원철 연구위원 · 김운식 연구원

목차

I

배경 및 목적

II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개념 정립

III

운영 현황
및 시사점

IV

통합
운영방안

V

결론 및
제언

I

배경 및 목적

I. 배경 및 목적

충남도가 중심이 되는 신(新) 운영 전략 필요

공공형버스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공재 성격의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하는 농어촌지역에 투입

* 시지역은 도시형 교통모델(국토교통부 지원), 구지역은 농촌형 교통모델(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충남도 역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2.28)으로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을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충남도가 시군 사업 관장**

새로운 전략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제로화(zero)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응답
공공형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이 담보된 새로운 운영 전략 필요**

- 충남도가 사업재원을 시군에 배분하는 등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충남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통해 삶의질 제고에 유용한 공공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수요응답 공공형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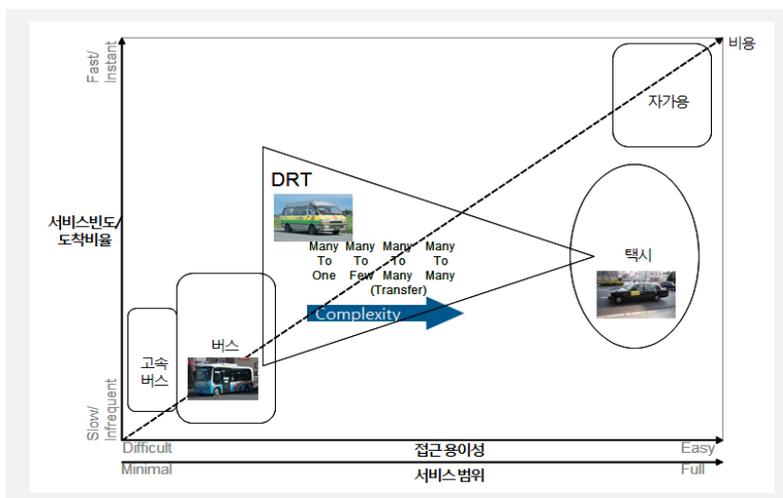
II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개념 정립

II.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개념 정립

수요응답교통의 특성(1/2)

수요응답교통(DRT)



출처 : Graham Currie, Melbourne DRT Trial Program Development Operator Workshop, Monash University, 재구성

01

서비스 수준
버스와 택시의
중간 영역

버스의 합승과
택시의 문전
서비스 제공



02

서비스 특징
버스와 택시의
중간 요금

수요에 따라
승용과 버스
운영 가능



수요응답교통의 특성(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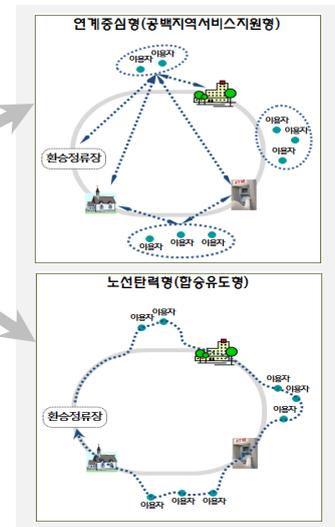
서비스수준

운행노선(route), 시간표(time), 예약방법(reservation)에 따라 서비스 수준(LOS)을 저(low), 중(average), 고(high)로 구분

- 저(low) 수준 :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고정. 일반버스와 같은 운행 방식
- 중(average) 수준 :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일부 고정. 일반버스와 같지만 운행노선을 이탈하여 운행 가능
- 고(high) 수준 :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없음. 택시와 같은 운행방식이나 합승이 허용됨

LOS(서비스수준)	Route	Time	Reservation	제공시기
High	Free	Free	Fully-automated	성숙기(장기)
Average	Semi-free	Semi-free	Semi-automated	성장기(중기)
Low	Fixed	Fixed	Operator	도입기(초기)

출처 : 김원철 외, "충청남도 농어촌지역 버스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2012.12, p.104.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07

III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운영 및 관리 조직

(시군) 교통 전담부서(인력) 부족 → 전문성 확보 필요

-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사업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에서 담당 (팀장1, 팀원2)
- (시 지역) 도로와 교통 업무 병행, (군 지역) 건설, 지역경제, 민원 업무 병행 → 교통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부재



출처 : 충청남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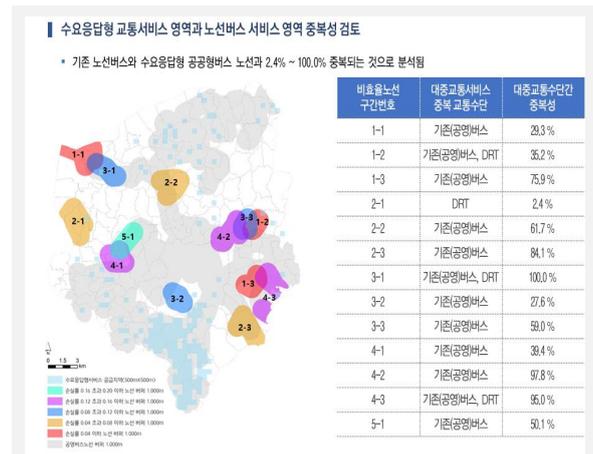
출처 : 충남 시군 홈페이지

📌 사업(운행노선) 계획

기존 버스운행 범위와의 중복성 검토 필수 → 사각지역 현황DB 구축 필요

- (도시형·농촌형교통모델 사업지침) 공공형버스는 기존 노선버스의 서비스와 중복 지역을 피하고, 대체 운영을 금지함
- (시군)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존 노선버스와의 중복성 검토 미반영 → '사업지침' 불이행, 공공성 저해

시지역	기존버스노선중복성검토	대중교통사각지역분석
천안시	NO	NO
공주시	NO	NO
아산시	NO	NO
논산시	NO	NO
당진시	NO	NO
금산군	NO	NO
부여군	NO	NO
서천군	NO	NO
청양군	NO	NO
홍성군	NO	NO
예산군	NO	NO
태안군	NO	NO



📍 위탁 협약

민간운송업체 중심의 위탁 협약 → 관리 강화 필요

-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100% 국고 보조 사업, (도시형·농촌형교통모델 사업지침) 대체 운행 불가
- 민간운송업체와의 위탁 협약 내용이 민간운송업체 관점으로 편향 → 지속성 저해

협약 사례

- 제1조(운영 목적) 공공형버스는 ○○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위탁 운영) “갑”은 별지 목록의 공공형버스 및 그 부속 물품을 「농촌형교통모델 운영지침」에 의하여 교통서비스 제공자인 “을”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을”에게 무상위탁 한다.
- 제3조(협약 내용 등) ① 공공형버스 위탁 운영에 따른 운행지역은 붙임과 같다. 단, 운행지역은 “별지목록의 공공형버스”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을”의 차량으로 대체 운행할 수 있다. ② 공공형버스의 운행지역은 주민 수요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을”은 공공형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농촌형교통모델 운영지침」 및 ○○군 공공형버스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선량한 관리의무 등) 공공형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주민교통 편의 증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의 가입) “을”은 공공형버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사 또는 버스공제조합에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차)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관리비 부담) ① “을”은 공공형버스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모든 책임 부담에는 제세공과금 및 제보험료 납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제경비를 포함한다. ② “갑”은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차량 내·외부 시설비 부담) 공공형버스 및 그 부속시설 중 ○○군수가 운행 상 필요로 하여 구입해 준 시설 이외의 내·외부 장착 시설은 “을”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을”이 계속되는 운영 적자 등으로 공공형버스를 반납하거나 군수가 위탁을 취소하더라도 “을”이 부담한 차량 내·외부 시설 비용은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11

📍 문제점 및 시사점

시사점1

충남도 교통정책과와 시군 담당 부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필요

- * 100% 국고 보조사업, 민간업체에 위탁·협약하여 사업 추진 중 →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 (시군)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업무 외 다양한(민원, 단속 등) 교통 업무 병행 추진 → 전문성 강화 필요

시사점2

시군 대중교통 사각지역 현황DB 구축 및 대중교통 사각지역 관리모델 도입

- * 공공형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역(취약지역 포함) 주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 (시군) 대중교통 사각지역 현황분석 없이 공공형버스 운행계획 수립 → 기존 버스와 운행 범위 중복 야기

시사점3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위탁 협약 표준모델 필요

- *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지침) 명확한 기준 보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제시
- * (시군) 세외수입 미 적용, 차량 유지 및 관리비용 또는 운송업체 운영관리비로 지원 → 지침 위반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12

IV

통합 운영방안

거버넌스 강화
대중교통 사각지역 관리모델 도입
충남형 공공형버스 위탁협약 표준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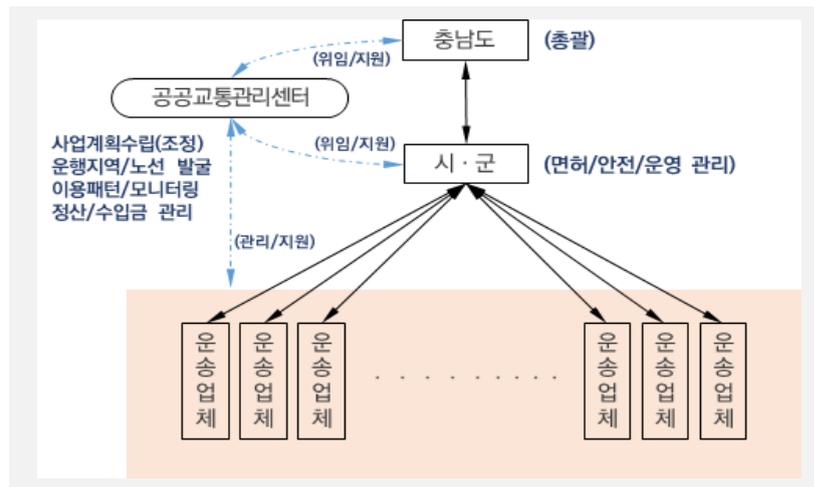
IV. 통합 운영방안

거버넌스 강화

개선방안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운행지역/노선 발굴, 모니터링, 정산/수입금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전문 조직, **(가칭)공공교통관리센터** 설립

- (충남도) '충남 대중교통 사각지역 제로화' 중·장기계획 수립, 시군 사업비 교부, 평가/관리기준 마련 등 업무 총괄
- (시군) 면허(사업자 공모) 관리, 안전 관리, 노선 및 재정 협의 등 운영 관리
- (공공교통관리센터)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운행지역/노선 발굴, 모니터링, 정산/수입금 관리 업무 담당
- 운송업체는 차량 및 운전자 관리, 서비스 제공 업무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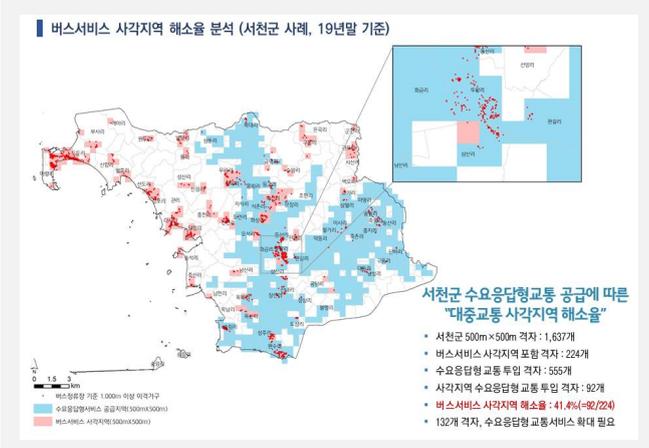
IV. 통합 운영방안

대중교통 사각지역 관리모델 도입

개선방안

충남 대중교통 사각지역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연차별 목표) 설정, 정책목표 달성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 사각지역 관리모델 도입**

-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율 분석을 통해 공공형버스가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어느정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지 정량적 평가 가능 (시군 대중교통 사각지역 현황분석을 위한 버스정류장 전수 공간정보화사업 필요)
- 개선 필요 지역의 사업규모 예측 가능성 증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사업 추진
- 공공교통의 운행범위 중복성 배제로 교통수단별(일반버스, 공공형버스) 국고 중복지원 예방, 재산성 확보



충남 대중교통 사각지역 관리모델(안)

충남도 관리모델 (매년 갱신)

- 대중교통(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정책목표 달성도, 사업비, 이용자 만족도 등 주요 정책지표 관리

구분	2020(기준)	2025	2030	2035	2040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격자)	224	250	270	290	300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공급지역 (격자)	92	***	***	***	***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정책목표 (%)	40.0	70.0	100.0	100.0	100.0
정책목표 달성도 (%)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비 (백만원)	***	***	***	***	***
이용자 만족도 (점)	80	-	-	-	-

시·군 관리모델 (매년 갱신)

- 지역별 대중교통 사각지역 현황,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공급 현황, 사업비, 이용 및 만족도 관리 등 현장지표 관리

법정리	대중교통 사각지역 현황		교통모델 공급 현황		사업비		이용 현황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율	
	격자수	인구수	격자수	이용객수	국비	도비	이용객수	만족도	격자	인구
''리	**	**	**	**	**	**	**	**	**	**
''리	**	**	**	**	**	**	**	**	**	**
''리	**	**	**	**	**	**	**	**	**	**

IV. 운영방안

충남형 공공형버스 위탁 협약 표준모델 개발

개선방안

시군이 민간 운송업체와 체결하는 위탁협약서를 충남 15개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충남형 공공형버스 위탁 협약 표준모델 개발**

- ① 대중교통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운행 노선권에 관한 사항, ② 재정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④ 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⑤ 인건비에 관한 사항, ⑥ 이윤에 관한 사항, ⑦ 광고계약 수익금에 관한 사항, ⑧ 회사매각에 관한 사항, ⑨ 노선 및 인력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⑩ 표준운송원가에 관한 추가

구분	세부내용
노선권	· 노선 운영 및 조정, 노선시설, 노선개편 권한은 시군이 행사함을 협약서에 명문화
재정 투명성 확보	· 충남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 의무 사용, 시군 통합영회(회계감사 실시) 대상 포함 ※ 페널티 : 부정행위 2회 적발 시 위탁협약에서 제외
서비스 향상	· 불친절 개선명령 과징금 제도 시행, 운전기사 3진 아웃제 도입
경영 합리화	① 공개채용 의무화 ※ 페널티: 위반시 인건비 삭감(채용일기준5년 이하 50%, 10년 이하 30%, 15년 이하 10%) ② 친족채용 금지 ※ 페널티: 기존인원은 근무년수(채용일~1년이하)를 기준으로 인건비 차등적용 (50~10%삭감)
인건비 지원 기준	① 대표이사 급여 : 상한액 설정 ② 비상근임원 인건비 미지급 ③ 퇴직급여 : 근속가산율 적용,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이자 반납, 추가지출액 및 목적 외 사용금액은 회수 또는 상계처리하며 부정행위 1회 간주, 위탁운영제 제외 시 근속가산 금액 반납(미납반시 보조금에서 상계처리) ※ 페널티 : 부정행위 2회 적발 시 위탁협약에서 제외 ④ 차기년도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의 ±20% 초과 금지 ⑤ 인건비 총액상한제 적용, 인상률은 행안부 고시 적용 ※ 페널티 : 부정행위 2회 적발 시 위탁협약에서 제외
이윤	· 기본이윤과 성과이윤 적용
광고 계약 등	· 계약기간의 광고수익은 운송수입에 포함하며, (가칭)공공교통관리센터에서 광고계약, 광고비사용처 및 사용비용 등 모든 권한 행사
회사 매각	· 각 사업자는 위탁운영제 기간 동안 버스회사를 매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불가피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할 시군이 우선 협상권을 갖음
노선 및 인력 운영 기준	· 노선 규모와 승무원 인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주52시간제를 충족하는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한 최적 인력운영 및 노선운영 계획 적용) ※ 페널티 : 원가 부풀리기(무리한 일2교대) 적발 시 위탁협약에서 제외, 3년단 도비 미지급
표준운송원가 기준	· 충청남도 시내·농어촌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지침 적용

V

결론 및 제언

V. 결론 및 제언

지속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통합 운영방안

결론

거버넌스 강화, (가칭)공공교통관리센터 설립

- 100% 국고 보조사업임을 고려, 사업비 정산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 필요, 시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운행지역/노선 발굴, 모니터링, 정산/수입금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소규모(2~3명) 전문 조직

거버넌스 강화, 대중교통 사각지역 관리모델 도입

- 공공형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시군 대중교통 사각지역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시군 사각지역 현황DB 구축 필요)

일관성 확보, 충남형 위탁 협약 표준모델 개발

- 민간운송업체와의 위탁 협약 내용이 민간운송업체 관점으로 편향되지 않고, 시군이 모두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민간운송업체화 위탁 협약 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필요

제언

충남 노선버스 회계 및 운행정보의 '융합 및 활용 플랫폼' 적용 대상에 포함

- 공공형버스의 사업계획과 실제 운행(집행) 여부 검증은 충남도에서 개발중인 '충남 노선버스 회계 및 운행정보 활용 플랫폼' 적용 대상으로 포함 필요 ('충남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 고도화 필요)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 수요응답 공공형버스 통합 운영방안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김형철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2022.12

연구요약

연구목적

- ④ '서산공항'의 '정책효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량적, 정성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변경(2019년)되면서 경제성(B/C)뿐만 아니라 정책효과 비중이 높아짐
 - 현재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고, 종합평가에서 정책성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

연구내용

- ④ 연구의 범위
 - 연구 대상: 서산공항, (정책효과 범위)일자리, 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
 - 공간적 범위: 서산공항 세력권, (시간적 범위)현재~30년
- ④ 연구의 주요내용
 - [Step 1] 관련 계획, 법, 제도, 사례 검토: 국가 상위계획, 도시/지역계획, 교통SOC 분석지침, 타 공항 사례 등
 - [Step 2]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서산공항 현황/여건, 전국 공항 여건, 영향권 내 주변 공항 이용 비율 등
 - [Step 3] 사업추진 여건: 내부여건(정책 일치성), 외부여건(지역 사업추진 의지)
 - [Step 4]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목차

I

개요

II

관련 계획
검토

III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IV

사업추진
여건

V

정책효과

I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대상과 범위
3. 흐름도

배경 및 목적

배경과 필요성

서산공항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고, '서산공항' 종합평가(AHP)의 사전대응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정책효과 분석 필요

- * 서산공항은 국가상위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에 반영
- * 예타의 사업추진 여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평가(AHP)에 의해 결정
- * 2019년에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책성 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효과로 평가하고 있음

목적

'서산공항'이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검토하고 '정책효과'를 분석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5>

대상과 범위

공간적 범위

- 공항 직접 세력권: 반경 30km(통상적)
- 공항 간접 세력권: 반경 60km(통상적)
- 교통수단 전환에 따른 효과 범위: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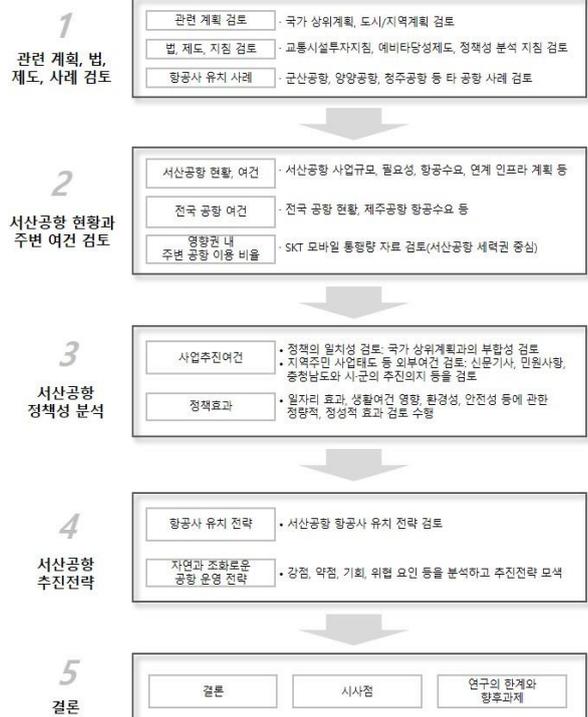
시간적 범위

- 현재~공항시설 및 접근도로 개통 후 30년까지

내용적 범위

- 관련 계획, 법, 제도, 사례 검토
-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 서산공항 정책성 분석
- 서산공항 추진전략
- 결론

흐름도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6>

II

관련계획 검토

I. 관련계획 검토

국가 최상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 서산공항 건설로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국가상위계획 (교통인프라 관련)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1-2040)
- 계획도(도면) 서산공항 반영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1-2025)
- 서산공항(일반공항) 반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2021-2030)
- 서산공항의 철도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포태안선' (내포-서산(공항)-태안)이 '추가검토 사업' 으로 반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1-2030)
- 태안축(서산~태안) 신규 반영 (태안축: 서해안~충남(서산)민항, 내포신도시 연결)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21-2025)
-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공항 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2021-2040)
- 서산공항 민항 추진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21-2040)
- 서산공항 건설로 여객·물류·관광의 항공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2021-2040)
- 서산공항 연계교통처리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중부권 4-2축 고속도로 / 내포철도 구축(내포~서산공항~태안))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2021-2030)
- '서산민항 유치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 반영



서산공항 건설은
국가상위계획,
도시/지역계획 등
정책 일관성 확보

III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1. 서산공항 현황과 여건
2. 전국 공항 여건

III.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서산공항 현황과 여건 (1/5)

1 현황

위치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일원 (해미비행장 11,900천 m²)

총 사업비 509억원 (국비)

사업내용 운항 일 8~9회, 터미널, 계류장, 유도도로(0.6km),
진입도로(1.4km) 등

경제성	B/C	NPV	IRR
	1.32	326억원	10.1%

수요예측 '23년 369천명 / '53년 477천명

※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전 타당성 연구(2017. 12) 국토교통부

- 추진경위**
- ✓'16. 5.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16~'20),고시('서산공항 설치 검토' 반영)
 - ✓'17. 12.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사업비 509억원, 수요 37만, B/C 1.32)
 - ✓'21. 8. 31. '22년 정부예산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5억원 반영
 - ✓'21. 9. 16.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에 '서산공항 추진' 반영
 - ✓'21. 11. 3.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충남 서산공항' 예타대상사업 선정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10>

Ⅲ.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서산공항 현황과 여건 (2/5)

2 장래 항공수요

- 서산공항 개항 시, '23년 369,790명 → '53년 477,034명 증가 예상
- 수요 비율이 높은 서산-제주 간 수요는 '23년 312,880명 → '53년 395,496명 증가 예상

(단위: 명)

구분	2023	2028	2033	2038	2043	2048	2053
서산-제주	312,880	336,494	360,392	378,549	392,386	396,755	395,496
서산-울릉도	24,146	26,248	28,166	29,514	30,760	32,125	34,070
서산-흑산도	32,764	35,450	37,175	38,272	41,165	43,851	47,468
합계	369,790	398,192	425,733	446,790	464,311	472,731	477,034

(단위: 천 명)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11>

Ⅲ.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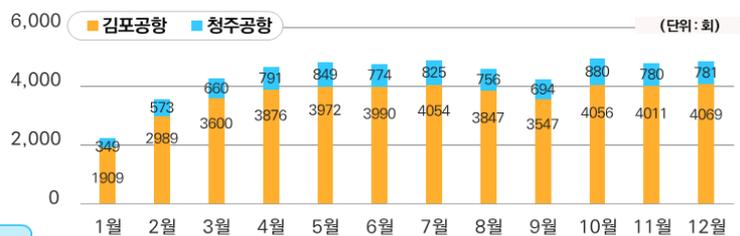
서산공항 현황과 여건 (3/5)

3 주변공항 이용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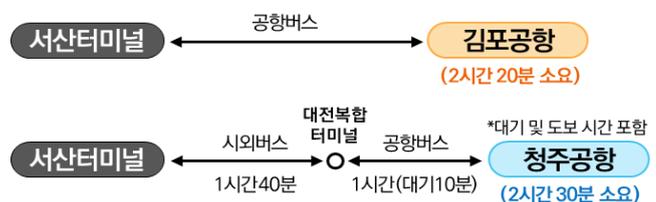
서산 ↔ 공항 승용차, 대중교통 접근시간



주변 공항의 제주 운항노선 편수 현황



서산 ↔ 공항 대중교통 통행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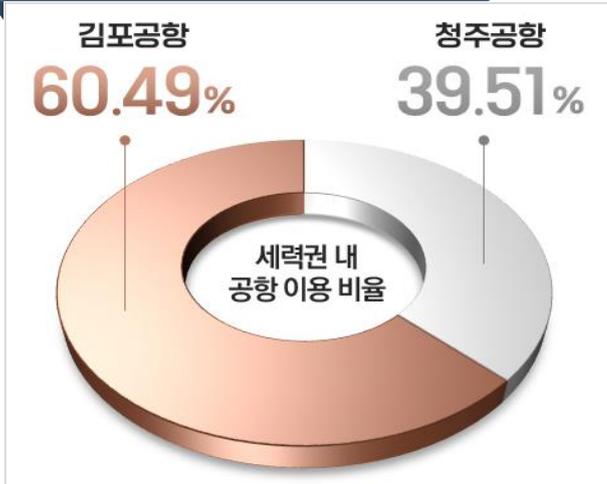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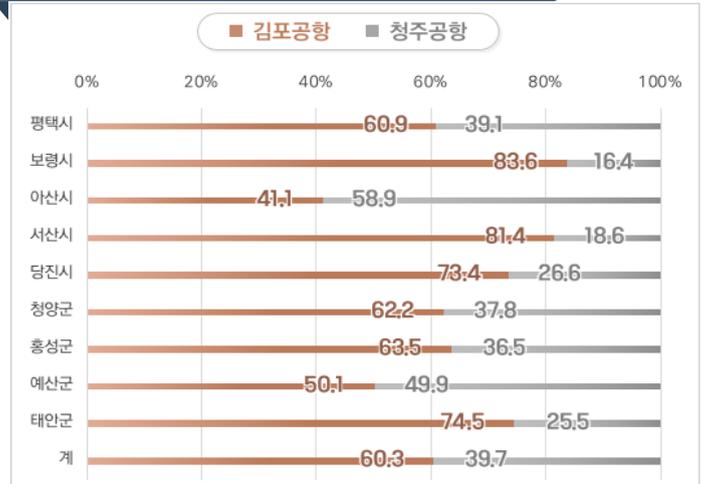
Ⅲ.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서산공항 현황과 여건 (3/5)

▶ 김포공항, 청주공항 이용 비율 (세력권 전체)



▶ 김포공항, 청주공항 이용 비율 (세력권 지역별)



주1: 자료수집 기간은 총 41일('22.02.14.~'22.03.27.) 간 SKT 모바일 통신 빅데이터 자료임

주2: 활용된 모바일 데이터는 전국에서 제주도로 이동한 통행량(사·군 기준) 자료, 전국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이동한 통행량(사·군) 자료를 활용함

주3: 김포공항 이용자로 집계는 서산공항 세력권(9개 지역)에서 제주도로 이동한 총 통행자 중 청주공항 이용자를 제외하여 산정함

출처: 충남도청 내부자료(충남도청(데이터정책관)에서 SKT모바일 통신 데이터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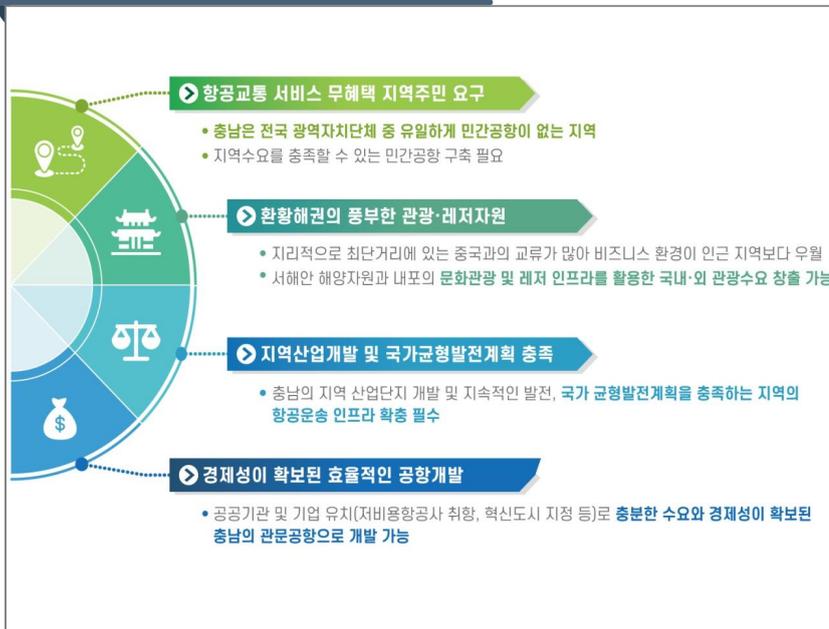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13>

Ⅲ.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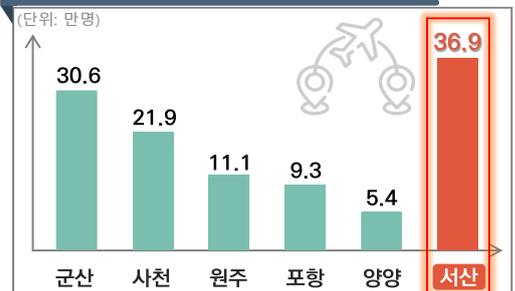
서산공항 현황과 여건 (4/5)

4 필요성

▶ 필요성



▶ 서산공항 항공수요



주1: 항공수요는 '19년 국내여객수요 반영

주2: 서산공항 수요는 '23년 장래 공항수요 반영

자료1: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자료2: 국토교통부, 서산 군비행장 민항설치 사전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 2017

▶ 서산공항 총사업비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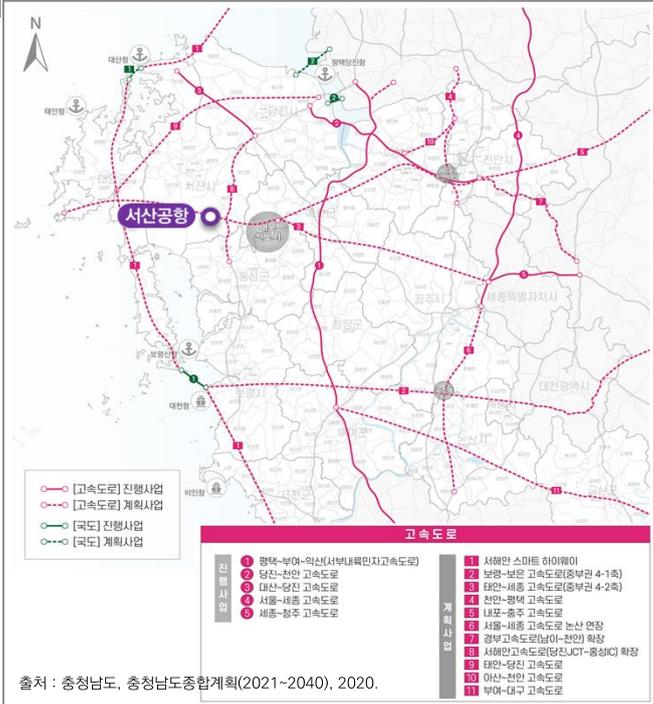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14>

III.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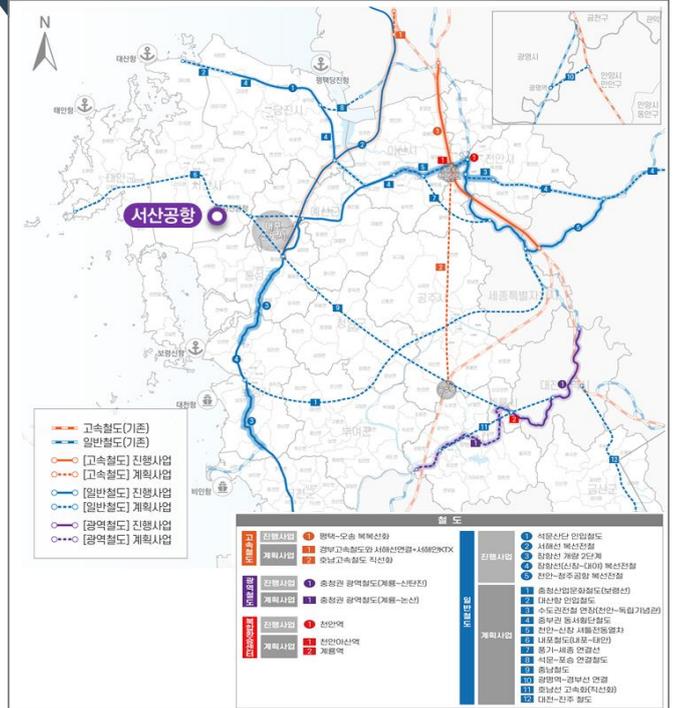
서산공항 현황과 여건 (5/5)

5 서산공항 교통인프라 연계 계획

고속도로



철도



III. 서산공항 현황과 주변 여건 검토

전국 공항 여건 (1/2)

1 전국 공항 현황

- 전국 15개 공항 중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 계획 및 추진 중인 공항6개

우리나라 공항 현황('20년)



계획 수립 및 추진 중인 공항 현황



전국 공항 여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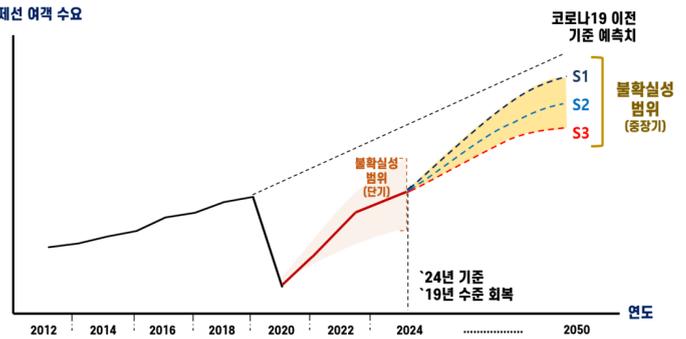
2 국내 제주공항 항공 수요

- 국내 제주공항 항공 수요를 향후 30년 후까지 예측
 - S1 : `25년 3,866 만 명 → `50년 4,578 만명 예측
 - S2 : `25년 3,396 만 명 → `50년 3,974 만명 예측
 - S3 : `25년 2,929 만 명 → `50년 3,407 만명 예측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는 항공수요를 단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마련하여 제시

** `20~`50년 GDP 예측치에 따라 낙관(3.1~1.3%) · 중립(2.4~0.9%) · 위축(2.3~0.5%) 구분

국제선 여객 수요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S1 (낙관)	국내	3,573	3,755	3,888	4,031	4,110	4,209
	국제	293	326	350	372	365	369
	소계	3,866	4,081	4,238	4,403	4,475	4,578
S2 (중립)	국내	3,107	3,266	3,381	3,505	3,574	3,660
	국제	289	303	315	328	316	314
	소계	3,396	3,569	3,696	3,833	3,890	3,974
S2 (위축)	국내	2,641	2,776	2,874	2,979	3,038	3,111
	국제	288	300	311	321	304	296
	소계	2,929	3,076	3,185	3,300	3,342	3,407

출처 :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 2021.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17>

IV

사업추진 여건

1. 내부여건(정책 일치성)
2. 외부여건(지역 사업태도)

IV. 사업추진여건

내부여건(정책일치성)

국가 상위계획, 도시/지역계획 등 정책 일관성 확보

각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추진전략 사업들 간 상호 연관성 높음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19>

IV. 사업추진여건

외부여건(지역 사업 태도) (1/7)

1 중앙정부

제20대 정부 서산공항 건설 국정과제 반영
※ 충남내륙철도와 서산공항 연계,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국가·국회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4 서산민항(충남공항) 건설

서산 공항비행장의 우수한 항공인프라를 활용하여 민항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 서남부지역 주민의 열악한 공항 접근성을 해소하고, 원활해진 시대의 국제 권유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 서산 전투 비행장을 활용하여 조기 민항 추진
- 서산민항은 기존 공군 활주로(2.7km)를 활용하여 항공 서비스 이용

'97. 6월 제20전투비행단 창단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공군기지에 '민항기 취항' 검토 지시

02

대통령(故 김영삼) 지시사항

국무총리대령장

제20대 대통령 직속 공군비행단 창단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민항기 취항' 검토 지시

국무총리대령장

제20대 대통령 직속 공군비행단 창단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민항기 취항' 검토 지시

K-2基地巡訪時事項措置計劃

<道에서 指撥한 事項>

1. 騒音・日夜音 環境被害 對象樹立

① 비행기 소음(소음 180, 1,559가)

○ 1일 20회 정도, 비행기 이착륙, 평균 90dB 내외 소음발생으로 인해, 77가량 불거는, 생활불편 - 주민항에, 입선가속 서신(259) 등

② 백야소음, 178가

○ 기존주민 야간경제음으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 발생
→ 충남도에서 공군본부와 협조, 환경전문가 조사후 대책 수립

2. K-2 集團民衆 解消 및 住民啓蒙

가. 지역단체 민원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 지역안전 및 지역안전 핵심대책에 구축
- 주민대표, 행정기관, 군부대, 의회의원, 환경전문가 포함

○ 소용피해 등 피해사례 조사 공동 추진
- 피해대책위 + 서산시 + 공군부대 운영

나. 주민정보강화 - 지역발전추진 계기

① 공적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헌대 형성
○ 각종 홍보에 활용 극조성(민항)을 임용 무라

②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의뢰 부활

○ 서해안시대 민항기 취항으로 지역발전 앞당김
- 인근 3개군민회와 협력, 지역안전-민항기-민항기
○ 군정명 및 관련공사 인구조립(약 8천명)으로 지역경제, 활황화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20>

IV. 사업추진여건

외부여건(지역 사업 태도) (6/7)

6 종교계(천주교 해미국제성지)

아시아 최초의 세계적 천주교 순례 관광지 구현을 위한 서산공항 추진 건의

종교계

해미국제성지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별 메시지 전달

08

“해미국제성지의 높은 세계적가치”



- 천주교 박해과정 등을 거치며 신앙이 깊게 뿌리 내린 지역으로 독보적 종교문화 형성
- 18 ~ 19세기 수백여명의 천주교 무명 순교자의 넋을 기리고자, 해미순교성지를 국제성지로 선포(교황청, '20. 11.)
- 해미 순교지 · 음성 '20년 54만명 입장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요관광지점입장객

“프란치스코 교황의 각별한 관심”



- 직접 해미순교성지와 해미음성을 방문하여 미사 집전('14. 8.)
- 이례적으로 해미국제성지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에 방문을 권유하는 특별한 메시지 전달('21. 4.)

해미국제성지 서산국제공항 사례와 필요성

Haemi Sanctuarium Internationalis

서산국제공항

국토교통부 및 KDI 브리핑 자료('21.20)



Haemi Sanctuarium Internationale

“Ce point Sanctuarium est le Corps par excellence de la dimension avec l'humanité de l'humanité.”

Wake Up Center Haemi Sanctuarium Internationale

Wake Up Center diventa un luogo del "risvegno" del mondo, per l'umanità, per la cultura, per la spiritualità.

▶▶ 해미국제성지 지정관련 특별메시지('21.04)
이 성지가 하늘을 만나고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만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 세계청년문화센터 관련 특별메시지('21.4)
Wake up Center가 세계의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25>

IV. 사업추진여건

외부여건(지역 사업 태도) (7/7)

7 언론보도

‘서산공항 구축’ 관련 언론보도 내용

언론보도

09

서산시,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막바지 총력

12월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막바지 총력전

공공의 안전 위해 희생당한 지역민-민간공항으로 보답해야

충남도, 서산 민항 유치 ‘큰박폭’

가덕도공항 되는데 서산민항 안 될 이유 없다

충남도, 서산 민항 유치 ‘큰박폭’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26>

V

정책효과

1. 일자리 효과
2. 생활여건 영향
3. 환경성 평가
4. 안전성 평가

V.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1/3)

1 고용유발효과

- 서산공항 건설기간과 운영기간 동안 **총 1,704명의 고용효과 유발**로 생산시장 및 노동시장에 긍정적 효과 발생
 - (건설기간) 4년 건설기간 동안 **총 590명 고용효과** 창출 ※ 인건비 고용효과(293명) + 사업비 고용효과(297명)
 - (운영기간) 30년 운영기간 동안 **총 1,114명 고용효과** 창출 ※ 0.77명 X 48.20억원 X 30년



주1: 총사업비는 509억원 적용 (각 년차별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주2: 재정지출로 인한 고용효과는 직접고용비율 0.28(교통시설건설), 연평균임금 0.4590 억원(건설업), 고용유발계수 0.86(교통시설건설) 적용 (고용노동부, 2021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p.19) 산업별 연평균 근로자 임금, (p. 22)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주3: 운영단계 고용효과는 0.77명/1억원 적용 (고용노동부, 2021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p.16), SOC 시설유형별 운영단계 단위당 고용효과, 공항부문 평균 반영)

주4: 연간 총 운영비는 4,820 백만원 적용 (충청남도, 서산 군비행장 민항 설치 사업타당성 보완 연구(p.62), 연간 총 운영비 반영)

V.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2/3)

2 고용의 질 개선 효과

- 서산공항 건설은 우수한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내 고용의 질 향상**이 기대됨
 - (임금수준) 서산시의 평균 임금 대비 **건설기간** 동안 임금수준은 **2.55 백만원** 높고, **운영기간** 동안 **14.11 백만원** 높음
 - (근로시간) 서산시의 평균 임금 대비 **건설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3.7 시간** 적고, **운영기간** 동안 **11.8 시간** 적음

▶ 임금수준 향상



▶ 근로시간 축소



주: 서산시의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은 서산시 전체 종사자수의 약 64%를 차지하는 4개 산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1: 고용노동부, 2021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2021. 재구성.
 자료2: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
 자료3: 서산시 통계연보, 종사자수, 2019년 기준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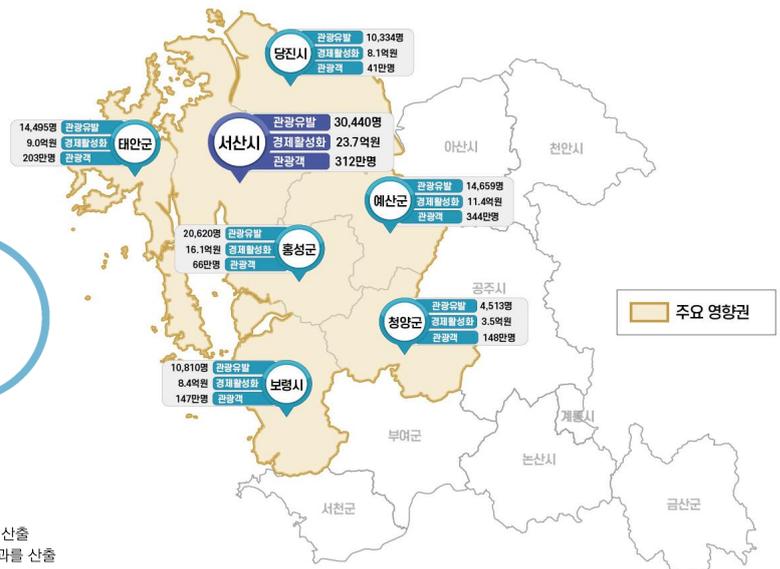
V. 정책효과

일자리 효과 (3/3)

3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

- 서산공항 건설로 접근성 개선에 따른 **관광 유발수요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간접고용 효과 발생**
 - 관광 유발수요 : 연간 10만명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연간 80억원 / 고용효과 : 연간 124명

▶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간접고용 효과



주1: 관광 유발수요 :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접근도 변화에 따른 유발 관광수요 분석
 주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유발된 관광객이 지역에서 하루간 소비하는 금액을 활용하여 산출
 주3: 고용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투입액으로 가정하여, IRIO 분석으로 간접고용 효과를 산출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KTDB 전국지역간 여가 통행 OD.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여행실태조사 분석편, 2019.

주: 관광객은 2019년 기준임
 자료: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0>

V. 정책효과

생활여건 향상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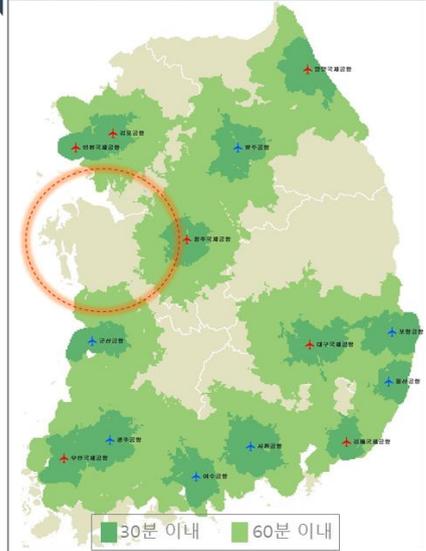
1 충남, 경기도(남부) 공항 접근성 향상

- (현황) 충남은 1시간 이내의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31.7%로 전국 지자체 중 공항 접근성이 가장 열악
- (개선 효과) 충남, 경기도(남부) 인구 밀집지역의 공항 접근성이 1시간 이내로 개선 → 국토 중부권 공항 접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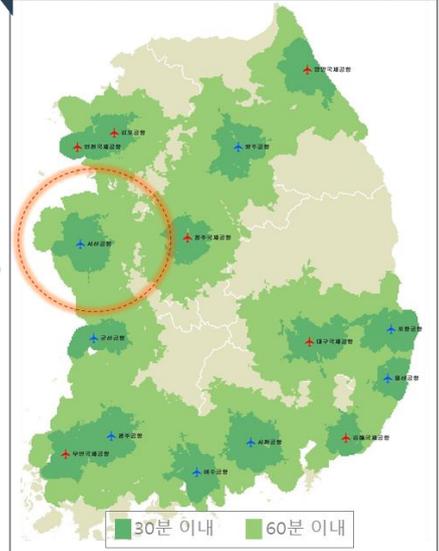
[공항 30, 60분 이내 지자체 면적 비중(%)]



▶ 현재 공항 영향권 (30, 60분)



▶ 서산공항 개통 후 공항 영향권(30, 6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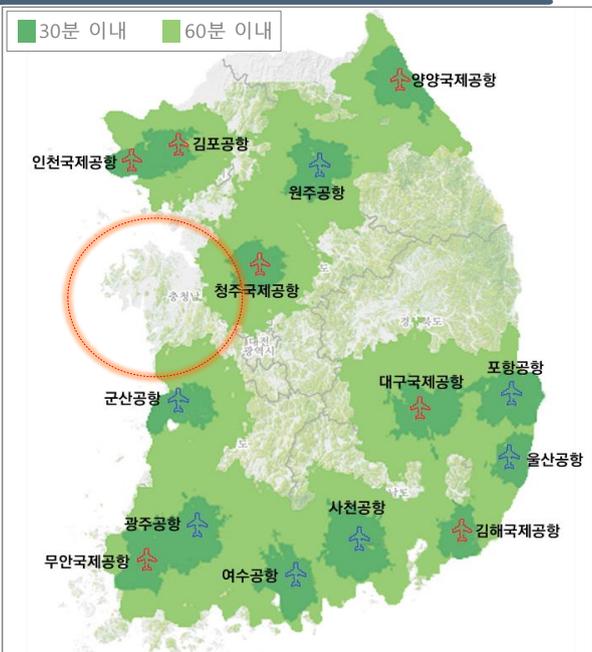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1>

V. 정책효과

생활여건 향상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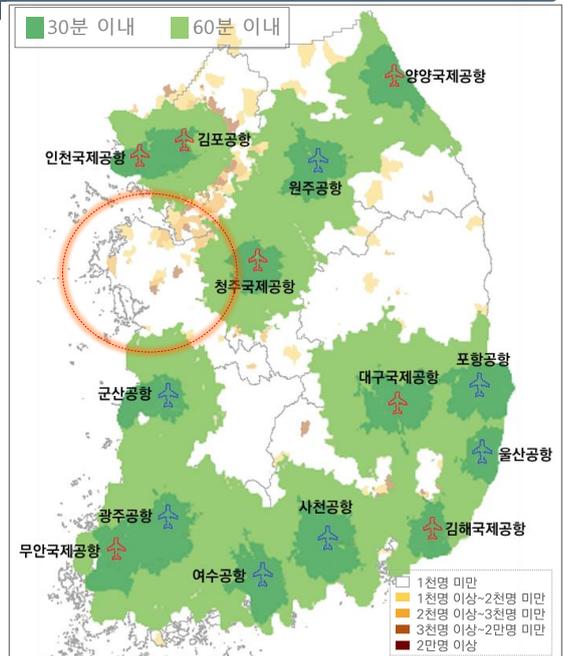
- 충남은 타 지역 보다 산악지형이 적고,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공항 접근성이 유일하게 열악한 지역임

▶ 산악지역과 공항 영향권(30, 60분)



자료: 산림청, FGIS 산림공간정보서비스

▶ 인구밀도와 공항 영향권(30, 60분)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 인구정보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2>

생활여건 향상 (2/6)

2 충남 주요 거점 접근성 향상

- 서산공항 반경 30km, 60km 이내 국가 주요 거점 접근성 대폭 향상
→ 국토균형발전거점(충남 내포혁신도시),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항만, 국가산단), 국제문화유산, 관광지 등의 접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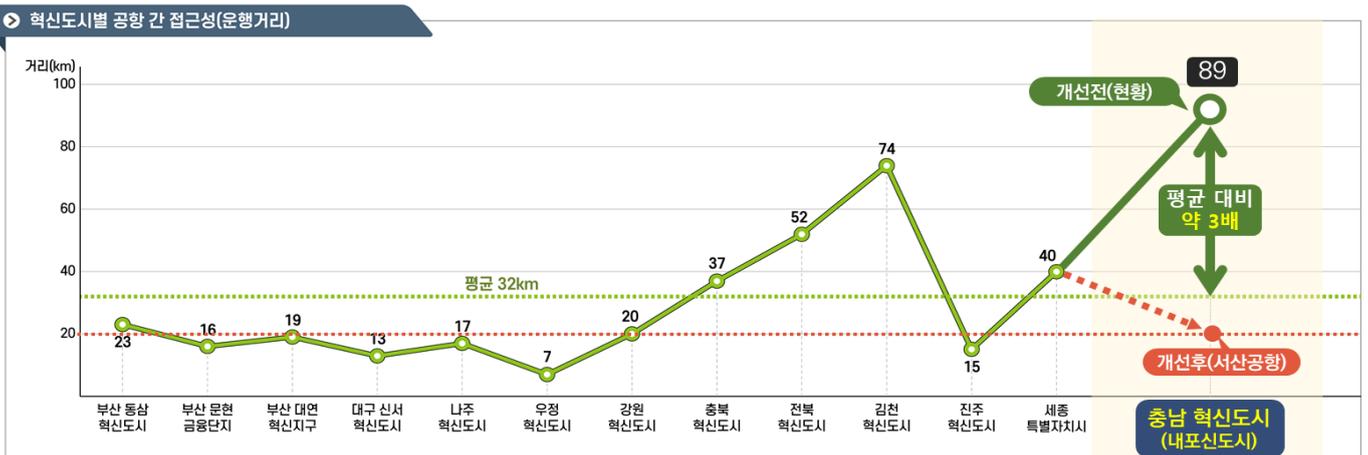
주1 : 접근성 향상은 서산공항 건설로 청주공항과 김포공항까지 이동단축 거리의 평균을 활용
주2 : 이동거리는 네이버 운행거리 기준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3>

생활여건 향상 (3/6)

3 국토균형발전 거점 지역인 혁신도시의 공항 접근성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유도

- (현황)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는 공항까지 직선거리가 89km(청주공항)~ 최대 100km(김포공항)이며, 타 혁신도시보다 약 3배 정도 접근성이 열악한 현실임
- (개선효과)수도권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광역 이동성 향상과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으로 국토균형발전 거점 지역인 충남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



주1: 운행거리는 네이버 지도 기준임
주2: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자료: 혁신도시 시즌2(https://innocity.molit.go.kr/), 2020.03 기준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4>

생활여건 향상 (4/6)

4 국토공간의 균형적인 공항 접근성 제공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충청권은 인구 대비 공항 개수가 저조한 현실, 충남은 인근 공항까지 2시간 소요 ※ 89km(청주공항)~100km(김포공항)
- 수도권 제외 각 권역별 공항 수는 2~4개임
- 충청권 공항은 1개(청주공항)이며, 충남의 공항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현실임
- 충청권과 인구 수준이 유사한 전라권, 대구·경북권 지역은 공항 수가 3~4개임

국내 공항분포 현황



권역별 공항수 및 인구수



<35>

생활여건 향상 (5/6)

5 통행 쾌적성 및 신뢰성 향상 효과

- 서산공항 건설로 도로 혼잡 감소, 통행 쾌적성 증대
 - 차량 간 간격 변화 및 중차량 비율 감소로 인한 통행 쾌적성 편익은 연간 3.8억원 수준
- 서산공항 건설로 도로부문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효과는 연간 17억원 수준

통행쾌적성



주: 통행쾌적성은 도로의 혼잡도 변화에 따른 운전자의 지불용의액을 조사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후 산출

통행신뢰성



주: 통행신뢰성은 사업 전후 통행시간 신뢰성 지표의 변화를 산정한 후, 통행 시간 표준편차의 비율편차를 곱하여 편익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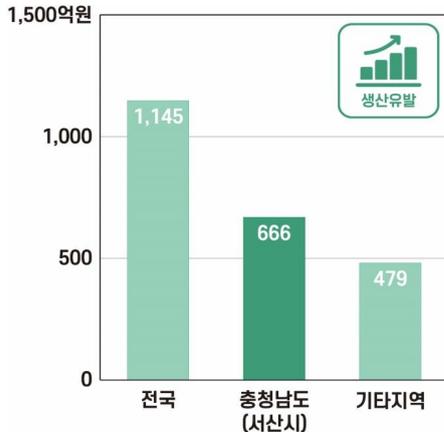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6>

V. 정책효과

🏠 생활여건 향상 (6/6)

6 지역경제 파급효과

-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1,14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69억원** 발생
 - (충청남도) 생산유발효과 66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20억원
 - (기타지역) 생산유발효과 47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9억원



주1 : 전국 = 충청남도(서산시) + 기타지역
 주2 : 지역경제파급효과는 다지역 산업연관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
 주3 : 서산공항 건설비 509억원이 투자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설에 효과임(건설 후 운영 시 발생하는 효과는 제외)
 자료 : 한국은행,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보도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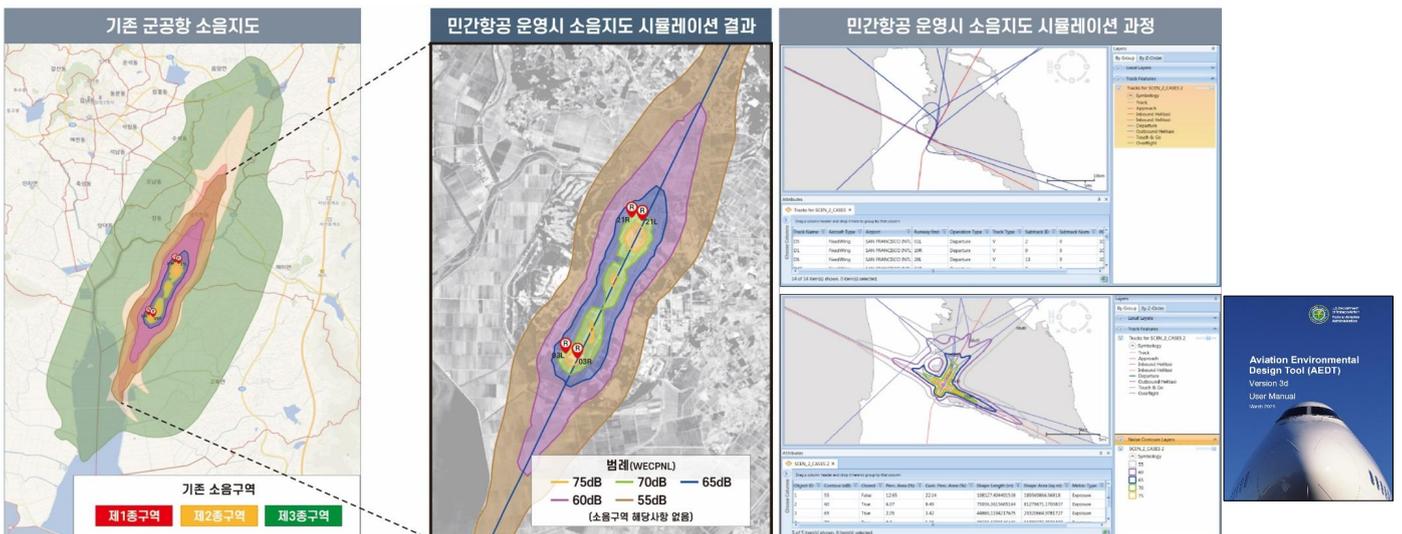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7>

V. 정책효과

🏠 환경성 평가 (1/3)

1 소음 효과

- 신규 민항기가 추가 운영되더라도 **기존 군용항공기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보다 미미** → **추가 소음피해 없음**
 ※ 민간항공기 운항 시 서산비행장 활주로사단 사이(비행장 내)에서 75~85웨클이 분석된 것 외에 주변 지역 소음은 65웨클을 크게 밑돌아 현재 서산비행장 소음등고선 내에 포함됨



주1: 군소음보상법(*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가구를 조사, 평가하여 소음피해 보상지원 시행 중임
 주2: '21년 서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상금 지급과 민원 조치를 시행 중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8>

V. 정책효과

환경성 평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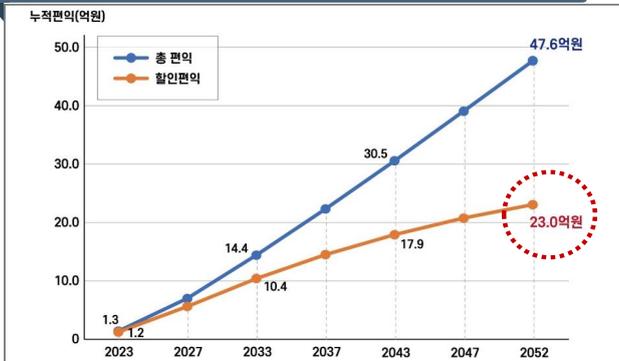
서산공항 건설에 따른 이용 단축 거리



2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 도로, 항공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개통 후 30년간 총 155억원 발생
 - (도로) 개통 후 30년 동안 약 23억원의 사회적 편익
 - (항공) 개통 후 30년 동안 약 132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도로부문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 산정결과(30년간)



▶ 도로부문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
 = 공항 접근 단축거리(65.18km) × 수단별(승용차, 버스) 1인당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원/인/km) × 공항 이용수요(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편익 산정결과(30년간)



▶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편익
 = 서산-제주 수요(인) × 제주노선 항로 단축 거리(94km) × 인-km당 CO2배출량 원단위 × 온실가스(CO2)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주1: 개통연도 2023년, 개통 후 30년인 2052년까지 도로부문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편익 산정
 주2: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주3: 각 연도별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편익은 5년 단위로 예측된 편익을 활용하여 선형추세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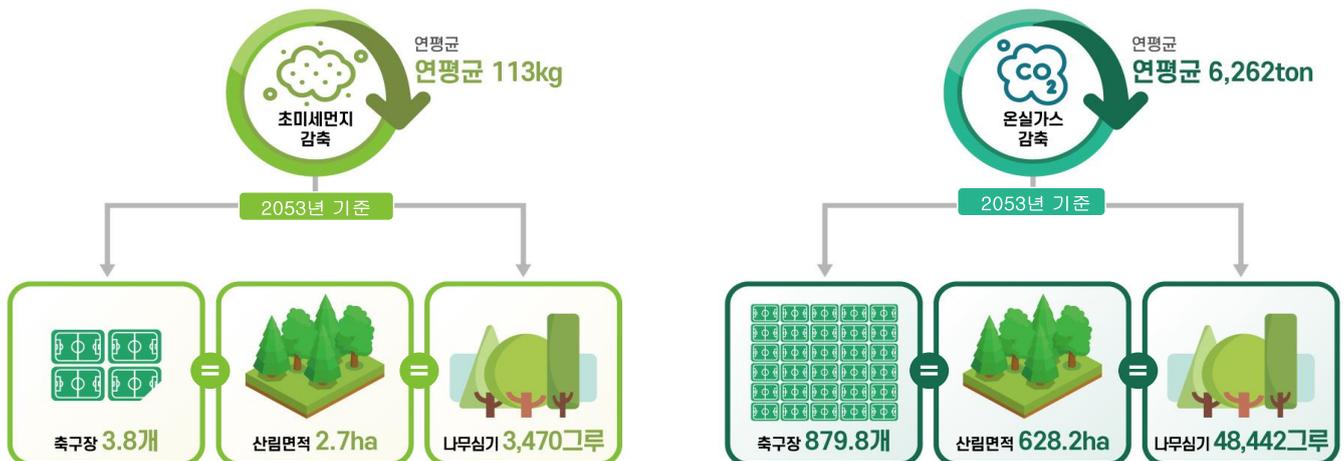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39>

V. 정책효과

환경성 평가 (3/3)

3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산림구축과 나무심기 효과

- (연평균 효과)서산공항구축시 초미세먼지(PM2.5)는 연평균 113kg/년 감축, 온실가스(CO₂)는 연평균 6,262ton/년 감축 예상
 → (2053년 기준) 축구장 약 884개 규모의 산림구축 효과와 51,912그루의 나무심기 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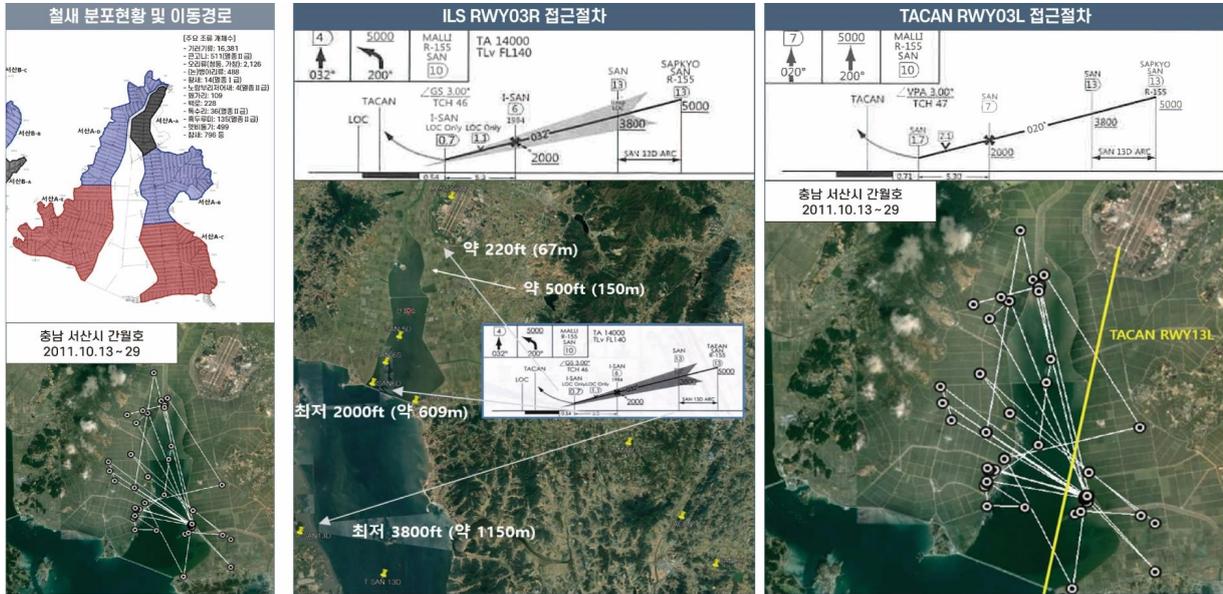
주1: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감소는 도로부문에 해당되는 수치임
 주2: 온실가스(CO2) 배출량 감소는 도로부문과 항공부문을 합산한 수치임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40>

안전성 평가 (1/2)

1 서산공항 운영에 따른 철새도래지 영향 검토

- 서산공항 인근 간월호의 철새 서식기간 중 항공기 입출항 시 **조류충돌 사례 전무**
- 서식기간 중 조류는 통상 지상 150m 미만에서 활동하여 **서산공항 운영에 영향 미미**



안전성 평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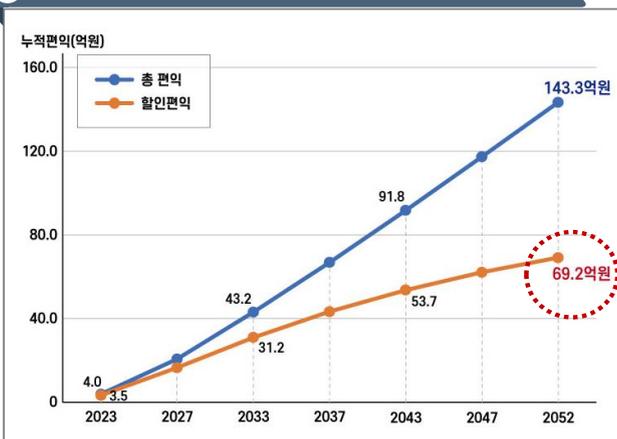
서산공항 건설에 따른 이용 단축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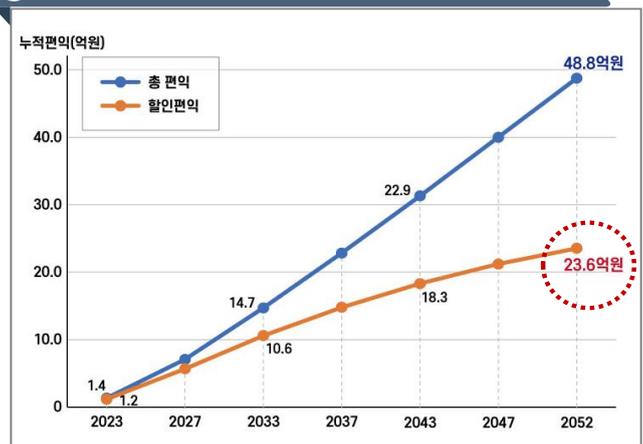
2 도로, 항공 부문 사고 절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 도로, 항공 부문에서 **교통사고비용 절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개통 후 **30년 간 총 93억원** 발생
- (도로) 개통 후 30년 동안 약 69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 도로부문 공항 접근거리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비용 감소 편익)
- (항공) 개통 후 30년 동안 약 24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 항공부문 운행거리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비용 감소 편익)

도로부문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산정결과(30년간)



항공부문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산정결과(30년간)



주1: 개통연도 2023년, 개통 후 30년인 2052년까지 도로부문과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편익 산정
 주2: 사회적 활인을 4.5% 적용
 주3: 각 연도별, 부문별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5년 단위로 예측된 편익을 활용하여 선형추세로 예측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서산공항 정책효과 검토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최돈정 책임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2022.12

목차

I

연구개요

II

공유재산 현황

III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IV

결론

I

연구 개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과 범위

I.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배경

지자체별로 GIS 기능을 탑재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발이 활발
방대한 공유재산 DB의 활용, 지역계획과 연계 등 정보 제공의 한계 존재

- 공유재산의 관리, 구축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간계획이나 각종 지역계획 수립에 활용



필요성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자체 정책수요 증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조 7항에 따른 공유재산 활용(관리→활용)**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분류체계의 개편 필요

토지위주의 공유재산관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 **건물, 공작물, 지식재산권 같은 다양한 재산관리 필요**

🏠 연구 목적

목적

기 개발된 운영중인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 방안 제시

세부목표

1.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재산관리대장 통합 공간DB 제시
2. 지역계획과 연관된 실증적인 활용방안 제시
3.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의 개념모델과 서비스 모델 설계
4. 시스템에 탑재될 데이터 갱신, 유지보수 방안 등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방안 제시

🏠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 시간적 범위

- 2022년

📋 내용적 범위

- 공유재산 제도의 변화와 방향성 검토
- 충남 공유재산 통합 DB 설계 및 활용방안
- 충남 공유재산 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 정책제언

01

법적/제도적 변화

공유재산
제도의 변화와
방향성 검토



02

공유재산 DB 설계

충남 공유재산
통합 DB 설계
및 활용방안



03

고도화 방안

충남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
템 고도화
방안



공유재산 법적/제도적 현황

제도적	법적	정책동향
다양한 개발방식 권고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지원 국·공유재산의 민간위탁 확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22.06.29 시행) 소극적 관리/처분 → 개발과 활용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지역계획과 연계한 5년 단위 관리처분 계획) 데이터 기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개선추진
~ 2000년	~ 2020년	2021년 ~
유지·보존 중심의 소극적 관리	제도기반 조성 및 재정수입 증대방안 모색	제도의 전략적 활용 및 관리 혁신
차별성	공유재산 데이터와 정보시스템 측면 중심 → 법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아닌 데이터와 시스템 중심으로 접근	

II

공유재산 기초현황

필요성
연구의 차별성

II. 공유재산 기초현황

충청남도 공유재산 현황(22. 04 기준)

시도	분류	개수	시도	분류	개수
충청남도	토지	86,130	공주시	토지	22,857
	건물	956		건물	534
	기타	11,174		기타	7,348
천안시	토지	30,668	금산시	토지	18,200
	건물	919		건물	381
	기타	32,038		기타	17,369
보령시	토지	20,845	부여군	토지	19,818
	건물	712		건물	659
	기타	28,389		기타	10,735
아산시	토지	21,819	서천군	토지	15,875
	건물	509		건물	554
	기타	31,528		기타	5,987
서산시	토지	24,855	청양군	토지	18,172
	건물	576		건물	506
	기타	38,670		기타	278
논산시	토지	29,874	예산군	토지	18,964
	건물	260		건물	477
	기타	3,382		기타	14,317
계룡시	토지	3,105	홍성군	토지	20,406
	건물	85		건물	560
	기타	1,817		기타	12,232
당진시	토지	21,394	태안군	토지	12,691
	건물	589		건물	522
	기타	636		기타	12,495
합계	토지: 385,673	건물: 8,799	기타: 228,395	총 합계: 622,867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09

II. 공유재산 기초현황

충청남도 공유재산 현황(22. 04 기준)

공유재산 면적

시도	분류	면적합계(㎡)	시도	분류	면적합계(㎡)
충청남도	토지	151,896,193	공주시	토지	22,156,459
	건물	797,790		건물	256,900
천안시	토지	30,173,603	금산시	토지	30,033,813
	건물	508,859		건물	203,804
보령시	토지	21,539,896	부여군	토지	14,363,654
	건물	91,153		건물	252,945
아산시	토지	23,892,122	서천군	토지	17,234,194
	건물	431,639		건물	295,702
서산시	토지	25,179,060	청양군	토지	9,558,172
	건물	57,950		건물	204,578
논산시	토지	20,838,360	예산군	토지	18,662,853
	건물	44,188		건물	268,575
계룡시	토지	4,605,699	홍성군	토지	17,315,954
	건물	78,843		건물	505,631
당진시	토지	21,943,069	태안군	토지	15,848,073
	건물	389,316		건물	228,238
합계	토지:		총 합계:		
		423,084,716㎡		건물: 30,884,546㎡	453,969,263㎡

공유재산 대장가액

시도	분류	대장가액(원)	시도	분류	대장가액(원)
충청남도	토지	2,465,572,758,028	공주시	토지	866,874,537,087
	건물	909,471,480,697		건물	162,714,734,931
천안시	토지	4,051,297,722,903	금산시	토지	524,507,839,482
	건물	953,168,806,474		건물	280,775,930,328
보령시	토지	846,870,542,653	부여군	토지	487,547,998,802
	건물	128,677,438,837		건물	164,314,679,198
아산시	토지	2,138,481,618,928	서천군	토지	291,381,977,332
	건물	481,685,116,705		건물	304,663,820,234
서산시	토지	1,146,461,036,038	청양군	토지	188,308,674,659
	건물	87,584,341,349		건물	170,745,992,469
논산시	토지	830,349,566,403	예산군	토지	671,700,638,604
	건물	598,627,934,575		건물	314,603,782,134
계룡시	토지	449,920,071,002	홍성군	토지	786,909,617,558
	건물	141,408,826,539		건물	259,168,068,781
당진시	토지	2,141,904,255,654	태안군	토지	467,364,047,322
	건물	379,258,933,509		건물	267,368,245,621
합계	토지:		총 합계:		
		18,355,452,902,455원		건물: 5,336,870,114,997원	423,692,323,017,452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10

Ⅲ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공유재산 통합 공간DB
공유재산 활용방안 제시
서비스 기능 및 운영방안

Ⅲ.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

🏠 공유재산 통합 DB 제시 (1/2)

① 토지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의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423,084,716㎡,
대장가액은 약 18조

*연번/회계구분/재산구분/상세구분/소재지/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위임재산관리관/지목/공부상
면적/소유자/대장가액/취득일자/취득방법/비고

② 건물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이 소유한 건물의 면적은 30,884,546㎡,
대장가액은 약 5조

*연번/회계구분/재산구분/상세구분/소재지/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위임재산관리관/재산명칭/
건물구분/공부상면적/소유자/대상가액/취득일자/취득방법/비고

③ 기타

공작물, 선박, 입목죽, 유가증권 등 10개 항목을 보유

*연번/재산종류/재산구분/상세구분/재산명칭/소재지/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위임재산관리관/
소유자/대장가액/취득일자/취득방법/비고

공유재산 통합 DB 제시 (2/2)

① 공유재산 DB관리

공유재산의 대장은 구주소(본번, 부번)로 존재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파악이 어려움



PK/FK 설정

공유재산 통합관리를 위한 Primary key 설정

*개별 공유재산별로 접근/수정할 수 있는 Key 필요



데이터 수집/갱신 체계

표준화된 공유재산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기 구축된 공유재산의 경우, 충청도와 15개 시군의 속성값이 다름



미등록 공유재산 관리

분류코드를 활용한 미등록 공유재산 파악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위성사진과 대조

② 표준화 속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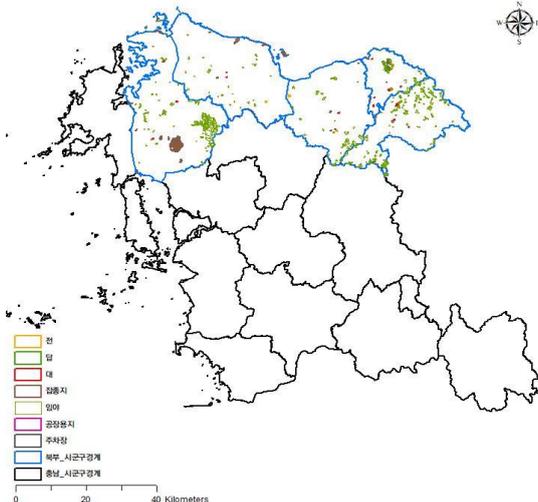
토지 공유재산		건물 공유재산	
PK	관리번호	PK	관리번호
FK	시군, 충청남도 구분코드	FK	시군, 충청남도 구분코드
	재산구분		재산구분
	회계구분		회계구분
	상세구분		상세구분
	소재지(구주소)		소재지(구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도로명주소)
	공부상면적		재산명칭
	재산관리권(분임, 위임 등)		건물구분
	지목		재산관리권
	대장가액		공부상면적
	취득일자		대장가액
	취득방식		취득일자
	분류코드(분류, 미분류)		취득방식
			분류코드(분류, 미분류)

공유재산 활용방안 (1/3)

활용성

공유재산을 지도화 하는 것이 아닌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 추출
공유재산 데이터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 탐색

아산만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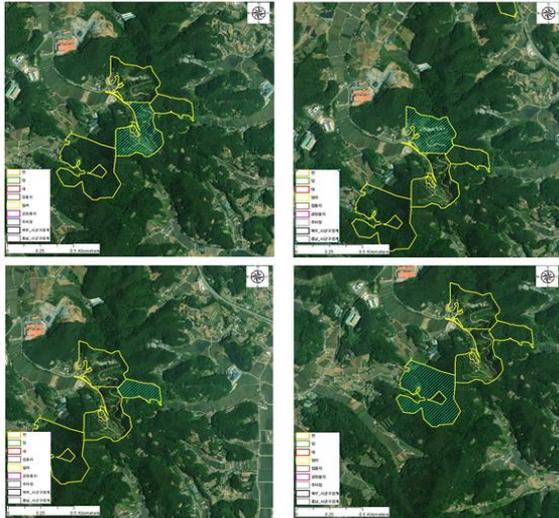
- 대규모 산단 조성 및 천안 종축장 부지 등 조성에 필요한 위치 탐색
- 공유재산 필지 중 면적이 30,000㎡ 이상 필지이며 지목이 잡종지, 임야, 전, 공장용지 등을 활용가능 지목 선정
- 실제 위성사진과 대조하여 건물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 지역계획과 연계

공유재산 활용방안 (2/3)

활용성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공유재산의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
 개별자산이 아닌 단위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리주체의 공유재산 규모화

공유재산 토지의 규모화를 통한 사업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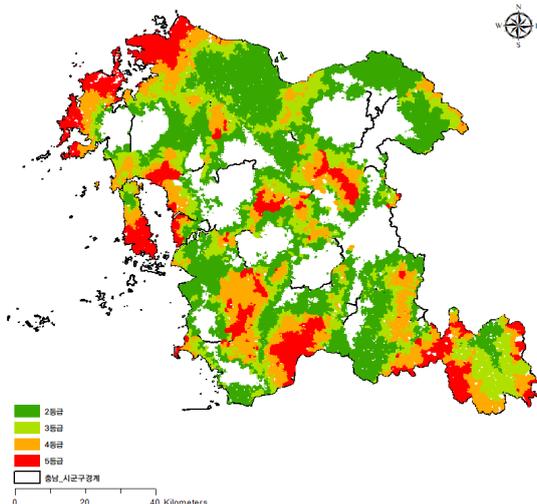
- 집적되어 있는 토지를 규모화하여 부지선정에 우선적인 검토 가능
- 충청도와 15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간의 교환을 통한 토지 규모화 가능
- 충청도 내 유휴토지 발굴을 통해 지역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공유재산 활용방안 (3/3)

활용성

1:5,000 Scale의 도로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접근성 취약지역 탐색
 도착 최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토지 탐색

생활 SOC 6종(학습, 돌봄, 의료, 문화, 체육, 휴식)에 대한 접근성 취약지역 탐색



- 생활 SOC 6종에 대한 종합분석결과로 5등급으로 나온 지역과 공유재산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유재산 탐색
- 인구밀도와 입지조건에 따라 공급조건을 고려하여 최저기준 달성에 근거있는 자료로 활용
- 해당지역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공유재산의 적절한 활용 모색

🏠 서비스 기능 및 운영방안 (1/2)

📊 공유재산의 시각화 및 의사결정 지원

- 공간정보 표준 및 행안부 표준에 준수한 공유재산 통합 DB 구축 → 분석기능을 통한 유희토지 및 건물 발굴을 하기 위한 GIS 분석기능 필요
- 임대 가능지, 개발 가능지, 비축가능 토지산정, 교환가능 토지 분석 기능과 같이 지역계획과 관련된 공간의사결정 모듈의 탑재 필요

📊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 새정부 국정과제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방행정 근간 시스템 마련
- 서버, 스토리지 등 정보자원의 50%이 6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효율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각종 기능 개선, 보완을 거친 차세대 행정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확장 필요

🏠 서비스 기능 및 운영방안 (2/2)

📊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

- 시스템의 고도화를 단순히 공유재산을 디지털화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맵 서비스 기능 업그레이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공간적 의사결정 지원
-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토지/건물의 공간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임

📊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및 역할

- 공유재산 DB는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로 공간적 표현이 가능하며 주소에서 추출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를 통해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다양한 정보 추출 가능
- 그러나 데이터 간 연계가 아닌 행정적 협조나 데이터 연결 범위 등 타 시스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 타 시스템 연계 시 그 대상에 맞는 데이터 표준(안) 설계가 필요하며 자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준 필요

IV

결론

IV. 결론

공유재산의 법적/제도적 변화

- 공유재산 업무수행의 지능정보화 수요증가
-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자체 정책수요 증대
- 토지위주의 공유재산 관리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 공간DB 설계

-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동일한 표준(안) 작성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 활용 방법 제시

- 아산만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 추진에 따른 4대 북부도시 공유재산 활용 가능성
-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생활 SOC 접근성 취약지역에 따른 유희토지/건물 탐색

단기간, 단일주체의 공유재산 수집은 해소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검증작업 필요

- 우선적으로 통합 DB구축을 위한 방안 검토 및 샘플링
- 검증작업이 적더라고 가시적인 수준에서 확인 필요
- 공유재산 DB 구축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확보 필요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세션 5

가치있는 정주기반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김용현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박철희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임준홍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김용현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2022.12

목차

I

연구의 개요

II

현황 및
이론적 검토

III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

IV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안

연구목적

- ② 고령자, 취약계층 등, 주거사각지대 해소방안 제시
- ② 도민의 주거만족을 위한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

연구내용

- ② 첫째,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 분석
- ② 둘째, 충청남도 주거관련 실무자 면접조사 및 국내 지역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례 분석
- ② 셋째,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제시

정책제안

- ②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이 설립 *조직구성 : 3팀, 5명(센터장 1, 팀원 4)
- ② 조직구성 중 1명은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충청남도 인력 파견이 초기에는 필요

I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주거복지 사각지대 문제점 대두

-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증평, 구미, 부산 등에서 생계 및 주거문제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영아 사망 사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

📌 2017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취약문제를 발굴하고 긴급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도시형, 농어촌형으로 나누어 구축하고 '19년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확산
- 전국적으로 지역 차원의 주거복지 문제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립 운영 추세 (11개 시도 43개소 설립 완료, 2021. 6월 기준)

📌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 사례관리 업무 중 주거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타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거복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

연구의 목적

- 📌 고령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주거사각지대를 해소, 통합적인 사례관리 위한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시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건립 필요성 및 운영 방향
 - *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관련 근거
 - *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역할의 범위 설정, 운영 방식 제안

연구의 내용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분석
- 국내 지역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례를 분석
-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및 근거 마련
 - *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기능 및 대상사업 발굴

연구의 방법

- 이론적 고찰 및 문헌 연구를 수행
- 국내 주거복지센터 사례를 분석
- 지자체 및 관계기관 FGI 조사를 실시
- 대학·국책연구기관·시도 연구원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II

현황 및 이론적 검토

전국 주거복지센터의 운영현황
주거복지센터 관련 정책 및 법령 분석

II. 현황 및 이론적 검토



📍 전국 주거복지센터의 운영현황

전국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중앙 1개소, 지역 25개소), 부산(권역 2개소), 대구(권역 2개소), 전주(지역 1개소), 청주(지역 1개소), 경기(광역 1개소, 지역 3개소), 제주(권역 2개소), 전북(지역 1개소) 등 43개의 지자체 산하주거복지센터가 설치, 운영 중 ('21년 6월 기준)

구분		운영주체	예산지원		
광역	서울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공공(SH공사)		
	경기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		
	제주	제주 광역주거복지센터	공공(제주개발공사)		
	전북	전북 주거복지센터	민간		
	인천	인천시 광역 주거복지센터	공공(인천도시공사)		
권역	부산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공공(부산도시공사)		
		서부권 주거복지센터	공공(부산도시공사)		
	대구	대구행복 주거복지센터	민간	대구시	
		대구 주거복지센터			
	제주	서귀포권역 주거복지센터	공공(제주개발공사)	제주도	
	제주도권역 주거복지센터	공공(제주개발공사)			
지역	인천	미추홀 주거복지센터	공공(인천도시공사)	인천시	
	서울	성동구 등(9개소)	공공(SH공사)	서울시	
		중로구 등(16개소)	민간		
	천안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 센터	민간	천안시	
	청주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	청주시	
	전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	전주시	
	경기	시흥	시흥 주거복지센터(사회적 협동조합)	민간	경기도
			성남 주거복지센터	민간	
			수원시 지속가능재단 주거복지센터	공공	

출처 : 대전세종연구원, 2021.

🏠 전국 주거복지센터의 운영현황

주거복지센터 기본 업무

📄 주거지원 사각지대 발굴

- 주거문제 파악, 주거실태조사, 주택조사

📄 주거문제 해결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

📄 자원연계

- 상담 이후 필요서비스에 대해 직접 제공 불가능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자원 연계하거나 공적영역의 사례관리 의뢰

📄 주거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복지기관, 공사, 주거관련 단체 및 현장 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확보 등 협력사업 수행

📄 주거문제 교육

- 복지대상자 및 복지관련 실무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지원제도, 임대차보호, 여타 주거복지정책 및 관련 복지제도 교육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09

🏠 주거복지센터 관련 정책 및 법령 분석

관련 법령

법	조항	주요내용
주거기본법	제22조 (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주거실태조사 및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4조 (주거복지센터)	①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충청남도 관련 조례

충청남도 주거기본조례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10

Ⅲ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

주거업무 실무자 면접조사
행복키움지원단 사례조사
선진지역 사례조사

Ⅲ.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



주거업무 실무자 면접조사

15개 시군 주거업무 실무자 의견수렴

목적

-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자 의견 수렴

기간

- 2022년 5월 17일

대상

- 15개 시/군 주거업무 담당자

내용

-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실태조사(실무자)
 - 현재 시군에서 주거복지 관련 수행하고 있는 업무 파악
 - 시군 주거업무 관련 통계
 -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 센터 설립 인식

Ⅲ.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

주거업무 실무자 면접조사

실무자 인터뷰 내용

번호	응답내용
1	군 단위 지자체는 대부분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자력으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도 저조하다.
2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임대아파트, 전세 등)에 대한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상 주거복지센터 운영 효과성이나 설립 당위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3	광역센터 설치로 道 내 시, 군 전체를 관할하기는 무리이다. 센터를 신규로 설치 추진하고 있는 시, 군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4	광역센터 설치 후 기초단체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지원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이 필요하다.
5	지자체 센터도 아직 설립 안 된 곳이 많은 데 광역센터 설립 관련을 논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지자체에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인 거 같다.
6	인구 및 수요가 적은 시군은 시군주거복지센터 설립 필요 없이 광역센터설립이 필요하다
7	도내 주거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지역의 민간단체, 지자체 등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이 먼저 이루어지려면 광역센터 개소가 필요하다.
8	주거 사각복지 해소 방안은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 내 사례관리로 대상자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 집수리사업 시행해야 한다.
9	15개 시군마다 설립할 여력 부족으로 도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10	계룡시는 직접설립보다는 lh와 연계가 필요하다
11	광역센터 설립 이전에 시군 주거복지센터가 먼저 설립될 필요성은 없으나 광역과 별도로 논산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 필요성을 검토중이다.
12	광역센터가 설립가 설립 된다면 단절된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도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 기구가 될 것이다
13	주거 사각복지 해소 방안으로는 각 기관별 및 민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13

Ⅲ.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

주거업무 실무자 면접조사

실무자 인터뷰 내용

- 광역 주거복지센터를 찬성하는 시군은 천안, 보령,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등 8개 시군으로 조사되었고 반대하는 시군은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6개 시군으로 나타남

광역센터건립 찬성	천안, 보령,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 9개 시군
광역센터건립 반대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6개 시군

- 시군 주거복지센터를 찬성하는 시군은 천안, 아산, 서산 등 3개 시 지역뿐이었음. 반면에 반대하는 시군은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태안 등 7개 시군이었고 검토가 필요한 시군도 (공주, 당진, 홍성, 예산)도 있었음

시군센터건립 찬성	천안, 아산, 서산 : 3개 시군
시군센터건립 반대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태안, 서천 : 8개 시군
시군센터건립 유보	공주, 당진, 홍성, 예산 : 4개 시군

결론적으로 시군은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초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은 상당히 미온적임을 알 수 있음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14

🏠 행복키움지원단 사례조사

4개 시군 사례관리 실무자 의견수렴

- 목적 :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자 의견 수렴
- 기간 : 2022년 7월 18일, 7월 20일
- 대상 : 15개 시/군 주거업무 담당자
- 내용 :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실태조사(실무자)
 - 현재 시군에서 주거복지 관련 수행하고 있는 업무 파악
 -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 센터 설립 인식

사례관리팀 면접조사의 소결

- 군단위지역은 집수리 문제 외 별도의 주거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도시지역은 주거 문제가 사례관리 대상이 되지만 '권한'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못함. 아산은 비교적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당진시의 경우, 주거복지센터 필요 정도는 100점 만점에 70-80점임. 사례관리와 '주거복지센터' 중복 문제 있을 수 있음.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도 차원의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광역센터가 설립된다면 시군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선진지역 사례조사

선진지역 사례조사 소결

- 7개의 선진지역 주거복지센터 사례를 볼 때 센터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함. 단체장의 의지에 실무자의 적극성이 견비되면 금상첨화 임
- 물론 시흥이나 천안처럼 밑으로부터의 접근도 주목해야 함. 광역센터는 매년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음. 광역센터는 각각 SH GH 인천개발공사가 위수탁을 맡아 지역의 개발공사가 센터 운영에 있어 주축이 됨을 알 수 있음
- 시흥은 시민운동의 역사가 있어 상담, 사례관리보다는 주거 서비스가 우선시 되는 특징이 있음

구분	운영형태	설립모형	특징	비고
전주	민간위탁	상향식	담당부서팀 아닌 과	
서울	공사위탁	25개 자치구 → 광역	광역+ 25개 자치구 설립	
시흥	협동조합	상향식	주거복지서비스 강함	
인천	공사위탁	하향식	퇴직공무원 활용	
고양	직영	하향식	전국 유일의 직영	
경기	공사 위탁	주거사업 다수 전개	향후 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천안	민간위탁	상향식	복지시민운동과 연계	

- 충남도의 광역 주거복지센터 역시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광역지자체처럼 충남개발공사를 위수탁하여 설립 및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임

IV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안

광역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근거 및 기능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설치계획(안)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운영계획(안)

IV.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안

광역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근거 및 기능

광역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 주거 문제와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증대되나 현행 '읍면동'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통합적 주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 주거복지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수요자에 정확한 정보전달 및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근거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및 충청남도주거기본조례에 의거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동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 「충청남도 주거기본조례」 제17조(주거복지센터 설치)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 주거복지센터업무 표준화가충남도광역센터의첫번째기능,아래와같은업무수행
- 센터 운영매뉴얼, 업무체계 구축 등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상담 통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다음과 같은 지역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확보를 수행
- 민간단체, 시, 군(주민센터) 등 전달체계 연계(네트워크 구축) :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포털시스템 구축이 요구
- 센터 간 정보공유 및 시·군별 주거복지협의체 구축 지원 등 운영방향 정립
- 광역으로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컨트롤 기능을 수행
- 도 주거복지사업 홍보 및 주거복지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추진
- 연구·실태조사 등을 통한 신규 주거복지 사업 콘텐츠 개발 및 정책 제안
- 주거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를 수행
- (사각지대 발굴, 정보제공) 주거문제 파악,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상담

가장 중요한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은 15개 시군의
주거복지센터 설립 지원임
일차적으로 아산, 서산,
당진 같은 도시지역에서
센터설립을 먼저하고
이후에 군단위지역은
남부권, 내륙권, 서해안권
등 권역별로 센터를
설립하는 것임

IV.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안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설치계획(안)

설치개요

- 사업규모 :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1개소
- 조직구성 : 3팀, 5명(센터장 1, 팀원 4)
※ 조직구성 중 1명은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충남도 인력 파견이 초기에는 필요



업무분장

구	업무	비고
센터장	센터 총괄	
주거복지사업팀	주거복지 직접지원 퇴거위기 가구 및 주거위기 발생시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주거복지기획팀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실태조사 성과보고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지역센터지원팀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19

IV.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안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운영계획(안)

추진방식

- 민간위탁(공사 또는 민간 포함 공개모집)
- 공평한 기회부여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충남개발공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 대상 공개모집 추진

위탁근거

-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 14조) 해당 도의 조례에 정하는 기관에 위탁
- . (도 주거기본조례 제18조) 충남개발공사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

추진절차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20

충남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운영계획(안)

시군에서 주거복지센터 설립 사전 검토 항목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갈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산	예산 집행 사전절차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까? ex) 1. 예산효율성, 장단기 비용 추계 등 2. 중기지방재정계획,		
근거법령	정책(사업)관련 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ex) 근거법률 및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등		
법률자문	법률자문관 또는 고문변호사의 사전검토를 검토하였습니까?		
협의협조	타 기관, 타 부서등과의 협의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성인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습니까?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정책홍보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기타사항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습니까?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광역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박철희 선임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2022.12

연구요약

연구목적

- ①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에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방안을 모색

연구내용

- ① 충청남도 공동주택 현황 및 이슈 분석
- ②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및 법규 검토
- ③ 공동주택 관리센터 사례조사 분석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
- ④ 도민 공동주택 안전지원 수요조사 및 분석 - 입주자, 관리자, 공무원 등 그룹별 조사 분석
- ⑤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 방향

정책제안

- ①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원센터 설립 필요 - 안전, 관리, 민원(갈등) 대응과 공동체 활성화
- ② 조례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은 ①공동주택 안전 및 관리 교육·홍보, ②공동주택 안전 및 관리 상담(자문), ③공동주택 안전 및 관리실태 조사 및 감사업무 지원, ④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하며, 조직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상설기구 운영

목차

I

연구개요

II

충청남도
공동주택 현황

III

운영사례

IV

수요조사

V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센터 설립방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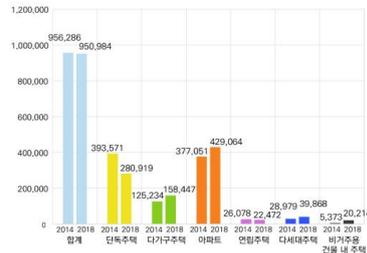
연구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구성 및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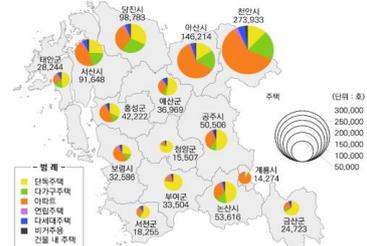
연구배경

공동주택 관리

충남 공동주택 수 증가('20년 : 1,218단지, '21년 : 1,244단지, '22년 : 1,324단지)에 따라, 입주민 간의 갈등 및 민원, 노후화에 따른 안전 등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충남 주택별 변화량(2014년, 2018년)



충남 시군별 주택유형별 현황

안전사고 증가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증가, 전기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폭우로 인한 주차장 침수와 인명 피해



전기자동차 전소로 인한 피해 확산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방안 연구 01

연구배경

중앙지원한계

중앙차원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충남도, 기초단위 지원에는 한계
중앙정부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한계와 문제점

✓ 정부예산지원 부족

•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LH예산을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LH는 내부통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사용에 한계가 있음

✓ 정부 공공기관 축소 방침 및 LH 혁신안에 따른 조직 축소

- 공공기관 축소 방침에 따라 추가업무에 대한 인력 배치에 어려움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직무량 과다로 사기저하, 동기부여 부족, 서비스 저하 발생
- 중앙관리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부족 (노하우 보유 전문위원의 퇴직으로 신규 인력 교육 및 충원이 반복되어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2022), 공동주택 관리지원 고도화 방안 연구,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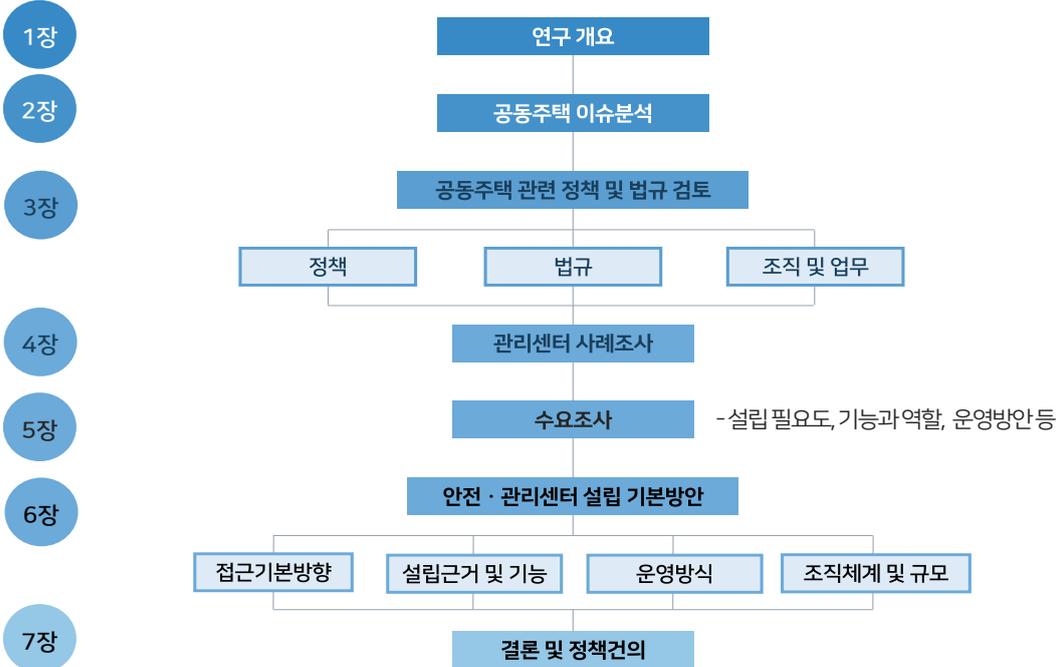
민선8기 정책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도민의 주거안전과 행복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대두

연구목적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에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연구구성 및 체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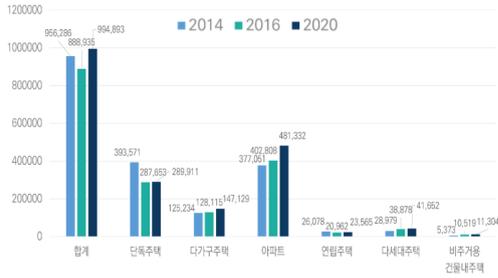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련 현황

충청남도 공동주택 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업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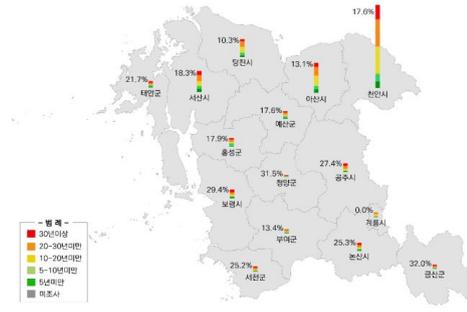
II.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련 현황

🏠 공동주택 현황 및 주요 이슈

주택유형 변화 및 공동주택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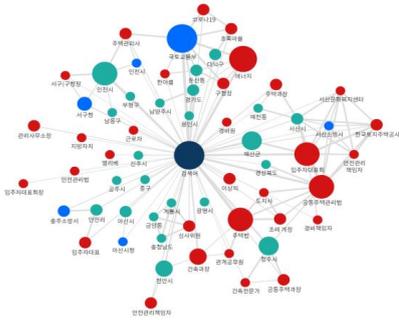


충남 주택 유형 변화



충남 시군별 주택연령

공동주택 관련 주요 이슈



충남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안전, 관리 등과 관련된 충남 이슈로 가장 많이 관계된 공간으로는 예산군,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공주시 등이 나타남
 → 품질검수, 화재예방/소방안전/안전교육, 범죄예방, 관리자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보드
 → 보조사업으로 시설물 보수에 대한 내용도 보드

II.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련 현황

🏠 조직인력, 업무처리 현황

조직인력

■ 전국/광역도 평균이 미치지 못하는 인력 보유, 공동주택 관련 기본 업무만 수행(그린홈아파트, 주택관리사 등)

지자체명	조직	인원 (공동주택 실무인원)	직무인원 (공동주택직무/총직무)	조례유무
전체평균		6.3	5.3	
광역시/특별시 평균		6.8	6.1	
광역도 평균		5.9	4.6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더행복한주택팀		4.0	1.7	지원조례는 있으나 센터 설립 조항은 없음

업무처리

■ 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기술자문, 전문상담 등) 하고 있으나, 충남도 차원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함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변화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8,097	100.0	2,303	100.0	2,506	100.0	3,288	100.0	12.6
기술자문	38	0.5	6	0.3	14	0.6	18	0.5	44.2
전문상담	2,129	26.3	524	22.8	669	26.7	936	28.5	21.3
관리진단	764	9.4	211	9.2	221	8.8	332	10.1	16.3
정보제공	1,009	12.5	328	14.2	317	12.6	364	11.1	3.5
관리교육	497	6.1	178	7.7	167	6.7	152	4.6	-5.1
공동체 활성화지원	16	0.2	7	0.3	6	0.2	3	0.1	-24.6
장기수선계획수립지원	2	0.0	1	0.0	1	0.0	-	0.0	-100.0
기타	3,642	45.0	1,048	45.5	1,111	44.3	1,483	45.1	12.3%

III

공동주택 관리센터 운영 사례

III. 공동주택 관리센터 운영 사례 조사

조사분석 종합

구분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설립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노후화, 관리 비리 등 사회문제가 증가 지원지구로 한국토지주택 공사(NH)를 지정하고 NH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관리비 거품 제거, 입주자 갈등 해소, 공동체 문화형성 등) 많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6월 1일부터 상담원(전문가 1인)을 배치하여 업무를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갈등 해소, 분쟁예방,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안전 확보, 관리, 모범·상생관리 단지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과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79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설치·운영(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정, 2016.12.29.)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부, 2팀, 4 현장지원반, 외부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 총인원 73명 -센터장 1명, 총괄부 7명, 지원센터 53명, 사무국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1과 2팀 총인원 10명 -과장 1인, 공동주택행정팀(팀장 1인, 주무관 2인), 아파트관리팀(팀장 1인, 주무관 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주택과 건축주택과 총인원 4명 -공동주택지원담당사무관 1인, 공동주택관리 및 주택관리사 2인, 공동주택 관리센터 상담업무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교통국 주택과내 총인원 6명 -팀장 1인, 주무관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총 26인 -과장 1명, 팀장 4명, 담당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내 총 5인 -팀장 1인, 주무관 3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상담 관리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컨설팅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아파트 e투표 지자체 감사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팀] 공동주택 활성화 정책 사업 [아파트관리팀] 많은 아파트 만들기 정책, 공동주택 관리위원회 충간소음, 갈등 해결 통합정보마당, 주민학교 주택관리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관리 감사 활성화 전문가 자문단 운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입주단지 시민당 지정배치 공동주택 생활안내리플렛 예비사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품질점검 공동주택 기술지원 공동주택 관리감사 공동주택 관리지문 공동주택 관리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품질점검 공동주택 관리정보 제공 공동주택 관리지원 경력관리

IV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수요조사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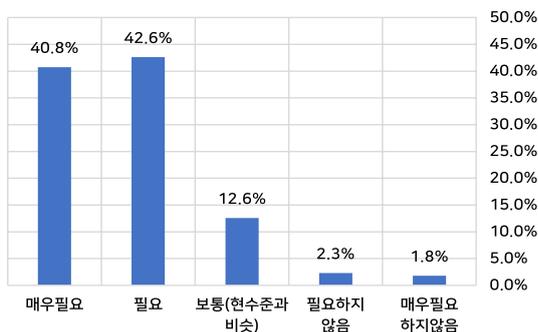
IV.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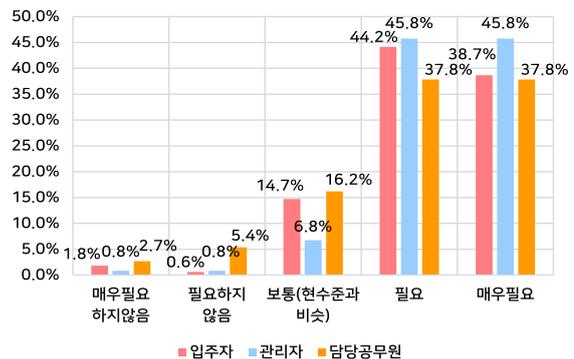
📌 조사대상 및 내용

구분	내용
조사목적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방향
조사대상/설문부수(318명)	공동주택 입주자 (163명), 공동주택 관리자 (118명),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37명)
조사기간/방법	2022년 11월 10일 ~ 11월 29일(20일간) / 설문배포 후 수거
조사내용	1)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의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이유) 2)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운영방향과 목표 3) 기능과 역할, 4) 운영방식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필요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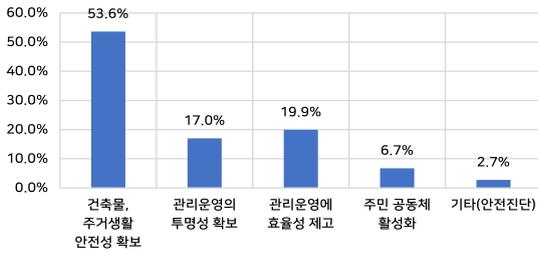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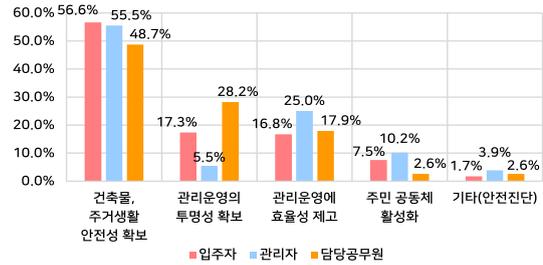
IV.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수요조사

조사결과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운영방향과 목표(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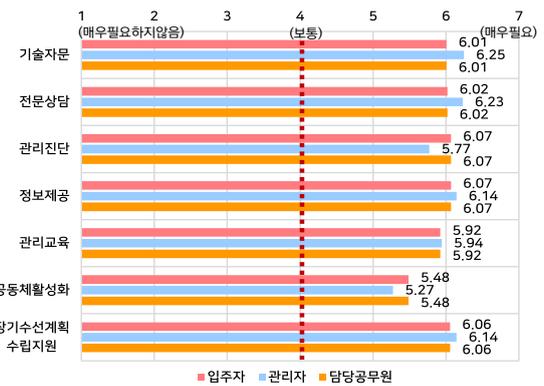
집단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운영방향과 목표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필요도(평균)



집단별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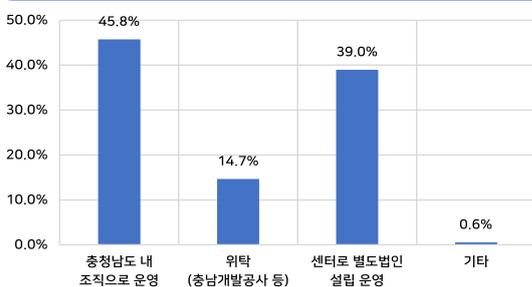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방안 연구 08

IV.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수요조사

조사결과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운영방식(평균)



집단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운영방식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필요도]** 전체 83.4%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설립 필요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 안전관리 센터의 운영방향]** '건축물, 주거생활 안전성 확보'에 전체 53.6%가 응답하여 안전을 중심으로 한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역할과 기능]** 기술자문, 전문상담, 정보제공, 장기수선계획 수립지원이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관리진단, 관리교육, 공동체 활성화 순으로 나타남
- **[운영방식]** 는 충청남도 내 조직으로 운영을 가장 선호(전체 45.8%), 다음으로 '센터로 별도법인 설립운영(39.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방안 연구 09

V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기본방향
설립근거 및 기능
운영방식
조직체계 및 규모

V.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기본방향

1. 센터 설립의 필요성 정립

- 1) 공동주택 안전 및 민원에 효과적인 대처 - 업무량,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2) 안전, 관리, 민원 등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 미흡하였던 관리교육, 컨설팅, 진단 지원
- 3) 안전, 관리 운영에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확보 - 관리운영에 효율성 확보
- 4)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공동체 가치 실현

2. 센터 정책 및 사업 기초

충청남도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및 행복 증진

→ 안전성 확보	• 재난재해 안전, 시설 및 설비 안전, 화재 대응, 건물 진단 및 유지보수 • 사전 안전 교육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경제성 증진	• 관리비 효율성(절감),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집행 • 관리비 항목의 적정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
→ 편의성 제고	• 공용부문 관리(통행로, 집하장, 쓰레기장 등), 놀이/문화시설 관리 • 보다 수준 높은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공동체 가치 실현	• (여가, 체육, 예술 등) 최소한의 공동체 활동지원 •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향상된 활동지원

📍 설립근거 및 기능

1. 설립근거 마련

-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 설치 근거 명문화 필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 도지사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를 도 건설교통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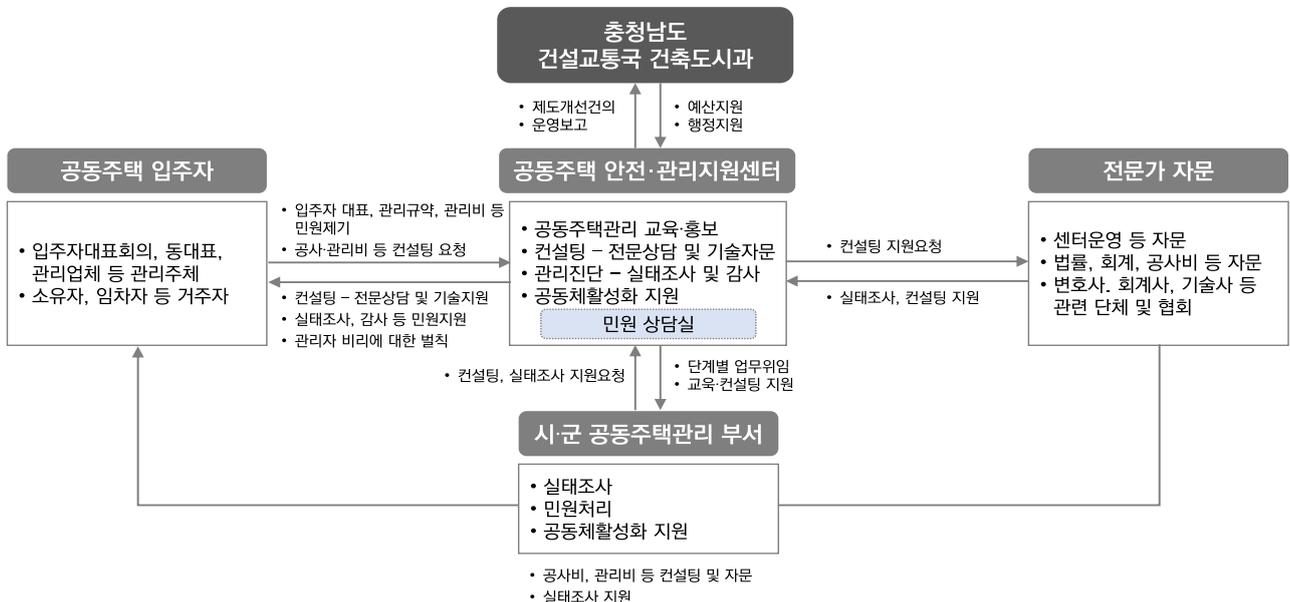
2. 센터 주요 기능

컨설팅(전문상담/기술자문)	안전관리 실태조사·감사	안전관리 교육	공동체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업체선정, 공사·용역비 산출기술 자문 · 관리비 비교 분석 및 진단, 절감 방안 자문 · 관리비 적정 여부, 공동구매, 공동계약 등 네트워크 구축 · 안전진단,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등 지원 · 관리사각지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자원봉사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 지원 · 공동주택 안전 및 노후 시설 보수 실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관리 실태 조사 · 입주대표회의 및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감사 · 위법사항 조사 및 처분 · 회계감사 지원, 제도개선 사건의 · 투명한 공동주택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 · 관리소장 업무 부담감소 신고 조치 지원 방안 · 공동주택 무단 증·개축 시공·감리자 처벌 ·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안전 및 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 안전 및 관리 효율화 정보 교육, 지원사업 등 · 통합정보마당 운영, 매뉴얼 보급 · 입주민 및 자치구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공동주택 운영 및 층간 소음 예방 교육 사업 ·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순회 방문 견학 ·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프로그램개발 ·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민원유형 분석 등을 통한 사례집 발간 · 공동주택 우수 안전·관리 사례 및 업무 편람 발간 ·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공개 ·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 주민학교 운영
상설/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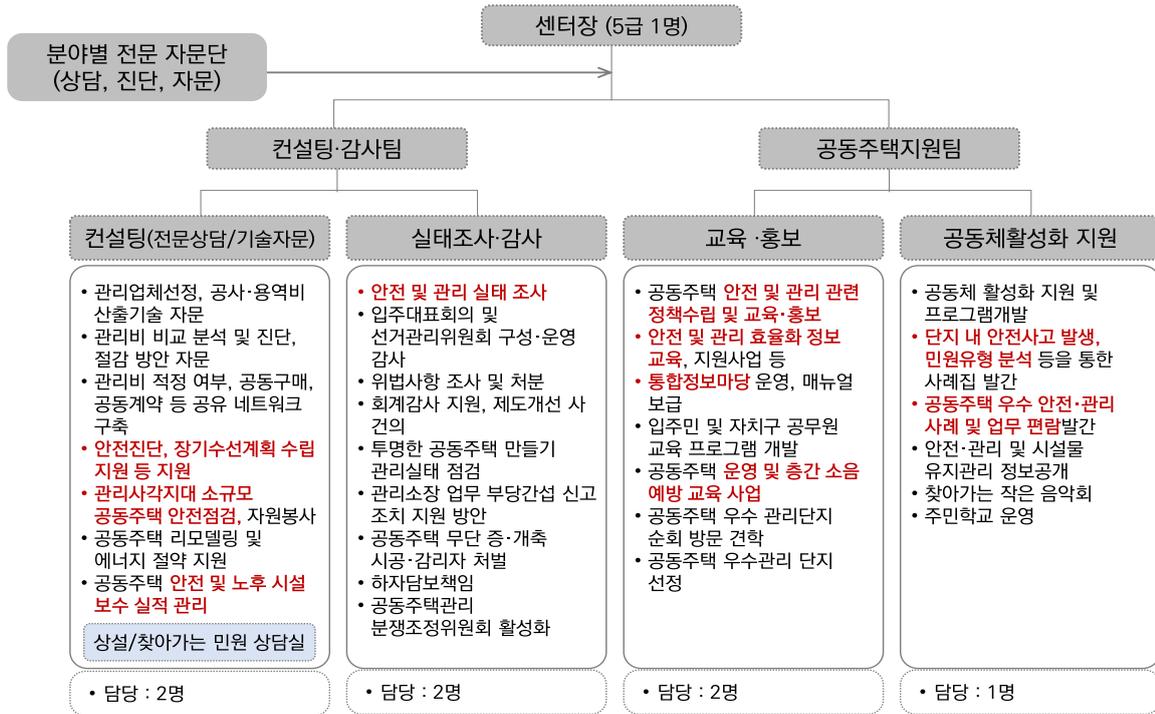
📍 운영방식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상설조직 또는 기구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 12

조직체계 및 규모



운영예산

■ 센터 예산은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시행예산에 한정하여 산정

주요기능별 사업	세부내역	예산액(천원)	
합계		623,000	
관리교육·정보제공		279,000	
통합정보마당	통합정보마당 포털, 앱 구축	200,000	
아파트관리 홍보	책자 제작 및 홍보	20,000	
매뉴얼 작성	매뉴얼 작성 및 보급=10,000원×1,000부	10,000	
민원유형사례집 발간	사례집=10,000원×1,000부	10,000	
층간소음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운영수당=300,000원×1명×30회(시군당 각2회)	9,000	
	층간소음 홍보물제작=10,000원×1,000부	10,000	
우수사례지 견학	국내외 우수 관리단지 견학	20,000	
컨설팅-전문상담, 기술자문		18,000	
	민원상담실 운영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 운영수당=300,000원×1명×30회(시군당 각2회)	9,000
	표준공사비 컨설팅	전문가 운영수당=300,000원×1명×30회(시군당 각2회)	9,000
관리진단-실태조사, 감사		204,000	
	실태조사 및 감사		
	외부전문가 운영=5,000,000원 x 15회	75,000	
	자문위원회 운영수당=200,000원×10회	20,000	
	공무원, 전문가 합동 워크숍=10,000,000원	10,000	
	합동점검 예비 및 현장조사 준비=600,000원×15개단지	9,000	
	시·군 실태조사 전문가 운영수당 지원 = 300,000원×2명×10일×15개시·군	90,000	
공동체 활성화 지원		122,000	
	우수단진선정	포상	30,000
	주민학교 운영	운영비=20,000,000원×4회	80,000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운영비	12,000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방안 연구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임준홍 선임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2022.12

임준홍·최정현·김용현

목차

I

연구 배경과 목적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 및
사례분석

III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IV

기성시가지 정비와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V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목적

- ④ 고령자 관련 통계 및 선행연구, 민선 8기 정책동향 등을 종합하여 고령친화도시 전략을 제안
- ④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 만들기 전략 및 지침 제안
- ④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점과 목적에서 신개발 지역은 물론 기성시가지에서 고령 친화도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제시함

연구내용

- ④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
- ④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여 계층과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제안
- ④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여 계층과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제안

정책제안

- ④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
- ④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여 계층과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제안

I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과 진행과정
선행연구 검토

충남 고령화 대책으로 고령자 체감형 삶의 질 제고 전략 필요

배경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1년 16.5%에서 2060년에는 43.9%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빠를 것으로 예측

충남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및 전략 필요

-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 제3조의 실천전략으로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충남 민선8기 주택 관련 공약과 연계한 실천전략 필요

- 특히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약 실행(2026년까지 공동주택 5000호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주택공급 전략 기반 마련 필요
-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법 적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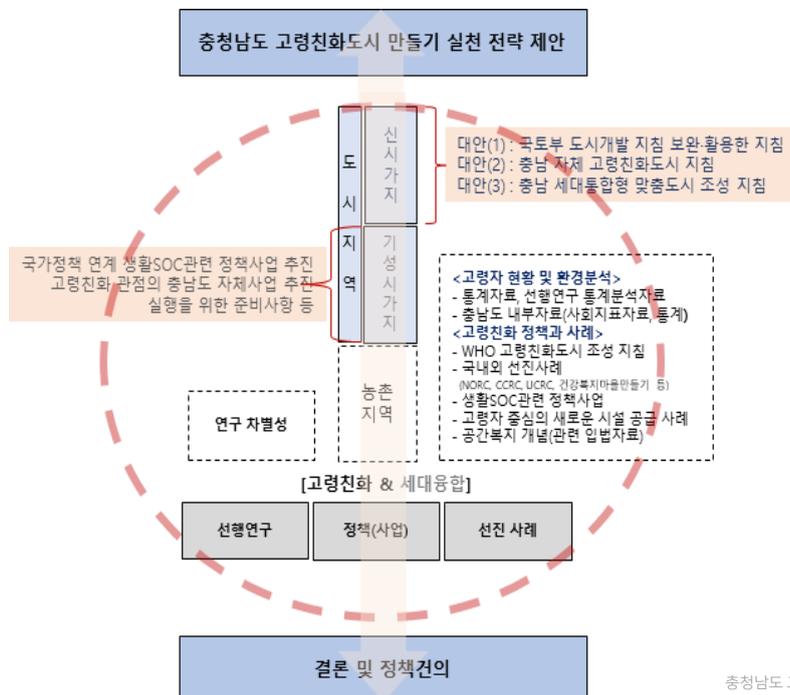
고령자 관련 통계와 선행연구, 관련 정책과 사례 분석, 최근 민선8기 정책 동향 등을 종합하여, 충남이 더 나은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안

- 신개발지역 :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만들기 전략 및 지침 (가이드 라인) 제안
- 기성시가지 : 고령친화도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 제시

충남연구원-충청남도-충남개발공사 워킹그룹 방식으로 수행

연구방법

연구자료 : 정책동향 + 선진사례
⇒ 충남형 고령친화도시 기본지침 및 정책과제 제안



도시공간구성 과정에서의 실행적-협력적 정책연구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제목 및 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세미 외, 2021)	설문조사 및 분석, 계량분석(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등)	고령친화환경, 공동체 의식이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분석
	2	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과제 (이동기 외, 2020)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제안
	3	충남형 고령친화마을 모델개발 방향 (임형빈 외, 2020)	정책 및 사례 분석, 통계분석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마을 모델 제안
	4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연구 (김춘남, 2019)	현황분석, 관련 정책사업 및 사례 분석을 통한 과제와 방향 도출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체계 제안,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제안
	5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고영호 외, 2018)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분석, 설문조사 및 분석, 관련 기관 협동연구	외부공간 시설의 고령친화도 진단지표 개발 및 진단방법 제안, 고령친화도 진단지표 활용방안 제안
	7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SOC 서비스 격차분석: 충청남도를 사례로 (임준홍 외, 2021)	- 통계적 분석방법: GIS점근성 분석, 회귀분석, 설문조사(충남사회지표조사 활용) 등 - 최소 분석공간단위: 충남/시/군/구별 위치정보	생활SOC 시설유형별 서비스 실태분석과 지역별 삶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상호 관계 분석 및 취약지역 도출, 정책제안
	8	도심거주 고령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분석 (임준홍, 2015)	충남사회지표 원자료 분석을 통한 충남고령자 주거특성 분석	고령자 도심거주 만족도 분석, 도심주거이동 의향 분석, 고령자 도심거주 촉진방안 제안
	근거기반의 실행가능한 정책개발 충남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정책의 실행모델 제안 *입법 중인 '공간복지 기본법' 대응(정책사업 등)에 선제적 대응			
본 연구	공간복지 정책과 연계한 충남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행 전략 연구	- 통계적 분석방법: 2021년 충남사회지표 원자료 + 국가통계 - 통합적 분석(회귀분석+GIS) 실행가능성 높은 도시개발지역 등 탐색적, 전략적 분석	충남형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전략 마련(충남 도시개발 업무자침 마련), 워킹그룹 회의를 통한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 개발 및 적용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03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 및 사례분석

고령자 현황과 생활환경
충남 고령친화도 분석
정책과 사례분석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급속한 고령화 2021(16.5%) → 2025(20.3%), 2060(43.9%), 충남도 2040(34.5%)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2021)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급속한 고령화 2021(16.5%) → 2025(20.3%), 2060(43.9%), 충남도 2040(34.5%)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충남의 고령인구 현황(2021.02 기준,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6.3%	19.6	16.8	14.2	14.3	14.6	12.8	9.9	13.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9%	18.2	19.3	21.6	23.7	21.9	17.6	15.9	

자료: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2022.10.08.)

충남의 고령화 추이(2021.02 기준)

구분		2006	2017	2019	2021	2024	2029	2035	2040
충남	천명	273	351	374	410	469	590	727	839
	%	14.1	16.3	17.1	18.4	20.6	25.1	30.2	34.5

자료: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2022.10.08.)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독거노인 증가 우려

충남의 독거노인 현황 (2021.12 기준)

시/군	독거노인 수				65세이상 노인수
	계	독거노인 비중	기초생활 수급노인	일반노인	
계	123,244	31.1	21,114	102,130	396,546
천안시	19,315	26.8	5,290	14,025	72,151
공주시	8,245	29.8	1,248	6,997	27,675
보령시	8,390	32.0	1,238	7,152	26,211
아산시	12,173	28.7	2,957	9,216	42,355
서산시	8,788	27.1	1,321	7,467	32,436
논산시	10,864	35.0	1,827	9,037	31,044
계룡시	1,502	29.2	193	1,309	5,141
당진시	8,441	26.9	908	7,533	31,331
금산군	6,038	42.2	743	5,295	14,318
부여군	7,525	33.2	1,038	6,487	22,638
서천군	6,169	32.5	691	5,478	18,988
청양군	3,557	32.2	268	3,289	11,059
홍성군	8,069	31.2	1,084	6,985	25,859
예산군	8,418	40.2	1,587	6,831	20,918
태안군	5,750	40.0	721	5,029	14,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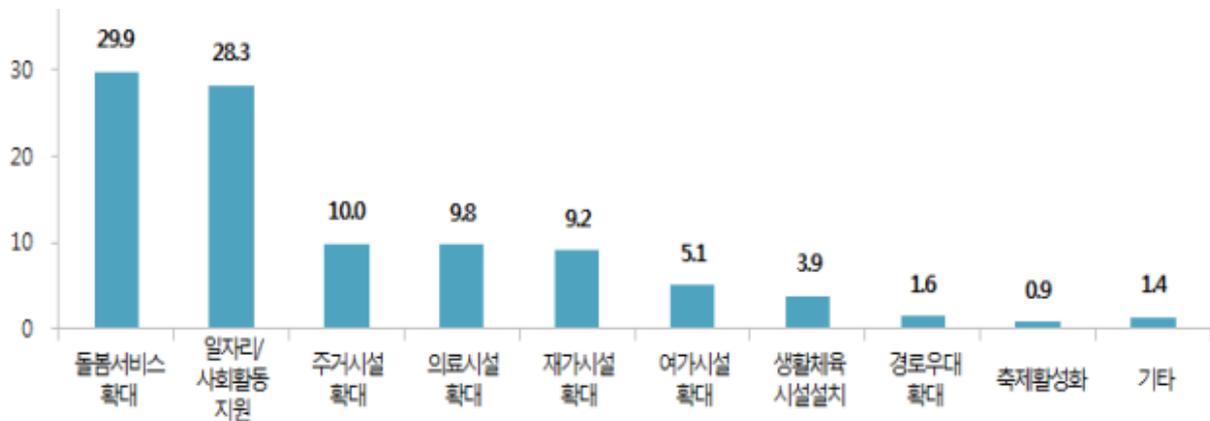
자료 : 충남 통합복지 홈페이지(2022.10.08.)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07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 충남 고령자는 돌봄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주거 및 의료서비스 요구 뚜렷



충남 고령자복지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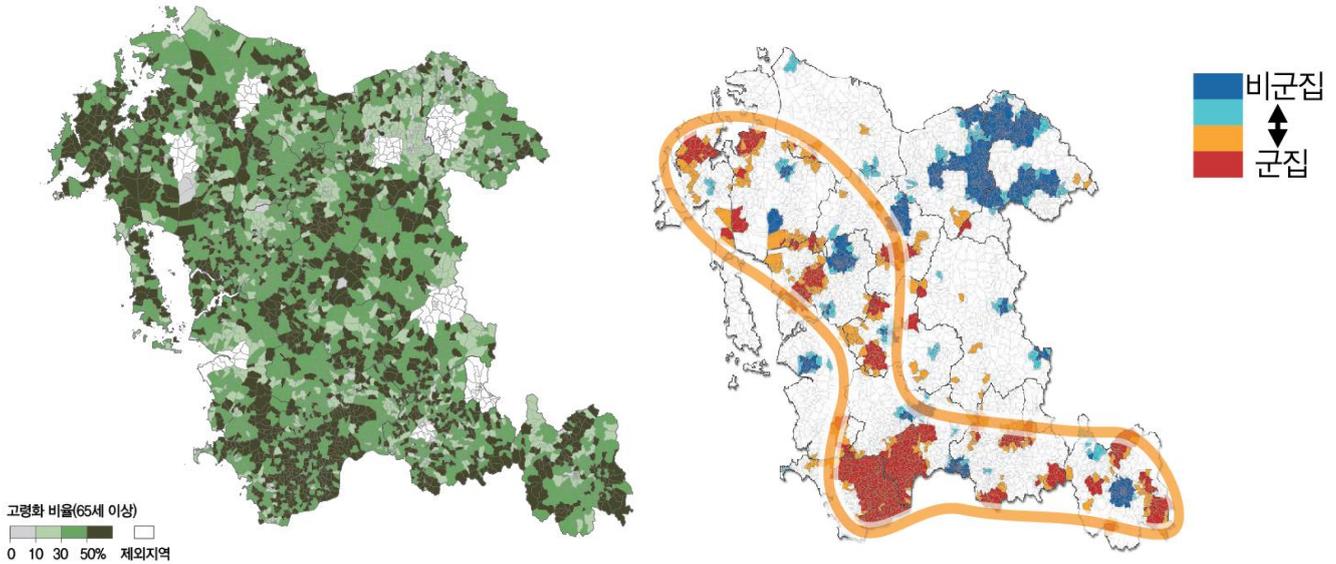
자료 : 충남사회조사(2019)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08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농촌지역, 인구감소지역일 수록 고령자 집중분포



행정리별 고령화 실태 및 핫스팟 분석

자료: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실거주 인구자료를 활용한 마을단위 인구분포, 충남정책지도, 2015.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충남의 고령친화 관련 조례와 충남의 고령친화도 분석

조례 2019년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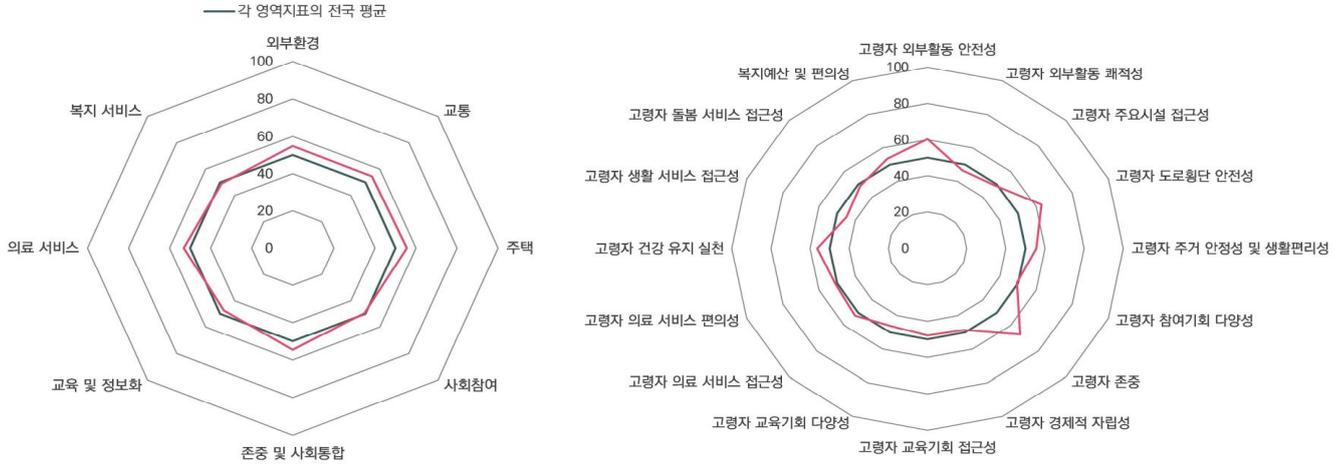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T-score	각 영역지표의 전국 평균
물리적 환경	외부환경	54.8	50.0
	교통	54.5	
	주택	55.5	
사회적 환경	사회참여	49.4	
	존중 및 사회통합	54.7	
	교육 및 정보화	47.4	
서비스 환경	의료 서비스	53.1	
	복지 서비스	49.1	

충청남도 분야별 고령친화지표 평가결과

자료: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조사·분석한 고령친화도 분석결과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충남의 고령친화 관련 조례와 충남의 고령친화도 분석



자료: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고령친화도 분석결과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정책 및 사례 : 고령자의 행태와 선호, 지역사회 특성과 연계한 공간 변화

정책흐름

활동이론에 기반하여 Active Aging,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동의 유지와 강화
 - Healthy Aging(건강하게 나이들어가기), Active Aging(활기차게 나이들어가기),
 Aging in Place(기존 주택·주거환경에서 나이들어가기)
 → Aging in Community(정든 마을·생활환경에서 나이들어가기 / 지역사회 지속거주)

구분	일반 특성	고려 가능한 정책 지원	잠재적 한계
장소 관점	현 주택 거주 사망시까지 무조건 유지	· 기존 생활환경 유지 · 이사비용 없음	· 주택개조 지원
	가능한 현 거주 유지	· 일반적 상황 · 후기고령 등 생애주기 전환에 순응	· 후기고령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 집중 지원
	현 생활범위·동네 거주 유지	· 적정 규모 주택으로 이주 · 동일한 지역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성 유지	· 적정 규모의 주거 공급 · 다양한 주거 선택지 지원
서비스 관점	요양시설 무조건 회피	· 거주지를 떠나 타 지역 가족과 합가 하더라도 시설 입소를 회피	· 고령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복지 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 지원
	현 요양시설 유지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타 시설로 이동 하지 않음	· 하나의 요양시설에서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결정권 관점	다양한 주거 선택	· 고령자 스스로 결정	· 개별 주택의 제공
	다양한 주거 지원	· 국가의 지원하에 고령자 개인이 판단	· 양질의 주거 선택지 제공 · 고령친화 커뮤니티 조성

자료: Forsyth & Molinsky, 2020; 고령호 외, 2021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정책 및 사례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관심

WHO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가이드라인)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지자체 현황

자료: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ho-network/>

분야	영역
물리적 환경	①외부환경 및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②교통수단 편의성 (Transportation)
	③주거환경 안정성 (Housing)
사회적 환경	④여가 및 사회활동 (Social participation)
	⑤존중 및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⑥시민참여와 고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서비스 환경	⑦의사소통 및 정보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⑧의료 및 지역 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13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정책 및 사례 : 고령자정책은 국가적 흐름, 정부의 핵심 과제

한국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전략 - 2022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75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

- 우리나라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확대의 방향을 설정함
-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차원의 고령사회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비율 증대 등 고령사회의 특징이 두드러지며, 고령자 대상 중심으로 복지정책 분야에 한정되었던 초기의 대응에서 해당 인구구조변화가 미치는 사회 주요 분야(의료, 교육, 주택, 도시, 노동, 여가 등)의 파급력 증대로 국가의 전 분야 정책에서의 다각적 대응으로 전환이 요구됨
-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3(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은 과제45(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제시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의 물리적/비물리적 연계를 강조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14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 정책 및 사례 : 고령자 돌봄의 중요성 강조

CCRC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연속돌봄형 고령친화 주거 단지 조성 사업)

- 민간 중심의 신규 주거단지 개발 또는 지역개발 형식으로 조성된 고령친화 주거환경 및 고령자 의료·복지 서비스의 일체적 조성 사업



Source: Knight Frank Research

CCRC 내 고령자 건강상태 변화 대응의 다양한 주거옵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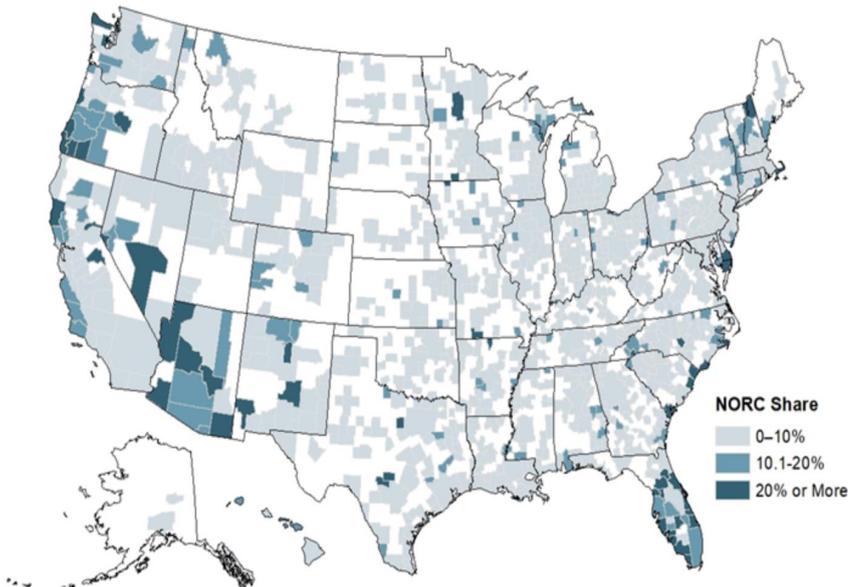
자료: Knight Frank's Retirement Housing, 2016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15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 정책 및 사례 : 기성시가지 정비와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사례

NORC NORC(Naturally Occuring Retirement Communities, 자연발생적 고령자마을 지원사업)



자료: Harvard University, 2021



자료: Queens Community House, 2022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16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정책 및 사례 : 대학과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사례 등

UBRC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 대학연계형 고령친화 주거 단지 조성 사업)

미국 주요 UBRC의 대학 참여 현황

주(State)	대학교	UBRC	대학의 UBRC 개발 참여	대학의 UBRC 운영 참여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Capstone Village	○	
Arkansas	University of Central Arkansas	College Square	○	○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University Retirement	○	○
Illinois	Benedictine University	Villa St. Benedict	○	○
Indiana	Anderson University	University Village Condominium	○	○
Indiana	Indiana University	Meadowood Retirement Community	○	○
Massachusetts	Lasell College	Lasell Village	○	○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Commons	○	○
Ohio	Ohio Wesleyan University	Austin Manor	○	○
Ohio	Oberlin College	Kendal at Oberlin	○	
New York	Ithaca College	Longview Retirement Community	○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he Village at Penn State	○	
Florida	University of Florida	Oak Hammock at the Univ. of Florida	○	

자료: Skular & Jacobson, 2007; Stevenson, 2014; 김미희·김석경, 2015; 고영호 외, 2021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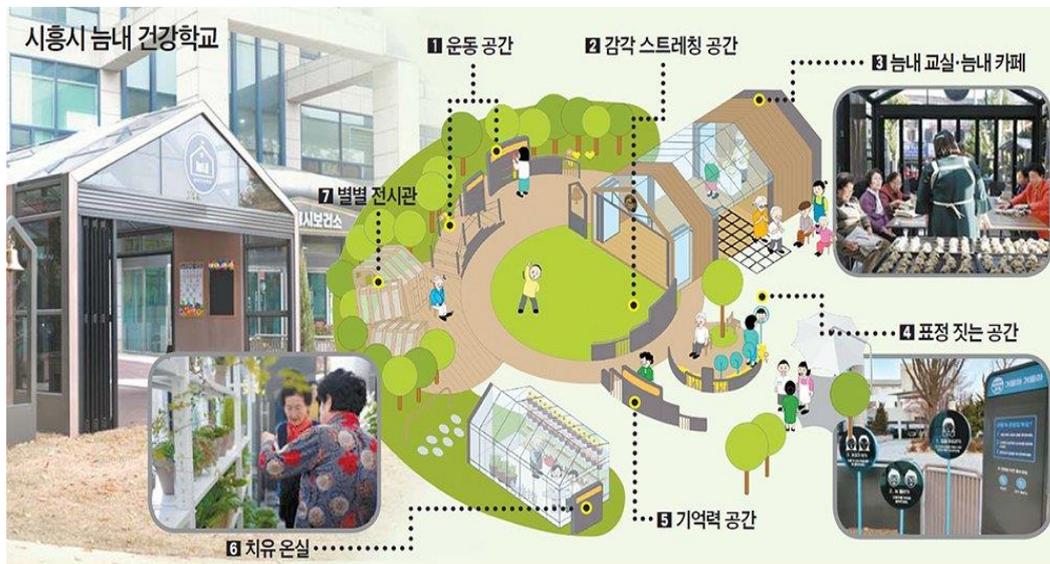
영국 런던의 건강 뉴타운 조성계획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17

II. 고령친화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정책 및 사례 : 고령자 수요와 행태에 대응한 공간 및 서비스의 변화

공간&시설연계 늠내건강학교(2019) : 노인 건강을 위한 제3의 공간(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늠내건강학교 공간구성

자료: 중앙일보, 2020. [한은화의 공간탐구생활] 노인들 살맛나는 핫플레이스 됐다. 1월 13일 기사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18

🏠 정책 및 사례 : 고령자 수요와 행태에 대응한 공간 및 서비스의 변화

공간&시설연계

동작구-서울리츠 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사업 : 세대융합형 행복주택

- 30년 이상 된 구립 경로당 부지를 활용, 경로당 재건축과 함께 용적률 여유분을 청년 공공주택으로 조성



학수경로당 행복주택

약수경로당 행복주택

경로당-청년주택 복합화사업

자료 :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1>,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011100838001#c2b>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19

Ⅲ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충남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조성 가이드라인

실행을 고려한 접근방법과 가이드라인 제안

접근방법

충청남도에서 추진코자 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3가지 방법(대안)이 검토



국토부 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중 물리적 환경조성 부분에 중점을 두어 고령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



자체가이드라인(고령친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여건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제정하는 방식



자체가이드라인(세대융합)

고령자를 포함한 세대 융복합·통합을 위한 도시 만들기 전략 제안

제안 방식

3가지 방법 중 '자체 가이드라인 신설'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내용적 구성은 중앙정부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토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과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인간중심 도시디자인 정책 등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충남 민선8기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안

-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2020. 6. 10. 시행)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시 + 고령친화도시 조성 유도

실행을 고려한 접근방법과 가이드라인 제안

총칙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조성지원조례」 등을 충청남도시개발사업에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임을 명확히 함

※ 업무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같은 용어로 이해될 수 있어 개념설정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 업무지침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1편 총칙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목적 등 명확화(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p>.....전략.....</p> <p>제1편 총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p> <p>.....후략.....</p>	<p>.....전략.....</p> <p>제1편 총칙 제1장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1-2.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개발업무지침」과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신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p> <p>.....후략.....</p>

📌 실행을 고려한 접근방법과 가이드라인 제안

부문별계획

목표 및 전략 설정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념 정립과 작성 기준에 관련된 가이드로서 현재 내용을 유지하고 추가하는 것이 적절

- (조정방향) 목표에 고령친화도시 조성개념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반영된 목표로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목표를 구체화
 -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도시개발계획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2-8-1-2. 목표와 전략은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목표 ① 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다 ③후략.....전략..... 2-8-1-2. 목표와 전략은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목표 ① 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다. ③ 목표와 전략에서 고령친화 개념과 가치가 명확히 제시되고, 주택공급 등 부문별 계획에서 실행력이 담보될 경우 기 확보된 인센티브에 추가하여 용적을 완화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작동후략.....

📌 실행을 고려한 접근방법과 가이드라인 제안

주요지표 설정

사회경제지표, 시설지표, 환경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량적·단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도록 안내

- (조정방향) 사회경제지표 중 '인구구조 설정' 내용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 검토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방향설정 단계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의 필요성을 주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전략..... 2-8-2-2. 주요 지표는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사회경제지표 ① ② ③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④ (2) 시설지표 ① 시설지표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의 수요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② (3) 환경지표 ① ②후략.....전략..... 작동 ①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한다. 작동 (2) 시설지표 ① 시설지표에는 도로, 상·하수도, 생활편의시설(생활SOC) 등 주요 기반시설의 수요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특히, 고령친화 관점에서 고령자 관련 생활SOC서비스 수준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한다. 작동 ② 제공되는 주요 기반시설은 고령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추가) 작동 ③ 고령인구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공간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음, 악취 등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추가)후략.....

🏠 실행을 고려한 접근방법과 가이드라인 제안

공간구성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은 앞서 진행한 현황분석, 목표, 전략, 주요지표 등과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

○ (조정방향) 개발구역 내 공간구성에 대한 총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고령친화 공간 및 시설을 우선한다는 내용은 추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p>.....전략.....</p> <p>2-8-3-2. 공간구성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p> <p>(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p> <p>①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p> <p>②</p> <p>③</p> <p>.....후략.....</p>	<p>.....전략.....</p> <p>2-8-3-2. 공간구성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p> <p>(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p> <p>①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의 배치 및 이를 원활히 연결한 동선체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다.</p> <p>좌동</p> <p>.....후략.....</p>

🏠 실행을 고려한 접근방법과 가이드라인 제안

인구수용

개발구역에 향후 정주할 인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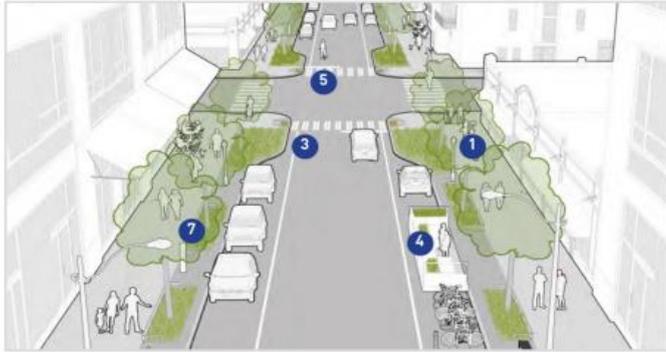
○ (조정방향) 수립기준 중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내용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이동성을 고려한 동선 체계를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 조성이 가능하도록 유도

도시개발업무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제4절. 인구수용계획' 조정(안)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p>.....전략.....</p> <p>2-8-4-2 인구수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p> <p>(2)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p> <p>①</p> <p>② 단위생활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하되, 생활권내 불필요한 통과 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여 보행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p>	<p>.....전략.....</p> <p>좌동</p> <p>② 단위생활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하되, 생활권내 불필요한 통과 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고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이동에 제약이 없도록 안전과 편의가 우선하여 제공되어야 한다.</p>

📌 실행력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시

공간(시설) 등 고령친화 보행공간조성, 주차공간확보, 주택공급 등 가이드라인과 예시 제시



■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주차구역 주차구획 표시	주차구역 안내 표지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27

📌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및 운용(도시계획심의 운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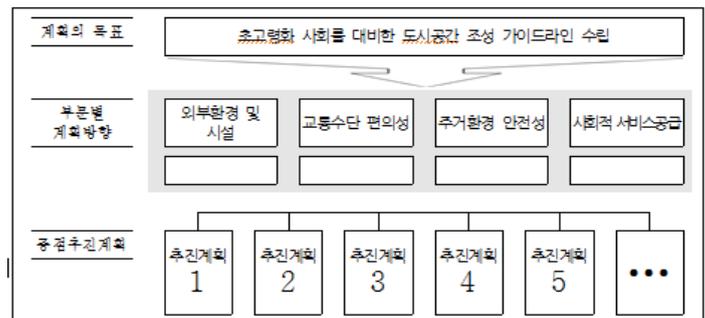
적용과 고려사항

고령친화도시의 주택 관련 내용은 현재의 도시개발업무지침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충청남도 세대통합 맞춤형도시 가이드라인(안) 별도 제시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 1) 총칙
- 2) 고령친화도시 계획수립 방향
- 3) 고령친화도시 계획수립 절차
- 4) 제4장 부문별 계획
 - (1) 물리적 도시환경 조성
 - (2) 사회적 서비스의 적용
 - (3) 개발계획 심의
- 5) 실시계획 수립
- 6) 부칙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28

IV

기성시가지 정비와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IV. 기성시가지정비와 연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전략

기본방향

시설 공급 **부족한 시설의 확충 및 적정 공급**

- 지역 및 주민계층 간 공간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공간복지 서비스의 포용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족한 시설은 확충하여 적정수준의 공급을 검토
- 신규시설은 공간복지 시설별 및 기능별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의 시설 수와 입지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공간 활용 **기존 시설의 재활용 및 재배치**

- 공간복지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시설의 재활용 및 재배치를 고려
- 공간복지 공급 및 수요 현황을 진단하여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의 재배치 기본원칙을 세우고 시설 운영 효율성이 미비한 지역에 대안을 제시
- 기존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리모델링, 장래 시설 수요를 파악하여 유휴 시설 활용 등을 고려

네트워크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공간복지 서비스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
- 교통 및 대체 시설 수단을 마련하고 거점시설 입지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

거버넌스 **지역사회의 참여와 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 공간복지 시설과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개인의 활동과 역량 강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교류, 소통이 증대
- 공간복지 시설이 지역사회 참여와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성과 확장성을 고려.

접근방법

서비스 도출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한 공급 필요 시설과 서비스 도출

- (현황) 기성시가지의 정비 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관련 사업구역 범위 내에서 시설의 공급을 판단하므로 도시 내 전반적인 수요와 과부족 현황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설치 및 작성 기준은 기존 도시·군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개선

생활SOC 등의 시설 공급 타당성 및 부담가능성을 고려 시 도시 내 전반에 대한 시설 공급 분석이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기성시가지 정비 및 개발 시 적용 가능한 지자체의 자체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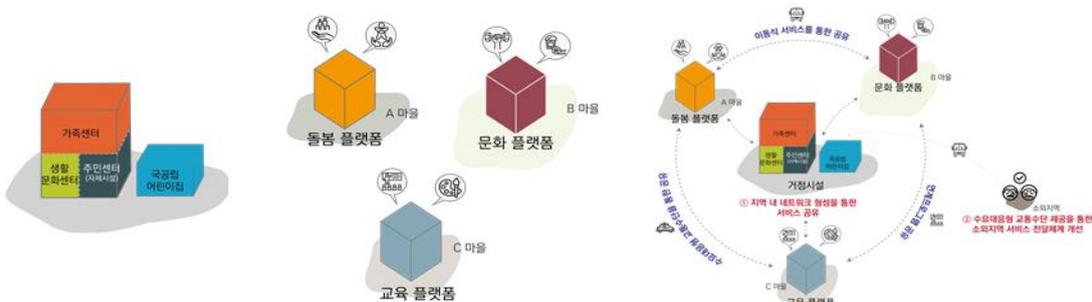
- 지역여건 분석 : 지역의 인구 및 공간구조, 재정 현황 분석
- 시설현황분석 : 시설의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이용 및 운영 현황
- 이용자 수요 및 트렌드 분석 : 현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장래 수요·트렌드
- 필요시설 도출 : 기존 시설의 유휴 및 이용불만족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황 및 수요 분석결과에 따른 필요시설과 서비스 도출

시설 공급 유형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 유형 설정

국비 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어울림 플랫폼 공급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자체 자체 가이드 및 사업 마련

시설 공급유형에 따른 공급 기본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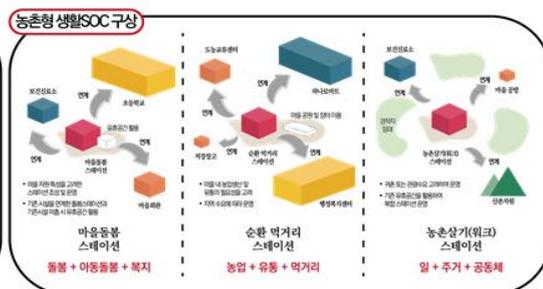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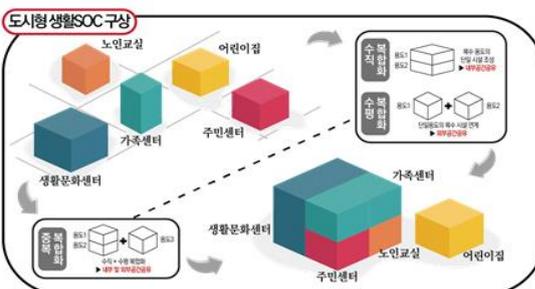
시설 공급유형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 유형 설정



거점형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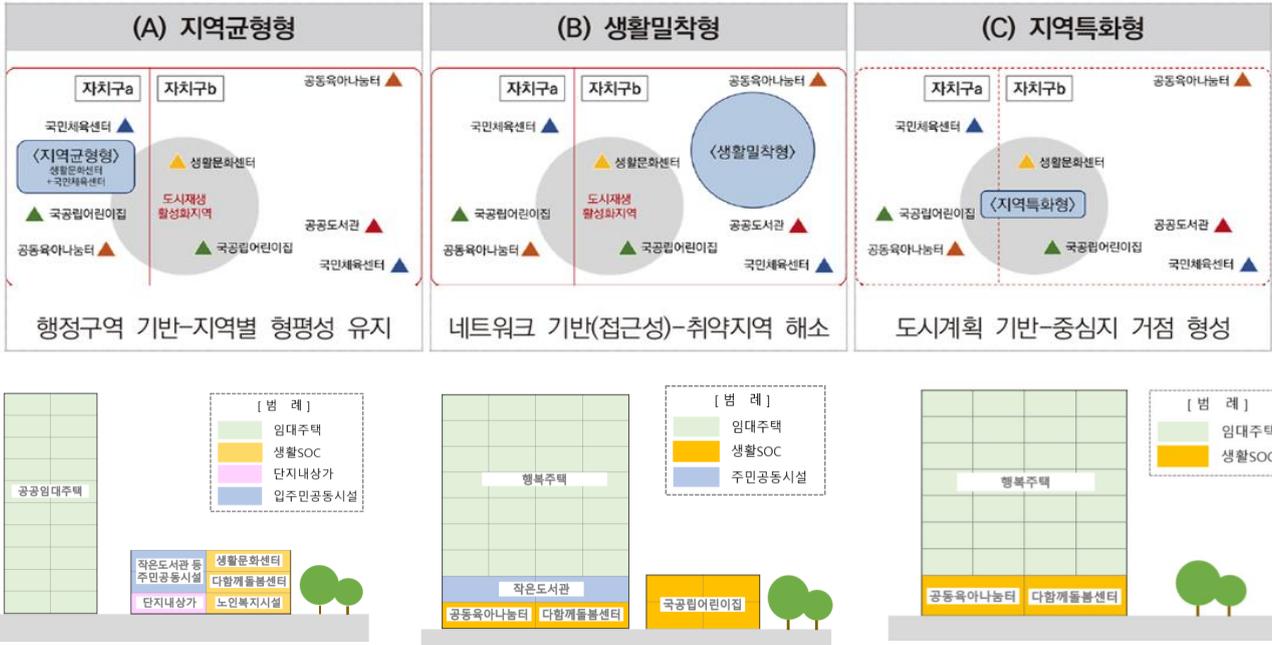
생활밀착형 (분산)

네트워크형 (연계)



충남도 및 시군 자체사업 발굴

사업모델 개발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개발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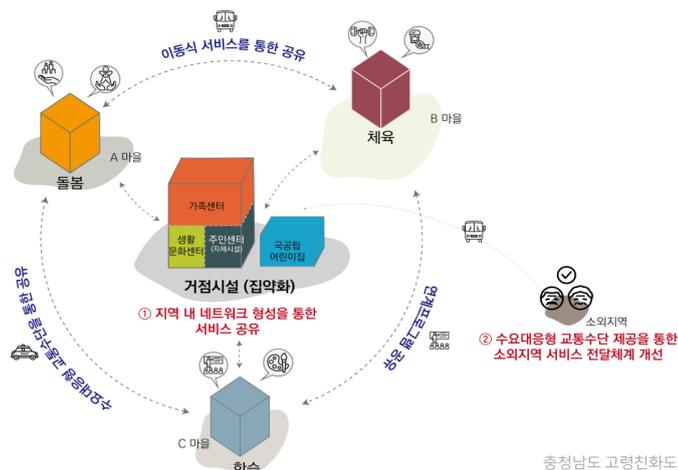


충남도 및 시군 자체사업 발굴

공급계획과 재편 기성시가지의 고령자 복합시설 공급계획과 공공시설 등 재편과 연계

현황 분석	미래수요 전망	시설 계획	운영 계획	투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현황 및 서비스 수준 분석 · 평가 △ 신축·관리·운영 예산 추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 변화분석 △ 수요추이 분석 △ 서비스 공급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정비 계획 수립 - (7)준용도전환/통폐합/리모델링 - (신규)복합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운영계획 △ 시설간 통합, 연계방안 △ 전달체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 재원 확보계획

지역단위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 체계 개념



실천을 위한 종합검토(제언)

서비스 전달체계

기성시가지 정비과정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공급-공간활용-네트워크(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관점에서 융복합적으로 추진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침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념 정의, 유형, 공급기준 등에 관한 내용도 보완되어야 할 것임

도시계획시설 관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생활soc사업을 '도시계획시설'의 관점에서 재정리되어야 할 것임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도시시설 등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시대와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립하는 것도 요구됨

고령자 복지시설 모델 개발

본격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고령자 복지시설의 모델 개발, 그 과정에서 주민 참여에 기반한 기획·운영 방안 마련, 운영효율화 방안 등도 구체화

'지역단위 추진 가능한 고령자 복합시설의 다양한 모델 개발을 개발하여 시범 공급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유형의 설정 및 사업화

V

결론 및 정책건의

- 충청도와 15개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정책을 강화하고, 공공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고령친화도시 관점의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과 기성시가지 정비(재생) 과정에서 고령친화적 시설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예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짐

신도시(신시가지)개발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고, 전략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발'과 '충남형 리브투게더'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 방안을 고려함

기성시가지 정비과정에서 이전 정부부터 추진한 생활SOC 복합화 전략은 물론 입법 중인 '공간복지' 개념을 받아들여 충남만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임

* 미국 뉴욕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시범지구(Aging Improvement District), 고령친화적 안전거리 조성 사업(Safe Streets for Seniors Program)를 충남의 특성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 지역대학과 연계한 미국의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ies, 대학 연계형 고령친화 주거 단지 조성 사업)등을 참조하여 천안과 아산, 홍성 등 대학이 있는 시군은 대학·민간 중심의 대학 캠퍼스 내 신규 주거단지 개발 형식으로 조성도 가능할 것임. 특히 대학의 유휴부동산 개발과 연계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충남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정비·보완도 요구됨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실천전략 연구

세션 6

품격있는 도민 육성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박춘섭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윤향희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임형빈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박춘섭 책임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청년정착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2022.12

연구요약

연구목적

- ④ 청년니즈 등 외적환경실현방식이 아닌 내적동기 고양하는 방법론적 접근 필요
- ④ 장소적 유대감 형성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과 인턴십 교육과정의 가능성 검토, 전략적 지원방안 제시

연구내용

- ④ 정책·현황조사: 청년정책(정착관점) 및 청년인구 동향
- ④ 선행연구: 청년이주·장소관련 연구 REVIEW
- ④ 사례조사: 메트스쿨·금산간디학교·K2인터네셔널
- ④ 인터뷰·설문조사: 인터뷰(졸업생·학교관계자) 및 설문(재학생·학교관계자)

정책제안

- ④ 충남의 나고자란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돌아올) 동기를 얻고, 정착할 수 있는 인턴십 시스템 구축
- ④ '인턴십으로 충남청년 1만명 정착'을 비전으로, 우선(3개) 및 중장기(3개) 과제 제시

목차

I

연구개요

II

충남청년 현황

III

사례분석

IV

설문·조사

V

정책제언

I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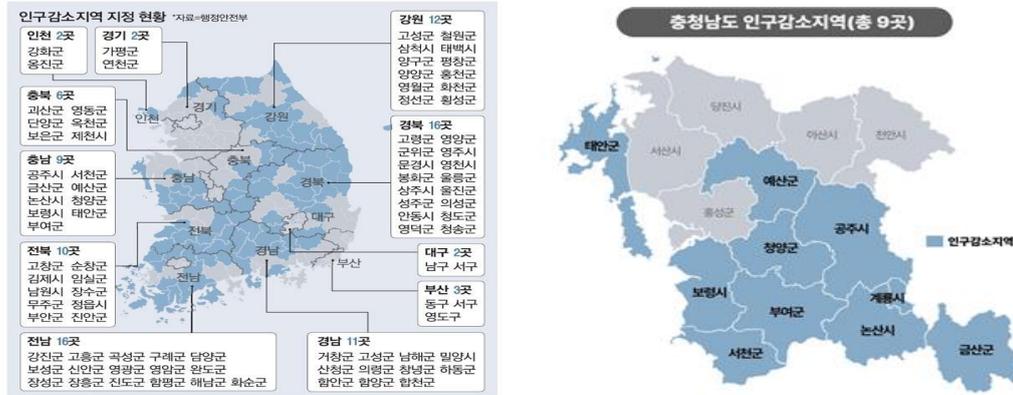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배경과 목적

배경

충남 9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편입 → **청년인구 유입의 필요성 대두**

- 인구감소지수: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청년순이동률(2020년 -4,731명), 유소년 비율(93년 22.0% → 21년 12.8%), 조출생률(93년 120명 → 21년 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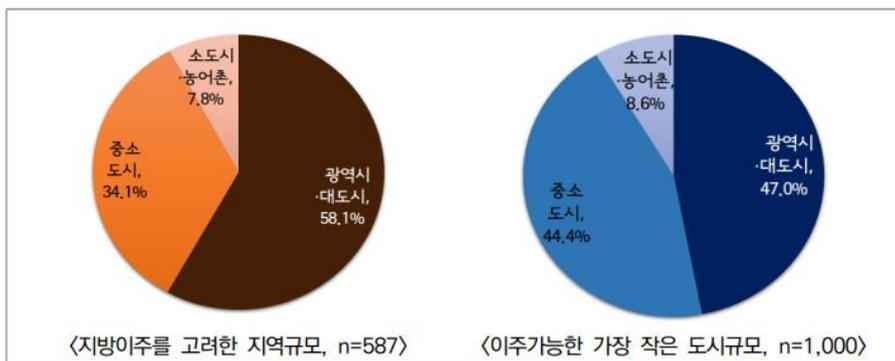
출처: 충남연구원정책이슈리뷰 9월호

배경과 목적

배경

인구감소 → 청년인구 유입 → **청년들이 원하는 지방 I**

- 청년들은 지방이주를 원할까?
- 박진경·김도형(2020) 도시청년의 지방이주 고려(58.7%)중 대도시 중심(58.1%), 소도시는 7.8%
- 청년들은 지방(충남 소도시)의 활력이 될 수 있을까?
- 소도시이주 고려 일반기업 취업(IT 등) 55.1%, 카페 외식업, 일반창업(62.7%), 사회적경제(16%), 영농조합(7.5%)
- 일본조사 역시 비슷한 경향성: 동경거주자 4%, 중소기업(37.1%), 기술창업(28.0%), 농어업(9.8%) 순



출처: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배경과 목적

배경

인구감소 → 청년인구 유입 → **청년들이 원하는 지방 II**

청년들의 지방 이주 조건은 무엇인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가능



김재홍 외(2018)

“급여수준, 복지수준, 직장분위기, 사회적인지도”



대구시 청년실태 조사보고서

“(귀향의 조건) 적정한 연봉과 직장 안정성”

청년들의 귀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엄창옥 외(2018)

“수직적 기업문화, 열악한 직장환경, 인적 기반이 좋지 않은 일자리의식, 실패자로서의 사회적 낙인”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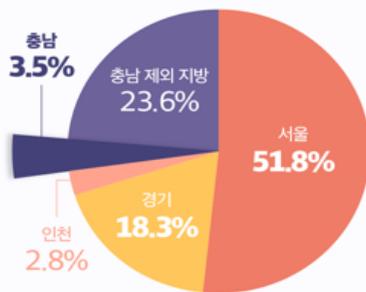
배경

인구감소 → 청년인구 유입 → 청년과 지방 → **일자리 개발**

- 노동시장의 관점에서의 불가능: 서울중심의 경제구조, 100대기업 본사 91% 수도권 위치
- 임금수준의 차이가 존재

지역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분포현황

2019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재지 수도권 집중 72.9%

자료: 감사원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출신 대학 소재지별 첫 일자리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고용정보원, 2018. 연도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배경과 목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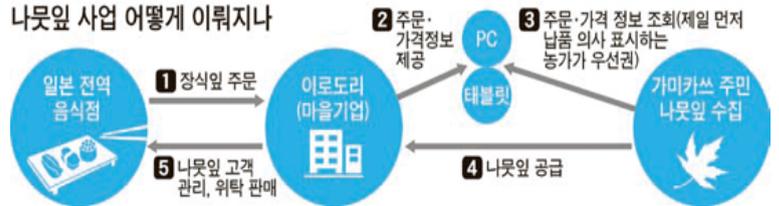
인구감소 → 청년인구 유입 → 청년과 지방 → 일자리 → **지역매력도**

- 후지나미(2018)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신산업 육성"

마을기업 '이로도리' 사례



나뭇잎 사업 어떻게 이뤄지나



출처: 중앙일보(2011.9.22), 일요신문(2016.2.1) 등 인터넷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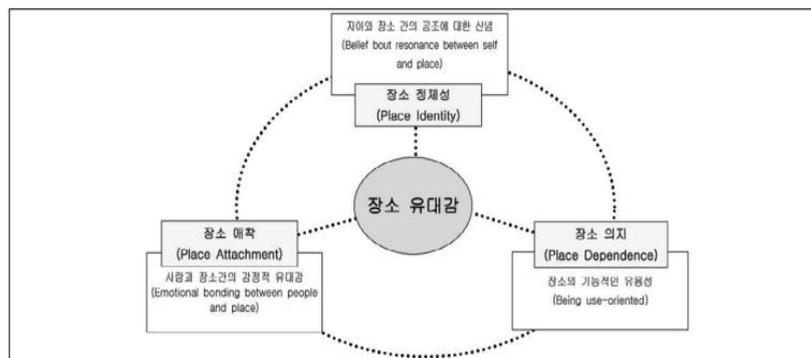
배경과 목적

배경

인구감소 → 청년 인구 유입 → 청년과 지방 → 일자리 → 지역 매력도 → **내면 동기**

사람들이 지역(자개발지역)에 남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비경제적 요인일 수 있다?

- 김재홍·도수관 (2020) "가족, 사회적 연계, 삶의 질 등 정서적 요인"
- 정동일·박영민(2021) "연고-감정적 애착, 주관적 정체성, 소속감 제공, 연속형 사회적 자본의 원천, 정보 취득 가능성, 신용가능한 사람인상, 출신고교"
- Tuan(1977) "경험이 바탕이 된 장소(Place)는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 곳"



출처: 임은진(2011), 장소에 기반한 자아 정체성 교육

배경과 목적

목적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학교 '인턴십과정' 분석 및 정책과제 제시

- 청년의 니즈, 외적 환경 실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내적인 동기를 구축하는 전환적 방법론 탐색
"청소년기에 지역매력을 경험하고 청년의 때에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동기(끈)이 되는 정책개발"
- 장소적 애착을 획득하는 방법의 경우, ① 학습, ② 사회참여, ③ 인턴십 등 존재(조수진외 2015, 황여정 2017 등)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 중 '인턴십의 가능성에 착목'
* 인턴십의 정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 관련 직업 현장에서 일정기간 실질업무 체험" 현장실습(OJT)과 대학생 인턴십 과 같은 기술 및 취업기반제도와 다름
- Smith(2002)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믿음을 깨기 위한 행동이 필요. 학교 교육에서 지역내 직업의 기회를 연결하는 교육, 즉 인턴십은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길러주어 지역사회 남게 한다"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의 졸업생들의 '지역정책' 사례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07

II

충남청년현황

충남청년의 현재
정책현황

충남청년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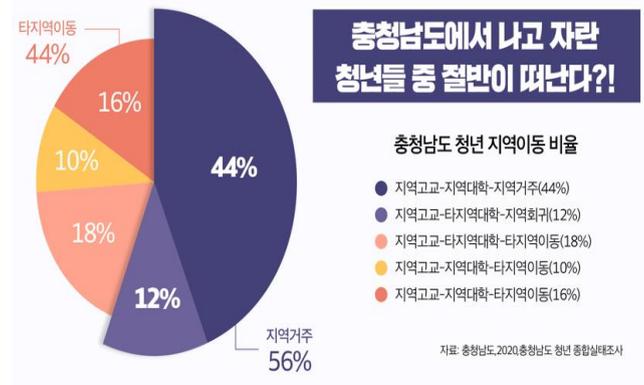
현황

충남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 충남대졸자 이동경로 분석에 따르면, 지역고교생이 지역에서는 (돌아오는) 비율 서울 77%, 경기권 78%, 충청 63% → 충남 56%



출처: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오정아 외 (2020)



정책현황

정책

비전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 청년정책 분야 5개 분야 74개 과제 (21년) → '일자리 분야 중심'
- 일자리(34개), 주거(5개), 교육(7개), 복지 및 문화(12개), 참여 및 권리(16개)
- 정책과 직접적 연관 사업(6개, 교육프로그램 집중)
- 청년정책(구환)에 대한 정책적 관심 높일 필요가 있음

사업명	목적 및 내용	특징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형식의 커뮤니티활동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알기와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	교육프로그램 (청년니즈·지역)
청년 활력공간 청년LAB 운영	도내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 및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 소통 공간 마련, 지역 활력 제고 및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교육 교류공간 구축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	지역청년 멘토를 육성하여 청년관련 정보 및 제도를 제공하고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 지원인력양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역에 활동할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교육프로그램 (지역)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충남에 관심이 있고 이주를 고려중인 충남 외 지역 청년에게 2~4주 동안 주거·생활공간과 지역교류 활동, 일자리 체험 등 제공	교육프로그램 (지역)
충남 청년 친화도시 인증제도	시군의 적극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기획·추진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	제도구축

출처: 22년 청년정보(충청남도) 및 다이나믹충남청년 홈페이지(<https://youth.chungnam.go.kr/>) 발췌·주정

III

사례조사

메트스쿨
금산간디학교

III. 사례조사



메트스쿨(the met school)

인턴십

'인턴십'을 통해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다.

- 비영리단체 빅피쳐러닝(Big Picture Learning)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대안학교
지역학교_졸업률 56%, 대학진학률 38% vs 메트스쿨_졸업률 95%, 대학진학률 98%로 성과 입증
인턴십 프로그램을 근간한 교육방법으로 성공. 전세계적으로 교육방법론(리얼월드러닝) 활용
특징: 다양한 분야 인턴십, 현장체험, 개인진로 및 지역사회 기여(졸업반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 필수)

1	관심사 파악	자신의 관심 분야 상세히 알기
2	인턴십 찾기	관심 분야의 멘토 찾기, 멘토 인터뷰
3	일일 직업체험	멘토 관찰, 정보 수집
4	인턴십 목표 수립	인턴십 과정 설명, 학생에게 맞는 학습 목표 세우기
5	인턴십 시작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 경험하고 배우기
6	장기 프로젝트 계획	학습 목표 향상, 인턴십 최종 결과물, 연구, 성찰
7	인턴십 평가	학습평가회, 공개 프레젠테이션, 서술식 평가서

출처:서희주(2020) 미국 메트스쿨 현황과 시사점



출처:김하늬(2021) 로컬혁신학교 발표자료

📍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개요 **진로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운영**

- 2001년 금산군 설립된 비인가형 대안학교 (vs 인가형 대안학교)
- * 대안학교란? 공교육의 인티테제로서 과잉경쟁교육방법에 대해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운동) 현재 인가형 대안학교 94개교, 비인가 287개교, 충남 인가형 4개교, 비인가 14개교 운영 대안학교의 경우, 진로교육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중
-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은 "진로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중. 리얼월드러닝 도입



출처: 금산간디학교 내부자료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13

📍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성과 **인턴십은 청년에게 장소성을 제공하고, 지역정주 계기 마련**

- 최근 5년간 인턴십 참여자수 평균 15명 vs 한학년 20명 내외 규모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참여학생수	11	14	12	19	20	중복 참여 있음
참여현장	11	14	12	22	27	

- 인턴십은 참가자들에게 ①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 ②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인턴십을 다녀오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 지역 청년공동체 같은 곳에서 자네보고 싶다. 000에서 인턴십을 하며 협동조합 마교의 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였다. 늘 도시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도시에서 일하며 지내는 삶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런 삶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언제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삶이 좋아 보였다(2021년 참가자)"

- ③ 실제 다양한 실험과 창업계기, 그리고 정주 "졸업생 4명중 1명꼴로 지역정주(2018)"



출처: 월간토마토,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14

📍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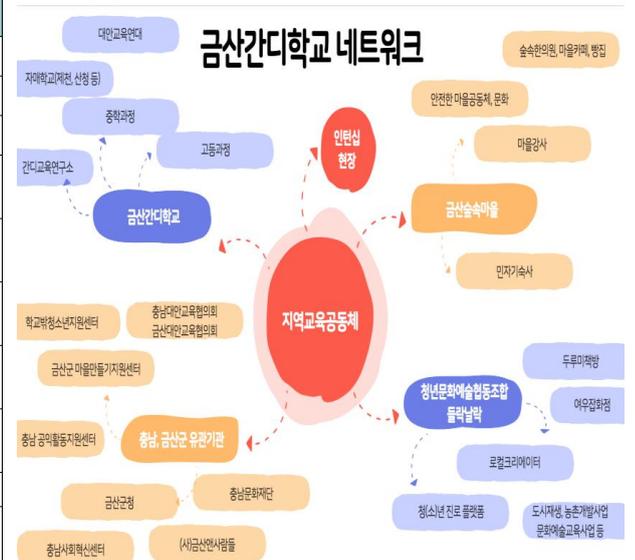
지역사회

인턴십은 공동체와 지역사회로의 확장하는 계기

- 금산간디학교의 인턴십은 1)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 관심으로 확장 2017년 독거노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예술, 에너지전환, 창업, 그리고 축제기획까지 확장

프로젝트와 활동	내용
독거노인프로젝트(2017)	매곡리 독거노인들과 만나서 건강을 위한 반찬 나눔
지역나눔프로젝트(2018)	인삼골건강마을 공연, 사회복지법인 다솜 장애인과의 만남, 소풍 등
예술공방프로젝트(2018)	금산 학교 앞 세월호 추모제 개최 및 실파찌 판매, 기부
에너지전환프로젝트 (2018~2021)	금산 월장 참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판매, 모금
창업 프로젝트(2018)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업인큐베이팅 교육 및 실습 참여" 닭강정, 공예, 밀크티, 호떡 등 먹거리 창업 인큐베이팅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2019)	금산읍 청년몰 졸업생 창업 특강, 청년몰 창업자 만남을 통한 관계맺기, 창업을 위한 시장조사, 분식, 핸드메이드 악세사리 등 아이템 개발
홍삼 창업 프로젝트(2020)	홍삼액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신고 등
창업 프로젝트(2021)	중부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지원, 창업 교육 및 사업계획서작성, 빈티지 카페, 청소년들을 위한 무알콜 칵테일바 등 아이템 개발
금산 시장 월장(2019)	판매부스, 체험활동, 스텝, 공연 등의 참여
금산인삼축제 청소년 문화난장 키워(2019)	들락날락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4개 대안학교 및 지역 학교 참여,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공연(밴드, 연극, 오케스트라 등), 청소년 선언문 낭독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인삼축제 참여

출처: 금산간디학교 내부자료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15

IV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
설문조사 결과

인터뷰결과

개요·결과

인턴십의 한계_현장+Connector+지원정책의 필요

- 졸업생(3인)과 학교관계자(3개단체 등)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설문을 통한 인터뷰
- 주요질: 졸업생_인턴십의 경험, 도움여부, 지역관심 촉진, 정책수요
학교관계자_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현황, 도움여부, 지역사회 연계 및 정책수요
- 주요결과: 졸업생_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 경험, 정책수요_ 재정지원, 코디네이터, "지역네트워크 필요"
"인턴십을 통해)막연함을 깨우치다", "서울에서는 소비자, 금산에서는 생산자"
" 선배, 단체, 멘토가 있는 금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Snow bowling)"
- 시사점: 지역정주촉진은 인턴십+학교(Anker)+교사(Connector)+지원정책
- 한계: 담당자비중높음(시스템 必)_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 확장조우

이우학교 (인가형 대안학교)	별무리학교 (비인가형 대안학교)	일하는 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금산간디대학교 졸업생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17

설문조사결과

개요·결과

인턴십은 지역정주의 관심을 높인다

- 금산간디대학교 재학생(12인) 및 대안학교 관계자(12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주요질: 재학생_인턴십의 경험, 지역 관심 관심도, 정책수요
학교관계자_ 인턴십 운영현황, 지역정주 관심도, 정책수요
- 주요내용: 인턴십은 전국적. 그러나 수도권 집중 현상
인턴십 기간은 1주~1개월이 가장 많음
인턴십 후 진로탐색 도움 및 지역정주 관심 높아짐(재학생 58.3%)
충남에서 인턴십 하고 싶다(재학생 66.7%)
인턴십 정책수요_ 재정적 지원(83.3%), 학교관계자(91.7%),
중간지원기관 필요(재학생, 학교관계자 90%이상)
충남정주 정책_ 취창업지원(재학생 75%), 주거지원(학교관계자 91.7%)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18

V

정책제언

기본구상
전략과제

IV. 정책제언

기본구상

시사점

“ 나는 왜 여기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 (Miss Match) 정책적 관심인 인구소멸지역(소도시, 10만이하)에 대한 도시청년의 관심 낮음
- 충남에서 나고자란 청년들의 과반은 돌아오고 있지 않으며, 지역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 수도권중심의 경제구조내에서는 지역이 취할 수 있는 **일자리중심 전략의 한계가 존재**
- 전환적인 고민 필요 **“삶의 동기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삶의 동기를 획득 할 수 있는 방법: (장소성) 장소의 애착을 고양하는 방법으로서의 인턴십프로그램의 유용성
- 공교육기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대안학교의 인턴십 프로그램의 가능성? YES.
-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역정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서 살고자하는 시도
- +대안학교(Anker), 교사(Connector) 등 사회적 자본과 축적된 졸업생 정주자(관계자본) → Snow bowling
- 한계_ 1) 인턴십프로그램 운영_ 현장부족_어드바이저_멘토
2) 대안학교의 운영_ 학령인구감소

기본구상



충청남도 청년정착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21

전략과제

① 우선과제 소프트웨어·추진용이·긴급		
<p>인턴십 도입·지원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으로서 도입촉진(시범) - 인턴십현장(인턴스터디기업) - +멘토(인턴마스터) - +교사발굴 	<p>충남형 캡이어II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충남외 지역청년 대상 - 충남소재 고교+ 인턴십 수료자 - 장기(~1년) 등 선택지 확대 	<p>청소년인턴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지원 必(83.3%) - 현재 제도 대상인원 한정 - 인턴 당사자+교사+멘토지원
② 중장기과제 인프라·시간필요·확장		
<p>충남형 인턴십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멘토발굴 및 DB관리 - 정보제공및네트워크 홍보 - 중심으로 중간지원이 아닌 플랫폼 - 대안교육기관 등 위탁운영 - 앱 중심(lmBlaze 참고) 	<p>충남청년 회귀지원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향회귀 관심 확대 - 일본 다양한 센터 운영 중 - 코로나19, 원격근무 등 수요확대 - 귀환청년 종합서비스 (주거+일자리) 	<p>충남형 대안학교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제31조 교육기회 - 서울 대안학교 지원 - 학교재정+급식비+직무역량 등 - 조례개정: 청소년정주활동 지원학교

충청남도 청년정착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22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청남도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윤향희 책임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022.12.20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정책

IV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V

정책제언

연구목적

- ①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의 개선방안 마련
- ②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습득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연구내용

- ①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제시
- ② 외국인에 대한 보육 및 교육현황 제시 및 국내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 지원 근거, 중앙정부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조례 검토
- ③ 면담을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체계구축 마련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 ①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과 보육기관의 한국어 강사 지원이 요구
- ②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
- ③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요구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80년대 아시안게임, 올림픽의 진행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며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빠르게 증가
-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3D 업종의 기피와 함께 저 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의 수용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국가적 배경
- 외국인가정 자녀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진입 되어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등에 대한 법률제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시행법 중 외국인가정 자녀의 율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내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부족에 따라 또래 관계 형성,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학업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학교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외국인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는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목적

- 외국인이 타국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은 언어이며,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은 한국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
-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교 학습에 있어 한국어 습득은 매우 중요하며 학교 교과과정과 또래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
- 충청남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과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지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
- 충청남도의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 및 교육지원 확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외국인가정 자녀란 부모 중 한 사람도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가정의 자녀로
국내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노동자가정, 재외동포가정, 유학생가정, 난민가정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대상

- ① 연구대상은 충청남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외국인노동자가정, 재외동포가정, 유학생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및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다문화정책학교로 선정이 된 초등학교의 다문화 담당 교사를 대상
- ② 국인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3그룹으로 선정
- ③ 연구 대상자 선정은 논산, 아산, 천안의 다문화정책학교와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선정

시간적 범위

- ① 시간적 범위는 2022년

지리적 범위

- ① 충청남도 전역 대상

연구방법

- ① 문헌조사, 세미나 및 간담회, 면담조사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IV. 이론적 배경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 외국인의 유형

- 외국인노동자, 재외동포,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입국

- 1991년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도입
-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여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
-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에 통합
- 2012년 2월에 '성실 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가 신설

📌 재외동포의 한국 입국

- 조선족의 입국
 - 1990년대 초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
 -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1980년대 후반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2022년 한국 체류 조선족은 약 70만 명
- 고려인의 입국
 -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려인은 귀환하려는 고려인동포
 - 2020년 4월 기준 85,072명이며, 국가별 비중은 우즈베키스탄 46%, 러시아 33%, 카자흐스탄 15%

IV. 이론적 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 계	등록	거소신고	
2011년	1,395,077	1,117,481	982,461	135,020	277,596
2012년	1,445,103	1,120,599	932,983	187,616	324,504
2013년	1,576,034	1,219,192	985,923	233,269	356,842
2014년	1,797,618	1,377,945	1,091,531	286,414	419,673
2015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2017년	2,180,498	1,583,099	1,171,762	411,337	597,399
2018년	2,367,607	1,687,733	1,246,626	441,107	679,874
2019년	2,524,656	1,731,803	1,271,807	459,996	792,853
2020년	2,036,075	1,610,323	1,145,540	464,783	425,752
2021년	1,956,781	1,569,836	1,093,891	475,945	386,945
2022년 6월	2,056,041	1,595,707	1,109,700	486,007	460,334

출처 :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IV. 이론적 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국내체류 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2년 3월	'22년 4월	'22년 5월	'22년 6월	전월 대비	'21년 6월	전년 대비
총 계	1,966,276	1,987,250	2,012,862	2,056,041	2.1%	1,961,035	3.8%
사증면제(B-1)	163,754	170,608	179,032	192,899	7.7%	170,498	13.1%
관광통과(B-2)	42,873	54,083	62,192	77,156	24.1%	53,296	44.8%
단기방문(C-3)	93,921	93,586	93,161	100,657	8.0%	103,251	-2.5%
단기취업(C-4)	2,304	2,442	2,374	2,751	15.9%	2,991	-8.0%
유학(D-2)	122,640	121,176	121,139	119,853	-1.1%	107,690	11.3%
기술연수(D-3)	1,655	1,726	1,739	1,726	-0.7%	1,696	1.8%
일반연수(D-4)	54,398	54,392	55,343	57,936	4.7%	51,300	12.9%
종교(D-6)	1,365	1,380	1,384	1,408	1.7%	1,295	8.7%
상사주재(D-7)	1,021	1,029	1,057	1,078	2.0%	1,045	3.2%
기업투자(D-8)	6,162	6,276	6,380	6,443	1.0%	5,741	12.2%
무역경영(D-9)	2,028	2,073	2,175	2,178	0.1%	2,171	0.3%
교수(E-1)	2,068	2,072	2,070	2,061	-0.4%	2,155	-4.4%
회화지도(E-2)	13,773	13,788	13,939	13,901	-0.3%	12,830	8.3%
연구(E-3)	3,693	3,684	3,724	3,719	-0.1%	3,241	14.7%
기술지도(E-4)	181	192	197	199	1.0%	197	1.0%
예술활동(E-6)	3,433	3,487	3,484	3,525	1.2%	3,145	12.1%
특정활동(E-7)	21,478	22,096	22,313	22,255	-0.3%	19,867	12.0%
계절근로(E-8)	344	1,584	3,472	4,581	31.9%	423	983.0%
비전문취업(E-9)	220,751	221,512	223,374	225,516	1.0%	220,588	2.2%
선원취업(E-10)	18,381	18,352	18,502	19,098	3.2%	17,779	7.4%
방문동거(F-1)	92,114	92,592	94,354	96,654	2.4%	96,653	0.0%
거주(F-2)	42,888	43,001	43,231	43,552	0.7%	43,020	1.2%
동반(F-3)	21,645	21,998	22,468	22,696	1.0%	20,232	12.2%
재외동포(F-4)	481,995	483,322	485,131	487,989	0.6%	472,514	3.3%
영주(F-5)	170,487	171,164	171,867	172,542	0.4%	164,379	5.0%
결혼이민(F-6)	134,676	135,119	135,334	135,621	0.2%	134,110	1.1%
방문취업(H-2)	117,243	115,927	114,985	113,390	-1.4%	139,684	-18.8%
기타	129,005	128,589	128,441	124,657	-2.9%	129,244	-3.5%

출처 :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IV. 이론적 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충남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1,109,700	361,978	230,610	68,440	67,664	63,220	51,999	40,110	36,690
	전남	전북	대구	광주	제주	대전	강원	울산
	33,344	31,350	27,787	21,033	20,686	18,758	18,927	17,104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부산
486,007	208,120	137,665	33,883	29,526	14,501	13,229	9,302	6,407
	울산	광주	대구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대전
	6,235	5,462	4,894	3,613	3,595	3,475	3,075	3,025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국적별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총계	중국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카자흐스탄	기타
486,007	353,365	43,132	26,523	21,854	17,005	9,579	14,549

출처 :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등록외국인 충청남도 거주 현황

(2022.06.30. 현재, 단위 : 명)

광역시도	시·군·구	등록외국인
충청남도	계룡시	185
	공주시	1,916
	금산군	1,944
	논산시	3,829
	당진시	5,150
	보령시	2,832
	부여군	1,293
	서산시	3,949
	서천군	1,257
	아산시	16,341
	예산군	1,976
	천안시	18,359
	청양군	642
	태안군	14,24
	홍성군	2,411
소계	63,508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09

IV. 이론적 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외국인유학생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유학 (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총계	176,186	119,853	56,313	20
베트남	67,948	31,830	36,115	3
중국	49,265	44,549	4,716	0
한국계	663	660	3	0
몽골	9,458	5913	3,545	0
우즈베키스탄	9,254	7521	1,733	0
일본	5,240	2521	2,719	0
네팔	2,689	2505	183	1
인도네시아	2,137	1855	282	0
프랑스	2,054	1750	304	0
미얀마	2,023	939	1,084	0
미국	1,978	1656	321	1
인도	1,640	1442	198	0
파키스탄	1,448	1415	33	0
러시아(연방)	1,448	775	673	0
방글라데시	1,427	1371	44	12
(타이완)	1,289	812	477	0
독일	1,193	1078	115	0
말레이시아	1,079	879	200	0
태국	1,015	542	473	0
기타	13,601	10,500	3,098	3

출처 : 법무부(2022년 6월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합계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출생 자녀
계	275,990	14,344	261,646
0세	15,149	42	15,107
1세	16,560	167	16,393
2세	16,035	421	15,614
3세	16,377	561	15,816
4세	17,116	812	16,304
5세	17,181	794	16,387
6세	17,161	869	16,292
7세	17,318	864	16,454
8세	18,409	894	17,515
9세	18,789	854	17,935
10세	18,515	837	17,678
11세	17,501	956	16,545
12세	16,754	1,032	15,722
13세	14,892	933	13,959
14세	10,848	925	9,923
15세	8,705	915	7,790
16세	7,192	903	6,289
17세	5,903	813	5,090
18세	5,585	752	4,833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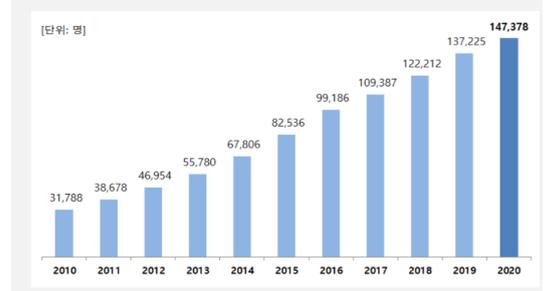
IV. 이론적 배경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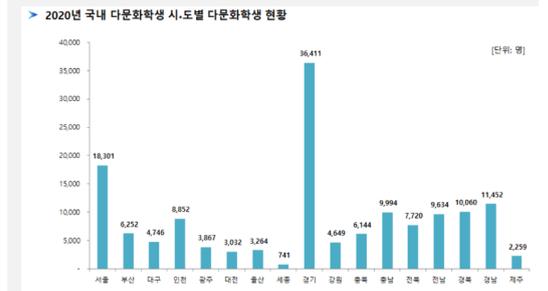
충청남도 다문화학생 현황

시도	학제	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충청남도	초등학교	7,176	3,477	5,811	2,824	263	128	1,102	525
	중학교	1,941	971	1,507	764	145	80	289	127
	고등학교	877	454	652	342	87	47	138	65
	(일반고)	482	273	363	205	54	33	65	35
	(특목고)	61	22	50	17	8	3	3	2
	(특성화고)	295	134	203	98	23	9	69	27
	(자율고)	39	25	36	22	2	2	1	1
	각종학교								
계	9,994	4,902	7,970	3,930	495	255	1,529	717	

국내 다문화학생 현황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2020년)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11

IV. 이론적 배경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외국인가정의 자녀 유형

-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 재외동포가정 자녀, 유학생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 주민등록법에 따른 보육지원, 충청남도 외국인가정 자녀 어린이집 이용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자녀(0~5세 아동 수)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808	911	843	885	878
천안시	221	261	227	232	226
공주시	39	44	35	50	54
보령시	32	40	26	27	45
아산시	152	166	172	171	153
서산시	65	74	67	64	67
논산시	47	60	49	62	49
계룡시	7	7	13	9	10
당진시	80	71	84	75	80
금산군	22	16	27	40	30
부여군	28	28	22	24	38
서천군	20	25	14	10	20
청양군	11	18	12	21	13
홍성군	37	42	34	46	36
예산군	29	34	35	33	36
태안군	18	25	26	21	21

외국인가정 자녀 지역별 어린이집 이용현황

구분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808	911	843	885	878
천안시	221	261	227	232	226
공주시	39	44	35	50	54
보령시	32	40	26	27	45
아산시	152	166	172	171	153
서산시	65	74	67	64	67
논산시	47	60	49	62	49
계룡시	7	7	13	9	10
당진시	80	71	84	75	80
금산군	22	16	27	40	30
부여군	28	28	22	24	38
서천군	20	25	14	10	20
청양군	11	18	12	21	13
홍성군	37	42	34	46	36
예산군	29	34	35	33	36
태안군	18	25	26	21	21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12

IV. 이론적 배경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

외국인가정의 자녀 한국어 교육지원

구분	유관기관
시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4개 시도교육지원청 (논산과 계룡은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 구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충청남도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유치원) 33개원	천안: 수신초병설유치원, 천안도솔유치원, 천안성성유치원, 천안신촌초병설유치원, 성환초병설유치원, 아이숲유치원, 사랑유치원 공주: 신관유치원 아산: 아이세상유치원, 해외달유치원,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창초병설유치원, 삼일푸른유치원 서산: 대장유치원, 성연유치원, 서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차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논산: 놀미유치원, 강경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홍성: 내포유치원, 조양유치원, 가람유치원, 혜전대학교부속유치원, 홍북초병설유치원, 한울초병설유치원 태안: 태안유치원, 모항초병설유치원 보령: 보령창미유치원 당진: 당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합덕초병설유치원 예산: 예산유치원
한국어학급(초·중·고) 21개교	천안: 성환초등학교, 입장초등학교, 천안신부초등학교, 천안신촌초등학교, 성환중학교, 천안북중학교, 천안서초등학교, 아산: 관대초등학교, 둔포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신광초등학교, 아산성초등학교, 온양중앙초등학교, 둔포중학교, 신창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서산: 차동초등학교 논산: 동성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충청남도인터넷고등학교 당진: 합도초등학교
대학생멘토링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건양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13

IV. 이론적 배경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미지원

주민등록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해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어려움

코로나 이후 유학생 생계 어려움 문제, 장애 외국인자녀에 대한 장애판정 불가에 따른 민간서비스 이용 제약

타 시도 외국인 자녀 보육교 지원

김포시, 서울시(영등포구), 의정부시, 정읍시 사례

외국인가정의 자녀의 언어교육

영유아 언어발달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말의 형성과 의사소통의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연령	언어습득
생후 1개월	- 자음 구별
2개월	- 오, 아, 와 같은 모음구성 가능
4-6개월	- 자음 첨가
10-12개월	- 유성어를 만들고 -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 구성
12-18개월	- 하나의 낱말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시작 - 2개의 낱말 연결사용 가능
18-24개월	- 이어문기로 조나나 연결사를 생략가능 - 명사, 동사, 형용사의 2개 이상의 낱말 연결
2-3세	- 문법적 형태소 사용시작 - 세 단어 이상 문장구성 가능
4-5세	- 공간적 관계어 이해 가능 - 대립관계어와 시간적 관계어의 이해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14

III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정책

국내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지원 근거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책지원

III.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정책



국내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지원 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가 명시
한국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국회에서 동의를 이루어진 후 대통령에 의하여 비준
헌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으로 효력
제2조의 비차별의 원칙
제3조의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
제6조 생명과 생존 발달의 원칙
제12조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의 4개의 일반원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0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 『교육기본법』은 1997년 12월에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미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교육기본법』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기본법』제12조 학습자

🏠 국내체류 외국인가정 자녀의 법적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로는 외국인의 특정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또는 외국계 국민과 혼인을 한 국민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가족을 모두 대상으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청소년의 인종과 종교, 성별과 나이 그리고 학력이나 신체조건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

🏠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추진경과: 2008년~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년~2017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2018년~2022년까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하여 시행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정책 목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중점 과제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비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정책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중점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화를 위한 국제업무 수행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 지원 시스템 구축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정책 목표 및 중점 과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정책목표</th> <th>중점 과제</th> </tr> </thead> <tbody> <tr> <td>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td> </tr> <tr> <td>2. [통합] 대한민국의 경쟁우위가 존중되는 사회통합</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td> </tr> <tr> <td>3. [인권] 차별방지외 문화다양성 존중</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자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td> </tr> <tr> <td>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td> </tr> <tr> <td>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td>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td> </tr> </tbody> </table>	정책목표	중점 과제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2. [통합] 대한민국의 경쟁우위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인권] 차별방지외 문화다양성 존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자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정책목표	중점 과제												
1.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수 활성화 기여 외래관광객 유치 2. 국가와 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3.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4.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2. [통합] 대한민국의 경쟁우위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립과 통합을 고려한 국적 및 영주제도 개선 2. 체계적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4. 이민배경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5.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인권] 차별방지외 문화다양성 존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자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 제도화 2.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4.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경관리 2. 질서 위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체류관리 3. 불법체류 단속의 패러다임 다변화 4.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5.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자 출신국,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난민정책 추진 3. 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확산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19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비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책 목표	중점 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 활용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 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 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민 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추진 과제	<table border="1"> <tr> <td>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td> </tr> <tr> <td>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td> </tr> <tr> <td>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td> </tr> <tr> <td>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td> </tr> <tr> <td>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td> </tr> </table>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0

🏠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 과제 (86)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7)	1-1.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	2-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2. 한국어능력 향상 2-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6)	3-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3-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3. 소외계층 지원 강화 3-4.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	4-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2. 직업교육훈련 지원 4-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4-4.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21)	5-1.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5-2.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5-3.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5. 다문화가족의 입역에 따른 병역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11)	6-1.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6-3.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1 기본방향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 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위·장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① 정책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① 정책추진체기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1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제2조)
-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지원 대상으로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제5조)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과 생활 그리고 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행사의 개최, 외국인·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그 밖의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제6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보호·지원, 응급 구호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 인권 보호 등이 있음(제7조).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2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생활 그리고 법률과 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문화와 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외국인주민가정 자녀 보육 사업,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교육사업(취학전 학습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포함), 중도입국 자녀의 사회 문화 적응지원,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범위(제7조)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제1조)
-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함(제2조)
- 지원의 범위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지원, 외국인주민의 의사소통 및 행정서비스 접근에 제고를 위한 다언어 서비스 제공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제7조)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3

IV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보육·교육 실태조사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 입국 전·후 보육 및 교육

IV.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보육·교육 실태조사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

- 목적: 외국인가정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현황과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의 현재 상황
- 대상: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 담당선생님, 어린이집 원장님, 외국인가정 부모
- 선정지역: 충청남도 내 외국인가정 밀집 지역으로 아산, 천안, 논산, 당진, 서산 지역
- 조사내용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교육지원

구분	내용
보육 (어린이집)	- 외국인가정 자녀의 체류자격 - 최초 등원 시 언어능력 정도 - 보육료 지원 - 언어교육 및 방과 후 보육 -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의 어려움
교육 (초등학교)	- 다문화정책학교 담당 교사의 요건 - 한국어강사 및 이중언어 강사 채용 - 한국어 교육시간 - 방과 후 교육지원

외국인가정 부모의 자녀의 언어 교육 지원

구분	내용
한국 입국 전	- 한국에 입국 결심 후 한국어교육 여부 - 자녀에 대한 한국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생각과 그에 대한 대처
한국 입국 후	- 부모의 한국어부족에 따른 자녀 한국어교육 부족 -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력 어려움 -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 - 한국에서 자녀 교육 시 어려운 점 - 자녀 양육에 대한 요구 지원 - 자녀 양육 시 가장 중요한 것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5

IV.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보육·교육 실태조사

면담대상

외국인가정 자녀 교육기관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적 특성	
	성별	구분
가 1	여	논산 지역 초등학교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담당
가 2	여	아산지역 초등학교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담당
가 3	남	천안지역 초등학교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 담당
나 1	여	민간어린이집 원장
나 2	여	민간어린이집 원장
나 3	여	민간어린이집 원장
나 4	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

외국인가정 자녀 부모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일반적 특성		
	국적	한국체류기간	자녀
다 1	카자흐스탄	6년	5명
다 2	카자흐스탄	6년	2명
다 3	카자흐스탄	13년	1명
다 4	몽골	7년	2명
다 5	키르기스스탄	6년	3명
다 6	우즈베키스탄	8년	2명
다 7	우즈베키스탄	5년	1명
다 8	우즈베키스탄	4년	1명
다 9	베트남	17년	2명
다 10	러시아	4년	1명
다 11	키르기스스탄	6년	3명
다 12	러시아	4년	1명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6

IV.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외국인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어린이집 원장 답변

아이를 두 명 데리고 왔어요. 인사를 한국어로 하지 않고 눈을 맞추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나봐요. 작은 소리지만 발음도 정확했어요.

어린이집 원장 답변

원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트이고 이제는 정말 잘해요. 외국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잘해요.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따라다니면서 인사도 잘하고 재잘재잘 대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원장 답변

엄마들이 더 잘 알아요. 아이를 두 명 데리고 가면 원비를 깎을 수 있다는 것ですよ.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나 봐요. 그리고 우리 원에 온 아이를 돌려보낼 수 없어요. 1명의 보육료를 감소하고 받아요.

어린이집 원장 답변

우리 어린이집은 재외동포가 많아요. 엄마, 아빠가 모두 일하러 가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비싸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국적법에 의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7

IV.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언어교육 및 방과후 보육

어린이집 원장 답변

아이들이 처음 원에 오는 경우에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득해서 이야기를 해요. 늦어지는 이유는 집에서 그 나라 말을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나오는 날이 늘면서 아이들 말도 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 답변

외국인가정 아이에게는 방과 후 교육비를 받지 않지만 다른 아이들과 같이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의 어려움

어린이집 원장 답변

처음 어린이집에 오는 경우 한국어가 되지 않아 아이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해 통역사를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언어가 되지 않으니 아이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힘들어요. 물론 이것은 언어교육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깐요.

어린이집 원장 답변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어를 교육할 한국어교사가 필요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와의 대화나 학습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아이와 밀착해서 아이만을 위한 한국어교사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28

외국인가정 자녀의 교육

다문화정책학교 담당교사 요건

교사 답변

저는 다른 학년을 신청했는데 교감선생님께서 한국어 학급을 맡는 것이 어떨지 연락이 와서 맡게 되었어요.

교사 답변

다문화학급의 담임을 맡는 경우 따로 교사의 자격은 없어요.

한국어 강사 및 이중언어 강사 채용

교사 답변

한국어강사는 한국어교원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데 이중언어 강사는 구하기 힘들어요. 특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강사는요.

다문화학생이 많은 경우 한국어학급을 더 늘려 한국어강사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 필요해요.

교사 답변

학생들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 한국어 강사 채용과 관련이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경우 한 학교에 3명, 4명 한국어 강사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한국 입국 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경험

한국 입국 전 한국어 교육 경험

학부모 답변

한국어 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오기 위한 서류를 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한국에 왔어요. 우리는 3달 정도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아이가 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준비하면서 한국에 왔어요.

학부모 답변

남편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애들이 있어서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남편은 고려인이어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저는 한국말 할 줄 몰랐어요.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어도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 입국 전 자녀가 한국에서 겪을 어려움 등에 대한 고민

학부모 답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후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아이가 한국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학부모 답변

걱정은 조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서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IV.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 한국 입국 후의 한국생활 적응 검토 및 부모지원

부모의 한국어부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학부모 답변

부모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도 언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러시아어로 이야기 하니깐요. 그래서 아이도 러시아말을 사용해요. 한국말 보다 러시아말을 더 잘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돼요.

학부모 답변

집에서 고향 말로 말해요. 애기도 함께 러시아말을 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한국말 부족해서 한국 애들처럼 잘 할 수 없으니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의 망설임

학부모 답변

어린이 집에 보내려고 하니깐 40만원도 넘어요. 우리는 애기들 둘인데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내가 봤어요.

학부모 답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남편과 저는 일을 했어요. 한국말도 모르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니깐 돈이 너무 많이 내요.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애기들과 지냈어요.

IV.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 한국 입국 후의 한국생활 적응 검토 및 부모지원

자녀 학교 진입 시 부모의 노력

학부모 답변

아이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이보다 더 몰라서 도와 줄 수 없어요.

학부모 답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애기 낳았을 때도 한국 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자존감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자존감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씩씩하게 지냈어요. 애기랑도 더 잘 놀아주려고 노력하고요.

한국에서 자녀교육 시 어려움

학부모 답변

우리는 애기들 5명이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데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어린이집 돈 너무 많이 내서 태권도나 피아노 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요.

학부모 답변

부모가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애들 어릴 때에 한국어 교육을 잘 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월세 내고 고향에 돈 보내고, 생활하다보니 애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못해줬어요.

IV.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실태

🏠 한국 입국 후의 한국생활 적응 검토 및 부모지원

한국에서 자녀 양육 시 필요 사항

학부모 답변

한국 아이들과 같은 지원을 받고 싶어요.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한국인 아이들이 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국에 와서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학부모 답변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할 거예요. 남편은 고려인이고 아이들도 고려인이예요.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학부모 답변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크니까 한국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아이가 한국에서 그런 생각 안하고 살면 좋겠어요.

학부모 답변

지금은 한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러시아 말 하고 밖에서는 한국말을 하면서 지내니까 한국어가 자꾸 부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한국어 더 많이 공부 하면 좋겠어요.

V

정책 제언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
외국인가정 자녀 언어 교육지원 확장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지원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 ① 외국인 관련 기관을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은 꾸준히 논의 되었으나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님
- ② 충청남도에 거주지 등록을 한 외국인은 충청남도 체류 거주 외국인으로 지역 주민임. 외국인도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어, 동등한 주민으로서의 지위가 있음.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필요
- ③ 영·유아 보육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기에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기관 한국어 강사 지원

- ① 한국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어린이집에 입소.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 어려움, 적응 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의 사용이 원활해지는 시기
- ②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첫 입문 한국어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한국어 습득에 있어 1대 1 학습은 매우 중요
- ③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 지원

가족센터와 연계 학습 프로그램 강화

- ①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 및 자녀교육과 상담, 통번역 지원과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각 시에 위탁 운영
- ② 자녀교육 사업으로 1:1 자녀학습 지원, 언어발달서비스, 중도입국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문교육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실시
- ③ 서비스 대상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북한이탈가족, 중도입국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
- ④ 충청남도의 1개 시군의 가족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외국인가정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의 연계 학습 프로그램의 확대 서비스 지원 필요
- ⑤ 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가정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과의 연계 학습 프로그램 확대로 외국인가정 자녀의 초기 언어 확장에 도움

외국인가정 자녀 언어 교육지원 확장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 강사 지원 확대

- ②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 ② 다문화강사 채용에 따른 교육 및 취업시간 확보
- ② 다문화학생 한국어 교육시간 확충

외국인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노력

- ② 다문화전담교사의 다문화역량제고
- ②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 확대
- ② 외국인가정자녀의 돌봄시스템 구축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재량권한을 의무조항으로 전환

- ②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나타난 외국인주민의 역할과 지원
- ② 외국이주민 지원에 대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전환
- ② 외국인가정 자녀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중심의 보육·교육 개선방안 검토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임형빈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2022.12

목차

I. 서론

II. 충남지역의 산업 특성과 향후 유망산업

III. 기술원 설립 현황 및 사례 조사

IV. 기술원 설립 방향

I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충남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의 둔화 추세

- 충남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성장 지역, 최근 성장률은 둔화 추세임
- 충남 지역총생산(GRDP)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2.5% 보다 낮은 2.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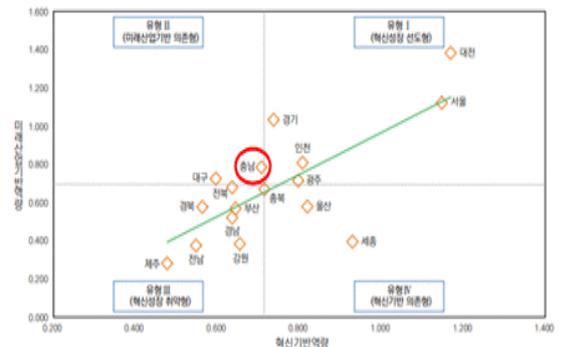
지역 인적자원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 필요

- 충남의 혁신성장 역량 수준 분석 결과
- 산업기반은 구축되어 있으나 **인적자본, 연구개발 분야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산업연구원, 2021 ; 김홍배, 2017)

[그림] 시도별 지역총생산(실질GRDP, 2015년기준)

지역	'10		'15		'20		연평균증가율 ('10~'20)
	금액 (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조원)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1,433	7	1,661	2.8	1,839	-0.8	2.50%
서울	333	3.5	370	2.9	414	-0.1	2.20%
부산	72	5.3	83	3	86	-2.9	1.90%
대구	44	6.5	52	3	54	-1.4	2.00%
인천	69	9.7	80	1.8	85	-2.9	2.10%
광주	30	12.1	35	2	39	-1	2.60%
대전	33	7	37	3	41	0.9	2.10%
울산	66	4.5	73	0.6	67	-7.2	0.10%
세종	-	-	9	7.3	12	5.1	2.30%
경기도	301	9.8	382	5.5	467	1.1	4.50%
강원도	35	4.3	41	2	45	-2	2.40%
충청북도	44	8.7	55	7	68	1.3	4.50%
충청남도	92	11.4	101	1.1	112	-0.5	2.00%
전라북도	42	5.1	47	1	50	0.1	1.80%
전라남도	68	9.9	69	0.7	75	-0.1	1.00%
경상북도	92	7.4	103	-2.6	101	-2.9	1.00%
경상남도	98	6.1	107	1.7	105	-4.1	0.60%
제주	12	1.8	17	7.4	18	-6.6	3.80%

[그림] 경제 추이 ('19.10~'22.12)



출처: 허문구·김윤수, 20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와 공간 차원에서 4차 산업을 위한 연구·교육 중심의 토지이용 복합화 구상 필요

- ④ 4차산업의 요소인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합화된 도시 체계 구축 필요
 - 뉴욕시 코넬대학 뉴욕응용과학 캠퍼스, 영국 텍 시티(Tech City) 사례
 - 연구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상업, 산업 기능의 복합 용도로 개발되어 기능의 효율성 향상 도모

4차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맞춤형 연구중심 기술원 설립 필요

- ④ 전국보다 상회하는 충남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율
 - 충남의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원 설립 필요함

충청남도의 혁신 성장과 산학 협력을 위한 연구중심의 기술원 설치 방안 모색

- ④ 첫째, 기술원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선정
- ④ 둘째, 기 기술원 설립 현황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복합화된 도시공간 이용 사례 조사
- ④ 셋째, 지역에 기반한 과학기술 중심의 기술원 설립을 위한 방향 제시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02

II

충남의 산업 특성과 향후 유망 산업

충남의 산업 특성 분석
충남 전략산업 선정

II. 충남의 산업 특성과 향후 유망산업

1. 충남의 산업 특성 분석

주요 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율

충남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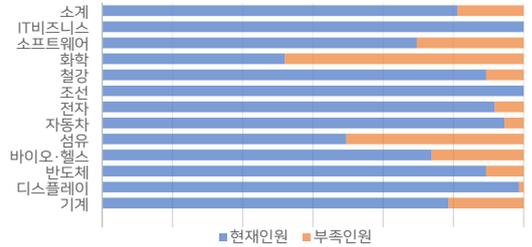
- 고졸 인력 67.6%의 부족률, 석·박사의 수요와 부족인력은 거의 없음
- 분공장 중심의 지역 산업 특징으로 연구개발 분야 고급 인력 필요성이 낮은 것이 큰 원인임

<표> 충남 주요산업의 현원 및 부족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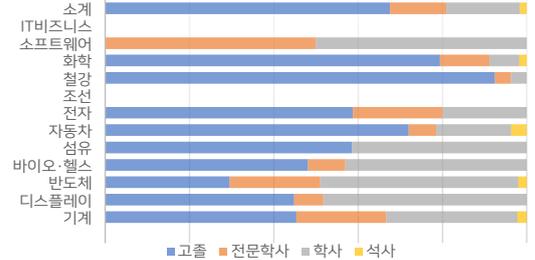
산업	현재인원	부족인원	부족률	학력별 부족인원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기계	10,294	225	2.1	102	48	70	5
디스플레이	21,642	29	0.1	13	2	14	0
반도체	13,642	148	1.1	44	32	70	3
바이오·헬스	2,970	80	2.6	38	7	34	0
섬유	997	53	5.2	31	0	22	0
자동차	19,505	107	0.5	77	7	19	4
전자	9,605	80	0.8	47	17	16	0
조선	35	-	-	-	-	-	-
철강	4,906	53	1.1	49	2	2	0
화학	15,278	1,114	6.8	884	130	79	20
소프트웨어	382	12	3	0	6	6	0
IT비즈니스	68	-	-	-	-	-	-
소계	99,306	1,902	1.9	1,286	253	333	3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보고서(2020년 기준)」.

[그림] 충남 주요산업의 현원



[그림] 충남 주요산업의 학력별 현원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04

II. 충남의 산업 특성과 향후 유망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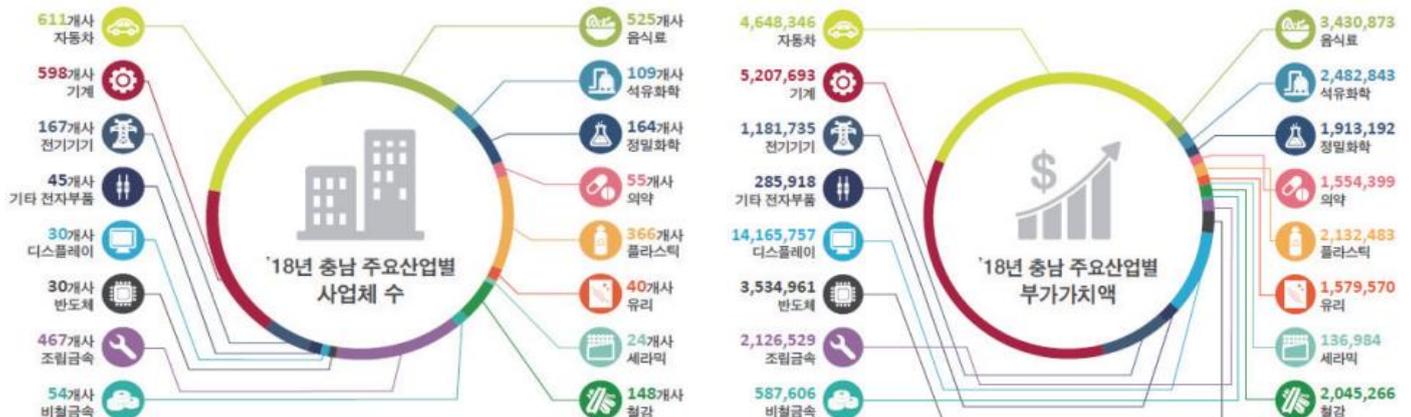
1. 충남의 산업 특성 분석

지역 산업 현황

충남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임

- 자동차 산업 611개사(17.8%), 기계 598개사(17.4%), 음식료 525개사(15.3%) 순임
- 디스플레이 산업 14.1조원(30.1%)이며, 차순위로 기계,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순임
- 1개 사업체수 대비 부가가치액은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산업, 유리, 의약 산업 순임

[그림] 충남의 지역 산업 현황



자료: 충청남도, 2020,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2021-2023)」.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05

II. 충남의 산업 특성과 향후 유망산업

2. 충남의 전략산업 선정

분석 과정

- ④ #Step 1. 산업별 원단위를 활용한 **산업별 규모 파악 및 그룹화**
 - 국토연구원(2015)의 산업별 1인당 생산액, 1인당 부지면적 자료를 군집분석하여 그룹화
- ④ #Step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룹별 산업의 총 산출액 변화 분석
 - #Step 1.에서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각 년도)의 산업별 총산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군집 분석한 결과를 그룹 내 산업들의 총산출액 추이 변화를 비교함
 -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의 지역별 총산출액(수입부문 제외)의 분류된 그룹별 산출액 비율을 시계열별로 비교함

기초 자료 분석 결과

- ④ 1인당 생산액 기준 분석 결과
 - 제조업 평균보다 그룹1 평균 대비 2.45 ~ 1.38배 높은 산업들로 이루어짐
 - 그룹2는 0.95~.066배, 그룹3은 그 이하의 비율을 나타냄
- ④ 1인당 부지면적 기준 분석 결과
 - 제조업 평균보다 그룹 1은 평균 대비 2.95~1.07배 높은 산업들로 이루어짐
 - 그룹2는 0.86~0.60배, 그룹3은 그 이하의 비율을 나타냄

II. 충남의 산업 특성과 향후 유망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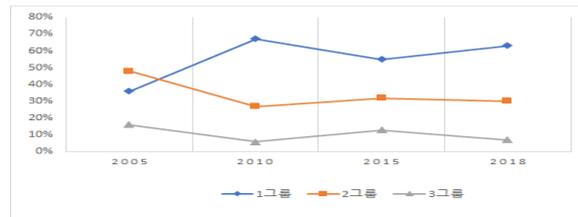
2. 충남의 전략산업 선정

충남 산업 구조 분석 결과

- ④ 2018년 기준 1인당 생산액이 높은 산업인 **1그룹**의 총산출액 비율이 전국보다 **15.4%** 높음
 - **1그룹**에 속한 산업의 총산출액 비율은 2005년 36.0%에서 2018년 63.1%로 크게 증가함

<표> 충남지역 1인당 생산액 기준 그룹별 총산출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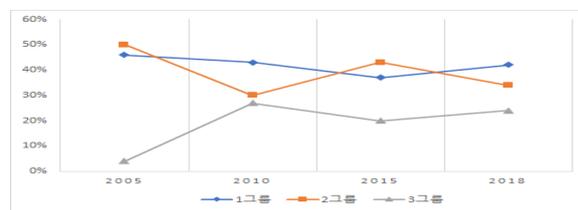
구분	2005		2010		2015		2018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1그룹	38.60%	36.00%	49.00%	67.50%	42.80%	54.80%	47.70%	63.10%
2그룹	46.60%	48.20%	42.10%	26.70%	43.20%	32.50%	42.10%	29.60%
3그룹	14.80%	15.90%	8.90%	5.80%	14.00%	12.70%	10.20%	7.3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④ 2018년 기준 1인당 부지면적이 작은 **3그룹**의 총산출액 비율은 전국보다 **4.3%** 높음

<표> 충남지역 1인당 부지면적 기준 그룹별 총산출액

구분	2005		2010		2015		2018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1그룹	39.80%	45.60%	33.10%	43.10%	30.10%	37.30%	33.70%	41.40%
2그룹	46.20%	50.10%	45.60%	30.40%	49.70%	42.70%	46.30%	34.30%
3그룹	14.10%	4.30%	21.30%	26.50%	20.20%	20.00%	20.00%	24.3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충남의 전략산업 선정

분석 결과 종합

④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은 **1인당 생산액이 높고, 1인당 부지면적이 작은** 산업임

- 충남의 산업구조는 전국과 비교하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율이 높음**
- 2018년 기준 1인당 부지면적은 작은 산업의 지역 비율(3그룹) : 전국 20%, 서울 66%, 경북 33% 경기 32%, 충남 24% 순
- 1인당 생산액이 크고(그룹1), 1인당 부지면적이 작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1인당 생산액이 크고(그룹1), 1인당 부지면적 중간(2그룹)인 자동차 트레일러 산업
- 1인당 생산액이 크고(1그룹), 1인당 부지면적이 큰(3그룹)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 제외 산업 임

<표> 충남의 전략산업 선정

구분	선정 전략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소에너지	미래형 스마트모빌리티	DNA (Data, Network, AI)	바이오 헬스케어
지역산업진흥계획	· 차세대 디스플레이		· 친환경 모빌리티 · 자율주행시스템 · 스마트휴먼인터페이스 (자율주행) · 친환경동력 · 지능형전자제어		· 스마트 휴먼바이오
DSC	· 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			· SW, AI	
충남4차산업혁명	· 차세대 디스플레이	· 친환경 에너지 · 수소에너지	· 스마트 모빌리티	· DNA · 미래형 보안시스템 · 스마트 팩토리 · 초실감형 시스템	· 맞춤형 바이오헬스
충남도청 제안		· 수소에너지 · 에너지산업 전환	· 자율주행 모빌리티 · 미래자동차 전환 · UAM산업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 미래의료 신산업 · 메디바이오 · 광물 바이오 · 그린바이오
관련 산업분류 (통계청)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음료제조업

자료 : 충남지역산업진흥계획, 2021 ;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2021-2023) ; 충남도청 선정 미래전략 사업
 (충청남도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함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08

III

기술원 설립 현황 및 사례 조사

시사점

1. 시사점

기술원 설립을 위한 방향 제시

① 법·제도적 측면

- 충남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의 개별법 제정이 필요함 → (가칭) ex) 충남과학기술원법
- 지역 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은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됨
- 전북기술원은 특화 산업인 미생물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 중임
-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한 분원 형태로 설치 가능

② 해외사례 측면

- 뉴욕시 응용과학 캠퍼스는 학생과 교수들의 주거공간, 스타트업 기업의 산업 공간이 복합용으로 건설됨
- 상업시설인 호텔과 컨벤션 등 기능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룸
- 펜테크 기업들이 입지한 영국의 테크 시티는 낙후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공간을 조성함
- 신생 창업기업들을 위한 복합 용도로 조성하고 프로그램과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함

공통점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을 유치하려는 노력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 용도로 공간설계
기업 창업을 촉진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 구축

충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중심 기술원 설립 방향 10

IV

기술원 설립 방향

기술원 설립 방향
설립과 운영 방식

1. 기술원 설립 방향

충남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R&D) 기능 수행과 기술의 파급

- ① 기존 산업생산 기반 중심 발전의 한계에 직면
 - 산업 기반 시설은 상위권이나 분공장 중심의 생산시설의 지역 산업 기반
 - 인적자원과 연구개발 측면에서 혁신 성장 기반 조성 필요
- ② 기존 산업 생산 기반과 연구개발 기능을 바탕으로 기술의 확산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파급되는 구조

지역의 전략산업 중심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

- ① 충남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반조성
 -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철강 등으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 구축
 - 기술원의 주요 연구분야(전략산업)은 디스플레이 & 반도체, 수소에너지, 미래형 스마트모빌리티, DNA(Data, Network, AI), 바이오 헬스케어 등임

지역 개발과 연계된 산업 정책 추진

- ① 충남의 도시 및 지역 개발 정책과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과 고도화
 - 수도권과 연결한 서북부권의 산업 기반을 내륙으로 파급, 기존 산업 기반에 첨단 산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산업 정책 필요
 -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중심지역인 아산만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민간 투자, 신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 필요

1. 기술원 설립 방향

비전

충남형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중심의 기술원 설립

목표

“지역 산업에 기반한 핵심 연구 기능 수행”



2. 기술원 설립과 운영 방식



기술원 설립시 입지는 **충남혁신도시, 베이벨리 메가시티**가 조성되는 아산만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선정되는 **충남 남부권** 등을 고려

충남혁신도시 충남 공동캠퍼스 조성과의 연계

- ④ 충남 공동캠퍼스 내에 기술원 설립시 교육과 연구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함
 - 혁신도시 내 주거와 상업시설 이용가능
 -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용도로 개발 가능

베이벨리 메가시티 조성지역인 아산만권에 설립하여 산업 기반과의 연계

- ④ 신 사업과 관련한 민간투자, 창업 측면에서 민간기업들과의 협력 도모
 -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 추진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남 남부권역에 조성 방안

- ④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의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역 선정
 - 주변 대도시인 대전·세종시의 교육·연구 기능 등과 협력 관계를 모색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감사합니다.

세션 7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대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방안 연구

해양치유자원 활용방안 연구

홍원표·이민정

김양중

김진영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자동차사업을 중심으로

홍원표 책임연구원 · 이민정 책임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2022.12

목차

I

서론

II

1부) 충남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III

2부) 충남 자동차산업의
신산업과
'지역간 일자리' 전략

IV

결론
및
정책제언

I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추진체계

I. 서론

📌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사회 패러다임 전환 본격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경제블록화
- 정책 여건 복잡화: 더성장, 인구감소, 소득양극화 등
- 정부정책대응 중심 신산업육성전략은 전국적 동일화 현상 부추겨
- 이는 산업 및 일자리 구조 관련 체계적, 객관적 데이터 및 분석 빈약에서 기인



연구 목표

-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패러다임 전환 전략 도출을 통해 충남의 정책수준 끌어올리고자 함
- 미래신산업군 연계망에서 충남의 지위와 전략적 육성 방향 도출
- 지역 간 상생 일자리 2.0 모델 발굴



연구방법 및 범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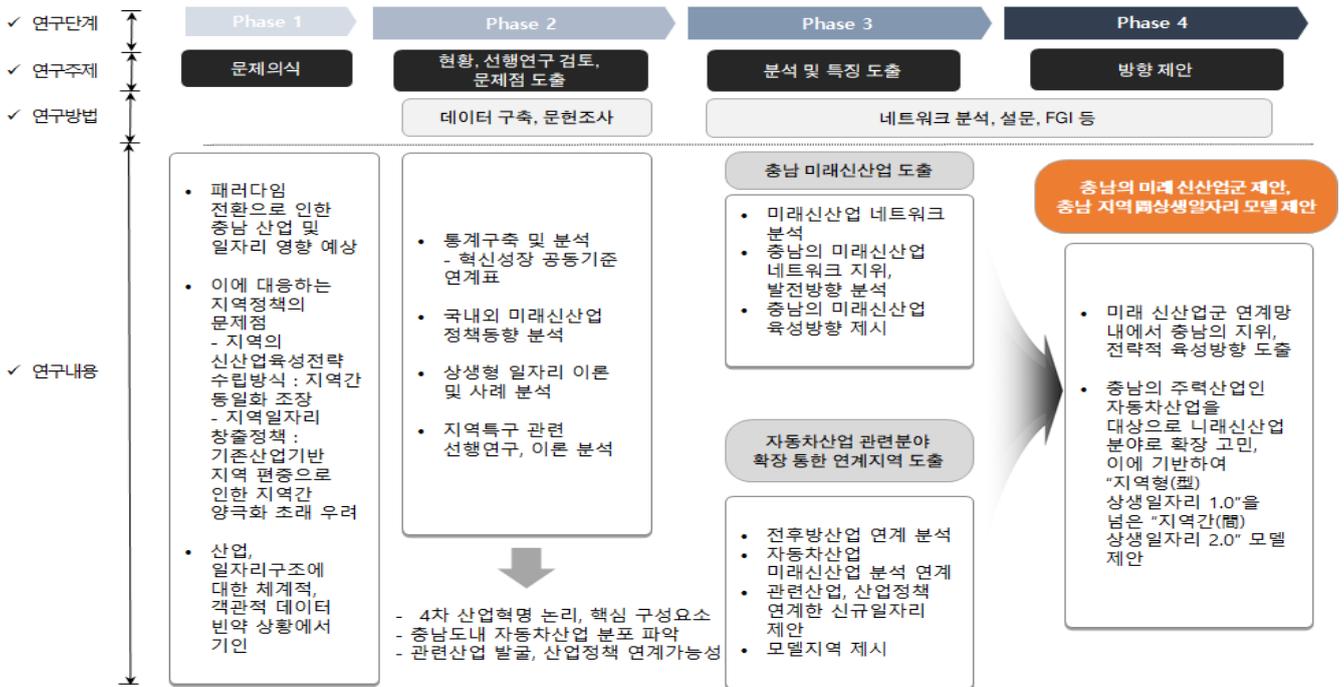
- 주제: 충남 미래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 방법: 문헌연구, 비정형자료 네트워크 분석
- 내용:
 - ✓ 4차산업혁명논리구조
 - ✓ 미래신산업네트워크분석
 - ✓ 충남 지위 및 발전방향분석
 - ✓ 충남 미래신산업 육성전략방향



연구방법 및 범위(2부)

- 주제: 충남형 지역 간 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
- 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FGI 등
- 내용:
 -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고용동향 및 변동원인 분석
 -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산업구조 및 생태계 분석
 - ✓ 충남 고용여건과 미래차 대응 실태 분석
 -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지역 간 상생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추진 체계



II

충남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 계층군집 분석
- K-means군집분석
- 충남 미래신산업 육성전략
- 미래차산업 육성전략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의 충남 미래신산업 네트워크 분석은 몇가지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데이터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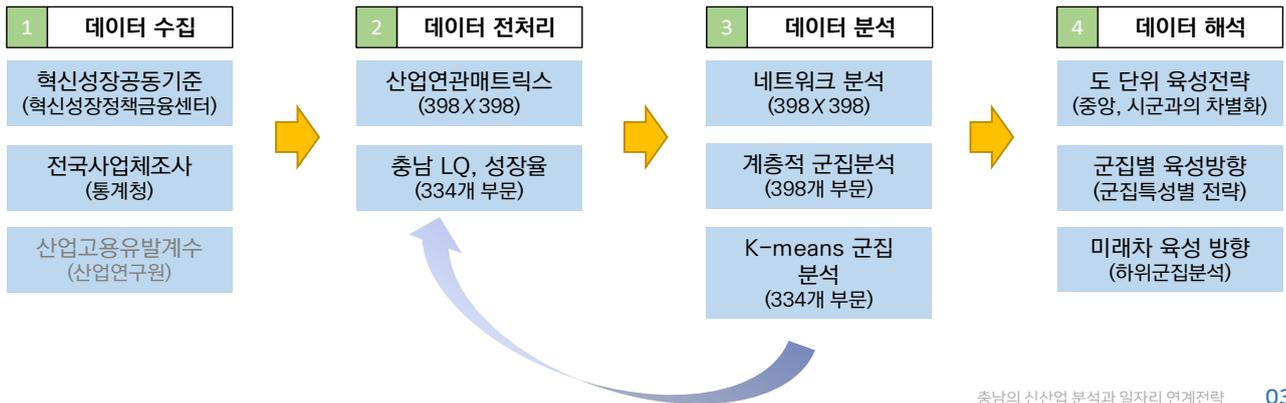
미래 성장 품목과 산업부문의 대응이 갖는 한계(혁신성장공동기준연계표)

신산업의
특징

산업 초기에서 주로 대량생산 前단계, 통계에 잡히기 어려움(제품생명주기론)

충남의 특징

주로 대량생산시설 입지 지역, 양산전단계에서는 통계에 안잡혀(공간분업론)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03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주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계층군집분석, k-means군집분석을 적용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연결중심성을 중심으로 분석

$$Degree\ Centrality = \frac{Degree\ Centrality\ of\ Node\ I}{\sum_{k=1}^n Degree\ Centrality\ of\ Node\ k} \quad (\because Node\ I : \text{특정 노드})$$

계층군집
분석

Ward 연결법 사용

거리함수 $D(x,y)=1/[C(x,y)+1]$

$$ESS = \sum_{k=1}^K \sum_{x_i \in C_k} \sum_{j=1}^n (x_{ij} - \bar{x}_{kj})^2$$

* ESS : error sum of squares
** k : number of clusters (1 ~ K)
x_i : elements of cluster C_k
j : number of variables (1 ~ n)

k-means
군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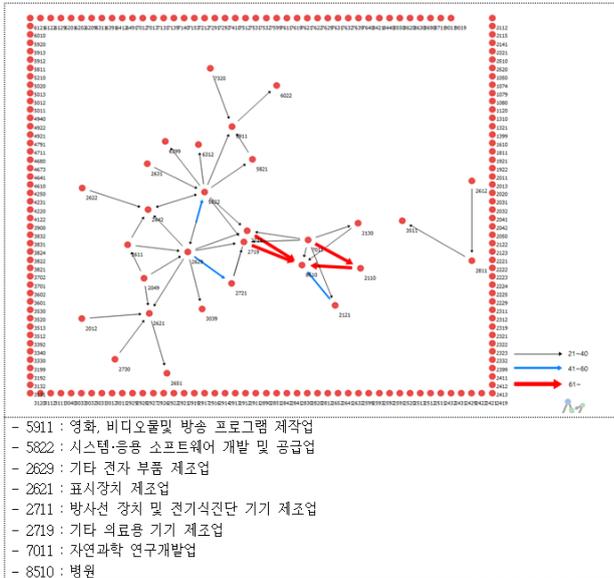
- ① 데이터셋에서 K 개의 centroids를 임의로 지정
- ② 각 데이터들을 가장 가까운 centroids가 속한 그룹에 할당
- ③ 2번 과정에서 할당된 결과를 바탕으로 centroids를 새롭게 지정
- ④ 2. ~ 3번 과정을 centroids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까지 반복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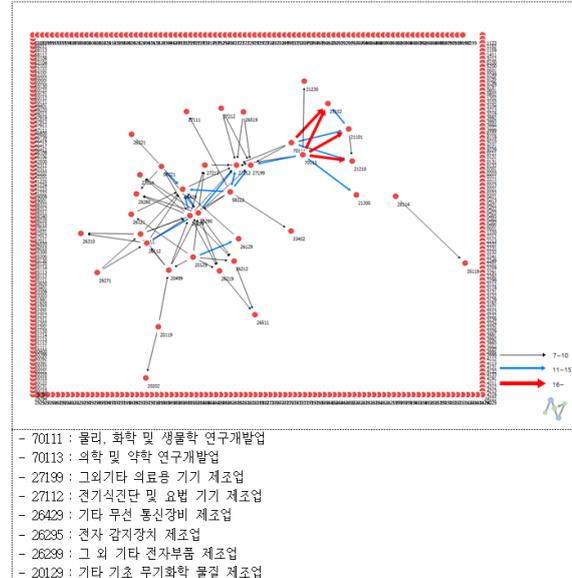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결과(산업세분류 기준)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결과(산업세세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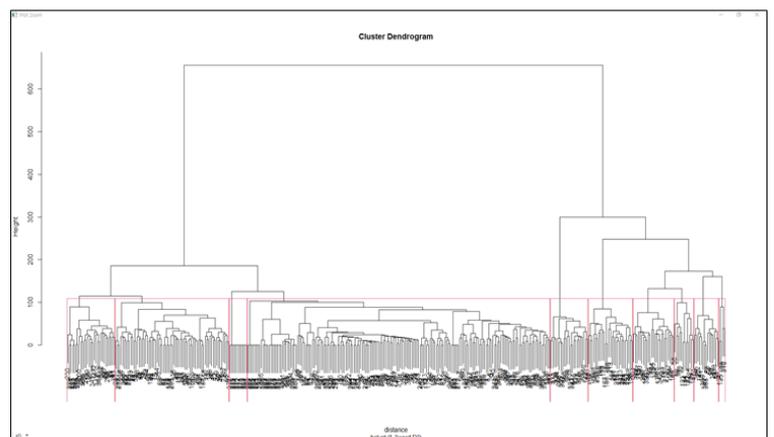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계층군집분석 결과

미래신산업 계층군집분석 결과

군집	개수	군집명	중심성 평균	중심성 표준편차	최대치	최대치 부문
1	180	-	0.016	0.020	0.126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107	-	0.004	0.006	0.025	화학품 제조업
3	15	동물의학산업군	0.112	0.064	0.218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4	20	비철금속산업군	0.032	0.019	0.072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5	4	화학소재산업군	0.171	0.043	0.23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6	18	전자부품산업군	0.098	0.073	0.175	비메모리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7	29	통신부품산업군	0.034	0.040	0.165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8	4	SW산업군	0.281	0.126	0.398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9	9	디지털콘텐츠산업군	0.005	0.003	0.009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10	12	전기부품산업군	0.074	0.039	0.162	축전기 제조업

미래신산업 계층군집분석 결과(덴드로그램)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k-means군집분석 결과

- K=2인 경우와 k=4인 경우 모두 고려
- 충남의 점유율, 충남의 성장율, 파급력 등 3개 차원으로 k-means분석 실시
- 점유율은 2019년 기준 충남의 LQ, 성장율은 2013-2019년 기간 충남의 종사자수 기준 성장율, 파급력은 연결중심성
- 분석결과 소수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31개 도출:
K=2인 경우 군집1에 속하는 19개, k=4인 경우 군집1에 속하는 16개, 군집3에 속하는 12개, 군집4에 속하는 2개
- k=4인 경우를 기준으로 군집1은 점유율이 높은 특징, 군집3은 파급력이 높은 특징, 군집4는 성장율이 높은 특징 보유

군집 개수	군집 구분	k=2		k=4			
		군집1	군집2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에 속한 산업부문 개수	19	316	16	305	12	2
	점유율(LQ)	1.426	-0.066	3.275	0.184	0.229	0.419
	성장율	1.503	-0.091	0.315	-0.091	-0.005	11.370
	파급력	3.005	-0.181	0.141	-0.184	4.063	2.501
	해당 부문 명칭						
KSC	인삼식품 제조업		...	0	...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0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0		0			
20119	석탄화학계 화학물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0				0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0		0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0				0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0					0
21101	의약품 화학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0				0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0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0				0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0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0		
24112	제강업				0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0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0				0	
26211	역경 표시장치 제조업				0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0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0				0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치 제조업	0				0	
28202	축전지 제조업	0				0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0			0		
28909	그 외 기타 전기전자 제조업	0				0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0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0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0				0	
30331	자동차용 부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0		
35113	회력 발전업	0		0			
35114	태양력 발전업	0				0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0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0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0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0					0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07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충남 미래신산업 분석 방법

주요
분석방법

연결중심성과 LQ를 결합하여 분석 수행

파급력 정의

미래신산업 네트워크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연결중심성, 지표는 내부 연결수

선도성 정의

해당산업부문에서 충남의 입지상(2019년 단년도 종사자수 기준)

육성 전략
방향

중핵산업부문이 존재하는가, 내부순환구조가 존재하는가, 연계 사슬 확장

1 고려 범위 설정
계층군집분석



2 파급력 파악
연결 중심성
지표: 내부 연결수



3 선도성 파악
충남의 지위
지표:충남 입지상



4 육성 방향 제시
중핵산업부문 형성
생태계 강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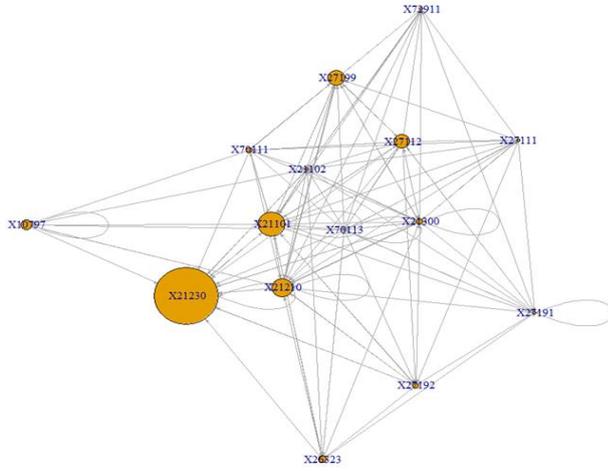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08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C3: 동물의학산업군: 중핵부문형성, 내부순환구조 형성, 21210 육성 긴요

육성전략

- 단기: 21210 육성
- 장기: 연결중심성 큰 70113, 70111, 22202 육성



[그림 1-20] C3 군집의 연계 관계

(표 1-6) C3군집 내부연결 매트릭스

startVend	10797	21101	21102	21210	21230	21300	26323	27111	27112	27191	27192	27199	70111	70113	72911
10797	1	0	1	1	1	0	0	0	0	0	0	0	0	0	0
21101	4	1	12	10	4	3	1	0	2	2	3	3	3	7	2
21102	0	1	0	3	3	1	0	0	0	0	0	0	0	0	2
21210	1	1	2	1	1	2	0	0	0	1	2	1	0	0	0
21230	0	3	3	3	1	1	0	0	0	1	0	0	0	0	0
21300	0	2	4	1	1	1	0	2	5	0	1	4	3	4	2
26323	0	1	2	1	1	1	0	0	0	0	2	0	0	0	2
27111	0	2	2	1	0	5	0	0	4	1	1	4	0	1	1
27112	0	3	4	3	1	3	0	0	1	1	1	3	3	3	2
27191	0	0	1	0	0	4	2	0	1	1	2	0	0	1	1
27192	0	1	0	1	1	3	0	0	0	0	0	0	0	0	0
27199	0	1	2	1	0	2	0	0	2	0	0	0	1	2	3
70111	1	15	16	12	5	6	0	1	8	0	0	8	0	8	1
70113	2	20	21	18	8	15	2	4	10	3	5	14	0	5	2
72911	0	1	2	1	0	0	0	0	0	0	0	0	0	0	0

상업부문	10797	21101	21102	21210	21230	21300	26323	27111	27112	27191	27192	27199	70111	70113	72911	합계
sum_in	9	52	72	57	27	47	5	7	32	9	18	35	10	33	16	429
sum_out	4	57	10	12	12	30	10	22	25	13	6	14	81	129	4	429
sum_all	13	109	82	69	39	77	15	29	57	22	24	49	91	162	20	858
LQ	0.91	2.18	0.28	1.70	5.10	0.59	0.67	0.28	1.26	0.33	0.51	1.38	0.54	0.11	0.33	

(표 1-7) C3그룹 산업별 고용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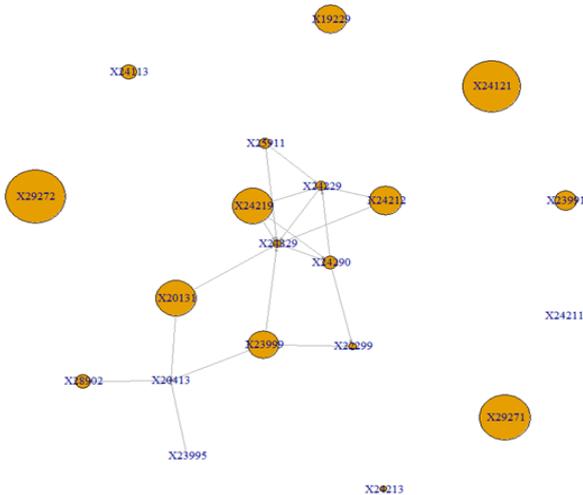
ksic10	산업명	충남증사자수			전국증사자수		
		2013	2019	고용증가율	2013	2019	고용증가율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318	478	0.50	1,569	1,814	0.16
21300	의약품용 및 기타 약학 관련제품 제조업	166	198	0.19	4,573	6,543	0.43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308	601	0.95	3,676	5,329	0.45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82	726	7.85	18,005	25,948	0.44
27191	차량용 기기 제조업	x	47	.	1,636	2,755	0.68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395	518	0.31	14,963	19,711	0.32
27199	그 외 기타 의약품 기기 제조업	1,042	1,157	0.11	11,205	16,293	0.45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36	358	0.52	3,720	7,647	1.06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64	44	-0.31	2,220	2,990	0.35
21210	원제 의약품 제조업	2,154	2,801	0.30	20,657	31,912	0.54
27112	진기시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347	466	0.34	5,594	7,140	0.28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83	90	0.08	2,340	2,599	0.11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49	136	1.78	11,011	22,907	1.08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x	52	.	2,594	3,612	0.39
72911	물리성분 검사 및 분석업	201	323	0.61	12,867	18,842	0.46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C4: 비철금속산업군: 중핵부문(24219) 형성, 내부순환구조 미형성

육성전략

- 장기: 24290-24219를 축으로 24329 또는 24229와 내부순환구조 형성



[그림 1-21] C4 군집의 연계 관계

(표 1-8) C4군집 내부연결 매트릭스

startVend	19229	20131	20413	22299	23991	23995	23999	24113	24121	24211	24212	24213	24219	24229	24290	24329	28911	28902	29271	29272	
1922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4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229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99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995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3999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241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1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2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2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2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21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0	0	0	0	0
2422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429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0	2	0	0	0	0
2432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91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902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927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927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um_in	0	0	4	2	0	0	0	0	0	0	0	0	0	0	4	1	4	0	2	1	0	0	20
sum_out	0	2	0	0	0	1	3	0	0	0	2	0	4	1	4	0	2	1	0	0	0	0	40
sum_all	0	2	4	2	0	1	3	0	0	2	2	0	4	5	8	2	1	0	0	0	0	0	20
LQ	2.45	3.12	0.22	0.61	1.73	0	2.38	1.34	4.4	0	2.5	0.59	3.11	0.79	1.12	0.69	0.91	1.19	3.01	4.59			

(표 1-9) C4그룹 산업별 고용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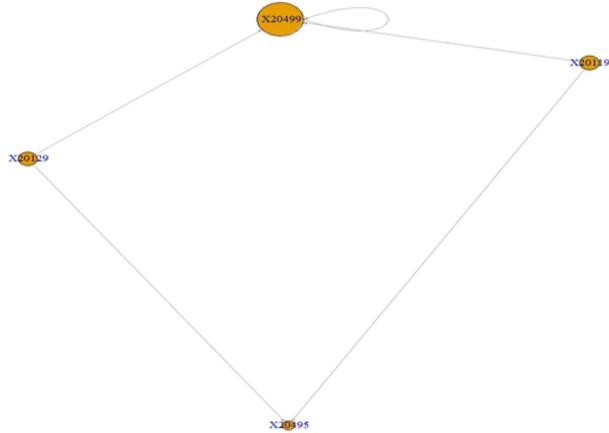
KSIC10	산업부문 명칭	전국증사자수			충남증사자수		
		2013년	2019년	고용증가율	2013년	2019년	고용증가율
19229	기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1,016	1,336	0.31	86	169	0.99
20131	무기반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484	1,193	-0.20	190	192	0.01
20413	인쇄잉크 및 화학용 물질 제조업	3,109	3,037	-0.02	37	34	-0.08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5,071	19,262	0.28	620	610	-0.02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3,647	4,433	0.22	279	395	0.42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435	477	-0.80	172		-1.00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원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429	3,151	1.21	41	388	8.46
24113	합금철 제조업	1,980	1,732	-0.13	232	111	-0.52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5,464	37,153	0.05	7,019	8,447	0.20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626	1,699	0.04	137		-1.00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3,850	4,619	0.20	434	596	0.37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703	3,581	1.10	0	110	1.10
2421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합금 제조업	2,384	1,421	-0.40	186	228	0.23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2,332	2,089	-0.10	84	85	0.01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257	2,705	0.20	66	156	1.36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313	1,118	-0.15	79	40	-0.49
26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097	2,524	0.20	45	118	1.62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1,896	2,033	0.07	80	125	0.56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32,676	48,894	0.50	6,078	9,883	0.63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9,918	14,144	0.43	2,432	3,352	0.38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C5: 화학소재산업군: 중핵부문(20499) 형성, 내부순환구조 형성

육성전략

- 단기: 20499 성장 촉진
- 장기: 20119, 20129 육성



[그림 1-22] C5 군집의 연계 관계

(표 1-10) C5군집 내부연결 매트릭스

start\end	20119	20129	20499	20499
20119	0	0	1	9
20129	0	0	2	8
20499	0	0	0	0
20499	0	0	0	1

sum_in	0	0	3	18	21
sum_out	10	10	0	1	21
sum_all	10	10	3	19	42
LQ_cri	1.44	1.38	0.97	3.37	

(표 1-11) C5군집 산업별 고용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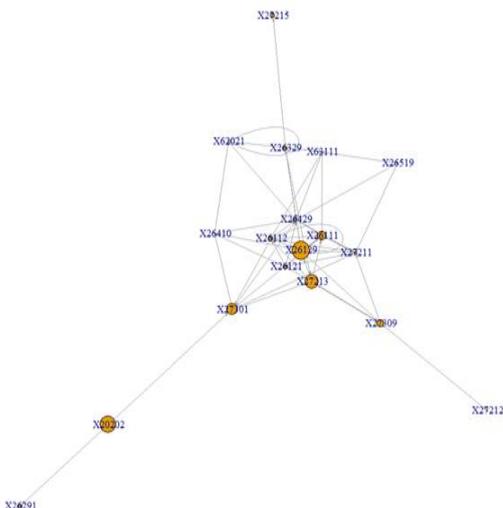
KSC10	산업부문 명칭	전국총사자수			충남총사자수		
		2013년	2019년	증감율	2013년	2019년	증감율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질 제조업	187	8,187	42.78	0	607	1.00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질 제조업	8,614	8,964	0.04	247	637	1.58
20499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17,458	1,061	-0.94	2502	53	-0.98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545	22,550	40.38	40	3,922	97.05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C6: 전자부품산업군: 중핵부문(26129) 형성, 내부순환구조(26129-26111-27213) 형성

육성전략

- 장기: 26429(조립가공) 입지 비현실적, 27301, 27309 육성 현실적



충남 미래신산업 육성 전략 요약

- 동물의약산업군, 전자부품산업군, 전기부품산업군은 파급력과 선도성 겸비 → 전후방 산업연계 강화
- 비철금속산업군, 화학소재산업군, SW산업군은 순환구조 미형성 → 내부순환구조 구축
* 비철금속산업군, 화학소재산업군은 특정 수요 폭발에 의한 선택적 육성 전략 유효: 20499사례
- 통신부품산업군, 디지털콘텐츠산업군 → 전략적 판단 필요

내부순환 구조에 따른 중핵산업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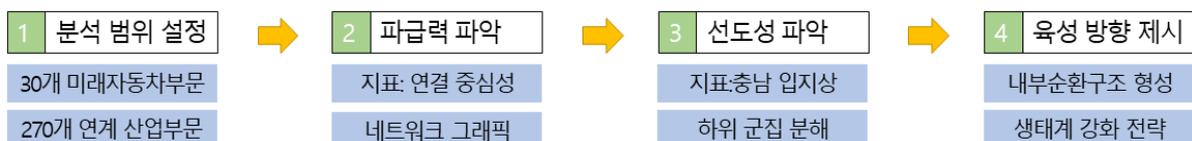
구분	중핵산업부문 형성	잠재적 중핵부문 형성	중핵산업부문 미형성
갯수	3	3	2
군집명	동물의약산업군 전자부품산업군 전기부품산업군	비철금속산업군 유기소재산업군 소프트웨어산업군	통신부품산업군 디지털콘텐츠산업군
특징	다수 중핵산업부문 있으며, 내부순환구조 형성	단일 중핵산업부문 있으나 내부순환구조 미형성	중핵산업부문 부재, 내부순환구조 미형성
육성 방향	전후방 산업연계 강화	내부순환구조 구축	전략적 판단 필요 (포기 또는 전략적 육성)

미래차산업에 대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미래차산업의 의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충남의 주력산업 특히 일자리 비중 큼;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

데이터 특징 혁신성장공동기준연계표(2018)에서 제시된 30개 미래산업부문 + 직접 연계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분석

분석 방법 중심성 분석과 하위군집 분해 위해 연계 점진소거법 적용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미래차산업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neighbor 포함 분석)

전반적으로 허브-스포크 구조와 네트워크 구조가 혼합된 구조

미래자동차산업 네트워크 분석결과(산업세세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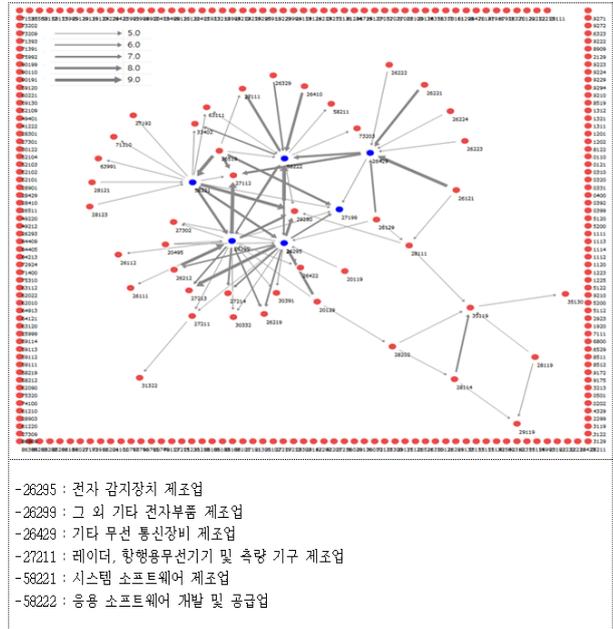
26295(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조업), 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이 높은 중심성 보임

네트워크 구조가 전반적으로 다수의 허브-스포크 구조가 허브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음

6개 산업부문이 각 커뮤니티에서 허브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다수의 산업부문과 연결되어 있음

26295, 26299의 경우 연계된 부문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있음

※ 26295, 26299의 매개중심성은 전체에서 1, 2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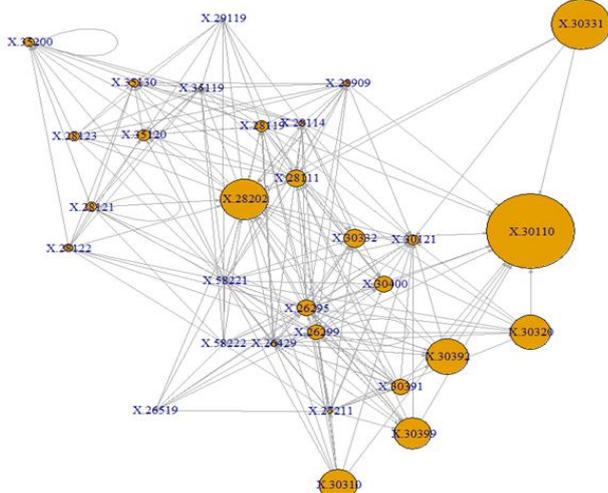


II. 충남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C3: 동물의학산업군: 중핵부문형성, 내부순환구조 형성

육성전략

- 단기: 21210 육성
- 장기: 연결중심성 큰 70113, 70111, 22202 육성



[그림 1-29] 미래차 군집의 연계 관계

(표 1-25) 자동차산업 내부연결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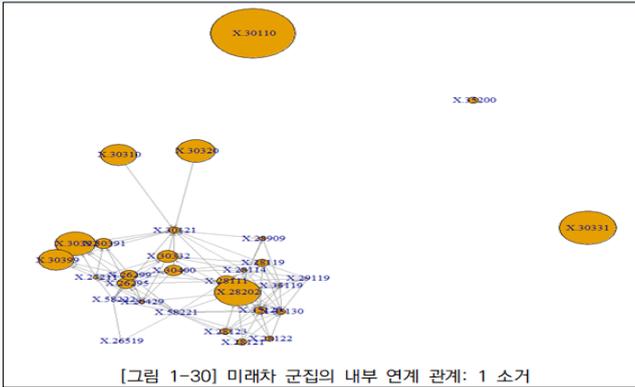
Industry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205	0	1	12	0	3	3	1	1	1	1	0	1	1	0	0	0	5	5	4	3	4	0	0	0	0	0	0	0	0	0	0	0			
20209	0	1	12	0	3	3	1	1	1	1	0	1	1	0	0	0	5	5	4	3	4	0	0	0	0	0	0	0	0	0	0	0	0		
20429	3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6295	1	1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721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3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114	0	0	1	0	0	4	0	0	0	0	1	5	1	3	0	0	2	0	0	0	2	7	2	2	1	2	0	0	0	0	0	0	0	0	0
28119	0	0	1	0	0	0	0	0	0	2	0	5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21	0	0	0	0	0	0	0	0	1	1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22	0	0	0	0	0	0	0	0	0	0	4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222	0	0	0	0	0	0	0	0	0	0	4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229	0	0	3	1	0	2	5	4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295	0	0	0	0	0	1	0	0	0	0	4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11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2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3	1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20	1	1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3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2	1	1	2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1	1	1	1	0	1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22	1	1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09	1	1	1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0	1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3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0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821	8	8	11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822	7	7	11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Industry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sum_r	26	26	62	1	30	26	8	7	3	0	31	7	16	13	30	0	0	0	0	19	14	12	10	19	37	32	10	75	30	987		
sum_c	71	71	33	19	15	15	33	22	18	19	34	19	0	0	10	4	12	10	10	11	11	2	1	1	1	1	1	1	1	1	1	1
sum	97	97	95	20	45	41	40	25	21	19	70	21	16	13	40	10	4	11	24	22	30	48	34	33	11	118	71	118	71	118	71	118
IQ_m	1.46	1.10	0.66	0.41	1.48	1.05	1.00	0.94	0.71	0.85	0.54	0.61	0.64	0.89	2.80	3.01	4.86	1.56	1.56	2.26	1.41	0.93	1.09	0.76	0.84	0.30	0.10	0.10	0.10	0.10	0.10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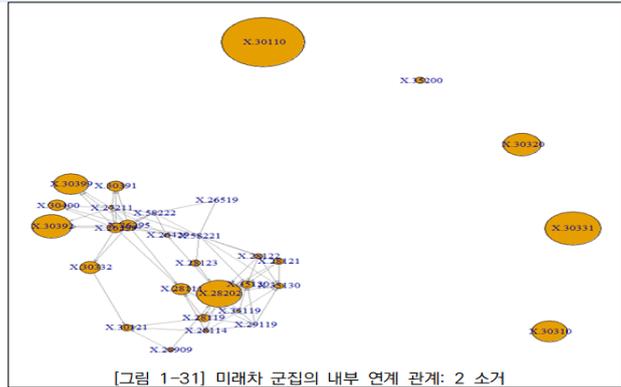
(표 1-26) 미래자동차산업군 그룹증가율

KSIIC10	산업부문 명칭	한국총시차사수			충남총시차사수		
		2013년	2019년	증가율	2013년	2019년	증가율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8,674	2,284	-0.61	1,425	548	-0.62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6,745	16,250	0.78	0	1,105	0.36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0,064	11,784	-0.41	532	342	-0.36
26519	배터리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3,791	3,034	0.05	41	41	-1.00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7,192	8,657	0.34	114	213	0.87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7,161	21,383	0.25	1,393	1,629	0.17
28114	디젤기, 차량장치 제조업	10,680	6,885	-0.34	941	718	-0.24
28119	기타 전기 차량장치 제조업	10,680	13,235	0.24	941	700	-0.26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31,498	15,773	-0.50	1,408	687	-0.51
28122	전기회로 감속장치 제조업	31,498	17,873	-0.43	1,408	659	-0.53
28123	배터리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31,541	38,227	0.21	1,171	1,073	-0.43
28202	속전지 제조업	11,769	26,074	1.22	5,347	4,762	-0.11
28809	그 외 기타 전기장치 제조업	5,298	6,785	0.28	111	214	0.93
28119	기타 전기 차량장치 제조업	1,044	1,291	0.18	240	240	1.00
303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856	1,100	0.29	368	368	1.00
30321	중용차 및 기타 차량용 자동차 제조업	76,735	78,117	0.02	3,177	3,565	0.13
30310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	44,435	48,140	0.08	3,803	7,002	0.8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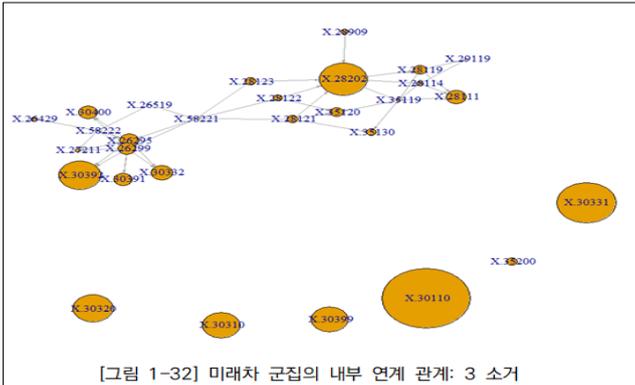
미래차산업군: 점진소거법으로 스마트화군집, 전동화군집, 부품 군집 등 하위군집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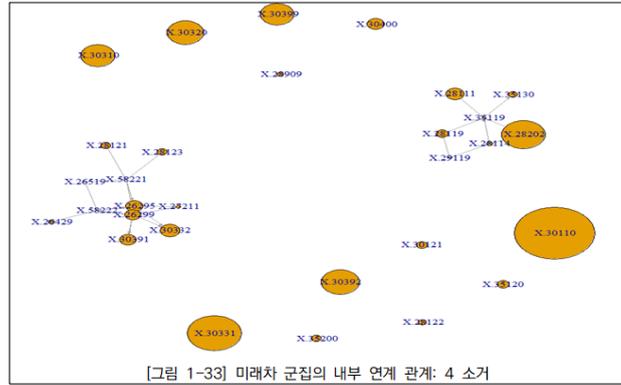
[그림 1-30] 미래차 군집의 내부 연계 관계: 1 소거



[그림 1-31] 미래차 군집의 내부 연계 관계: 2 소거



[그림 1-32] 미래차 군집의 내부 연계 관계: 3 소거



[그림 1-33] 미래차 군집의 내부 연계 관계: 4 소거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미래차산업군: 하위군집별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스마트화 하위군집 육성 전략

- 26295(전자감지장치제조업), 26299(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에서 LQ 1.0이상, SW산업부문 취약
- 충남 스마트카 육성 전략은 HW에서 기반해서 SW산업을 육성하는 현실적
- SW산업의 독자적 생태계 구축이 아니라 스마트카 생태계 구축전략이 필요

전동화 하위군집 육성 전략

- 28202(축전지제조업) 중심으로 28111(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28119(기타전기변환장치제조업)와 느슨한 내부순환구조 형성
- 당면 육성방향은 기 형성 내부순환구조를 강화할 것
- 충남은 28202(축전지제조업) 의 강점을 활용할 전략이 필요

기타 부품 하위군집 육성 전략

- 30110(자동차용엔진제조업), 30331(자동차용신동력전달장치제조업), 30320(자동차차체용신부품제조업), 30392(자동차용신동장장치제조업) 등으로 구성
- 전통 자동차부품산업과 연속성을 지니며 LQ도 높아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
- 패러다임 전환 시기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요충 하위군집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Ⅲ

충남의 자동차산업 신산업 분석과 지역간 일자리 전략

충남 자동차산업 실태와 현황
미래차산업 전후방네트워크 분석
자동차 생태계분석 및 신산업 육성방향 도출
지역간 일자리모델 구상

Ⅲ 충남 자동차산업 신산업 분석과 지역간 일자리 전략



충남 자동차산업은 도내 전산업 2위 규모, 전국 3위규모의 주력/전략산업 (20년 매출액기준)

자동차산업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기술이 집약된 구심체로 한국/충남의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
2020년 기준, 자동차산업 매출 205.7조원 (전산업 대비 3.1%)

충남 자동차산업

2020년 기준, 충남의 자동차산업 매출 25.9조원 (전국대비 12.6%, 전국 3위)

* 충남 전산업 중 2위 규모. 7.7% 비중 (1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 13.4%)

'20 기준 충남자동차산업 구조 (단위 : 백만원)

산업구분	충남	전국
전산업	339,018,273	6,710,918,882
제조업	206,481,906	1,816,488,8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89,453	205,678,665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제조업	7,682,972	90,864,09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408,261	4,401,237
자동차 부품제조업	17,882,034	110,059,122
자동차 재제조부품 제조업	16,186	354,214

지역별 입지계수

순위	지역	입지계수
1위	울산	6.59
2위	충남	2.85
3위	경북	1.99
4위	경남	1.84
5위	광주	1.65

충남 자동차산업 일자리는 부품업 중심, 영세화 경향

자동차산업 일자리

충남 자동차산업 종사자수는 44,125명 (전국대비 9.1%, 전국 3위)
일자리가 완성차보다 부품업에 집중

* 자동차 신제품 제조업에 87.6%, 부품제조업 전체로는 87.9% 차지

'20 기준 충남자동차산업 일자리현황 (단위 : 명, %)

산업구분	종사자수(비중)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제조업	4,027 (9.1)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93 (2.9)
자동차 신제품 제조업	38,657 (87.6)
자동차 재제조부품 제조업	148 (0.3)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모두 아산시 1위
 북부권 4개 지역에 자동차산업 업체 대다수 위치 (지역적 편중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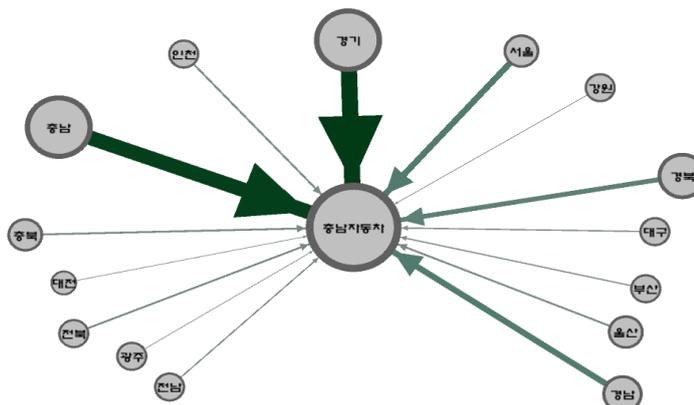
- 특히, 주력인 부품제조업 (신제품 부품 + 재제조 부품)이 영세화 경향

충남 자동차산업의 전후방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경기도 영향력이 가장 큼

충남 자동차산업 전후방 네트워크 구조 분석

충남 자동차산업(완성차 기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기도 → 충남 → 경남 순

- 도내 자동차산업의 전후방산업이 경기도에 더 많이 분포 (경기도 53개 산업, 충남 37개 산업)
 → **도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강화 필요**
- 제조업 : 금속주물, 금형 및 주형, 반도체, 비철금속 1차제품, 영상 및 음향기기,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등
 서비스업 : IT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정보서비스, 자원재활용서비스 등



🏠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설문을 통한 생태계 분석 및 신산업 육성방향 도출

설문조사

조사평균

- 2022년 조사기준 충남 자동차부품업체의 평균수치
 - 총매출액 268.1억원
 - 영업이익률 1.4%
 - 근로자수 64.9명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를 통해 7년간 충남 자동차산업생태계 변화 도출

응답자 수 :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입지한 321개사
조사기간 : 2022년 6월 22일~7월 10일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지역	천안	25.5%	주요 생산 품목	동력발생장치	13.1%
	아산	44.5%		동력전달장치	9.3%
	서산	19.9%		제동장치	13.1%
	당진	10.0%		현가장치	8.4%
업종	자동차 엔진용 부품제조업	11.5%		조향장치	1.9%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업	31.5%		의장(내외장)	7.2%
	자동차 새시 부품제조업	19.0%		전장(전기장치)	24.0%
	내외장 부품제조업	16.5%		공조장치	14.6%
	전장 부품제조업	13.7%		기타	8.4%
	공조 부품제조업	7.8%		근로자수 (평균)	64.9명
	(평균)	1.4%	연구직	5.0명	
영업 이익	-10%미만	2.5%	생산직	48.7명	
	-10~0%미만	23.1%	사무직	11.3명	
	0~1%미만	1.0%	연매출액 (평균)	268.1억	
	1~3%미만	28.7%		50억 미만	42.4%
	3~5%미만	15.9%		50~100억미만	15.3%
	5~10%미만	15.6%		100~500억미만	29.9%
	10%이상~	4.4%		500~1000억미만	5.0%
		1000억 이상~		7.5%	

🏠 도급구조 분석 통해 충남자동차생태계 영세화, 종속화, 생산품질 저하우려 등 도출

도급구조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계
2022년	9.7	35.8	54.5	100.0%
2015년	19.6	50.3	30.1	100.0%

- 2021년 충남에는 3차벤더 비율 가장 높음
- 2015년과 비교시 1-2차 벤더 감소, 3차 증가

도급관계

구분	2015년	2022년
상호 독립적 구조	2.8%	1.9%
상호 보완적 구조	-	10.0%
수평 협력적 구조	16.0%	32.7%
지배 종속적 구조	16.6%	55.5%
경쟁-대립적 구조	64.7%	0.0%

납품가격 결정

구분	2015	2022
자체 결정	-	5.6
발주처에서 제시한 가격	11.4	42.4
발주처와 협의 결정	80.1	49.5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	8.6	2.5
계	100.0%	100.0%

발주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 축박한 납품기일 (25.2%) → 낮은 납품단가(21.7%) → 대금결제 장기화(21.3%) 順
- 2015년 비교시, 계약기간/납품기일 단기화, 납품커미션 요구, 기술자료 부당요구 등 증가

* 품질저하로 연결-상생요소 포함을 통한 정책개입 등 고려 필요

III 충남 자동차산업 신산업 분석과 지역간 일자리 전략

▶ 납품-조달 모두 충남 비율 감소, 수출 비율 증가(특히 동남아 비율 증가)



납품 구조

-납품 = 우리회사에서 상위벤더로
-충남기업이 충남(49.1%) → 경기(17.3%) → 울산(9.9%)
으로 납품
-총납품액 규모 23.0조원 추정
-2015년대비, **충남/경기비율하락, 울산증가**
-시군간 납품은 아산(37.2%) → 천안(20.8%) →
당진(20.4%) → 서산(15.4%)으로 납품
-2015년대비, **아산/보령으로 납품감소**



조달 구조

-조달 = 하위벤더가 우리회사에게
-충남기업이 충남내(48.6%) → 경기(19.8%) → 울산(7.1%)
에서 조달받음
-총조달액 규모 12.6조원 추정
-2015년대비, **충청권 비율감소, 울산경남증가**
-시군간 조달은 아산(40.6%) 천안(21.7%) 당진(21.6%)
서산(13.7%)에서 조달
-2015년대비, **아산/당진/홍성증가**



판매 구조

-내수 : 수출 = 90 : 10
-수출국가는 북미(29.9%) 중국(24.5%) 동남아(19.4%)
-2015년대비 **수출비율증가, 중국비율감소 동남아비율증가**
-완성차 납품비중
현대(57.3%) 기아(31.1%)
-2015년대비, **현대/기아비율증가**



기타

-**집적이 필요하다 93%**
조향, 동력발생, 전기장치업종에서 매우필요 응답 고
-부품시장 다양화
Non-OEM 부품제도 인지도 93.8%
자체브랜드 보유 3.3%
보유 희망 42.7% (동력발생, 바디, 조향장치업종 고)
*부품산업다양화를 위한 정부지원, 상생협력의필요성

III 충남 자동차산업 신산업 분석과 지역간 일자리 전략

▶ 미래차 패러다임 대응여부는 비슷, 대응을 위해 조직화 필요성, 기반구축 요청



미래차 패러다임 대응

필요인력 분야	비율(%)	진출희망 분야	비율(%)
모터	11.1	전기차 부품	25.9
배터리	11.4	수소차 부품	10.4
센서	21.0	자율차 부품	26.8
신소재	17.2	친환경차 공용부품	22.4
수소연료전지	2.5	자율차 공용부품	14.5
수소연료탱크	6.1	합계	100.0
제어기	19.3		
SW (AI, 빅데이터 포함)	7.1		
스마트공장	4.3		
합계	100.0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지원

현재 필요한 지원	비율(%)	정부/충남도 요청 지원	비율(%)
자금지원	21.9	사업자금 지원	24.0
정보제공	10.0	R&D 지원	20.2
인력 및 교육지원	14.2	기반구축	27.7
기술지원	18.7	기술인력 확보	16.5
마케팅 지원	3.9	판로개척	5.0
생산관리/ 정보화 지원	10.5	정보 제공	5.6
장비지원	13.9	구조조정	0.9
시제품 제작	6.6	합계	100.0
지원 불필요	0.2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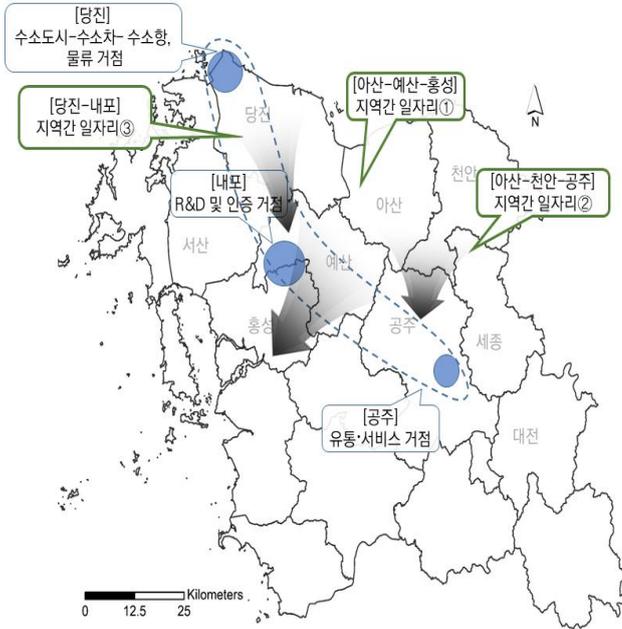
-미래차 대응에 대해 대응 못함 (40%) 보통 (20%)
대응중 (40%)
-대응못하는 이유 : 단독으로 자신없음(23.9%) →
자금/인력부족(22.0%) → 현재 발주량 충분(15.5%)

-우리회사에 필요한 지원 : 자금/기술처럼 활용 자율성 있는
지원책
-정부/충남도 요청 지원 : 역량 제고할 기반구축

*충남도 육성 요청분야는 미래차관련보다, 고유가/탄소중립 대응가능한 기술분야

미래차부품, 인증부품 관련서비스 로 3개 지역간 일자리모델 구상

지역간 일자리 모델



01

아산-예산-홍성 일자리

- 충남 자동차부품업체 최대집적지 아산의 영향력 약화
- 예산, 홍성의 영향력 강화
- 역량 높아지는 지역과 상생도모



02

천안-아산-공주 일자리

- 공주의 지리적 강점 (대도시 시장 연결) 활용
- 천안아산의 제조, 공주의 Non-OEM 부품 유통서비스 연계



03

내포-당진 일자리

- Non-OEM 부품 인증-수출/물류
- 내포 대체부품 인증센터 본격가동('24~)으로 R&D, 인증업무 발생
- 당진 수소도시 지정('22.10)로 수소차 R&D, 수요증가 기대
- 동남아 수출 대응할 서해안권 물류단지 조성 등



IV

결론 및 정책함의

결론

정책적 함의: 연구방법 측면

정책적 함의: 연구결과 측면

연구요약

결론

1부 혁신성장공동기준의 신성장산업부문 전후방연계+사업체조사→충남미래신산업 선정, 육성방향 모색

- 동물의약품, 전자부품산업, 전기부품산업 = 미래신산업 육성기반 有, 내부순환체계 형성
⇒ 연관산업부문의 신규추가
- 통신부품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 지역기반 無 ⇒ 자원투입 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비철금속, 화학물질산업 = 충남 LQ 비중이 일정정도 확보 ⇒ 특정산업부문 중심의 육성으로 접근
- 미래차산업부문 중 기타자동차부품 하위군집은 일자리 연속성/안정성 확보 위해 중요 ⇒ 정책적 지원
스마트화 하위군집은 일정한 발전기반 보유 ⇒ 내부순환구조 확보
전동화 하위군집 중 28202(축전기제조업) ⇒ 내부순환구조 확보, 육성
충남미래차 전체생태계발전 ⇒ 58221(시스템 SW 개발 및 공급업) 을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강화

2부 전후방네트워크분석+설문분석→ 現생태계보완 업종, 업체요구방향, 지역간 일자리모델 도출

- 기존산업강화업종(제조업 24종, 서비스업 13종) 및 신규육성업종(제조업 13종, 서비스업 7종) 도출
-기존산업강화 : 제조업(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전기장비, 금속단조야금및압형 등
서비스업(도로운송서비스, 기타과학기술및전문서비스, 법무및경영지원서비스 등)
-신규육성 : 제조업(영상및음향기기, 금형및주형,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반도체 등)
서비스업(보관및창고서비스, 자원재활용서비스 IT서비스 등)
- 설문 통해 시군별 납품/조달비중 변화, 집적 필요성, 사업다각화(Non-OEM 부품) 및 수출 지원 필요성 도출
- 연관산업, 연관지역을 연결한 "지역간 일자리"
-아산-예산-홍성 : 아산시 생태계구조가 영세/중소기업 중심으로 하향화. 역량높아지는 지역과 연계/상생
-당진-내포 : 당진 수소도시 지정으로 수소차관련 R&D 수요, 수출물류기능 + 내포 대체부품인증센터 인증업무
-천안-아산-공주 : 대도시시장 연접한 공주에 Non-OEM 유통/서비스기능 + 천안아산 제조/서비스업 연계

정책적 함의 : 연구방법 측면

1 데이터간 융합을 통해 더 풍부한 내용 도출

- 지금까지 혁신성장공동기준의 산업부문간 연계데이터 활용 미흡.
충남산업부문 데이터와 연계하여 산업연계 데이터 잠재력 드러냄

2 산업연계 데이터 활용이 더 객관적, 설득력 有

- 대개 정성적으로 접근해온 미래신산업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객관적 근거 제공

3 비정형데이터/반정형데이터 분석에 네트워크분석이 유용

-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가시화하여 전체 데이터구조 이해에 기여

4 전후방네트워크 분석으로 생태계보완 업종 도출

- 경기도-충남 생태계 비교를 통해 단기~중기 육성산업 제안

5 2015/2022 설문비교 통한 충남생태계 분석

- 코로나19 충격을 사이에 두고 2개 시점 비교. 충남(충청권) 생태계 변화, 역량축소 도출.
충청권 메가시티의 미래차 산업 논의에 시사 有

6 지역간 일자리로서 발전된 상생일자리 제시

- 분절된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형 일자리'를 넘어, 연관된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간 일자리' 제안
충남 "남북문제" 완화, 일자리벨트 확장에 기여

정책적 함의 : 연구결과 측면

- 1 미래신산업 중 핵심산업부문 군집 제시하여 산업생태계 관점 도입
- 2 동물의약산업의 신성장산업으로 성장가능성 발견
- 3 전기산업부문과 전자산업부문에서 충남이 강한 이유 제시
- 4 미래자동차산업부문이 스마트화 하위군집, 전동화 하위군집, 기타 자동차부품 하위군집으로 구성됨을 확인
- 5 경기도 연접효과 누리는 업종을 정확히 도출하여 충남의 보완업종 제안
- 6 2015~2022 7년간 충남 자동차생태계 변화 규명
- 7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구.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발전가능성 제시

연구요약

연구목적

- 미래신산업군 연계망에서 충남의 지위 및 전략적 육성방향 도출
- 충남 자동차산업의 신산업 발굴 및 '지역형 일자리'를 넘어 '지역간 일자리' 모델 발굴

연구내용

- 혁신성장공동기준+사업체조사 → 미래신산업 3개군 도출 및 육성기반 보유 확인
충남 자동차산업 미래신산업으로 스마트화, 전동화, 기타 자동차부품의 하위군집 구성 확인
- 전후방네트워크 분석 → 기존산업강화업종(제조업 24종, 서비스업 13종) 및 신규육성업종(제조업 13종, 서비스업 7종) 도출
- 설문 → 생태계 변화, 기업수요 도출 및 이를 통한 지역간 일자리 3개 모델 제안

정책제안

- 충남의 미래신산업 = 동물의약산업, 전자부품산업, 전기부품산업 을 데이터기반 으로 객관성, 설득력 갖추어 도출
- 일자리기반 보유지역과 연계/협력/보완을 통한 '지역간 상생일자리' 3개 모델(아산-예산-홍성형, 당진-내포형, 천안-아산-공주형) 제안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충남의 신산업 분석과 일자리 연계전략

대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방안 연구

김양중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대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방안 연구

2022.12

목차

I

서론

II

현황 및
문제점

III

실태조사

IV

국가산단
전환논리

V

국가산단
전환방안

서론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은 여수석유화학단지, 울산석유화학단지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그동안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을 견인해온 핵심지역임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 입지 현황〉



- ▶ 그러나 전남 여수시와 울산광역시에서는 석유화학단지를 국가산단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개별입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 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반면 여수석유화학단지와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와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입지하고 있어 국가산단의 지위와 그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충남 서산시	전남 여수시	울산 광역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울산석유화학단지 
(개별입지+일반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미포국가산업단지)

-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공장이 가동된 지 30년이 넘어 대부분의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유출 및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또한, 국가산단에 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국가적인 인프라 조성 및 안전관리 대책도 미흡한 실정
- ▶ 이에 대산석유화학단지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산단 전환을 위한 근거 및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논리와 방법을 찾는 연구는 전무함
- ▶ 이는 지역의 현안 문제이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야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를 찾기 어려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그동안 대산석유화학단지관련 연구는 대부분 주변 대기질 조사, 주민환경영향 조사,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계 등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요 초점이 있었음
- ▶ 그러나 본 연구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그 대안 중 하나가 국가산단으로의 전환과 지원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
 -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
- 시간적 범위
 - 2022년 기준(구득 가능한 최신 자료 활용)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 및 인근 지역			
시간적 범위	2022년 기준			
내용적 범위	①	②	③	④
	현황 및 문제점 진단	주민 및 근로자 실태조사	국가산단 전환논리 개발	국가산단 전환방안 검토

- 내용적 범위
 - 통계분석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국가산단 전환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단 전환방안을 제시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자료는 충남도청, 서산시청 내부자료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활용
-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주민 및 근로자 실태조사는 본 연구에서 직접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
 - 표본은 랜덤추출 된 213부
 - 표본추출 방법은 마을별 랜덤 추출 방법 활용
 - 조사 방법은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 조사로 진행

〈설문조사 표본설계〉

모집단	- 인근 마을주민 전수 - 대산석유화학단지 근로자 전수	
표본크기	인근 마을주민	대산석유화학단지 근로자
	107부	106부
표본추출방법	- 랜덤 추출 방법 활용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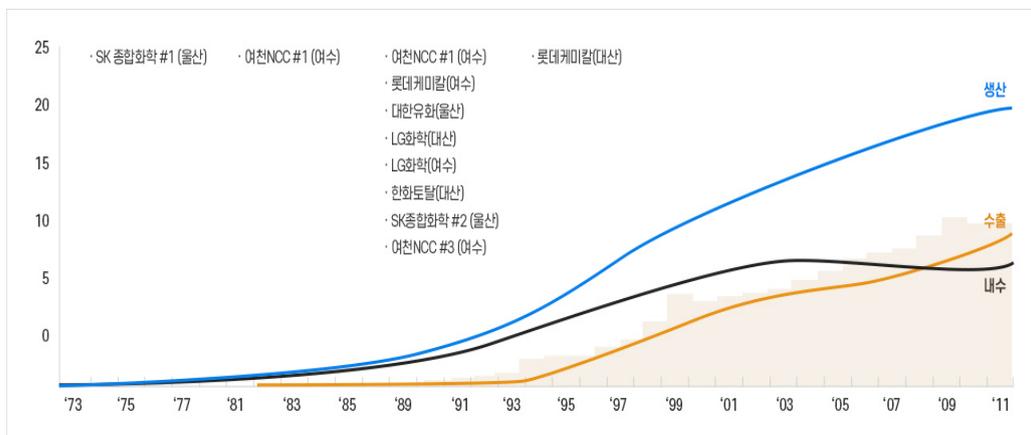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및 문제점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대산성규화학단지 문제점 및 관련 이슈

II.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및 문제점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 ▶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에는 대기업인 한화토탈(주), 롯데케미컬(주), (주)LG화학, 현대오일뱅크(주)가 개별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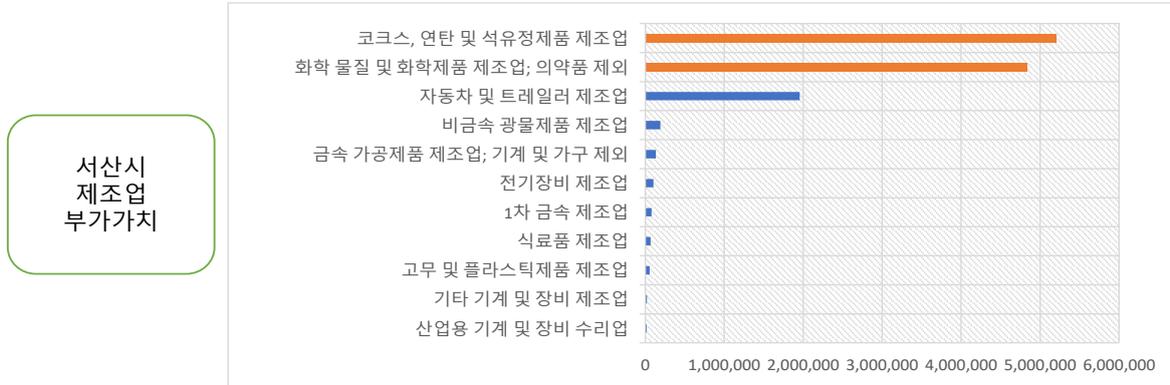


- ▶ 1개의 국가산단(대죽자원)과 6개의 일반산업단지(대죽일반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대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 씨지앤대산전략일반산업단지)가 집적해있음

II.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및 문제점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서산시의 2019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총부가가치는 각각 5조 2,015억, 4조 8,411억으로 서산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1.0%, 38.2%로 합은 79.2%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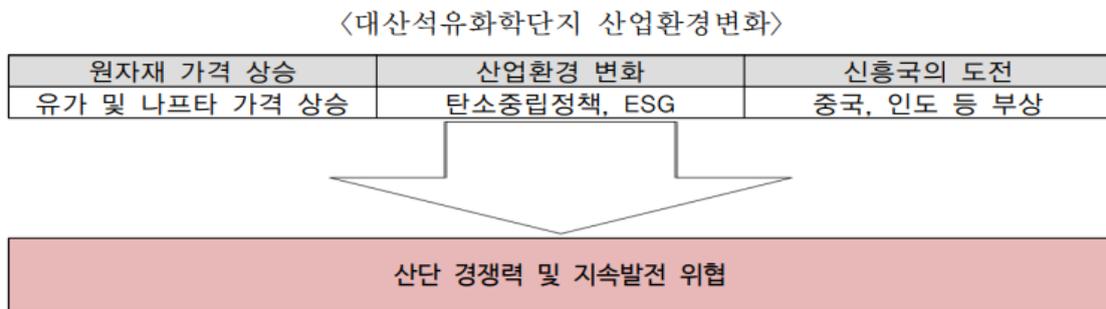


- 서산시의 석유화학은 국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21.5%와 10.2%를 점유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9%와 67.7%에 달함

II.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및 문제점

대산석유화학단지 문제점 및 관련 이슈

산업측면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는 물론 충남의 석유화학 산업을 지탱해왔지만, 최근 유가 및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 상승, 국가의 탄소중립정책, ESG 등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아울러 세계적인 환경규제 확대, 탄소중립 이행 부담, 중국의 설비 증설,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수입규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친환경·첨단산업단지로의 변화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

II.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및 문제점

🏠 대산석유화학단지 문제점 및 관련 이슈

📊 환경측면

〈대산석유화학단지 사고 현황〉

2018	2019	2020
롯데케미칼 벤질유출사고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LG화학 폭발사고

주인 및 근로자의 환경권·안전권 위협

-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각종 사고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음
 - 중대재해 처벌법은 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 따라서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기업들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지원이 매우 시급하게 되었음
 - 안전관리 조직의 확대, 안전점검 강화, 안전교육강화, 안전체험공간 구축 등에 기업의 부담이 증가

II.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및 문제점

🏠 대산석유화학단지 문제점 및 관련 이슈

📊 정책측면

〈대산석유화학단지 관리현황〉

높은 국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미흡 일반산단과 개별입지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의 다양한 지원 혜택에서 배제 (공업용수 부족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가능)

충남도의 탄소중립 선도 붕괴

-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그동안 높은 국세를 내고 있지만 낮은 지방세 비율 및 정부지원은 미흡
 -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한 해 매출액은 70조 정도(2021년 기준)이며 국세 납부액 24조 3,711억원 (최근 5년)에 비해 지방세는 1%(3,095억원) 정도에 불과
- 그러나 경쟁 산업단지인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 내 입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충남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일반산단과 개별입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산업단지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Ⅲ

대산석유화학단지 실태조사

인근 주민 실태조사
근로자 실태조사

Ⅲ 대산석유화학단지 실태조사



인근 주민 실태조사

기초조사

기초조사 시사점

- ① 인근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0.5년으로 고령자가 많음
- ② 주로 인근에서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거나 대산석유화학단지 근로자나 서비스를 제공

이미지 조사

이미지조사 시사점

- ①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이미지는 위험함(31.3%), 냄새남(28.0%), 칙칙함(12.6%)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이미지 강함

산업인식 조사

산업인식 시사점

- ① 대산임해산업지역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92.6%)고 인식하고 있지만, 인근 마을과의 상생 노력은 미흡하다(31.8%)고 느낌
- ② 대산임해산업지역의 대기오염, 각종 폭발사고, 수질,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지역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음(56.1%)
- ③ 향후 신규 산단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산단으로 조성되기를 희망(82.2%)

인근 주민 실태조사

단지인식 조사

단지인식 시사점

- ①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산업단지나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93.5%)
- ② 석유화학 관련 각종 사고(오염, 유출, 폭발 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고(90.6%) 악취, 냄새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
- ③ 많은 주민들이 석유화학 관련 두통,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을 겪고 있고(33.6%), 대산임해산업 지역에 가까울수록 더욱 심각
- ④ 적절한 소방훈련경험 비율(26.2%)이 낮고 대산임해산업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사고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보유 비율이 낮아짐

정책인식 조사

정책인식 시사점

- ①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산단으로 전환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98.2%)
- ②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국가산단 전환이 충남의 탄소중립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인식(98.1%)
- ③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고도화를 위해 주민들은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제정(40.2%)과 대산임해산업지역 국세의 지방세 전환(32.7%)을 희망
- ④ 아울러 인근 마을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희망하고 있음(99.0%)
- ⑤ 국가산단 지정 시 폐기물, 폐수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및 재정비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나타남

근로자 실태조사

기초조사

기초조사 시사점

- ① 초기입주 기업의 경우 30년이 넘어 공장과 시설의 노후화 가능성 높음
- ② 개별입지와 일반산단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이미지 조사

이미지 시사점

- ①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이미지는 위험함(22.6%), 냄새남(13.2%)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이미지 강함

산업인식 조사

산업인식 시사점

- ① 지난 2년간 업황 어려움(31.1%), 향후전망 좋지않음(61.3%) 등 석유화학산업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②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기업 성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47.0%)이며, 글로벌 경기불황(33.3%)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 ③ 석유화학산업의 품질경쟁력(68.2%)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격경쟁력(14.1%)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③ 미래기술 대응력(71.7%)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대응력이 낮아지고 있고, 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실태조사

🔍 단지인식 조사

단지인식 시사점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산업단지나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95.3%)
②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석유화학 관련 각종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고 (94.3%) 악취, 냄새, 미세먼지 등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
③ 근로자들의 화학물질 노출정도, 석유화학 관련 두통,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은 영세기업일수록 더 높게 나타남
④ 사업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예방기구나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 미흡

🔍 정책인식 조사

정책인식 시사점
① 많은 근로자들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국가산단으로 전환되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98.1%)
②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국가산단 전환이 충남의 탄소중립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인식(99.1%)
③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고도화를 위해 근로자들은 대산임해산업지역 국세의 지방세 전환(39.6%)과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제정(29.3%)을 희망
④ 최근 1년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작업장 시설개선이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원은 대기업에 보다 치중(대기업 77.2%, 중소기업 55.6%)
⑤ 국가산단 지정 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산단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으로 나타남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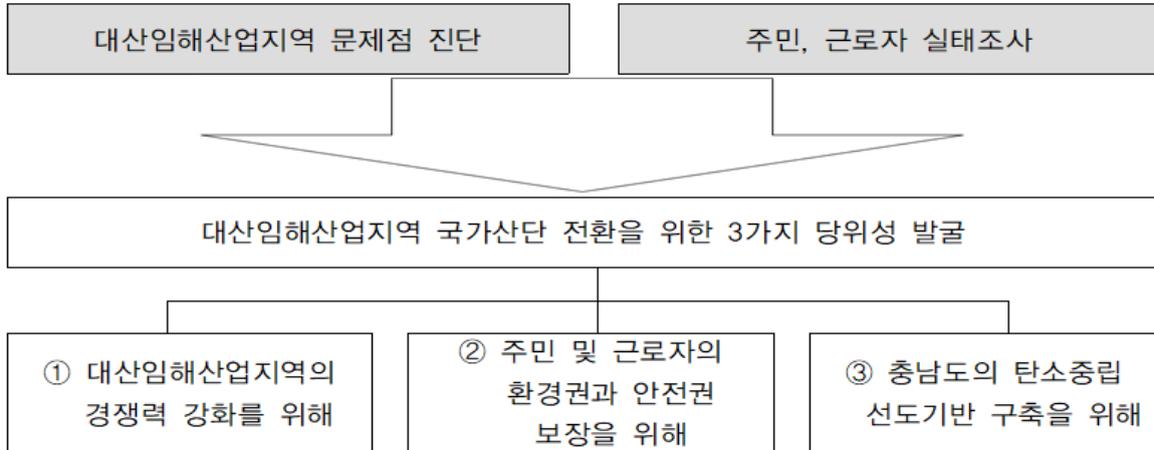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 논리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 및 근로자의 환경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충남도의 탄소중립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IV.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 논리

당위성 도출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 당위성 도출〉



IV.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 논리

논리 ① :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초기입주기업이 공장과 시설이 노후화되고, 개별입지와 일반산단이 혼재되어 있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함
- 위험하고 냄새나는 노후산단의 이미지가 강하고 아직까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글로벌 경기불황 하에서 향후 기업경기가 좋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음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 전환 필요

- 30년이 넘는 노후산단과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있음
- 개별입지와 일반산단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산업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어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
- 기술·품질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생산공정 스마트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 등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책 강화 필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인력지원, 기술 전수 등 대 중소기업 간 공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발굴 필요

IV.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 논리

논리 ② : 주민 및 근로자의 환경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 대산임해산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고령자가 많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대산임해산업지역은 주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생산시설들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
-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위험성과, 마을과의 상생 노력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음
- 주민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석유화학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
-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사고 및 질병 발생 확률이 높고 사고 예방관리 미흡

주민 및 근로자의 환경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 필요

- 대산임해산업지역 인근 마을의 노후화·고령화로 맞춤형 지원 필요
- 대산임해산업지역 대개조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기업과 마을 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예산의 확대 필요
- 불안감이 높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 마련 필요
- 대산임해산업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산단재생 공모사업 등 참여)
-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설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과 기업들의 시설개선(악취 저감, 미세먼지 포집 기술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주민들을 위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파악 및 지원 필요
- 노후화단지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
- 사고 가능성이 높은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특히 악취 저감, 미세먼지 포집 기술을 위한 지원 필요
-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실태조사 및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 발굴 필요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관리와 관련 지원의 확대 필요

IV.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 논리

논리 ③ : 충남도의 탄소중립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국가산단 전환이 충남의 탄소중립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산단 전환을 위한 특별법제정, 인근 마을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희망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국가산단 전환이 충남의 탄소중립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국가산단 전환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희망

충남도의 탄소중립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 필요

(주민조사)

- 주민들의 환경권·안전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어야 함
-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에서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국가산단 전환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추진 사업에 포함되어야 함
-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국가산단 전환, 국세의 지방세 전환, 인근 마을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을 통해 지원을 위한 근거 및 재원마련 필요
- 주민들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친환경 산단으로 바꾸어나가야 함

(근로자조사)

- 충남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 충남도 탄소중립 정책에서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국가산단 전환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추진 사업에 포함되어야 함
- 대산임해산업지역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가산단 전환을 통해 지원을 위한 근거 및 재원마련 필요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장 시설개선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지원 필요
- 근로자들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복합생태산단으로 개발해야 함

V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방안

전환가능성 검토
 전환시 혜택
 전환방안
 입법추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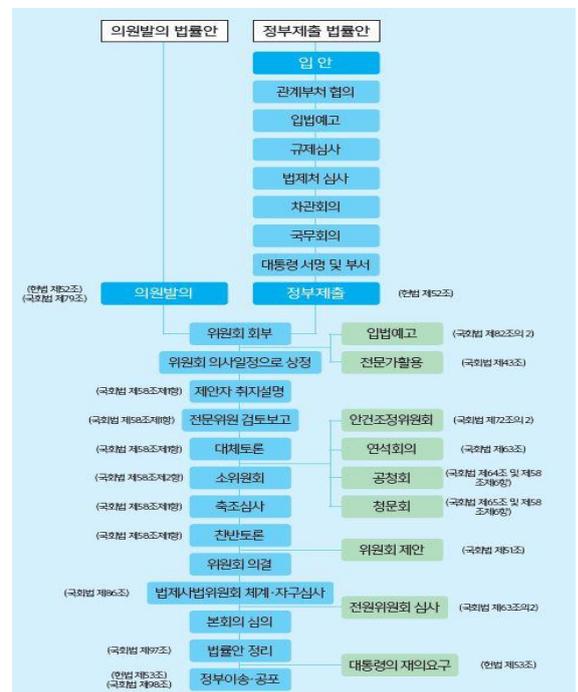
V. 타이틀 삽입 부분



국가산단 전환가능성검토, 전환시 혜택, 전환방안

〈국가산단 전환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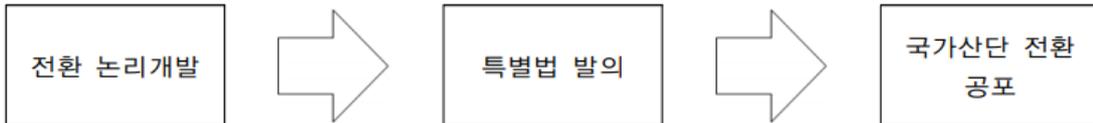
①	②	③
국가산단 전환가능성 검토	전환시 혜택	전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률하에서는 국가산단 전환 불가능 ■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환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특별법에 추가지원사업 포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 법률안 추진: ■ 국회의원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고 서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



입법추진(안)

- ▶ 정부입법은 국회 법안제출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법안제출까지 6개월 이상 소요
- ▶ 그러나 의원발의의 경우 의원 10명만 찬성하면 즉시 법안을 낼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도 제외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특별법 발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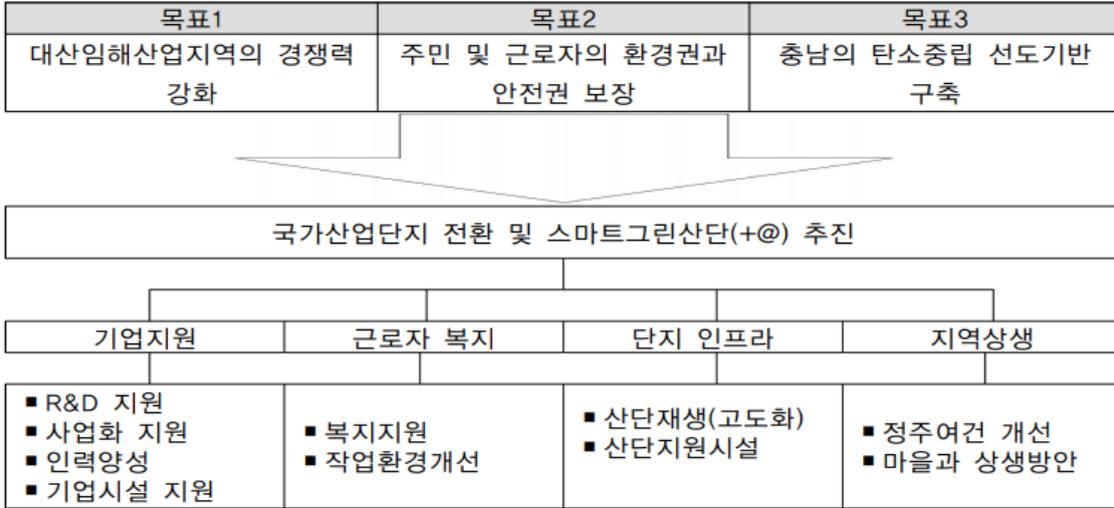
〈대산석유화학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대산임해산업지역 추진사업

추진사업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전환 후 추진사업>



➤ 기업지원의 56%, 산단지원시설지원의 60% 정도가 스마트그린산단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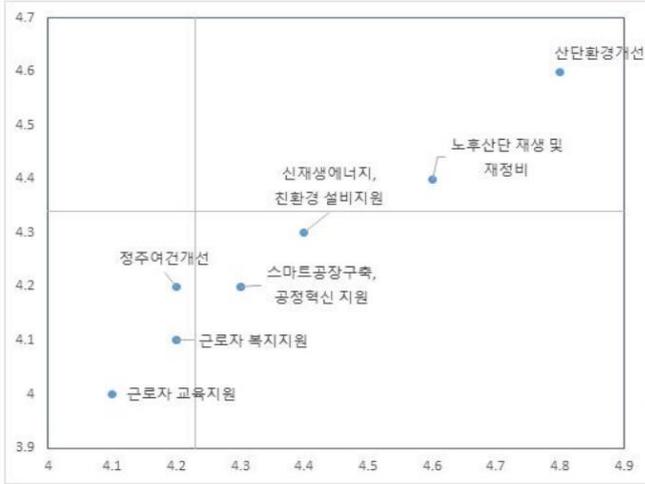


스마트크린산단 지정현황 및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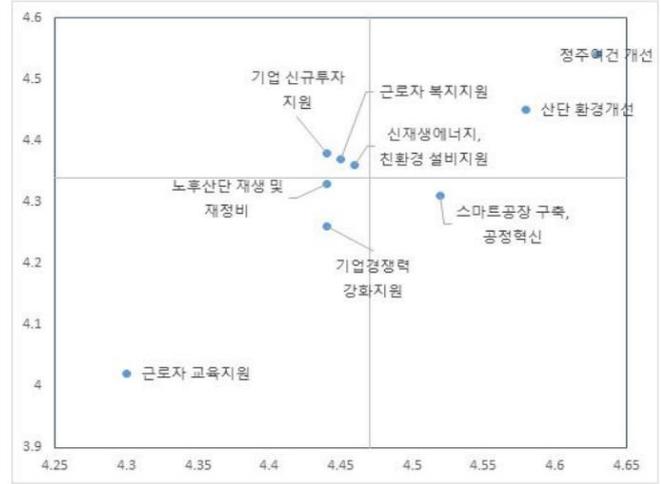
국가산단	경기반월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기업 데이터 기반 '산단형 데이터 댐' 구축 ▶ 에너지 다소비기업 에너지효율화 및 친환경플랫폼 구축 ▶ 뿌리공정 스마트화 인력 양성, 산단 주거공간 쾌적화
	경남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기업 데이터 기반 '산단형 데이터 댐' 구축 ▶ 산단그린화·에너지자립 추진 ▶ 디지털전환 인력 교육 및 창업생태계 조성
	인천남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부·장 기업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에너지자립도 제고, 청정·친환경산단 전환 ▶ 스마트인재 양성, 제조창업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경북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IoT기반 디지털 혁신산단 구축 ▶ 에너지 고효율화 및 친환경설비 도입 ▶ 스마트 인재 양성, 인재 공급망 확립 등
	광주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산업 제조혁신을 위한 Si플랫폼 구축 ▶ 에너지 자립형 2035 RE100 산단 구현 ▶ 청년 창업 지원 및 AI 전문인력양성
	전남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디지털전환, 첨단소재산업 육성 ▶ 친환경 설비구축, 폐자원 활용으로 친환경 산단 구축 ▶ 스마트제조인력 양성, 산단내 정주여건 개선
	부산명지녹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단 인프라 디지털 고도화 추진 ▶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조성 및 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구축 ▶ One-Stop 기업지원 프로그램 실행 및 창업보육공간 제공
	울산미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제조혁신 기반 구축 ▶ 산단 자원순환·친환경 청정 산단 추진 ▶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산업 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전북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혁신기반 조성 ▶ 친환경 제조공정 혁신,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일반산단	대구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금속 등 5대 주력업종 영세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 에너지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친환경화 ▶ 창업거점 + 산학연협력 → 신산업 창출

구분	세구분	사업명	부처	비고
기업 지원	R&D 지원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산업부	
		▶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산업부	산단대개조산단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지원	중기부	산단대개조산단
	사업화 지원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사업화지원	중기부	산단대개조산단
		▶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환경부	
	인력양성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기업시설 지원	▶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산업부		
	▶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및 경쟁력제고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산업부		
근로자 복지	복지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고용노동부	
	작업환경 개선	▶ 일터혁신지원	고용노동부	
단지 인프라	산단재생 (고도화)	▶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산림청	
		▶ 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산업부	
		▶ 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구축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	산업부	
		▶ 부처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국토부	
		▶ 노후공단 재정비	국토부	
		▶ 노후산단 재생지원(웅자)	국토부	
		▶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구축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산업부	
	▶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산단지원시설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 산단혁신지원센터 구축	산업부	
		▶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 혁신데이터센터구축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정주여건 개선	▶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업부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출자, 웅자)	산업부		
지역 상생	마을과 상생방안	▶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산업부	
		▶ 이주자택지 조성	서산시	
		▶ 마을 상생프로그램 운영		

<주민 조사 IPA 분석>



<근로자 조사 IPA 분석>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리를 위해서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환경권과 근로자의 안전권** 개선을 위해서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야만 합니다.

연구목적

- 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에 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
- ② 대산석유화학단지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산단 전환을 위한 근거 및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연구내용

- ①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② 주민 및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한 관계자 니즈(needs) 발굴 및 대책마련
- ③ 국가산단 전환논리 개발 및 국가산단 전환방안 제시

정책제안

- ① 의원발의 대산임해산업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산단 전환 모색
- ② 대안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를 통한 메뉴판 사업 추진(4개 영역 31개 사업 대상)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대산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 전환방안 연구

해양치유자원 활용방안 연구

김진영 책임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해양치유자원 활용방안 연구

2022.12

목차

I

서론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III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IV

정책제언

연구목적

- ①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및 연안시군간 연계 방안 모색
- ② 향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토대 마련

연구내용

- ① 연안 6개 시군 해양치유자원 현황 조사
- ② 시군별 해양치유 특성화 방안 제시
 - 태안군 : 의료연계형 해양치유
 - 보령시 : 휴양형 해양치유
 -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 생활형 해양치유

정책제안

- ① 해양치유자원 발굴·개발·생산체계의 구축
- ② 해양치유-해양관광 연계 및 활성화
- ③ 해양치유자원 기반 주민 건강 및 복지증진

I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배경

건강 관련 산업(웰니스 산업)의 수요 급증
 - (요인)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인구 고령화 등

해양치유산업 :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

건강 관련 산업(웰니스 산업)의 수요 급증
 -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
 -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추진 :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지자체 4개소 선정(2017년)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2020년)
 -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제정(2020년)

충남은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갯벌, 기후, 해송림 등 우수한 환경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육상 치유자원도 우수하여, 양자 간의 연계를 통한 산업육성의 적지라고 할 수 있음

목적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및 연안시군간 연계 방안 모색

- 충남 연안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구축
- 향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토대 마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범위

공간적 범위 : 충남 6개 연안 시군(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내용적 범위 : 해양치유자원

※ '해양치유자원법'에서는 해양치유자원으로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을 제시하고 있음(법 제2조제3호)

방법

구분	내용	연구수행방법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치유 산업육성 관련 중앙부처 정책분석 해양치유산업에 활용 가능한 연안 시·군 별 해양치유자원 조사 중앙부처 정책 등에 반영 가능한 연안 시·군별 해양치유자원 모델 개발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치유자원 조사
충남형 해양치유 산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연안 시·군별 특화자원 상호 연계방안 마련 충남형 해양치유 산업 발전 방안 제안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해양치유의 개념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충남 해양치유산업 현황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 해양치유의 개념

해양치유의 개념

학문적 구분 : 해수, 해양광물, 해양생물, 기후, 해양배후자원 등으로 구분
☞ 치유자원 보유의 관점에서 충남은 타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주(主)목적으로 하는 산업
-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치유 제품생산, 생산지원, 제품서비스의 관점에서 구분가능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 1) 해외 동향

유럽

유럽의 국가들은 해양, 산림, 기후가 우수한 지역을 휴양치유단지(독일), 해양관광지구(프랑스)로 지정하고, 휴양치유 산업 육성

초기 : 헬스 관광(Health Tourism)과 연계하여 발전

→ 이후 : 의료서비스, 바이오산업 등과 연계한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

독일

휴양치유단지인 Kurort(쿠어오르트)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보험에서 해양치유를 지원

독일 전역에 약 350개 이상의 Kurort가 운영 중이며, 이중 해양치유욕 및 해수욕 Kurort는 97개소(2019. 8. 9. 기준)

주요 방문객 : 만성 호흡기질환자, 순환기질환자, 근골격계질환자, 피부질환자, 정신건강질환자, 소아청소년, 암환자, 뇌질환자 등

프랑스

해안 건강리조트의 건강요업 일부를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가가 비용을 지원

프랑스 내 해양치유시설은 80여 개 이상이며, 해양치유 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가 인증 시스템을 구축

약물 및 운동 치료와 스파 등 주변 휴양 시설을 병행하는 경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됨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제2차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2014)

■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이라는 전략과제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해양치유관광 육성 포함

비전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정책 목표

- ◆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23년까지 해양여행이동충량 5억일 달성
-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
 - '23년까지 해양관광분야 신규일자리 3만5천개 창출

전략 과제	세부 추진 과제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 해양치유관광 육성 ▪ 해양휴양공간 조성·정비 ▪ 노후형만의 해양친수공간화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 마리나산업 고도화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문화자원 발굴 및 산업화 ▪ 해양문화시설 확충 ▪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관광자원화 ▪ 테마가 있는 연안 조성 ▪ 섬관광 활성화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크루즈 허브 실현 ▪ 국제 미러나 네트워크 구축 ▪ 어수박람회장의 국제해양관광허브화 ▪ 국제대회 및 행사 참여·유지

추진내용

- 1) 해역별 해양치유자원 특성화 사업모델 개발
- 2)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기반 마련
- 3)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2019)

■ 산업부문의 '해양레저관광 핵심 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계절 해양치유산업 육성** 포함

비전	다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지역
목표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관광객 1,000만명 달성('17년 580만명') * 낚시, 해수욕장, 단순 어항 및 섬 방문 제외 ◆ 해양레저관광 분야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 ◆ 심 관광 방문객 연간 1,000만명 달성('17년 659만명')
4대 전략	13개 추진과제
[인프라] 권역별 해양관광 명소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7대 권역별 특성화 및 거점 조성 2.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구축 3. 해양 관광길 개발 : K-Ocean Route
[콘텐츠] 체험·채류형 관광 콘텐츠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촌 체험관광 콘텐츠 내실화 2. 우수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3. 지속가능한 낚시 환경·문화 조성
[산업] 해양레저관광 핵심 산업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계절 해양치유산업 육성 2. 마린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3.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4. 수중레저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 교육·체험을 통한 친수문화 정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을 통한 친수문화 습득 2. 체험을 통한 친수문화 제화 3. 친수문화 확산 기반 조성

주요내용 : 기반조성, 지역특화, 산업화 등을 제시

- (기반조성) 치유자원 발굴 및 효능검증, 산업화 모델 개발 등 기초연구수행, 선도사례 육성, 법·제도 정비 등 국가 주도의 활성화 기반조성
- (지역특화)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체험마을 발굴·조성, 지역 복지프로그램과 해양치유 프로그램 연계 등 자생적 해양치유 지역 기반조성
- (산업화) 해양치유벤처 지원 및 펀드 조성, 인바운드 관광시장개척지원, 사회보장보험체계 편입 등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지원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2019)

■ 5대 핵심 해양신산업으로 ①해양바이오, ②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③친환경선박, ④첨단 해양장비, ⑤해양에너지를 제시

비전	해양수산 신산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조원 달성 ('18, 3.3조원 → '22, 5.2조원 → '30, 11.3조원) ▶ 오션스타 기업 발굴 (매출 천억원 스타트업, '22, 5개 → '30, 20개) ▶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 (최고기술국 대비 '18, 80% → '22, 86% → '30, 95%)
3대 전략	9개 과제
1.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바이오경제를 주도하는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② 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활성화 ③ LNG, 수소, 전기 등 친환경선박 연관 산업 육성 ④ 첨단 해양장비 산업 조기 상용화 ⑤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척
2.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 해상물류를 통한 해운항만 재도약 *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해상통신 ②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수산업 혁신 * 스마트 양식·유통·가공·어장관리
3.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양수산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② 해양수산 스타트업 창업·성장 촉진

관련내용 : 7대 권역에 대한 특성화와 해양치유산업 강조

- 해양치유관광 산업 육성 위한 산업화 지원 법률 제정
- 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역에 치유센터 건립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해양치유산업 활성화계획(2020)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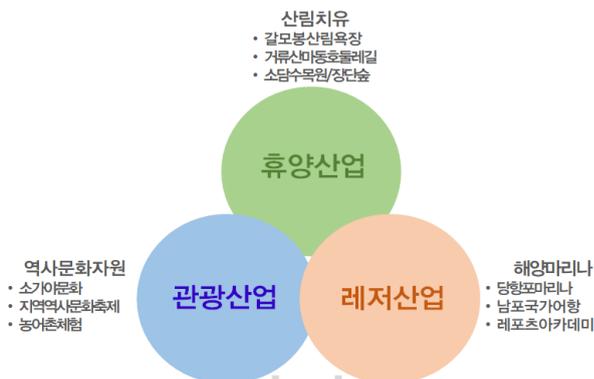
비 전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경제 활력 제고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치유 체험인원 100만명 달성(누적, '22. 20만 → '23. 30만 → '24. 50만) ▶ 연안지역 고용 효과 1,900명 달성 ▶ 해양치유산업 생산유발효과 연간 2,700억 원 창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
1. 해양치유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양치유 시범거점 조성 ② 해양치유 공간 확산 ③ 해양치유로 주민 복지 실현
2.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기술개발·창업 활성화 ⑤ 국내외 치유 네트워크 구축 ⑥ 해양치유 수요 확대
3. 산업 기반 조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법·제도 정비 ⑧ 전문 인력 양성 ⑨ 자원 관리 체계 마련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 3) 해양치유센터 설치 동향

경남 고성군

- (기업연계형) 기업체 종사자의 스트레스·피로 회복으로 특화, 해양치유 아카데미를 활용한 전문인력 교육 거점으로 육성



휴양산업, 관광산업, 레저산업이 융·복합된 해양치유관광형 단지 조성을 지향

- 섬 지역의 특성을 강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도입시설과 지형, 경관을 활용한 단지 컨셉을 활용한 개발을 추진
- 해양치유시설 : 휴양·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사계절 이용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 관광·숙박시설 : 감성 문화를 숙박시설에 도입하고, 건축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획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 3) 해양치유센터 설치 동향

전남 완도군

- (스포츠 재활형) 해변 노르딕 워킹, 해수 보행과 해산물을 이용한 식이요법 등을 통해 재활 치료 및 대사증후군 완화로 특화



의료·관광·해양바이오산업을 연계한 해양치유산업단지 조성을 지향

-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등 조성
- 해양치유시설은 휴양·건강증진기능을 강화하고, 사계절 이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운영할 예정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해양치유산업 정책 동향 : 3) 해양치유센터 설치 동향

경북 울진군

- (중장기 체류형) 온천지구 및 산림자원과 연계, 해양-온천-산림 치유와 연계한 STAY-Healing, 피부·호흡기 질환 및 스트레스 완화 특화



- 온천관광산업, 해양레저산업과 융·복합된 해양치유·휴양형 단지 조성을 지향
- 해양치유시설 : 지역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한 특성화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설 도입 및 아토피 등 알려지성 질환 치유 중심의 해양치유전문병원을 운영
 - 휴양·숙박시설 : 장기 치유자 유치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 연계형 리조트를 구축. 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마을 조성 추진
 - 지원시설 : 일정기간 장기 치유가 필요한 아토피 등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병원구축, 단지인접 교육기관을 활용한 해양치유전문인력 양성 지원시설 구축을 계획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충남 해양치유산업 현황 : 1) 충남 해양치유산업 관련 정책

충남 해양치유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

■ 해양치유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전략 마련

비전	바다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치유 복합단지 6개소 조성 - (22년) 1개소 → (25년) 2개소 → (30년) 6개소 해양자원별·특성별 충남형 산업화 모델 개발 - 종합(거점)형 1개소, 레저(휴양)형 1개소, 해양치유마을 4개소
정책 방향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 벨트화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전략 ①】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 → 해양치유지구 + 연계 관광시설 → 해양치유 시범단지 종합(거점)형
【전략 ②】 치유 + 레저· 관광의 융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관광 복합지구(K-Ocean Route), 해양치유지구 지정, 웰니스관광을 결합한 레저(휴양)형 조성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 R&D 사업 해양머드박람회, 광역해양레저체험지구, 서핑스팟 등 → 「해양치유+레저+관광」의 융·복합
【전략 ③】 치유 플랫폼 구축·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시설과 연계한 소규모 「해양치유 마을」 조성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 R&D 사업 단지(마을)별 네트워크 + 플랫폼 구축, 운영 활성화 →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 벨트화

‘바다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이라는 비전하에
충남형 해양치유 서해안 벨트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

- 전략 ①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 전략 ② 치유+레저·관광의 융복합
- 전략 ③ 치유 플랫폼 구축·상용화
→ 3대 전략을 기초로 추진과제를 도출함

II. 해양치유의 개념 및 관련 동향

충남 해양치유산업 현황 : 2) 태안군 해양치유 산업 추진현황

충남 태안군

■ (레저복합형) 주말·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 FAST-Healing, 피부미용 및
근골격계 질환 완화로 특화

시범센터 건립 (’20~’22)	연계시설 확충 (’23~’25)	민간시설 유치 (’25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6,245㎡) 시설: 기본+전문치료실, - 1층: 기본치료실 - 2층: 전문치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형 치유단지(빌라촌) 폼솔룸 치유공간 해변길(솔모래길/산책로) 스포츠재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치유 재활전문의료기관 해양치유 빌라촌 체류형 호텔(리조트 등)

- (대표자원) 피트, 머드, 소금 (피부미용 및 근골격계 질환 완화)
- (거점환경) 수도권 접근성(2시간 이내) 우수, 서핑·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 및 해수욕장·리조트 등 휴양 인프라 보유(가족 휴양)

충남 해양치유산업 현황 : 2) 태안군 해양치유 산업 추진현황

충남 태안군

-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약 40만㎡)
해양치유센터, 빌라촌, 곰솔 숲 치유공간, 스포츠 재활센터 등 건립 예정



단지 배치도(안)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감도

III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충남 연안시군의 해양치유자원
충남 연안시군별 해양치유 특성화 방안

Ⅲ.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충남 연안시군의 해양치유자원

<h4>머드(갯벌)</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 이완, 통증 완화, 피부미용에 효과 - 갯벌걷기는 류머티즘 등 혈액순환 촉진과 근골격 긴장 이완 효과가 있음 <p>태안군 : 128.8km 서천군 : 72.3km 서산시 : 66.0km</p>	<h4>해사</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르딕워킹, 해풍욕, 해사온열요법 등의 방법으로 활용 - 해양치유 중 운동·재활치료의 기반이 되는 자원 <p>실제로 해사를 이용하여 운동 치료가 가능한 모래 해수욕장은 보령시 1개소, 태안군 5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p>	<h4>해수</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의 재활 운동에 중요한 해양치유자원 - 해수온천, 해양심층수, 염지하수 등이 해양치유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해수의 범위에 해당 <p>해수온천 1개소 염지하수 18개소</p>
<h4>소금</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이나 피부질환의 증상 완화나 개선을 위한 재활치유에 유용하게 활용 - 소금은 목욕, 흡입, 팩, 식용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p>식염생산량 태안군 : 454,977kg 서산시 : 216,314kg</p>	<h4>해송림</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나 정신건강, 면역력 증대에 중요한 자원 - 소나무, 해송은 건강에 유익한 피톤치드(phytoncide) 방출량이 많음 <p>태안군 : 10,867ha 서산시 : 5,205ha 보령시 : 2,727ha 서천군 : 2,590ha</p>	

Ⅲ.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충남 연안시군의 해양치유자원

충남 연안 시군별 해양치유자원 현황

구분(단위)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피트	매장량(t)						200,000
머드	갯벌(km)	30.5	66.0	20.2	72.3	13.4	128.8
해사	모래해수욕장(개)1	1					5
해수	해수온천(개)						1
	염지하수(m ³ /d) (5개소)	755 (5개소)	350 (2개소)				3,466 (11개소)
소금	식염(kg)	4,335	216,314	1,930	4,280	196	454,977
	자염(t)						23
	천일염(t)	210	1,080				11,400
	염전(m)	720,832	4,269,541	3,629,623	474,395	123,131	6,315,846
해송림	해송면적(ha)	2,727	5,205	928	2,590	459	10,867

Ⅲ.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충청남도 연안 시군별 해양치유 특성화 방안 : 1) 충청남도 해양치유 산업의 목표와 방향

충청남도 해양치유 산업의 목표

- ① 해양치유 시범단지로 선정된 태안군을 중심으로 해양치유산업 육성
- ② 연안 시군별 특성에 맞는 해양치유산업을 개발, 특성화
- ③ 해양치유산업과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태안군

-의료연계형 해양치유모델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숙박 기능, 의료기능 집적화 → 해양치유 시범단지 조성

보령시

-레저·스포츠·관광 중심의 휴양형(웰니스형) 해양치유로 특성화 추진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생활형 해양치유

-서천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을 통한 해양치유의 과학화 및 산업화에 초점

-서산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연계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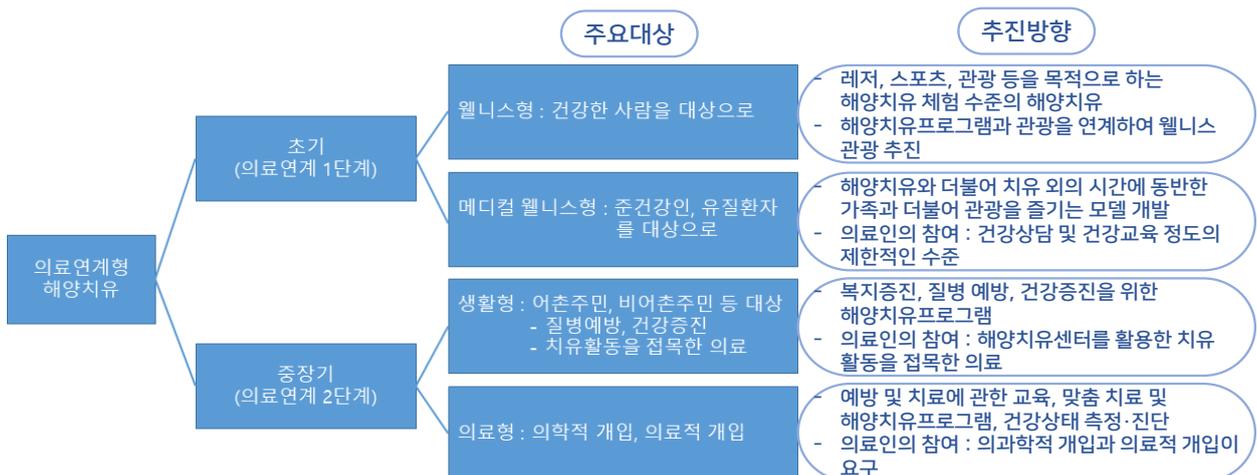
Ⅲ.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충청남도 연안 시군별 해양치유 특성화 방안 : 2) 태안군 - 의료연계형 해양치유

특징

해양치유 시범단지 지정
시범단지 중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 산림자원 및 농촌자원 등 보유
→ 해양, 산림, 농촌 치유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태안군 의료연계형 해양치유 단계별 설명



Ⅲ.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충청남도 연안 시군별 해양치유 특성화 방안 : 3) 보령시 - 휴양형 해양치유

특징

대표적인 해양치유자원 : 머드

- 해수, 해양기후, 해사 등 다른 해양치유자원도 풍부

원산도 : 레저·스포츠 및 관광 기능을 갖춘 해양치유센터 도입 검토 중

➔ 해양치유자원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주요대상

레저, 스포츠, 마리나, 관광 목적으로 보령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동반 가족

해양치유를 체험하고자 하는 일반인(건강한 사람)

보령시의 레저, 스포츠, 마리나를 체험하고자 하는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방문객 등

추진방향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 보령시와 태안군의 상호협력을 통한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도모

-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

“보령머드”의 브랜드화 및 대표 자원화

머드연구시설(연구소)의 설립이 필요

-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산업 **소재로서의 머드 개발**

보령시의 각종 해양관광자원과 해양치유자원과의 연계

- 기존 머드축제, 보령머드테마파크, 보령머드박물관, 대천해수욕장, 원산도 등 우수한 시설과 자연자원

- 현재 계획 중인 원산도 해양치유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Ⅲ.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개발

충청남도 연안 시군별 해양치유 특성화 방안 : 4)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 생활형 해양치유

특징

해수치료, 해양광물치료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해양치유 모델

해양치유를 통한 건강증진 및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

주요대상

어촌주민, 다문화가족,
감성노동근로자 등

복지증진, 질병 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도시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해양치유체험과 지역관광을 제공

추진방향

해양치유자원 및 환경이 우수하고, 관심이 높은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해양치유센터 추진

- (예시)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이 되었거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계획 중인 어항 또는 어촌

지역브랜드 및 대표 해양자원 개발·선정

- 각 시군의 대표가 되는 해양치유자원 브랜드를 개발·선정하여 지역간의 차별화 및 지역내 특화

-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의 활용

지역 보건시설(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과의 연계

지역관광과의 연계

- 지역 해양치유센터를 통한 어촌과 도시민의 교류 촉진

- 도시민의 해양치유 체험, 어촌마을 체험 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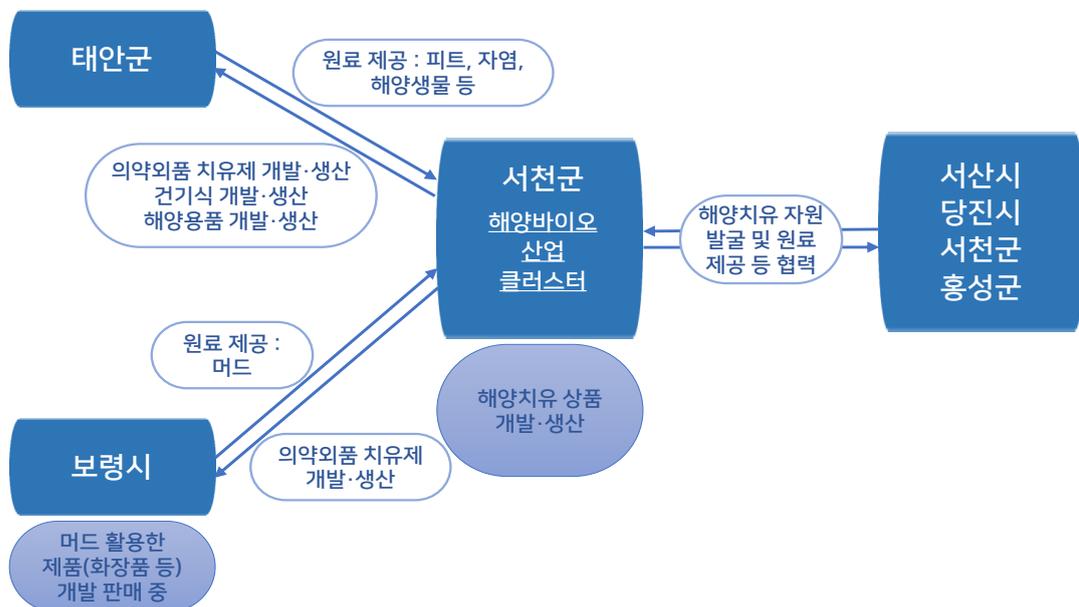
IV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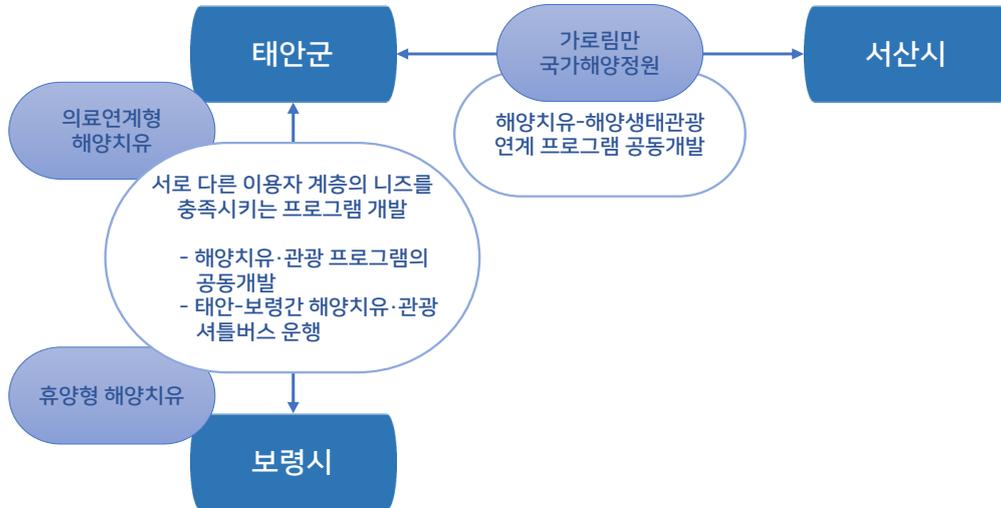
해양치유자원 발굴, 개발, 생산체계 구축
해양치유-해양관광 연계 및 활성화
해양치유자원 기반 주민 건강 개선 및 복지증진

IV.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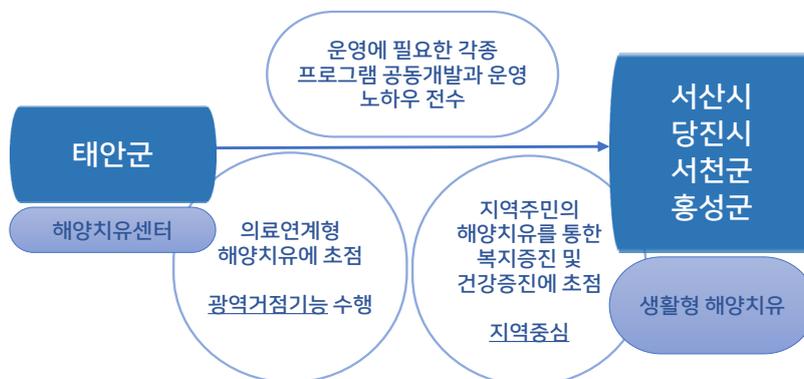
해양치유자원 발굴·개발·생산체계의 구축



🏠 해양치유-해양관광 연계 및 활성화



🏠 해양치유자원 기반 주민 건강 및 복지증진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해양치유자원 활용방안 연구



세션 8

삶을 지탱하는 환경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형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이 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형범 연구위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2.12

연구책임 : 여형범(연구위원)

목차

I

연구 개요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III

미국의
환경정의
운동과 정책

IV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
이슈

V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충남 환경정책의
과제

I

연구 개요

I. 연구 개요

연구 필요성

- ④ 정부 차원에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가 기본이념 및 전략으로 제시되고 시·도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환경정의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필요
- ④ 정부 차원에서 환경불평등 평가·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 환경불평등 개선사업 강화, 환경정보 제공 확대, 환경책임·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환경소송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환경정의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한 대책 마련은 부족

연구목적

- ④ 기존 환경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환경정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충남의 환경정의 실태를 반영한 환경정의 정책 방향 및 우선적인 정책 과제 발굴

주요 연구내용

- ④ 환경정의 개념 및 국내·외 정책동향 조사
- ④ 충남 환경정의 실태 진단 및 인식 조사
- ④ 환경정의 관점에서 충남의 주요 환경 정책 사례 분석
- ④ 환경정의 관점에서 충남의 정책 과제 도출 (충남 환경보전종합계획 반영)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OECD 환경성과평가 환경정의 분야 권고 내용

- 관련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법과 정책 문서 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 우선순위, 부처간 책임소재,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한다. 적절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한다.
- 환경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며, 공공 사회부문 지출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도시와 농촌간 환경위험 노출,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개선한다.
- 입지선정 및 정책 수립 시 분배 영향 문제를 고려하여, 현존하는 개발 압력에 맞서 분배적 정의의 향상을 모색한다.
- 토양오염에 대한 배상 책임 제도를 보기 삼아, 수역과 수생태계에 대한 과거 훼손에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한 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한다. 버려진 모든 오염된 산업 부지 대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점진적인 오염제거를 위한 재정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 정보 이용, 환경적 의사 결정에 공공 참여, 법률 및 정책에 사법적 접근에 관한 핵심 절차적 권리 표출을 강화함으로써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환경적 책무에 보다 많은 대중의 지원을 확보하고, 환경적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출처 : OECD, 환경부 역, 2017, 2017 대한민국 OECD 환경성과평가 요약본, 42~43쪽. (일부 내용 발췌)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 내용

환경정책기본법은 2019년 환경정의 개념을 기본이념으로 담는 것으로 개정

- (제2조 기본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국토기본법은 2019년 환경정의 개념을 담아 개정

-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를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긴 환경정의의 3대 원칙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환경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나눔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참여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택 환경의 질 및 인프라 ○ 부담 환경오염, 위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참여 개발계획, 사업 등의 의사결정 참여 ○ 정보접근 보장 접하기 쉬운 정보, 공개 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자 책임 강화 ■ 환경훼손 복원·보상 ■ 피해자 구제 및 입증책임 전환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이벤 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정의의 3+3 원칙

-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정의를 기존 시스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환경정의의 원칙으로, 생산적, 인정적, 회복적 정의를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결합 또는 확장되어야 하는 환경정의 원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

환경정의의 3+3 원칙

영역	정의	
시스템 유지	분배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편익과 피해 및 위험배분의 공정성 ◦ 최전선 공동체(frontline community)의 역량 증진
	절차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PIC(free, prior, informed, consent) 원칙에 기반한 최전선 공동체(frontline community)의 정책 참여
	교정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원인자의 책임부담, 환경피해자의 권리 구제 ◦ 훼손된 환경과 건강의 복원 및 치유
시스템 전환	생산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서는 생산구조와 생산방식의 전환 ◦ 생산공정과 생산제품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인정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이한 가치, 정체성, 문화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존중
	회복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훼손된 관계성, 정체성의 회복 ◦ 환경을 훼손한 당사자의 회복 과정 참여

출처 : 배현주 외(2020), 한상운 외(2019), 이수만·김현제(2021)의 내용을 수정·정리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환경정의 전략 주요 내용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이전 계획과 달리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대책, 계획을 추가

제5차 국토환경종합계획의 환경정의 분야 주요 정책과제

구분	주요 정책과제	정책 제안 사례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환경정의 제도화 및 정책추진	환경관련 법률에서 환경권 보장 실효성 강화, 개발사업의 환경정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환경·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녹색 사회전환을 위한 포괄적 전략 추진	녹색기본소득 제도 도입, 주요 정책·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의무화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평가·진단 및 개선기반 구축	환경부정의 빅데이터 확보, 환경부담에 대한 불평등 지표 선정,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공간적·계층적 환경불평등 개선사업 강화	취약지역 실태조사와 환경위험 저감 대책 마련, 환경약자 보호
	미래세대, 동식물까지 포용하는 환경정의 확장 모색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증대, 인간 외 생명을 배려하는 제도 검토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	환경정보 제공의 획기적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환경관련정보 공개 확대, 정보 소외계층 정보 접근성 강화
	국민의 실질적 참여기회 강화	참여형 회의 개최 확대·활성화, 국민참여형 사업 모델 개발 및 확산
	환경책임·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환경소송 제도의 개선으로 교정적 환경정의 강화	환경피해 구제 실효화 추진, 환경피해 존재 및 인과관계 추정요건의 완화, 환경피해의 경제적 보상을 넘어 피해예방과 복원을 포함,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조정결과의 실효화 강화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환경부 환경계획 수립지침의 환경정의 구역설정 규정

- 환경부의 시·도 환경계획 수립 지침(2021년)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매체-취약(민감)계층-대응력이라는 세 가지 틀로 분석된 자료를 중첩하여 서로 간의 어떤 공간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도록 요구

시·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의 환경정의 관련 현황조사 및 분석 내용

환경매체

환경 질(대기질, 수질, 토양, 지하수, 화학물질 등의 발생원, 발생량 및 오염정도, 상하수도 보급률 등), 환경 서비스(생태계서비스, 공원녹지 등), 환경 안전(재난위험지역, 폭염위험지역, 침수흔적, 산사태 위험지역, 재난피해액, 발생건수 등) 등을 파악한다

취약(민감)계층

신체적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14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의 수 또는 비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공시지가, 외국인(다문화가구), 여성가구주 등의 수 또는 비율), 건강 취약계층(환경관련 질환자(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의 수 또는 비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응력

대응시설(환경매체별 오염측정망, 무더위쉼터, 각종 대피소, 응급의료시설, 119안전센터 등), 대응여건(관련 예산(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등), 상하수도 등 각종 요금현황 및 부담, 취약(민감)계층 지원사업, 보건의료진 여건 등)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환경단체의 정부 환경정의 과제 제안

- (사)환경정의는 2022년 1월 차기정부에 환경정의 과제를 제안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 ① 매년 정부 예산의 20%(100조 이상), 기후정의 재원에 활용
- ② 갈등 없는 재생에너지 상생 모델 구축과 재생에너지 위주의 안정적 전력 체계 마련
- ③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 ④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 정책 실행과 에너지 분권 실현
- ⑤ 탄소 다배출 산업전환 계획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
- ⑥ 에너지 기본권 법률로 보장
- ⑦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기반의 국토, 도시 및 환경 체계 전환
- ⑧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

- ①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환경정의 이행체계의 제도화
- ②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 및 국내법 개정
- ③ 토지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환경정의 실현
- ④ 먹거리 보장 관련 각종 제도와 집행의 통합적 체계 구축
- ⑤ 공공급식의 국가적 책임강화와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통한 먹거리정의 실현
- ⑥ 식생활교육 정규교과목화 등 먹거리시민 육성과 아동먹거리 종합정책 수립
- ⑦ 화학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 마련
- ⑧ 산업폐기물처리장 관리의 공공성 확보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충남 환경 민원 및 환경정의 정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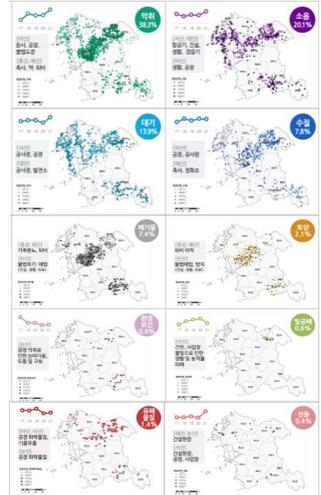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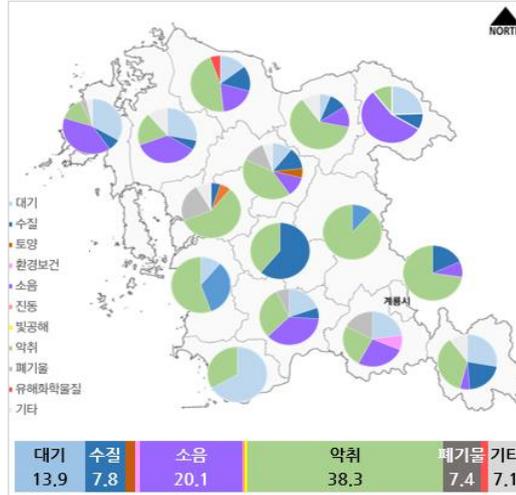
충남 환경 민원 분석

- [이슈별] 악취>소음>대기>수질>폐기물 ..., [시군별] 아산시>홍성군>서산시>논산시>예산군>천안시>태안군 ...
- [발생지역별] 도시지역(6,353건)>관리지역(6,315건)>농림지역(1,391건)>자연환경보전지역 순

환경민원 키워드



환경민원 총괄 분석 결과



이슈별, 용도지역별 분석 결과

- [도시지역 민원]
- ✓ 소음, 진동, 빛공해 70%이상 제기
 - ✓ 악취(38.9%), 소음(31.4%), 대기(14.4%) 순
- [관리지역 민원]
- ✓ 토양, 환경보전, 폐기물 60%이상 제기
 - ✓ 악취(43.8%), 대기(13.1%), 소음(11.4%), 폐기물(10.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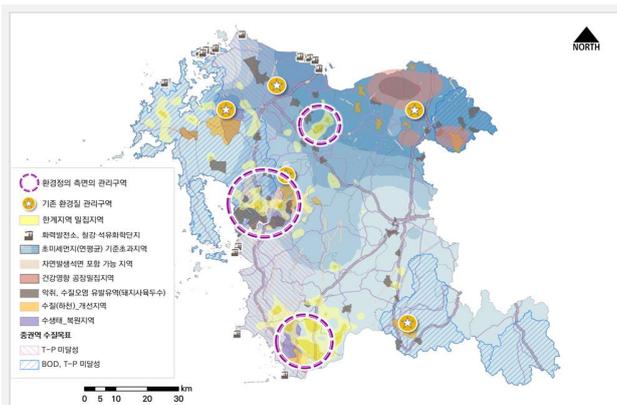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13

II. 국내 환경정의 정책 현황

충남 환경 민원 및 환경정의 정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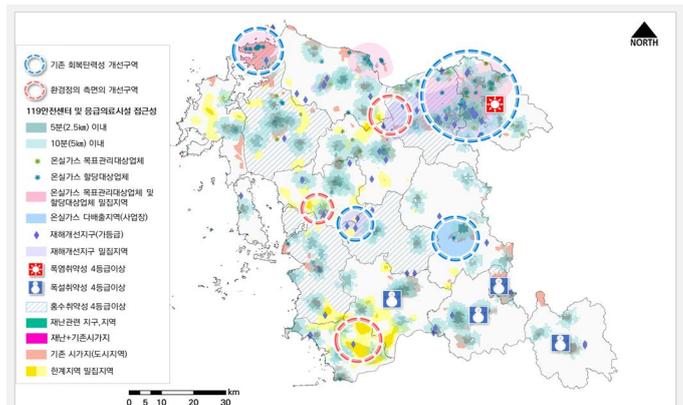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지도

환경정의-생활환경 전략도



* 기존 환경질 관리구역 외 한계지역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환경정의-회복탄력성 전략도



* 기존 회복탄력성 개선구역 외
① 119안전센터 및 응급의료시설로부터 차량 10분 이내 이동 불가한 지역 및
② 재난취약지역과 한계지역 밀집지역 중첩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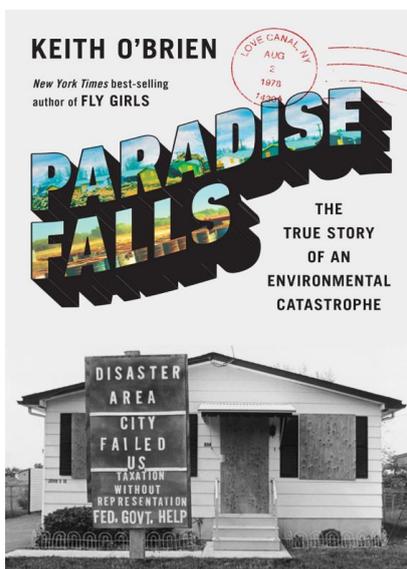
III

미국의 환경정의의 운동과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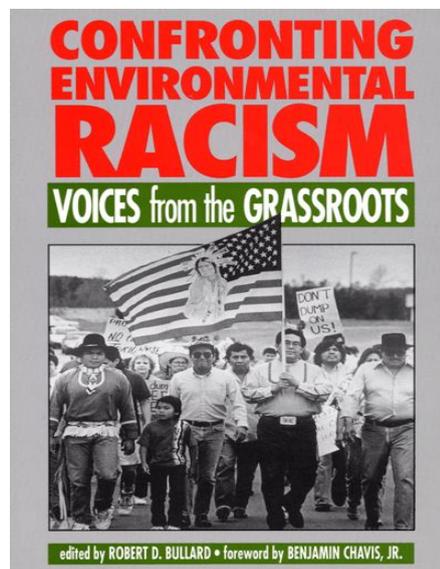
III. 미국의 환경정의의 운동과 정책

📖 러브커널 사건(1978년)과 워렌 카운티 사건(1982년)

러브커널 사건



워렌 카운티 사건



📌 제1차 전국유색인종 환경리더십회담(1991년)



1991년 제1차 전국 유색인종 환경리더십회담의 개최 목적

- (1) 유색인종 리더들이 환경부정의에 도전하는데 참여하는 국가, 지역, 현장의 조직 및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촉진한다.
- (2) 유색인종 리더들과 국가환경단체 리더들 사이에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 (3) 유색인종 리더십 관점에서 핵심적인 환경 정책 질문들을 확인한다.
- (4)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환경정의를 위한 공공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출처 : Lee, Charles, 1992, Proceedings: The national People of Color Environmental Leadership Summit, 6쪽.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17

📌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2898호 (1994년)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환경정의의 달성을 위한 실행을 요구

- 연방정부의 정책 실행이 유색인종과 저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법이 허용하고 실행가능한 최대 수준에서 조치를 취할 것
-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
-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없애고 유색인종과 저소득 커뮤니티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참여를 보장할 것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18

미국 환경정의법 제정 (2022년 7월)

- 그동안 연방정부 차원의 법률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 차원에서 추진되던 환경정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정의법이 2022년 7월 통과됨



Environmental Justice for All Act

- Provides funding to support communities and workers as they transition away from oil, gas, and coal industries to renewable energy.
- Requires oversight of permits to ensure that projects do not demonstrate harm to human health.
- Provides funding for research and programs that would help reduce health disparities and improve public health in environmental justice communities.

Rep. Raúl Grijalva (AZ-03)

CONGRESSIONAL HISPANIC CAUCUS

미국 환경청(EPA)의 EJSCREEN

- EPA는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정책, 사업을 개발할 때 추가적인 고려, 분석, 현장탐사 등이 필요한 후보지역들을 식별하기 위해 EJSCREEN을 사용
- * 2015년 시험판을 개발하여 공개한 후 2016년 최종판이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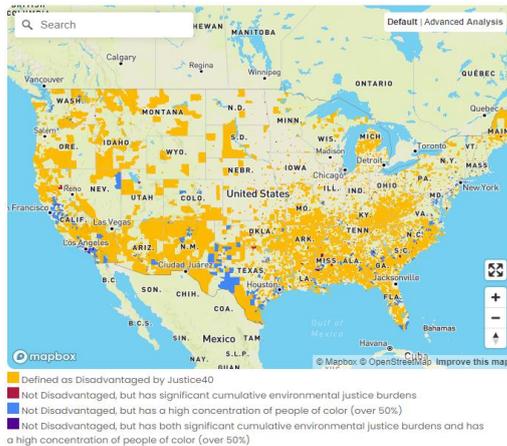
EPA uses EJSCREEN in the following ways:

- for public outreach and engagement
- enforcement targeting
- inclusion in inspection reports
- permitting and NEPA reviews
- reviews of grant projects
- other place-based initiatives
- inclusion in CCDS/ICIS
- retrospective reporting



📍 미국 바이든 정부의 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린 행정명령 14008에서 기후 및 경제 정의의 스크리닝 도구 개발 요구
- 연방기관이 주변화되고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오염부담이 가중된 취약지역(disadvantaged communities)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 특별히 Justice40 사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



What is the Justice40 initiative?

The Justice40 Initiative aims to deliver 40 percent of the overall benefits of federal investments in climate and clean energy, includ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to disadvantaged communities. But how are those communities determined, and who is left out?

This analysis looks at which communities are defined as disadvantaged in the [Justice40 beta screening tool](#) and which communities fall short. To get started, pick a census tract to see how that community scores.

Video Walkthrough

If you're new to using this tool, here's a [video walkthrough](#) of CNT's analysis of the 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data.

Census Tract: Select a census tract by clicking a location on the map.

📍 캘리포니아주의 환경정의 지도 (CalEnviroScreen)

- 2013년 CalEPA의 환경건강위해평가국에서 개발하여 공개함(버전4까지 업데이트됨)
- 다양한 오염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건강 및 사회경제적 상태에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상위 25%)를 식별함(기후-환경 예산의 20%를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함)

What is CalEnviroScreen?

UPDATE TO THE CALIFORNIA COMMUNITIES ENVIRONMENTAL HEALTH SCREENING TOOL:

CALENVIROSCREEN 4.0

PUBLIC REVIEW DRAFT

CalEnviroScreen

February 2021

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https://oehha.ca.gov/calenviroscreen>

- Mapping tool that helps identify California communities burdened by multiple sources of pollution and population vulnerability
- 21 indicators combined into a single score
- Census tract scale
- The draft of CalEnviroScreen 4.0 was released for public comment in February

캘리포니아주의 환경정의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

- 환경오염과 환경위해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비영리조직과 원주민 조직에게 환경정의 이슈를 다루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공모 방식으로 진행됨
- 주요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민 주도 사업 개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개선, 유해물질 감축,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문화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 사업 등임

캘리포니아주 환경정의 소규모 지원 프로그램 사례 (2022년, 일부)

영역	정의	지원액
Frontline Catalysts	방과후 기후 정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진행, 공동체 과학 프로젝트, 관계 형성 프로그램, 시민참여 활동 등 포함	\$49,623
Humboldt Baykeeper	해수면 및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독성물질 오염 지역의 영향 분석, 복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도구 개발, 원주민의 기후적응계획 지원	\$48,691
Insight Garden Program	교도소 수감자 450명 대상, '환경정의 퍼실리테이터' 자격증 교육, 교도소 출소자와 함께 하는 환경정의 재진입 세션 개최	\$50,000
One Step a la Vez	기후 회복력, 환경 이슈, 전통생태지식 등에 대한 15차례의 서베이 회의, 간략보고서, 인포그래픽, 다언어 웹 포털 제작	\$49,868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커뮤니티 기반 환경영향평가 시행	\$50,000
The Sierra Fund	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광해 노출을 피하는 방법 교육, 역사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원주민, 스페인어 사용자, 저소득 가구 대상	\$50,000

출처 : <https://calepa.ca.gov/envjustice/funding/smallgrants/2022-environmental-justice-small-grants-project-summaries/>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23

시애틀시의 환경정의기금 지원사업

- 시애틀시는 2017년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이민자, 난민, 저소득층, 청소년 및 노년층과 같이 환경 및 기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의기금(environmental justice fund)을 조성함

시애틀시 환경정의기금 선정 프로젝트 (2021년, 일부)

영역	정의	지원액
Delridge Neighborhood Development Association (DNDA)	유색인종 청소년에게 자연환경 관련 일자리를 제공. 참여 청소년들이 환경정의 이슈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	\$56,012
The Doorway Project	도시정원 인턴십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땅과 자아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64,450
Y-WE (Young Women Empowered)	청소년 여성에게 소외된 유색인종 커뮤니티에서 환경정의와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게끔 지원함	\$75,000
Basilica Bio	도시농업 현장을 모바일 교실로 활용하여, 도시농업 및 도시정원 기술을 익히고 지역식량체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끔 지원함	\$61,050
Sawhorse Revolution	지역 내 친환경건축 관계자들과 함께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에게 그린빌딩 설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녹색일자리를 소개함	\$35,362
Wa Na Wari	청소년들이 토양 회복에 대한 지식과 문화를 지역 BIPOC 커뮤니티 내 어른들과 교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75,000

출처 : <https://www.seattle.gov/environment/equity-and-environment/equity-and-environment-initiative/environmental-justice-fund>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24

시애틀시 환경정의기금 프로젝트 선정 기준

- 신청자가 해당 커뮤니티에 거주하거나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환경정이나 기후정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취약 커뮤니티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기준임

시애틀시 환경정의기금 프로젝트 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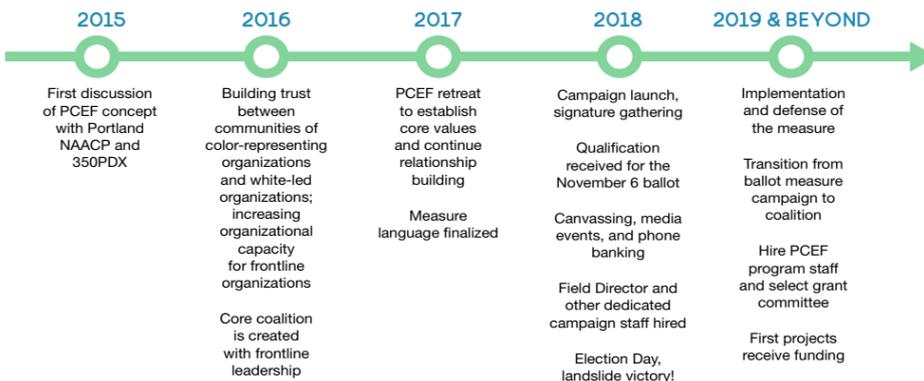
- 조직**
 - 신청자(신청기관)는 커뮤니티에 밀착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함. 조직의 직원이나 커뮤니티 그룹이 해당 커뮤니티에 속해있어야함
 - 인종적 정의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에 포함되어야함
- 프로젝트**
 - 프로젝트는 환경정이나 기후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내야함
 - 신청자(신청기관)는 커뮤니티 이슈를 깊게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함
 - 좋은 계획 과정을 담고 있어야함
 - 목표는 명확하고 결과는 달성가능해야함
 - 실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과 커뮤니티 자원(파트너십 등)이 있어야함
- 사람**
 - 커뮤니티 구성원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데 참여하고 있어야함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자원활동가의 수가 적절하고, 활동을 위한 기술/전문성/경험을 지녀야함
- 영향**
 - 환경정의 이슈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들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아야함(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이민자, 피난민, 저소득가구, 청소년, 노인 등)
 - 환경정의와 기후정의 이슈를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해야함
 - 평등과 환경의제, 모두를 위한 건강한 환경, 일자리, 지역경제와 청년의 경로, 환경 내러티브 및 커뮤니티 리더십에서 확인된 커뮤니티 우선순위를 진전시켜야함
- 기타**
 - 지리, 인종·문화적 커뮤니티, 기존에 잘 인지되지 못한 접근들을 다루어야함

출처 : Seattle Office of Sustainability & Environment, 2021, Environmental Justice Fund 2021 Guidelines

미국 포틀랜드시 청정에너지 커뮤니티 혜택 기금

- 포틀랜드시의 풀뿌리 조직들이 기후위기 최전선 공동체를 위한 포틀랜드 청정에너지펀드(PCEF)를 만들어 냄
- 2018년 11월 주민 투표를 통해 포틀랜드내 대규모 유통업체들(연간 판매액 10억 달러 이상 기업 대상. 식품점, 의약, 발전, 건강돌봄서비스 제외)을 대상으로 수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부과하여 기금 자원 마련하는 법안 통과
- 매년 8,000~9,000만 달러. 최전선 공동체에 기금 지원. 2021년 기준 45개 조직에 860만 달러 지원

TIMELINE OF KEY MILESTONES



IV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 이슈

IV.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 이슈

환경정책 이슈 선정

- 충남 환경계획의 전략 분야에 맞추어 생태환경, 생활환경, 기후·에너지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 정책 및 사례를 선정
- 연구진 회의, 충남 내 환경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환경민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대상 정책 사례를 선정

환경정책 이슈별, 환경정의 원칙별 문제점 및 정책과제

분야	주요 정책과제	정책 제안 사례			시스템 전환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생산적	인정적	회복적
생태환경	자연공원 주민지원(도립공원)						
	장항제련소 오염정화부지 생태복원						
	송전선로 건설과 보호구역 지정						
생활환경	대규모 산업단지(석유화학) 주변지역						
	개별입지 공장 주변지역						
	폐석면광산 관리 및 석면피해정책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축사 밀집 지역						
기후·에너지	비행장/사격장 주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농어촌 재생에너지 갈등 에너지 복지						

IV.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 이슈

🏠 생태환경 분야 정책과제

환경정책 이슈별, 환경정의 원칙별 문제점 및 정책과제

생태환경 분야

정책 및 사례	시스템 유지			비고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자연공원 주민지원(도립공원)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주민 피해)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탑방객 편익)	주민참여 절차, 주민 대표 조직, 정보 생산·제공 없음	국립공원은 주민지원사업 실행 중 도립공원은 주민지원사업 위한 예산 확보 미흡	자연공원법 개정(2005년), 공원 내 주민 지원 가능 자연공원 입장료 폐지
장항제련소 오염정화부지 생태복원	주변지역 영향권역 구분에 따른 보상방법/수준 차이	주민 대책위, 지역언론, 전문가 결합된 활동 (공론화 주도, 정부대책 요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2016년) 국가/기업의 책임 부담	2009년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
송전선로 건설과 보호구역 지정 (당진 소들섬)	송변전설비 선하지 주민의 피해 (356kV 이상 송전선로 주민 보상)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의제 처리 주민대책위 활동 (노선변경 및 지중화 요구, 한전 거부)	공사중지명령(재판 중 공사 완료) 법원 판결의 해석 지중화의 건강영향(비용 추가)	2014년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정책 및 사례	시스템 전환			비고
	생산적	인정적	회복적	
자연공원 주민지원(도립공원)	-	보전·관리 주체의 확대 (보호지역 내 주민의 역할, 자연환경단체의 역할)	보호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입장료, 기부금, 개발사업 부담금 확대 필요성)	보호지역 질적 향상 목표 도립공원 국립공원화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장항제련소 오염정화부지 생태복원	굴뚝 철거 여부 도시재생 연계 생태산업 육성	오염부지 이주민, 경계 밖 주민 역할 도요물폐사의 고려	생태복원/도시재생 과정에서 구)장항 제련소 시설/부지 기업의 책임/역할	2022년 생태복원추진 중
송전선로 건설과 보호구역 지정 (당진 소들섬)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전환 (송전선로 건설·관리 변화)	소들섬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정 (조사, 보전·관리, 향후 개발에 대한 방어)	건설 완료된 송전탑의 철거 여부 (비용부담 여부) 소들섬 생태 보전을 위한 협력 가능성(한전 참여)	2022년 소들섬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29

IV.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 이슈

🏠 생활환경 분야 정책과제

환경정책 이슈별, 환경정의 원칙별 문제점 및 정책과제

생활환경 분야

정책 및 사례	시스템 유지			비고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대규모 산업단지(석유화학) 주변지역	환경오염, 화학사고 발생 거리에 따른 산업단지 피해/해택 인지 차이	환경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조례 제정 요구, 화학사고 대응 파트너십 형성)	주민건강영향조사(2018~2022) 화학사고지역 대비체계 구축사업 선정 (2020년) / 주변지역 지원법률 미제정	석유화학기업 개별 입지, 이후 주변 국가/일반산업단 조성
폐석면광산 관리 및 석면피해정책	충남 석면광산 밀집, 석면피해자 최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구성, 전국석면 피해자와 가족협회 구성(제도화 요구) 실태조사 강화 및 정보 제공 필요	석면피해자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원 석면피해자 지원 대상/기간/프로그램 확대 필요 일상공간 석면관리 강화 필요	석면피해구제법(2011년)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불법폐기물 매립 피해 운영중/종료 매립장 유출사고 및 사후관리 미흡 신규 매립장 건설 계획 갈등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전국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방치폐기물 종합대책 시행(2022년까지 처리 목표) 폐기물 발생지역 책임원칙 제도화 필요	산업폐기물처리 민영화

정책 및 사례	시스템 전환			비고
	생산적	인정적	회복적	
대규모 산업단지(석유화학) 주변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전환 구상(중소 기업 지원, 정의로운전환 준비 필요)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RE100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 화학사고 파트너십과의 관계	석유화학기업의 ESR 검토(그린워싱 여부)	탈플라스틱 정책 탄소중립 정책
폐석면광산 관리 및 석면피해정책	-	석면피해자 추가 발굴(원거의 거주 주민 조사, 주기적인 건강조사)	석면피해 역사에 대한 기록, 석면피해 기록관 설립·운영	환경보건법 개정(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이행 강화)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 매립장 관리 강화	농지와 임야의 사회적 가치 인정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개선 (전역 국가 귀속→지역배분), 협력적 갈등 해소 위한 재원 활용	산업폐기물처리 재공영화

30

IV.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 이슈

회복탄력성(기후·에너지) 분야 정책과제

환경정책 이슈별, 환경정의 원칙별 문제점 및 정책과제

회복탄력성 분야

정책 및 사례	시스템 유지			비고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환경오염 피해(주변지역/전국단위) 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지역경제 부정적 영향	전원개발촉진법 지역내 발전소 건설 반대와 건설 찬성 갈등 발전소 폐쇄 관련 법 없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개선 필요성) 지역자원시설세(인상 요구)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정당한 전환 특별지구, 지원센터, 기금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 시스템 (전력수급계획) 탄소중립기본법(정기로운전환 규정 포함)
에너지 복지	저소득가구의 에너지비용 지출 부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농촌)	하향식 정책 수립 집행 및 법적 근거 미약(바우처사업만 명시적) 연탄은행 등 자선활동 중심	도시가스미보급지역 LPG지원사업 (마을/읍·면/시·군 단위) 현물/현금 지원 주택에너지효율개선	2006년 에너지법 제정 (에너지빈곤 명시)

정책 및 사례	시스템 전환			비고
	생산적	인정적	회복적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탄소중립경제/녹색산업 육성 과제 지역내 좋은 녹색일자리 창출 필요성 지역순환형 경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영향받는 지역사회/노동자 구성의 다양성 인정 기후위기 당사자 목소리 듣기	정기로운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폐부지/폐시설 복원 포함) 산업유산형 예코뮤지엄 추진 필요성	녹색성장/녹색전환/심층적응의 상이한 전망 긍정적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 대응
에너지 복지	도시가스미보급지역 대책 시 탄소중립 고려 필요 연탄난방가구 대책 필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에너지 빈곤층의 의견 대변 필요	삶의 질 개선, 건강영향 측면의 에너지복지 접근 필요	탄소중립 화석연료보조금 폐지(2025년)

IV.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 이슈

환경정의 원칙별 시사점

환경정의 3+3 원칙별 시사점

시스템 유지

01 분배적 정의

- 충남 내 특정 시·군, 읍면동에 집중된 환경피해 (발전소, 송전선로, 석유화학산업단지, 축사, 오염부지, 석면광산 등)
- 전국적 차원에서 저소득지역/농촌지역 집중된 환경피해(자연공원, 개별입지공장, 산폐장, 군용 비행장/사격장, 에너지빈곤 등)

02 절차적 정의

- 전반적으로 정보 생산 및 접근성, 소송 지원, 협력적 갈등관리 시스템 등 미흡(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성)
- 주민조직 구성 여부, 전문가 등 결합 여부, 전국네트워크화에 따라 정책 개입 효과 상이

시스템 전환

03 교정적 정의

- 주변지역 지원제도 마련(정책확산?), 경계 내/외 지역의 격차 고려 필요성
- 건강영향조사 및 구제제도 마련, 사후대책 및 대상자 확대 필요성

01 생산적 정의

- 기후위기(탄소중립), 생태위기(생물다양성), 팬데믹위기(건강관리)로 사회적 시스템 대전환 추진

02 인정적 정의

- 주변지역 지원제도, 거버넌스, 대책의 변화 필요성 증대
- 당사자의 확장 또는 연계 필요성 증대

03 회복적 정의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의 확대 (기업의 ESG의 진정성)
- 피해의 조사·기록, 훼손 지역의 복원, (보상을 넘어) 삶·공동체의 복원 필요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32

- 420 -

V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충남 환경정책의 과제

V.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충남 환경정책의 과제



환경정의 제도 준비 단계

환경정의 아카이브 구축 회복적 정의

- 충남 내 환경정의 사례 발굴, 기록, 공유
- 환경정의 아카이브 구축팀 구성·운영

환경정의 아카데미 개최 절차적 정의

- 공무원, 활동가, 취약지역 주민 대상 환경정의 교육 진행
- 지식 전달부터 전문자격 획득까지 수준별 과정 운영, 에너지·기후·식량·주거정의 등 연관 분야 확대

환경정의 대화마당 운영 회복적 정의

- 충남 내 환경 갈등 당사자 간담회
- 대면 조사, 심층 인터뷰, 커뮤니티 대화, 설문조사 진행 등 다양한 형식
- 관계 회복 또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의 주제도 제작 연구 절차적 정의

- 환경정의 지표 개발 전 다양한 주제도 제작 방법론 개발 (관련 데이터 확보 방안 연구 포함)

환경정의 제도 구축 단계

환경정의 관련 조례 제·개정

절차적 정의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기본개념을 반영하여 충남 환경기본조례 개정(또는 환경정의조례 제정)
- 환경정의 위원회, 기본계획, 공간지도, 취약지역 지원사업, 기금 등의 규정 포함

충남 환경정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적 정의

- 환경정의 준비단계의 참여자와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정의 기본계획 수립
- 행정의 사업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역할 부여

환경정의 전담팀 구성

교정적 정의

- 환경정의 이슈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운영
- 지표, 공간지도, 취약지역 지원사업, 아카이브 구축, 기금 운영, 정책 모니터링·평가 담당

충남 환경정의 지표 개발

절차적 정의

- 국내·외 환경정의 지표 사례 및 준비단계에서 제작된 주제도를 참고하여 환경정의 지표 개발

충남 환경정의 지도 제작

절차적 정의

- 도민들이 활용가능한 환경정의 지도 제작·운영
- 환경정의 취약지역 선정 방법론 개발·적용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35

환경정의 제도 안착 단계

과학상점 및 공동체 시민과학 프로그램

절차적 정의

- 환경정의 취약지역 주민들의 조사·연구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상점 운영
- 환경정의 지도 업데이트를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그램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 지역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정의 취약지역에서 오염시설 계획 또는 확장 추진 시 환경정의 영향평가 또는 보고서 제출 의무화

환경정의 취약지역 지원 사업

분배적 정의

- 환경정의 지도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취약지역 역량 구축, 계획 수립, 교육, 돌봄, 일자리 창출 등 소규모 지원사업 추진

환경정의기금 마련(정부 정책화)

분배적 정의

- 기존 환경정의 관련 부과금 및 기금 조사
- 취약지역 대상 환경정의 관련 기금 활용 정부 제안 (지자체 배분 요구 포함)
- 환경정의기금 조성 방안 정부 제안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36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충남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이 샘 책임연구원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2022.12

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금강하구의
현황

III

하구 생태복원
관련 주요 이슈

IV

연구 내용

V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목적

- ① 금강 하구 기수역 현안 및 문제점 확인
- ② 국내 주요 강·하구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충남 금강 하구 생태복원의 정책방향 제시
- ③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수자원부문) 검토를 통해 환경편익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강조

연구내용

- ① 금강 하구호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② 국내 통합 물관리 정책과 국내 강·하구 사례분석
- ③ 하구관련 법·제도적, 환경경제학적 측면 주요 이슈
- ④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19) 이후 수자원부문 사업 환경편익 분류체계 확인

정책제안

- ①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해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통합성 확보
- ② 금강 하구호 환경편익 분류체계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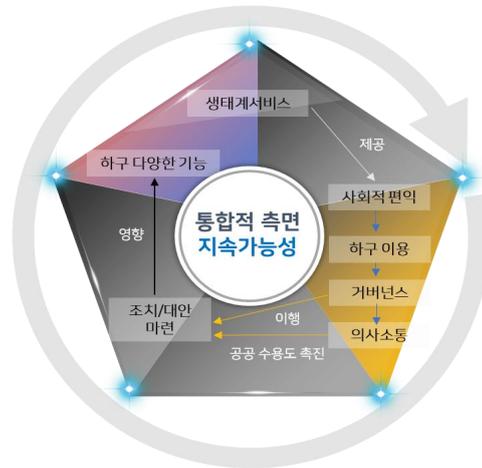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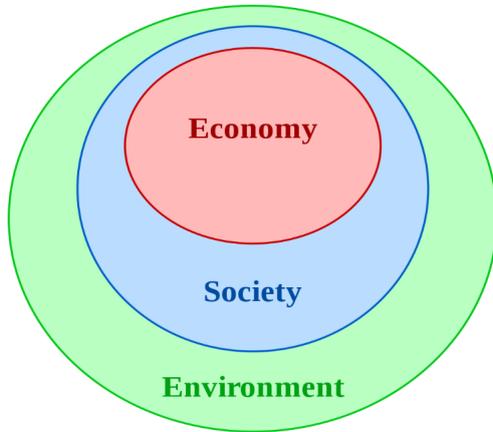
I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의 목적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기후위기, 탄소중립, 인구감소, 포스트 팬데믹(Post-Pandemic)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 → 통합적 측면 '환경성' 강조된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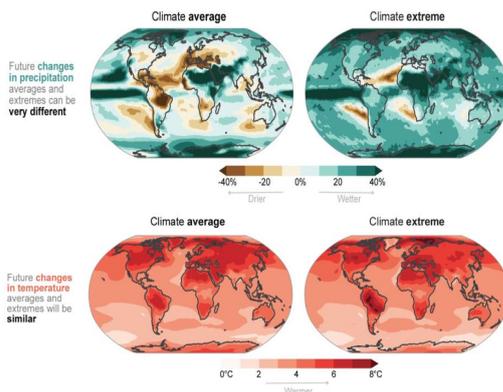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01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재해 재난 불규칙적으로 발생
 - 집중호우 빈도 및 강도 증가, 강우 일수 감소
 - 국내 홍수발생 현황('01~'20), 연평균강수량 증가 1,274→1,441mm/yr(13% 증가)
 - 극한 가뭄과 홍수 발생 등 물 관리 여건 악화 대응 필요

Warming is already occurring in all areas of the globe, but models of future temperatures show that the changes will not be distributed equally. Polar regions and land areas are expected to see the largest temperature changes. Future changes in precipitation will vary regionally, with some parts of the globe likely to become wetter and other areas projected to become drier.



IPCC Working Group I, 2021

The Korea Herald

Climate change makes summers longer, winters hotter and shorter in Korea

It said global warming and urbanization have progressed faster on the peninsula than the global average over the past century, as rises in its annual average temperature and carbon dioxide density were 0.8 C and 6.5 ppm higher compared to those of the entire earth.

The report also said summer became 20 days longer on the peninsula and winter 22 days shorter between the 1912-1940 and 1991-2020 periods.

Thus, the start dates of spring and summer also became faster by 17 days and 11 days, respectively. In the last 30 decades, summer has become the longest season with 118 days and autumn the shortest with 69 days.

The KMA report said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for the past 109 years has steadily increased by 0.2 C every 10 years, and temperature rises were particularly evident in spring and winter.

Spring posted the steepest temperature rise of 0.26 C per decade, followed by 0.24 C in winter, 0.17 C in fall and 0.12 C in summer.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02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기후변화 불확실성 증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한 점차 다양한 방안 필요
 - 기존의 예측이 아닌 겪지 못한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기후변화 평가 및 적응대책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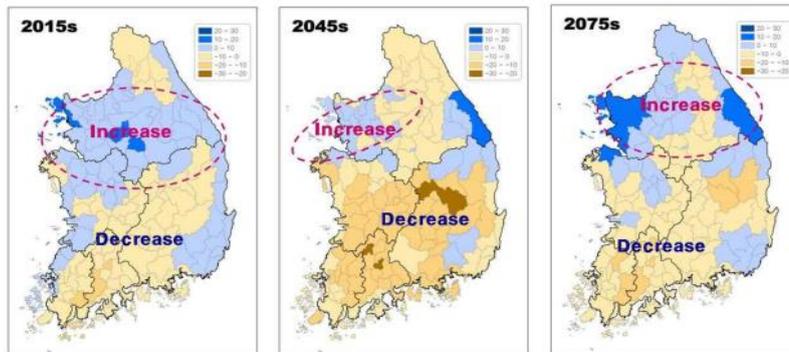


Fig. 1. Runoff Change Ratio (%) for 2015s, 2045s and 2075s Relative to the Reference Period under the A2 Scenario in Korean Sub-Basins (Bae et al., 2008b)

(GCM과 수문모형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 수자원 전망, 배덕호 외, 2011)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최근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수준 제고
 -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 수립
 - 2050 탄소중립 선언, 전세계적 목표 설정에 따라 물 관리 전 과정의 탄소중립 기여 필요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410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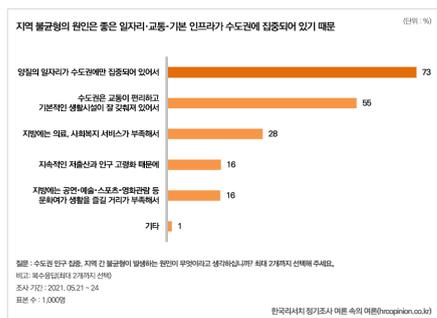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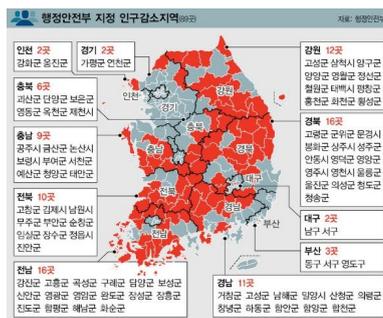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양극화 격차 감소, 기후위기와 인구소멸 대응/적응을 위한 지역균형 대책 요구 → 국가 역할 점차 증대 예상

정부 예산/공공투자 환경 분야 여전히 낮은 수준

재정 운영측면에서 인구정책 + 지역균형발전측면 연계 향후 물 인프라 투자 방향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 필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05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환경권·안전권 기반으로 시대적·정책적 요구에 맞춘 물관리 정책 필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핵심의제

- 물 관리 중요 분야간 "통합적 관리 시대"로 이미 진입
- 수량, 수질, 수생태계 등 기본적 물 관리 분야 통합 + 물 이용 가치의 사회경제적 철학 개념 통합
- 지속 가능한 공공재로서 물 가치의 실질적 관리 과정에서의 효율성, 형평성과 참여 중심의 유역기반 관리로의 전환도 제시

- 물-국토 주요 이슈
- 국토환경: 환경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국토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과제 중 하나. 국토환경 중장기 여건 변화를 기후환경, 사회경제, 정치행정 측면에서 진단 필요
- 자연환경: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 보호·복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 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 및 자연공간에 대한 요구 증가. 생태복원과 자연기반 흡수원등 관련 정책수요 증가로 자연환경 부문 정책 추진 여건은 양호
- 생활환경: 물과 관련된 재해와 하천 생태계에 관한 관심 증가. 수질과 먹는 물에 관한 관심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물수요 변화. 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물수요 패턴의 변화가 관찰

(KEI, 뉴노멀 환경현안에 대한 중장기 환경정책 발굴 연구: 물-국토 부문, 2022)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06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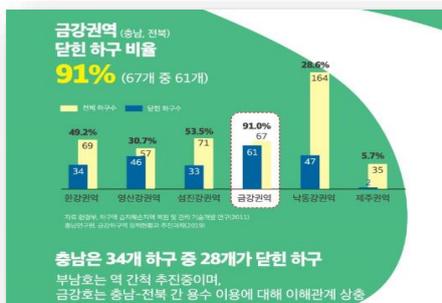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금강하구의 현황

II. 금강하구의 현황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금강하구의 생태복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달린 하구: 하구인공구조물에 의해 하구 순환 차단, 자연생태 고유 특성 상실 하구
- 충남 내·외 지역개발 V.S. 물환경 보전의 경합지역
- 수질과 수량확보 필요지역으로 농업, 공업 등 산업별/지역별 물관리 갈등 유발 지역



물환경 보전

- 수질 6등급까지 나빠지는 등 수질문제 심각
- 김제, 군산, 부안, 익산지역의 농·공업용수 취수원
→ 연간 4억 3천만톤의 물 공급
- 저지대 침수 피해, 염해 피해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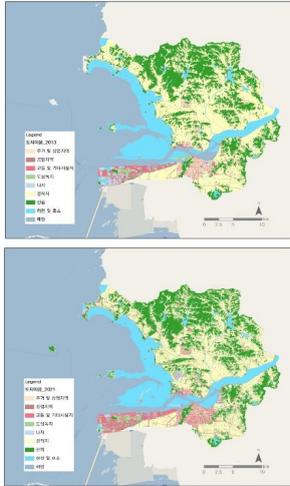


지역 개발

- 금란도 개발, 200여 만㎡에 4천344억원 투입, 대규모 공원 등 조성
- 금란도-상항항 포함한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용역도 함께 추진
- 군산시, 금란도 해상매립지 항만재개발 본격화

시대적,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금강하구의 생태복원 정책 방향 설정 필요

- 2021년 기준 2013년에 비해 토지이용 변화: 공업지역과 교통 및 기타 시설지 증가
- 금강 하류지역 중심으로 남조류 독소문제 대두, 수생태 건강성 D(나쁨)~E(매우 나쁨)



[2013년, 2021년 토지이용 변화]



[금강도 200여 만㎡에 4천344억원 투입, 대규모 공원 등 조성]
[금강도-장항항 포함한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용역도 함께 추진]



[퇴적토 증가로 인한 기수역 역할 상실]
[남조류 독소문제, 수생태계 악화 심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10

III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하구 생태복원 관련 주요 이슈

Ⅲ. 하구 생태복원 관련 주요 이슈

📍 국내 강 주요 이슈(문제점)와 시사점(자문결과)

한강

- 신곡수중보 이설
- 하구습지 복원
- 수산자원(황복 등) 복원
- 습지이용시설 설치



- 개발과 환경사이에서 개발사업 위주로의 사업
-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요구되는 하구의 모습에 관한 다각적 논의 필요
- 생태계 서비스의 편익 측면에 대한 논의 필요
- 다양한 주체와 지역 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
- 기술적 논의 + 하구 복원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낙동강

- 하굿둑 해수 유동
- 대규모 하천 정비 영향
- 하구호 수질개선
- 소형어선 뱃길 유지



- 초기 지역내 낙동강 하구 보전을 위한 낙동강 협의회 구성 되었으나, 현재 협의회 사라짐
- 지역차원에서 예산과 갈등조정 과정 등 한계
- 하향식 계획수립 과정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 하구관리종합대책 수립 필요
-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방안 필요

영산강

- 해수 침투범위 확대
- 수산자원(재첩 등) 복원
- 갯벌 매립(서식지 훼손)



- 방조제, 간척 농경지 조성에 따른 연안습지 면적
- 정확한 조사, 모니터링 데이터, 체계적 계획 부재
-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방안 필요
- 하구관리종합대책 수립 필요
- 지역차원에서 예산과 갈등조정 과정 등 한계
- 하향식 계획수립 과정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 지속적 축적된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필요
- 하구 복원 주류화를 위한 상위 보전계획과 도시계획에 사업 포함 추진 필요
-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와 공감대 필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11

Ⅲ. 하구 생태복원 관련 주요 이슈

📍 하구 관련 법·제도적 관점(자문결과)

법·제도적 측면

복원·관리대상으로서 하구(역)의 (하천·해양) 차별화된 법적 지위 정립 필요
복원·관리를 정책목적으로 하는 하구(역)의 개념과 범위의 명확한 설정 필요

• 하천(육역)과 해양(연안역)으로 양분된 기존 관리체계에서 통합적 접근 전략 요구

→ 금강하구 대상 별도의 특별관리구역(수역)제도 창설로 통합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 현재는 「하천법」, 「4대강 특별법」, 「습지보전법」,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하천(육역)과 해양(연안역)을 아우르는 다수 관계 법령을 근거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지자체 등 소관 부처에 따라 특정 영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관리체계를 분산 운영

• 금강하구를 구성하는 하천(육역)과 해양(연안역)에 중첩적으로 적용되거나, 그 관리주체가 다소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각종 보호·보전지역·지구 지정·운영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관리구역 지정·운영제도를 법제화 필요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12

Ⅲ. 하구 생태복원 관련 주요 이슈

하구 관련 환경경제학적 관점(자문결과)

하구의 정량적, 정성적 가치 추정을 위한 환경편익의 분류체계 재정립
+ 사회적 수용성 최대화 → 통합적 틀에서의 전략

환경 경제학적 측면

01 생태계서비스 관점에서 평가

- 금강하구는 낙동강하구와 동일하게 하구둑 개방과 기수역 확대 중요한 이슈
- 공급, 조절, 문화 서비스 외에도 생태계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원서비스를 편익추정의 대상에 포함 필요

03 사회적 관점에서는 수용성을 최대화하는 전략

- 하구복원의 방향은 주요 4개강 하구별로 처한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 가능하지만,
-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정책수용성을 최대화하는 전략 필요

“ 하구의 어떤 기능을 높여 편익을 극대화할 것인지 환경경제적 관점에서 판단 요구 ”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13

Ⅲ. 하구 생태복원 관련 주요 이슈

하구 관련 환경경제학적 관점

금강하구 환경편익 분류체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예타') 분석 항목 검토 : 수자원 부문사업 항목과 연계

-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에 근거)

- 예산낭비와 사업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
- * 공공투자사업관리: 예타(기재부) → 타당성조사(주무부처) → 설계 → 보상 → 시공
- * 총 사업비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신규사업이 예타의 대상 (국가재정법 제38조)



[’22 충남 해수 유통 실증실험추진 (3km)]

향후 충남 시나리오



[하구둑 상류 취양수장 상류이설 (안), 배수갑문 신규 설치 (안)]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14

IV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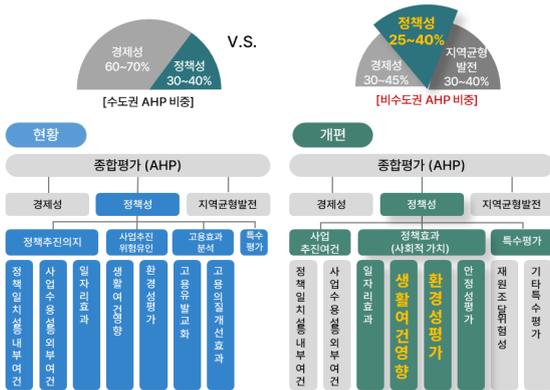
IV. 연구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익 부문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개편('19.4)

다양한 "사회적 가치" 수요증대를 반영하여 '정책성'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편입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 (가중치) 차등
- 정책성 평가 내실화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정책효과 항목 신설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예비타당성조사수행유연세부지침일부만연구

경제성이 예타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 사회적 가치반영이 부족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일자리 효과 (직접+간접)	사업기간 재정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운영기간 직접고용, 사업완료후 간접고용, 고용의 질 제고, 취약계층 고용 등
생활여건 영향 (접근성, 보건 등)	접근성,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공동체 복원 등
환경성 평가 (+, - 영향)	환경문제발생가능성, 지역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안전성 평가 (방재, 사고 등)	재해·재난예방 및 대응가능성과 피해규모 효과, 사업추진 중/완료 후 안전사고, 시스템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효과 등

제22조(편익항목의 식별)

수행기관은 편익 추정을 위해 우선 편익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익은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하게 선정한다.
2. 편익은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항목을 고려한다.

제23조(편익항목의 조정)

- ① 수행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원칙으로 정하는 편익항목을 제거하거나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편익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수행기관은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수행기관은 개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익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편익은 **증상기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의 부문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KDI 보고서 검토

'19~'22 KDI 보고서 수자원부문

- 15개 사업 '편익추정', 정책효과 '환경성 평가부문' 검토

<p>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p> <p>- 목 차 -</p> <p>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p> <p>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p> <p>제 III 장 수요 추정</p> <p>제 IV 장 비용 추정</p> <p>제 V 장 편의 추정</p> <p>제 VI 장 경제성 분석</p> <p>제 VII 장 정책성 분석</p> <p>제 1 절 정책성 분석 체계</p> <p>제 2 절 사업 추진여건</p> <p>제 3 절 정책 효과</p> <p>1. 기본 방향</p> <p>2. 일자리 효과</p> <p>3. 생활여건 영향</p> <p>4. 환경성 평가</p> <p>5. 안전성 평가</p> <p>제 VIII 장 지역균형발전 분석</p> <p>제 IX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p> <p>(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KDI, 2022)</p>	<p>상·하수도</p> <p>광역상수도 복선화,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구축</p>	<p>수도권(V)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p> <p>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p> <p>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p>
	<p>정수장</p> <p>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p>	<p>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사업</p> <p>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p> <p>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p>
<p>댐·하천</p> <p>낙동강 먹는물 댐</p> <p>하천정비, 하천환경조성, 하천재해</p>	<p>농업·공업 용수</p> <p>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p> <p>농촌용수개발</p>	<p>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p> <p>댐 안전성강화(II단계, 다목적댐) 사업</p> <p>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p> <p>원주천 하천재해 예방사업</p> <p>나진포천 하천환경 조성사업</p> <p>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3차)</p> <p>마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p> <p>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p> <p>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p>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의 부문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KDI 보고서 검토

편익추정 부문: 사업에 대한 소비자 후생 증가분 CVM 적용

- 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 관로복선화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의 수도요금 외에 추가로 1,000원/인 사용자의 지불의사
- 용수 공급신뢰도 개선에 대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용가의 추가적인 지불의사 도출을 통해 추정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 경제적 추가치(TEV) 유형, 추정기법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서비스 범주	직접사용가치	간접사용가치	선택/유선가치	존재가치	
생태계서비스	원재: 개인후생	원재: 사회후생	미래: 개인 사회적 후생		
문화/레크리에이션	회피비용법	헤도닉가격법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기후/대기조절	회피비용법	헤도닉가격법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물(홍물) 조절	회피비용법	헤도닉가격법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폐기물 처리	회피비용법	헤도닉가격법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자연재해 조절	회피비용법	헤도닉가격법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지식서비스	여행비용법	관련충지출액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생물종다양성	여행비용법	관련충지출액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토양형성	여행비용법	관련충지출액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문화/레크리에이션	여행비용법	관련충지출액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교육/과학	여행비용법	관련충지출액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예술/문화유산	여행비용법	관련충지출액	조건부가치 측정법(CVM)	선택실험법(CM)	

□ 결론적/정책적 실효성 관점에서의 한계점

전문가 인터뷰: KDI, 공공투자센터

"기존의 모든 사업 등에 대한 편익을 CVM에 태워서, 너무 CVM을 과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루어진 사업과의 일관성 때문
- CM의 경우 항목을 세분화하고 제시기준 항목을 세분화함에 있어 추정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방법
- 탈락된 사업에서 새로운 CM과 비교해 편익이 높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사업 시행 여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법론을 바꾸기 어려움
- TCM의 경우 '원'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편익이 작게 나와 예타 500억-1000억의 기준에 있어서 적은 편익추정으로 실질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음
- CVM 한계점은 모든 사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WTP가 추정되어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

IV. 연구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의 부문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KDI 보고서 검토

편익추정 부문: 조건부 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행하지 않음 지적

“관련문헌 검토 결과 본 사업시행 시 직 간접적으로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될 경우 수질개선(BOD, T-P 저감), 건전화 방지 등의 효과가 예측되며 이로 인한 생태보존, 친수공간 확보 등 사회 환경측면의 개선이 기대된다. 하지만, 본 사업은 하천의 수질개선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하천의 수질 모형 분석 등을 통한 가치평가(CVM, 대체시설비용법)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 대신 공급량(률)을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표 VI-40> 하천유지용수 공급가치

구분	분석기준	분석방법	공급효과	공급가치
수자원사업의 환경적 가치추진 방안(2019)	국내 수자원의 가치	대체시설 비용법	월 1톤의 BOD 저감	139.41원/톤
농업용수(주방용수) 특용공급사업	KDI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 연평균: 0.703m³/ha 일회 - BOD(㎖/L): 5.07 ~ 4.86 - T-P(㎖/L): 0.248 ~ 0.223	4,843원/가 가치당
영산강 유역 농업용수지 특용공급사업	KDI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 수질: 5 ~ 2등급	1,058원/가 가치당
충북평 도농지원 건설사업	KDI	대체시설 비용법	- 연평균: 4.76m³/ha 일회 - BOD(㎖/L): 2.207 ~ 2.109	12,880원/가 가치당
당진시 농업용수 공급사업	KDI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 갈수기 0.684m³/ha 일회 - 연회비: 평균 4.4수 ~ 1.2등급	1,283.7 ~ 2,232.7원/가 가치당
영양면 관습사업	KDI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 수질: 2 ~ 1등급	948 ~ 6,249원/가 가치당
예비타당성조사(2011)	KDI	조건부 가치 측정법 (CVM)	- 하천유지용수 0.31m³/ha 일회 - 하천의 환경 및 생태 복원	937~4,136 원/가치당
낙동강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한국경제연구원	조건부 가치 측정법	- 하천환경 개선	843원/가 가치당

<표 VI-41>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대비 수질개선 효과 관련 연구

연구명	추가 공급량(m³/ha)	BOD 부하(mg/L)
영산강 유역용수 확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2011, 김익규)	10.22	3.6 2.5 △1.1
유지용량 증가에 따른 복수천 수질 및 하천생태환경 개선 효과(2008, 최홍숙)	0.13 ~ 1.20	0.6 ~ 3.6 0.6 ~ 2.5 △0 ~ 1.1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용수 종류	편익 추정방법론	내용
생활용수	수요함수 접근법	수요측면에서 생활용수 사용에 의한 소비자들의 효용을 편익화
공업용수	생산함수 접근법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순생산 증가를 편익화
환경개선용수	대체시설비용법	용수공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의 비용

조건부가치추정법(CVM)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추정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18

IV. 연구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의 부문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KDI 보고서 검토

정책성 분석 '환경성 평가' 부문 :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였으나 미반영

“주무부처의 해당 제출 자료는 단수 발생 시 공급필요 급수량을 모두 플라스틱 물병으로 제공할 경우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로 사고 등으로 인한 단수발생 시 대부분의 물 공급은 배수지 활용, 비상연계, 물차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플라스틱 병을 활용한 물 공급 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 목 차 -

- 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제 III 장 수요 추정
- 제 IV 장 비용 추정
- 제 V 장 편익 추정
- 제 VI 장 경제성 분석
- 제 VII 장 정책성 분석
 - 제 1 절 정책성 분석 체계
 - 제 2 절 사업 추진여건
 - 제 3 절 정책 효과
 - 1. 기본 방향
 - 2. 일자리 효과
 - 3. 생활여건 영향
 - 4. 환경성 평가
 - 5. 안전성 평가
- 제 VIII 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 제 IX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KDI, 2022)

환경편의
부분

탄소배출량 산정식

- 총 탄소배출량 = ① 플라스틱물병제조~폐기과정의 탄소배출량 + ② 운반에 따른 탄소배출량
- ① 플라스틱 탄소배출량 = 개당 탄소배출량 X 물병개수
= (0.247kgCO2/개)/1,000 X 20,320,000개 = 5,019.1tCO2
- ② 운반탄소배출량 = km당 탄소배출량 X 수송가까지 거리 X 차량대수 X 2(왕복)
= 0.22kgCO2/km(1톤)/1,000 X 60km X 40,640 X 2 = 1,072.9tCO2
- ✓ 수송가까지 거리: 60km(성남(정) 병물공장 ~ 안성관말)
- ✓ 차량대수: 40,640대(20,320,000개/500개) -1톤 트럭 2L병물 500개 적재 가능

(수도권)·전주권광역상수도관로복선화사업, KDI, 2022)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19

IV. 연구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익 부문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KDI 보고서 검토

정책성 분석 '환경성 평가' 부문 : “실질적 효과를 제시하는데 한계 존재” 지적

“환경성 평가의 경우, 추가적인 하천유지용수 및 지하수 확보, 대기정화 및 산소공급 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효과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그 크기가 미미하다”

“주무부처가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사업시행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효과’, ‘대기정화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효과를 정량화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표 VI-42> 논에서 타작물 전환 시 온실가스 감축량

작 품	감축량	작 품	감축량
콩	7.89	달걀	6.93
참깨	7.71	마늘	6.85
물감자	7.47	고구마	6.18
가물감자	7.17	고추	6.31

자료: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보고서(2016), 농촌진흥청 (작물별 감축량)

(단위: CO2톤/ha)

○ 논에서 타작물 전환 시 온실가스 감축량

- 국립농원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재배면적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출해보았고 전환작물은 현재 사업지구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 한정하였음.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타작물 전환률: 10%)		
작 품	재배면적	배출가스	작 품	재배면적	배출가스
벼	4,139ha	배출량: 31,879t	콩	139ha	배출량: 88,840
			감자	139ha	농림축산검역본부 산정기준: 0.0026

(단위: 연평균 CO2톤)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효과를 추정 증수된 쌀의 탄산가스 제거량을 추정후 탄산가스의 가격을 적용 하여 평가 증수된 쌀의 산소배출량을 추정하고 이에 산소가격을 적용하여 대체법에 따라 평가
평가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소방출량가치: 680원/쌀 kg 탄산가스흡입량 × 탄산가스 중 산소비율 × 산소가격 계산식: 탄산가스 흡입량 × 탄산가스 중 산소비율 × 389,477원/톤 한국물가협회 2017년 산소 평균가격: 444원/리터(389,477원/톤, 1.14kg/L, 877.2L/톤 기준) 탄산가스 제거가치: 172.6원/쌀 kg 탄산가스흡입량 × 탄산가스 중 탄소비율 × 탄소가격 발전 시 이산화탄소 처리비용 = 한국전력 발전시 이산화탄소 처리비용(\$63/톤 = 71,820원/톤, \$1=1,140원 기준)

자료: 경제성 조사분석 기준(2019), 농어촌연구원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20

IV. 연구 내용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익 부문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KDI 보고서 검토

정책성 분석 '환경성 평가' 부문 : “환경편익 분류체계 정립” 장기적 연구 필요

- 수자원사업을 통하여 환경문제가 감소와 증대의 상충, 불확실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 필요
- 환경비용 절감, 원수수질개선, 하천환경개선 (+) v.s. 레크리에이션, 내륙주 운수송, 토지조성, 교통 활성화 등으로 환경문제 부정적인 정책요소 (-) 동시 발생 가능

이중계산(Double counting) 한계

긍정적
부정적 효과
동시 발생
가능

(+)

(-)

수자원예타(4편) 지침	사업유형	댐 (저수지)	상수도 개발	지하수 개발	농업용수 공급사업	운하	방수로	하천복원 /외복	하천 공원화	하천 개수	홍수 조절	지하 저류시설	소수력 개발
원익항목													
생물용수공급	△	○											
공업용수공급	△	○											
농업용수공급	△												
홍수피해경감	△												
전력생산	△												
환경비용절감	△												
원수수질개선	△												
자연자원개선	△												
레크리에이션	○												
비상용수공급	△												
내륙주운수송	△												
자산고도화	△												
토지조성	△												
교통활성화 / 피해방지	△												
건설 및 연관산업피급효과	○	○	○	○	○	○	○	○	○	○	○	○	○
공중보건위생 향상	△												

주: △표 표시된 항목은 대상사업의 개별목적 및 단계에 따라 선택될 수 있음.

환경성 영향의 경우, 수자원 사업에서 정책효과로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현재까지는 인정 불분명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21

예비타당성조사 환경편익 부문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KDI 보고서 + 기존 연구검토

**경제성
비용편익분석**

기존 예비타당성분석에서 사용되는
CVM에 국한

- 조건부가치평가법(CVM)
- 선택실험법(CM)

기존 예비타당성분석 미반영
새로운 지표 개발 필수

- 자연환경: 생태
- 생활환경: 대기, 에너지, 자원순환..

**정책성
환경성평가**

수질, 생물다양성, 소득 변수 사용 가능

비시장가치 계량화 어려움 극복 방안 논의 필요

환경가치 CVM/CM 방법론

구분	방법론
조건부가치평가법(CVM)	가정시장법, 실험시장법, 가상시장법, 선택실험법
선택실험법(CM)	가정시장법, 실험시장법, 가상시장법, 선택실험법

구분	변수	특징
수질	수질지수, 수질등급	수질개선 효과 측정 가능
생물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서식지 다양성	생태계 건강성 평가 가능
소득	소득수준, 소득변화	경제적 편익 측정 가능

환경성 평가 지표 재정립, 공론화 필요

제23조(편익항목의 조정)

- ① 수행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원칙으로 정하는 편익항목을 제거하거나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편익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수행기관은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수행기관은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익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료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 2012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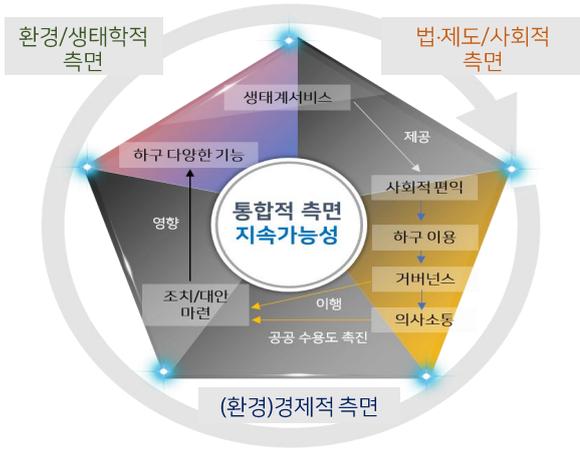
V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및 시사점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 위한 통합성 확보 방안



- | | | | |
|----------------|----------------------|---|-----------|
| 법·제도 측면 | 하구 관련 법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하구 대상, 별도의 특별관리구역(수역)제도 •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활용 | 01 |
| 사회적 측면 | 하구 관리 기반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구협의회, 지역간 거버넌스 협력강화 • 모니터링 조사 분석 통한 시민인식 개선 및 홍보 | 02 |
| 경제적 측면 | 환경편익 분류체계 재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서비스 가치 추정 방법론 •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 방법과 연계한 기능별 편익 분류 재정립 | 03 |
| 환경적 측면 | 생태계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관리 • 깃대종 선정 및 관리 | 04 |

- 환경모니터링 분석 + 드론 데이터(개선) 공동구축(K-water)으로 정보 체계 마련
- 향후 장기적 관점 유해독조 위험관리 체계 마련
- 내·외부 오염원 유입량 저감 방안 마련
- 통합취수부담금(제도) 갈등 대비, 적용방안 제고

- 2022 전략과제 연구성과 발표대회 -

금강 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한 충남의 정책방향과 환경 편익 연구